



한눈에 보는 정부 2013



한눈에 보는 정부 2013



OECD Korea Policy Centre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원문과 한국어판 간에 차이가 존재할 시에는 오직 원문의 내용만이 유효합니다.

이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아래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의견과 주장들은 OECD 및 OECD회원국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와 지도들에는 영토적 지배권·상태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으며, 영토·도시 및 지역의 명칭·경계 및 국경에 관한 편견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보고서에 활용된 원문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OECD(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본 한국어판은 파리에 있는 OECD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영어와 불어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Government at a Glance 2013/Panorama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2013
© OECD 2013
All rights reserved

본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사진저작권자 : Cover © Rovest Adrian Hillman/Shutterstock.com, © Tovovan/Shutterstock.com
Chapters 2 to 9 © Shutterstock/Kentoh
OECD 발간물의 정정은 온라인에서(www.oecd.org/publishing/corrigeuda) 확인할 수 있다.

역자서문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는 OECD와 대한민국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설립된 국제협력기구로서 OECD의 정책 경험과 주요 관심사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부인사 및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를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관리정책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관리정책본부는 OECD에서 발간하는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주요자료들을 선별하여 한국어판으로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발간한 “Government at a Glance 2013(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2009년부터 격년으로 발간하는 보고서로,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한 공공 거버넌스의 성과증진을 최종목적으로 각 회원국 정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통계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인 재정·금융 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에 초점을 맞춰 신뢰 회복에 필요한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 50개 지표들이 정부신뢰, 전략적 거버넌스, 공공 재정과 경제 등 9개 장에 걸쳐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다양한 지표와 심층적 분석은 중앙정부의 거시적 접근과 지방자치단체의 미시적 접근 양자에서 두루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 거버넌스 관련 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독자들에게 영감을 줌으로써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어판은 원문의 문장구조 및 용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저자들의 의도를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전자책으로 출판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초안 번역은 차호준 부본부장(1장/2장/5장/9장), 김성은 연구원(6장/7장/8장), 문재원 연구원(3장/4장)이 참여하였고, 김찬국 인턴과 이연우 인턴이 수정 작업에 합류하였습니다. 감수에 도움을 주신 분으로는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이창길 교수(1장/2장), 조세재정연구원의 홍승현 박사(3장/4장),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윤권 박사(5장/8장), 여성정책연구원의 문미경 박사(6장), 조달청 국제협력과의 서강일 사무관(7장), 정보화진흥원의 Gregory Pokony 연구원(3장/9장) 등이 각 분야별 전문적 의견을 주셨으며, 한국법제연구원의 김형건 박사과 이기평 박사(법률용어), 안전행정부의 남주현 과장(공공인사제도), 기획재정부의 이종수 과장(조세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현우 과장(보건복지)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번역상 오류에 대한 지적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9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 **이보환**

머리말

2008년에 시작되어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재정·경제위기는 국가의 역할, 즉-어떠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정부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증거기반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양적·질적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영역들에 걸쳐 정부의 활동과 정책집행, 성과비교를 가능하게 해주고,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또한, 이 출판물은 정부신뢰와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 제도간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이 작업은 Rolf Alter와 Edwin Lau의 지휘하에 Zsuzsanna Lonti가 이끌었으며, Natalia Nolan-Flecha, Santiago Gonzalez, Jean-Francois Leruste, Alessandro Lupi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주요한 초안 의견들은 Mario Marcel과 Stephane Jacobzone(제1장 "정부신뢰, 정책효과성 그리고 거버넌스 아젠다"); Catherine Gamper와 Alice Lazzati(제2장 "전략적 거버넌스"); Monica Brezzi, Arthur Mickoleit와 Camila Vammalle(제3장 "공공 재정과 경제"); Ronnie Downes, Ian Hawkesworth, Joung Jin Jang, Knut Klepvisk와 Lisa Von Trapp(제4장 "예산 관행과 절차"); Robert Bell 과 Maya Beauvallet(제5장 "공공부문의 고용과 보수"); Robert Ball, Michelle Marshalian과 Tatyana Teplova(제6장 "정부에서의 여성"); Elodie Beth, Maria-Emma Cantera, Ulrika Kilnes(제7장 "공공조달"); Julio Bacio Terracino, Janos Bertok, Marria-Emma Cantera, Ronnie Downes, Ulrika Kilnes, Knut Klepvisk, Arthur Mickoleit, Adam Mollerup, 그리고 Barbara Ubaldi(제8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Filippo Cavassini, Alice Lazzati 그리고 Adam Mollerup(제9장 "특집-대시민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출판을 위한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준 Lia Beyeler, Laura Boutin, Kate Lancaster, Natasha Lawrance, Sophie Limoges, Jennifer Stein 그리고 Deirdre Wolfender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출판물은 광범위한 자료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출판물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와 한눈에 보는 정부 운영그룹(자세한 내용은 부록 F를 참조하기 바람); OECD 통계위원회; 공공고용·관리 작업반; 고위 예산공무원 작업반; OECD 이해충돌에 관한 전문가 그룹; 고위 전자정부 공무원 네트워크; 공공조달에 관한 선도적 전문가들 과 혁신과 개방정부에 관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한 Peter Van de Ven과 Catherine La Rosa-Elkaim(OECD 통계국); Richard Highfield, Mehmet Ceylan과 Devi Thani(조세정책센터); Gaetan Lafortune, Nicolaas Sieds Klazinga, Valerie Paris(OECD 고용·노동·사회국); Corine Heckmann, Joris Ranchin(OECD 교육국); Peter Hoeller, Giuseppe Nicoletti(OECD 경제국); 국제노동기구의 Messaoud Hammouya(국제노동기구, 제네바, 스위스); Zoltan Mikolas(컨설턴트) 등에게서도 귀중한 자문을 받았다.

目次

서문 -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다!	8
요약	9
일러두기	11
도입	15
제1장. 정부신뢰, 정책효과성 그리고 거버넌스 아젠다	19
서론	20
정부신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1
정부신뢰는 왜 중요한가?	21
정부신뢰의 측정	23
OECD 회원국 정부신뢰의 패턴과 추세	25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28
결론	35
설명	36
참고문헌	36
제2장. 전략적 거버넌스	39
정부신뢰	40
정부정책을 통한 공정성 개선	42
법의 지배	44
위험관리	48
재정건전성	50
공공부문 효율성	52
공공부문 비용-효과성	56
제3장. 공공 재정과 경제	61
일반정부 재정수지	62
일반정부 채무	64
정부수준별 재정수지와 채무	66
일반정부 수입	68
일반정부 수입구조	70
정부수준별 수입구조	72
일반정부 지출	74
일반정부 지출구조(COFOG 함수사용)	76
정부수준별 지출구조	78
정부 투자지출	80
일반정부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82
특집: 중앙정부 정보통신기술 지출	84

제4장. 예산 관행과 절차	87
재정 규칙	88
중기 재정계획	90
예산집행의 유연성	92
성과예산	94
민관협력사업	96
독립적 재정기관들	98
제5장. 공공부문의 고용·보수	101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고용	102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104
고위관리직에 대한 보상	106
중간관리직에 대한 보상	108
중앙정부의 전문직에 대한 보상	110
비서직군에 대한 보상	112
주요직종별 보수	114
교사의 급여	116
제6장. 정부에서의 여성	119
일반정부에서의 여성 고용	120
중앙정부에서의 여성 고용	122
중앙정부에서의 여성 고위관리직	124
여성의 정치참여	126
제7장. 공공 조달	129
공공 조달 지출	130
공공 조달의 혁신적 수단	132
전략적 공공조달	134
공공조달의 공정경쟁과 중소기업	136
제8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139
공공자료 공개(OGD)	140
이해관계 및 재산공개	142
예산 투명성	144
포용적 정책결정	146
제9장. 특집-대시민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149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비용충당능력	150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	154
공공서비스 대응성: 적시성	158
공공서비스 신뢰성: 시민권의 보장	162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166
부록 A. 정부수입 총계 방식	169
부록 B. COFOG함수를 활용한 정부 기능분류	170
부록 C. 복합지표 예산 관행	172
부록 D. 정부의 피고용인 보상에 관한 방법론과 부가 사항	176
부록 E.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상세 자료	185
부록 F. 운영위원회 구성	189
용어해설	190

OECD 보고서들은 아래 열거된 사이트에 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ilibrary>




<http://www.oecd.org/oecddirect/>

이 책은...

StatLinks 

A service that delivers Excel® files from the printed page!

이 보고서에 있는 그림과 표의 아래 부분에 있는 **StatLinks**  를 찾아보시오. Excel®의 스프레드 시트에 맞도록 내려 받기를 하려면, 인터넷 창에서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주소를 타이핑하거나, 전자서적의 링크부분을 클릭하십시오.

서문 -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다!

세계 경제 전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세계는 계속해서 재정·경제 그리고 사회위기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저성장, 높은 정부부채, 지속적인 실업, 그리고 확대되는 불평등은 강력한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들은 경제를 더 강력하고 더 환경 친화적이며, 더 포괄적인 성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돌려 놓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가 이를 주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다면, 신뢰는 쉽게 무너진다. 실제로, 위기는 정부신뢰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시민들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해야 할 정책결정자들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 본질적인 것은 정부들이 필요 한 개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확신을 다시 얻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핵심요소는 강력한 성과이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년판은 의사 결 정자 들과 시민들이 정부의 성과를 분석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부문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는 분야를 식별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50개 지표들은 공공 재화와 서비스들의 모든 생산 사슬(투입, 과정, 산 출 및 성과)과, 예산 집행 (budgeting practices), 청렴성과 개방 정부, 전자정부와 ICT전략과 같은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governance)의 핵심적 영역 들을 다룬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정부들이 제도를 강화하고 비용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한 조 치들에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많은 국가들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 음에 도 불구하고 공공재정 건전성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고, 상당한 양성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단지 중간 관리직의 40%, 최고관리직의 29%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자료공개(OGD)가 거버넌스의 도구로서 중요성을 얻 고 있으나(OECD 국가들의 56%가 국가 OGD전략을 갖고 있다)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담보하기 위해 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그리고 많은 다른 영역들에 걸쳐서, 공공부문 개혁은 우리의 경제·사회 목표를 지원하 는 가장 우선 순위 높은 항목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거버넌스 지표와 분석에 대한 범위와 적시성(適時性)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보다 용이한 접근을 위한 다양한 전 자문서 형태로 이들을 제공함으로써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이 정책 결정자들, 시민들, 연구자들이(OECD의 정책 솔로건인)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더 좋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OECD 사무총장
Angel Gurría

요약

재정·경제 위기와 그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많은 OECD 회원국 정부들은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계획을 수행하였다. 정부신뢰가 매우 떨어진 상황에서 한정된 정부의 자원들만으로는 시민들의 높아지는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2007년과 2012년을 비교해보면, 국가신뢰는 평균적으로 45%에서 40%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필요한 개혁조치를 하기 위한 시민지지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제한적 수단들만으로 시민들의 높아지는 기대치를 충족하려 한다면,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전략적 역량 창출, 강력한 기관, 효과적 수단과 절차, 명확히 측정 가능한 성과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은 OECD 회원국들이 그러한 전략적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발견들

-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각국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정분야 해결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있다.** OECD는 2030년까지 공공부채총액을 GDP의 60%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 수지 개선 추정치를 산정했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2 회계연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3%씩 잠재적 GDP가 증가해야 하지만, 몇몇 OECD 회원국들의 경우, 2011년도 정부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부분적으로는 경기부양조치 소요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수입 정체 및, 노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기인한다.
- **각 국가들은 새로운 예산관행 채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기관들을 발전시켜 왔다.** 기존의 메커니즘이 재정 규율을 지키는데 비효과적이었으므로, 각 국가들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재정 도구들을 개량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거버넌스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97%의 OECD 회원국들은 적절한 재정적 규칙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의 재정규칙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9-2013년동안 8개 국이 독립적 재정 기관을 설립했는데, 이는 재정규율 준수를 촉진시키고, 경제정보를 생산하고, 자원을 효율적 배분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 **공공고용수준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다.** 일반정부고용은 2001- 2011년간 총 노동력의 16%이하로 비교적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수치는 2011년 GDP의 45.4%를 차지하는 정부의 평균 지출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며, 이에 아웃소싱(outsourcing)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몇몇 OECD 국가들이 신규채용 동결을 선언하고, 재정부채정리계획의 일환으로 고용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고용의 상당한 감축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 **공공부문의 양성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녀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신규채용 및 승진에 있어서의 할당제 도입,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비서직군은 50% 이상(어떤 경우 에는 거의 90%)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고위직 여성 비중은 상당히 낮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 예를 들어 예산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성 인지 관점을 적용하는 성인지 예산(gender responsive budgeting) 도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지출(gender-blind spending)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정부의 프로그램들이 예산상에 나타나는 양성불평등의 결과물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성 인지 예산(GR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OECD 회원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각 국은 공공조달을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OECD 회원국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를 들면, OECD 회원국 94%는 범 정부 단가계약을 사용하고 있음] 혁신적 조달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그들의 구매 기능을 개선하고 있으며, 구매를 통합하고, 공공조달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채택(OECD 회원국 97%가 국가 전 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 하고 있다. 또한 많은 OECD 회원국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비용대비 가치(VFN)를 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 [회원국 73%는 녹색조달을 촉진하고 있음], 중소기업 지원(회원국 70%는 중소기업 이 용을 촉진하고 있음), 그리고 경제적 기회에 접근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a level playing field)과 같은 또 다른 정책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 **의사결정자의 재산공개 및 사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 도구로 계속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사결정자들에게 자신들의 재산과 소득의 원천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직(前職)과 부채까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 **정부자료공개는(OGD) 거버넌스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 절반을 조금 넘는 OECD 국가에서 대 시민 정부 자료공개(OGD)를 국가적 전략으로 채택(개별 계선부처수준의 전략으로 12%, 국가 및 하위정부 수준의 전략 모두는 28%)하고 있다. 정부자료공개에 있어서, 핵심적 우선순위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포함하여 민간영역에서 민간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사업영역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더불어, 각 국가들은 정부자료공개 가 공공서비스전달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정보자료 공개가 공청회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citizen engagement)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시민들은 정부라는 추상적 관념보다는 자신들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들을 더 신뢰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다. 예를 들면, 평균 72%가 자신들의 지방경찰에 대하여 신뢰한다고 보고 하였다. 거의 유사한 비율로 자신들의 질 높은 건강보험이 가능한 데에 만족하고 있으며, 66%는 자신들의 도시와 지역에서의 학교 및 교육시스템 에 만족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전세계 재정·경제위기 기간 또는 그 직후에도 만족의 정도는 상당히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정부들은 광범위한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재와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서비스전달 성과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과정상에 시민들의 피드백을 축 정하고 통합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실행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는 최초로 서비스의 질을 4가지 차원(비용충당능력, 대응성, 신뢰성, 시민만족도)에서 국가간뿐만 아니라, 핵심 공공서비스영역들(교육, 건강보험, 사법, 조세행정 등)간에도 비교하고 있다.

일러두기

한눈에 보는 정부에 포함된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독자들은 다음에 소개하는 수 많은 지표들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전 판과 같이, 4페이지로 제시된 법의 지배나 공공서비스의 질에 관한 지표들과 같은 몇 가지 지표들을 제외하고는, 지표 제시를 위한 기본형태는 2페이지로 제시되었다. 2페이지 형태에서, 첫 페이지에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는 본문을 담고 OECD 회원국들에서 관찰된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분야가 그 뒤를 잇는다. 첫 페이지의 맺음말은 그 자료가 나오게 된 맥락을 보여주는 유용한 배경서적들의 목록인 '더 읽어볼 것들' 분야이다. 두 번째 페이지는 자료들을 보여준다. 이 숫자들은 현재의 수준을 보여주고, 가능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章)에는 이 보고서의 주요한 '용어정리'가 실려있다.

국가계정체계자료의 통상연도(calendar year)와 회계연도(fiscal year)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OECD 국가계정자료는 통상연도에 근거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호주의 경우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한 하위영역에 대한 자료와 COFOG(정부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정부지출은 회계연도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계정체계(SNA)에 근거한 자료는 2013년 8월 12일자로 OECD 국가계정통계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분석대상 국가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34개 모든 OECD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자료들은 이스라엘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견도 없음을 밝혀둔다.

추가된 국가들 예를 들면, 러시아와(현재 OECD 승인절차가 진행중임) OECD의 공공행정위원회 참가자 지위에 있는 브라질, 이집트,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도 몇 가지 지표들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OECD 멤버가 아닌 국가들의 자료는 표와 그림의 마지막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국가코드(국제표준화코드)

OECD 회원국		폴란드	POL
호주	AUS	포르투갈	PRT
오스트리아	AUT	슬로바키아	SVK
벨기에	BEL	슬로베니아	SVN
캐나다	CAN	스페인	ESP
칠레	CHL	스웨덴	SWE
체코	CZE	스위스	CHE
덴마크	DNK	터키	TUR
에스토니아	EST	영국	GBR
핀란드	FIN	미국	USA
프랑스	FRA		
독일	DEU	OECD 가입 진행중인 국가	
그리스	GRC	러시아	RUS
헝가리	HUN		
아이슬란드	ISL	기타 주요국가	
아일랜드	IRL	브라질(OECD 공공행정위원회참가국)	BRA
이스라엘	ISR	중국	CHN
이탈리아	ITA	인도	IND
일본	JPN	인도네시아	IDN
대한민국	KOR	남아공(OECD 공공행정위원회참가국)	ZAF
룩셈부르크	LUX		
멕시코	MEX	기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가국	
네덜란드	NLD	이집트	EGY
뉴질랜드	NZL	우크라이나	UKR
노르웨이	NOR		

OECD 국가 평균과 합계

평균

표와 본문에 나와있는 OECD 평균값은 가중치를 두지 않은 OECD 회원국들의 산술평균값들이다. 비회원국들의 자료는 평균값 계산에 넣지 않았다. 설명에는 OECD 회원국들의 이용가능하지 않은 자료들을 표시하였다.

숫자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연도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한 평균값이다. 예를 들면, 2009년도의 OECD 평균값은 비록 특정국가가 그 당시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2009년 현재 모든 OECD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한 것이다.

합계

OECD 합계는 가장 일반적으로 표에서 나타나는데, 이용 가능한 OECD 회원국들 각각의 자료들을 합계한 것이다. 합계에는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의 자료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설명에서는 이용 가능하지 않은 자료들을 언급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보완

일부 지표들은 국가별 자료들을 제시하는 표와 그림으로 온라인상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였다. 자료가 입수 가능한 경우에는 지표의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분에 설명을 달았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또한 StatLink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독자들은 보고서에 자료로 쓰인 엑셀파일을 내려 받기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전자서적 판에서는 StatLinks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표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링크를 해두었으며, 직접 웹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또한, 아래의 보완자료들도 온라인으로(www.oecd.org/gov/govatag glance.htm) 이용할 수 있다.

- OECD 평균과 비교한 각 국가별 주요 자료들
- 지표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 통계자료집
-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행정적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배경 정보를 담고 있는 각 국의 맥락적 설명

1인당 자료

몇 가지 지표들은(예를 들면, 정부지출, 정부세입, 정부부채) 1인당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추정치는 “국가계정체계의(SNA)” 거주자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1년 혹은 그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외교관 및 군인, 공부하고 있는 학생, 치료중인 환자와 같이, 비록 그들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은 포함하였다. 1년의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자국민들은 자신의 나라에 포함되는 반면에,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그 나라에서 휴가를 즐기는 외국인 방문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특정한 한 개인이 어떤 국가에서는 피고용인으로서 생산을 통해 그 국가의 GDP에 기여하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서 임금이 다른 국가의 총 국가소득(gross national income)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 평가는 각 나라 간의 가격수준의 차이를 제거하고 각각의 서로 다른 나라들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만드는 환율이다. 구매력 평가로 변환되면, 각 나라들 간의 지출은 동일한 가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구매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적 차이를 반영하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2001년과 2009년: 모든 유럽국가들의 구매력 평가는 Eurostat에 의해 제공된 1년 단위의 비교평가의 결과물들이다.

2011년: 모든 OECD 회원국과 러시아의 구매력 평가는 OECD에 의해 계산된 예비적 비교평가의 결과물이다. 추정치와 예비적 비교평가의 결과물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OECD의 구매력 평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oecd.org/std/prices-ppp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복합 지표

이 보고서는 이해관계, 예산관행과 절차 등과 같은 한정된 영역들에서 몇 가지 기술적 복합지표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복합지표들은 불연속적이며 질적인 정보들을 요약하는 실질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한 복합지표들은 복합지표구성을 위한 요약책자(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Nardo et al, 2008)에서 밝힌 단계들을 밝아서 만들어졌다.

예산 관행과 절차의 복합지표들과 이해관계의 복합지표들을 구성하는 변수와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C와 부록E에서 각각 알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지표들은 회원국들의 협조로 개발되고 이론과 실제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그들간의 상대적 가중치들은 전문가집단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신판 예산 관행과 절차 그리고 예산집행 연구조사 (2012)는 2007년 연구조사판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설문구성으로 인해 이 보고서의 예산 관행과 절차에 관한 복합지표들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09의 복합지표들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또한, 몇 가지 설문사항들이 추가되었으며, 몇몇 가중치들은 재정의되어 있다.

기호와 약자

- .. 값이 없거나, 활용할 수 없음
- x 적용 불가능
- EUR 유로화
- USD 미국달러
- %p 퍼센트 포인트

도입

목적

최근의 경제적 위기는 현대사회에 중요한 행위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적 제약과 인구통계적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들은 자신들의 시민복지를 증가시키는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며, 공공 선을 달성할 목적으로 개인들과 민간기업들을 규제하고,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며, 그들의 시민들에게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관리정책과 실행력에 의존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과 인적자원 관리, 공공조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들에 의존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의 주요한 목적은 OECD 회원국과 그 밖의 나라들의 결과물들과 정부활동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순서대로 이러한 자료들은 자신들의 정부의 성과를 비교응용(benchmarking)하려는 나라들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신들의 발전 및 국제적 발전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고, 자신들의 공공정책결정의 근거로 활용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 사용한 지표들은 공공 거버넌스의 많은 분야에서 측정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특징점(trademark)이라 말할 수 있는 핵심지표들에 덧붙여, 이번 제3판은 OECD 회원국들의 공공행정에 관한 더욱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표들과 추가적 자료출처원천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에 새로운 것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11과 비교해보면, 한눈에 보는 정부 2013판은 몇 가지 새로운 특징들이 있다. 우선, 3개의 새로운 장(章)을 포함하고 있다: "전략적 정부"(제2장)에서는 이전 판의 구성요소들을 종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제도와 기관)에 대한 신뢰, 위기관리 그리고 법의 지배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포함하였다. "정부에서의 여성"(제6장)에서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와 같은 모든 정부의 영역들에서 여성의 참여를 분석하고 있다. 특집 -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제9장)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접근성, 민감성, 신뢰성, 만족도와 같은 핵심적 차원을 포함한 새로운 질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인 차원들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은 교육, 건강보험, 사법, 조세행정정책분야에서 측정되었다.

공공 재정에 관한 자료들은 경제위기 이전과 경제위기가 진행중인 상태와 위기 이후를 보여주기 위해 2001년과 2009년 및 2011년으로 제시하였다. 부채와 재정수지 및 투자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은 정부의 하위부분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들의 재정적 구조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예산의 관행과 절차, 예산집행, 공공조달과 보상 등에 관한 연구조사는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새롭게 구성된 지표들을 포함해서 2012년에 수행되었다. 연구조사의 최신판에서는 더욱 상세하고 우수한 질적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예를 들면, 보상에 관한 연구조사의 경우, 최초로 OECD 회원국간 수준과 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 경찰, 수사관, 경찰근무자, 이민국직원, 세관직원, 세무조사원 등 주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직종들에서 자료를 산출하였다. 이번 판의 주요 특징은 ICT지출에 관한 지표가 포함된 것이다.

정부의 정의

공공 재정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계정체계(SNA)에서 말하는 "일반정부"의 개념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정부는 사회보장기금뿐만 아니라, 하위(주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비영리기구들, 부처/국, 실, 사무소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고용에 관한 자료는 일반정부와 공공소유의 은행, 항만과 공항 등과 같은 공기업들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의 실행과 과정에 관한 자료들은 중앙정부수준에서만 다루었다.

기본 틀

한눈에 보는 정부는 34개 OECD 회원국은 물론 그 외의 국가들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접근가능하며 이용 가능한, 예를 들면, 러시아와 같은 국가의 자료들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과 같은 주요한 국가들의 자료도 포함하였다. 어떤 자료들은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참가국가들(브라질, 이집트, 남아공과 우크라이나)의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구조에서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 역할이 증가할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정부 이번 제3판은 맥락과 관련하여 투입, 처리(과정), 산출과 결과물 지표들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2013년판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된 사법부문과 건강보험, 교육, 사법 그리고 조세행정 등의 공공서비스들에 관한 질적 차원 분야를 담고 있어서, 산출 및 결과물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과업수행에 관한 핵심적 측면을 나타내는 보다 광범위하게 구성된 지표들을 포함한다. 그림 0.1은 한눈에 보는 정부에 관한 개념적 기본 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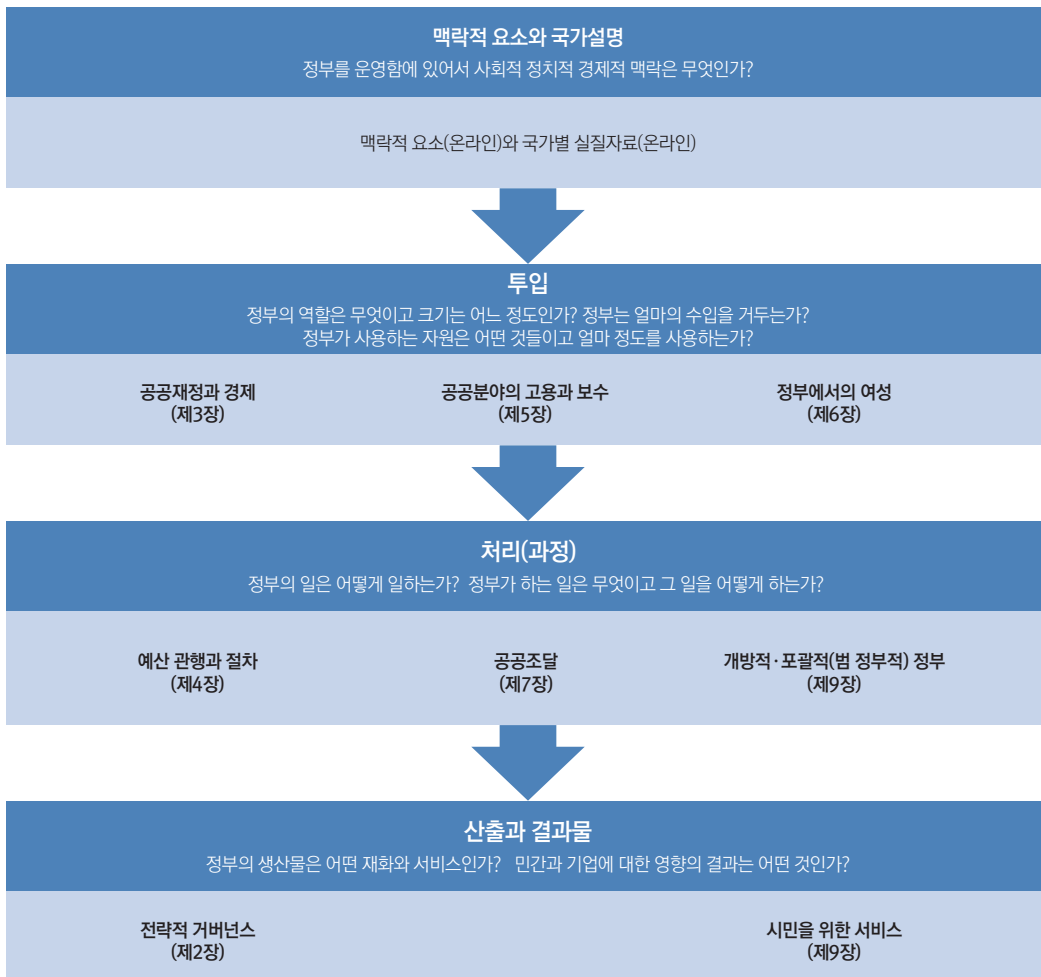
투입

투입은 정부의 생산가능뿐만 아니라 자원들이 혼합되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자원들을 의미하며, 이들 자원은 노동과 자본에 상당하는 것 들이다. "공공 재정과 경제", "공공분야의 고용과 보수", 그리고 "정부에서의 여성"은 이와 같은 투입의 측면을 기술하는 장(章)이다. 여기에는 정부지출, 생산비용, 고용과 노동력의 특징에 관한 지표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들을 구분하게 되면, 공공재화를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능력 차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과정)

처리(과정)는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관리의 실행과 절차에 관한 언급이다. 처리(과정)는 임무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행정관리의 수단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그 결과로, 처리는 종종 정부활동의 개방성은 물론 법의 지배와 회계책임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공공분야의 개혁은 대체로 처

그림 0.1.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을 위한 개념적 기본 틀



리(과정)의 개선을 지향한다.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국민들의 관심은 상당부분 여기에 집중된다. 이번 판에서는 예산의 관행과 절차, 공공조달, 그리고 개방적·포괄적 정부(open and inclusive government)에 관한 정보들을 담았다.

산출과 결과물(outputs and outcomes)

산출과 결과물 간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 산출은 정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에 관한 언급이고, 결과물은 민간과 기업에 대한 정책과 실제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행된 정책의 성공은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물(outputs)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취한 결과물(outcomes)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번 판에서는 산출과 결과물에 대한 증가하는 지표들을 추가하려고 노력하였다. 산출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전에 언급했던 질적 기본 틀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기와 장소에 있어서 몇 가지 차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지표들의 사례는 "특집 -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제9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구성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정부신뢰에 관련된 현행 상태와 OECD 회원국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들에 관한 내용을 정부신뢰라는 정책 장(章)에 담으면서 시작하였다.

제2장부터 제9장까지는 다음과 같은 공공행정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전략적 거버넌스", "공공 재정과 경제", "예산의 관행과 절차", "공공분야의 고용과 보수", "정부에서의 여성", "공공조달", "개방적·포괄적(범 정부적) 정부", 그리고 특별 탐구의 장(章)이라고 칭할 수 있는 "특집 -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이러한 장(章)들은 사용 중인 다양한 공공관리도구들의 유용성과 영향력에 관련된 더 좋은 증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부록들과 용어정리로 마무리하였다.

향후 과제

한눈에 보는 정부를 발간하기 위하여, OECD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견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들과 -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World Justice Project,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Gallup 그리고 the European Commission -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수집의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 담긴 국가자료들간 상호 비교가 가능해 졌다.

한눈에 보는 정부 작성 팀은 이 발간물의 후속 판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의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 특정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정부기관과 그 특징
- 규제관리의 관행과 성과에 관련된 새로운 자료의 수집
- 중앙정부(행정부와 수상 혹은 대통령 간 공동과업을 지원하는 단위)의 우선순위, 책임성, 권력, 기능과 구조관련 지표들
- 민간과 공공부문의 보상 수준과 구조에 대한 비교
- 정치자금 확보와 로비에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
-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실행에 관한 반복적 조사

제1장

정부신뢰, 정책효과성 그리고 거버넌스 아젠다

서론

2008년에 시작된 재정·경제위기로 인하여 정부신뢰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2012년 OECD회원국에서는 평균 10명 중 4명만이 자신의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는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그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집행능력은 정부신뢰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특히 단기적 희생이 요구되고 장기적 이익이 와 닿지 않는(less tangible) 개혁을 위해 필요한 시민들의 지원을 얻어내기 어렵다. 정부신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정부신뢰가 성공적 정책 형성에서 본질적 요인임에도 종종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정부신뢰의 감소는 시민의 규칙과 규제들에 대한 순응율(順應率)을 더욱 낮아지게 한다. 또한, 시민과 민간기업은 더 위험회피적이 되어 경쟁력 회복과 성장 활성화에 본질적인 투자·혁신 그리고 고용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 지연된다.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은 미래의 경제회복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이다. 정부신뢰는 공공부문개혁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 투입인 동시에 개혁의 결과물이다. 이것은 공공부문 개혁이 경제·사회적 복지와 관련된 사람과 조직의 태도와 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과 민간기업의 정부신뢰는 경기상황이 어떠한 효과적·효율적 정책형성에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투자는 정부가 위기로부터 교훈을 배우고 있다는 신호일뿐만 아니라, 경제회복과 사회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롭고 중추적인 접근방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신뢰 유지를 위한 과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정보 흐름이 더 빨라지고 더 다양화되면서 - 시민사회, 인터넷, 사회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을 통해 -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직면하는 환경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환경에서, 만약 시민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들을 의심하게 되고, 비용과 편익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훌륭한 정책설계와 경제 회복만으로는 정부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신뢰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순환 형성에 필수적이다.

이 장(章)의 목적은 정부신뢰와 공공 거버넌스의 정책과 제도 간의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신뢰, 특히 정부신뢰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어떻게 측정되고, 공공정책에 대한 시민의 태도와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 장에서는 무엇이 정부신뢰를 결정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과거에는 다소 이질적 이라고 간주되었던 거버넌스 전문가·사회학자·경제학자 등에 의해 연구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예비적 탐구이다. 비록 일반적 관점과 더 강력한 정책적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신뢰는 공공 거버넌스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시각을 - 사람들의 인식과 정책 조치·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 제공한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대한 이해는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정책결정자들과 분석가들이 시민들의 기대에 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정부신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뢰는 개인 또는 조직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는 '관찰자의 눈'에 비추어지는 주관적 현상으로, 특히 이것이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할 때 중요하다. 정부신뢰는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그런 일을 하는 정부"(Easton, 1965)의 조치들에 대한 시민들의 확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선호들 - 무엇이 올바르고 공정하며 무엇이 불공정한지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 시민들에 의해서 인식된 정부의 실제적 기능수행 간의 일치 여부에 의존한다(Bouckaert and van de Walle, 2003). 시민들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매우 다양한 기준들을 사용하여 정부의 조치/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 한 개인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시민들의 선호들과 정부의 기능수행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질적 성과가 아닌 인지된 성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 외에 인지를 유발하는 결정요인들 또한 알아야 한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정부신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구성된다: 1) 사회 공동체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의미하는 사회적 신뢰; 2) 시민들이 정부와 그 제도들을 평가하는 정치적 신뢰. 정치적 신뢰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데, 분산되어 있으며 시스템에 근거한 거시적 수준의 신뢰와 제도에 근거한 신뢰가 그것이다. 공동체에 대한 시민참여와 사람들 간의 신뢰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utnam, 2000).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기계적인 것은 아니며, 많은 맥락적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고 - 사회적 신뢰는 낮다 -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제도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있다(Aghion et al., 2010).

시민들의 기대는 그들의 정부신뢰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서 정부 성과에 대한 그들의 기대치도 높아진다. 만약 시민들의 기대가 정부의 실제 성과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면, 신뢰와 만족은 감소할 것이다. 기대에 관한 이러한 변화들은 정치적 지원의 침식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의 성과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Dalton, 2005) 과거의 진단들에 얽매어있는(anchored) 정책 결정자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게다가 시민들의 정부신뢰는 그들이 정부의 서비스전달에 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지 혹은 부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 경험은 긍정적 경험보다 정부신뢰에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불만스러워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들은 정부신뢰에 더 강력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Kampen et al., 2006).

또한,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관한 분석들의 대부분은 민간기업들과 심지어는 정부의 피고용인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나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인식의 형성과 요소들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정부신뢰는 왜 중요한가?

정부신뢰는 정치시스템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들 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 정부신뢰는 사회적 통합과 복지에 필수적이며, 그것은 정부신뢰가 정부의 통치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강압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신뢰는 어떠한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율적인 수단이다(Fukuyama, 1995). 정부신뢰 수준이 높으면 정부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가될 수도 있다.

상당한 수준의 정부신뢰는 정부제도의 - 법의 지배의 준수, 혹은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전달 그리고 인프라 공급과 같은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능수행에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와 독립적 사법기관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몇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 정립된 것처럼(Knack and Zak, 2003; Johnston, Krahn and Harrison, 2006;Blind, 2007), 이들의 적절한 기능이 정부신뢰를 얻을 수 있는 핵심적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제도들은 민간기업의 투자결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뢰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다(Dasgupta, 2009; Algan and Cuha, 2013).

정부제도들에 대한 신뢰는 동시에 개인의 행위에 - 자신이 소망하는 정책결과를 후원하는 방식에 관한 - 영향을 준다. 이것은 다소 좁게 정의되는 정책들과 프로그램들부터(예방접종 홍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더 넓은 정책 개혁에(환경규제 또는 연금개혁과 같은)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정부신뢰가 중요한 것은 많은 공공 프로그램들이 무임승차와 기회주의적 행동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신뢰는, 사람들이 공공정책의 장기적 결과물에 대하여 개인수준이나(연금) 혹은 공공선에 기여한다는(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긍정적 기대를 갖게 되어 다소의 즉각적 혜택들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행위들이 발생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이 되는 구조개혁을 실행 하도록 지원한다. 대부분의 개혁들에 있어서 장기적 혜택을 위해 단기적 만족을 희생해야 하는데, 이러한 개혁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정부신뢰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러한 개혁들이 적절하게 수행될 뿐만 아니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길게 지속된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관한 시간범위(time frame)를 확장시킨다.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으며 부분적인 편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치인들도 무임승차와 인기영합적 태도로 단기적·기회주의적 이득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Gyorffy, 2013).

정부신뢰는 규칙과 규제들에 대한 순응을 향상시키고, 강제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규칙과 규제들은 남용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벽하거나 완전한 것이 결코 아니다. 법과 규칙들의 효과성은, 사람들이 법과 규칙들을 순응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충분히 공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순응비용과 개인적 이익간에 차이가 크고, 통제가 더 어려운 분야에 관한 규제들인 경우 특히 중요하다. 세금부과가 전자의 예이고, 교통규제가 후자의 예이다. 규제당국에 대한 신뢰는 더 많은 자발적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Murphy, 2004).

정부제도에 대한 신뢰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투자와 소비 같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개인간의 신뢰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내구재의 소비부터 직업이동성, 노동자의 고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정들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사람들 간 신뢰의 증가는 총 요소생산성을 상승시키고, 그리하여 경제적 진보를 촉진시킨다(Dasgupta, 2009). 이것은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주체들의 계획 지평을 확장시키며, 그에 따라 경제적 활력이 증가한다.

정부신뢰는 공공 거버넌스의 핵심 기능에 관심이 집중되는 자연재난·경제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에 특히 대단히 중요하다. 위기에 대처하고 성공적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은 종종 정권의 생존과 재선을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정부신뢰의 부족은 긴급대처나 복구절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하

여, 사회에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며 정부의 대응능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와 비슷하게 현재 진행중인 경제 위기는 위기 이전에는 서서히 진화하고 있어서 분명하지 않았던, 정부신뢰의 차원들(dimensions of trust)을 드러낼 수도 있다.

정부신뢰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책 효과성을 위해서 시민들이나 사회조직들의 정부신뢰가 중요하다. 시민과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와 정부 내부의 신뢰도 정책 기획이나 정책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uckaert, 2012).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이 정부에 의해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정부의 기능들과 공공서비스들의 효율성과 효과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조직화 되는 방법에도 - 예를 들어 조세시스템·자기규제와 자체점검의 활용 - 반영된다. 게다가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의 정부신뢰와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는 긍정적 상호보완 관계(feed off)에 있다. 개방적이고 대응성(對應性)이 강한 정부는, 정부-시민 간의 신뢰를 쌍방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이다. 불행하게도, 정부로부터의 신뢰와 정부내의 신뢰에 관한 연구물들은 정부신뢰를 다루는 연구물들 보다 훨씬 더 적다.

정부신뢰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그것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다. 정부·경제·사회의 성과에 대한 신뢰의 영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만약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또한 기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불신의 증가는 시민들(그리고 민간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법을 따르고, 위기 동안에 희생을 감내하고, 세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비용을 상승시키거나 - 이는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 세입을 감소시킬 것이다. 정부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은 또한 정부기관들을 위해 일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계속 재직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정부신뢰의 측정

정부신뢰는 인식에 기초하고, 그 측정은 도전과제를 투성이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는 더 명백한 사실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신뢰는 시민들, 민간기업들, 전문가 들에게 그들이 정부·리더십 그리고/또는 특정 정부기관들을(예를 들면, 지방정부 혹은 사법시스템) 신뢰하는지(또는 확신을 갖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인식조사들에 의해 측정된다. 종종 지방경찰·교육 또는 의료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만족에 관한 질문들도 - 비록 그 질문들이 정부신뢰와는 다소 다른 개념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 또한 활용된다.

몇 가지 국제적 조사들은 시민들의 정부신뢰에 관한 응답자료들을 수집하였다(표 1.1 참조). The World Gallup Poll 은 정부신뢰에 대한 세계적 재정·경제 위기의 영향을 정확히 포착하기에 충분한 규칙성을 담고 있는 34개 모든 OECD 회원국에 걸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는 오랫동안 정부신뢰를 측정해오고 있는

표 1.1. 정부신뢰 또는 자신감을 측정하는 국제조사들

조사명	포함된 OECD 회원국의 숫자	포함된 연도나 주기	측정	응답척도
World Gallup Poll	34	2005-12(매년)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2: 예/ 아니오
World Values Survey	25	4년 주기:1989-93;1994-98; 1999-2004;2005-08	정부에 대한 자신감	4: 매우/ 상당히/그다지/전혀
Eurobarometer	23	2003-13(년2회)	정부신뢰	2: 신뢰하는 성향/신뢰하지 않는 성향
Edelman Trust Barometer	15	2001-13(매년)	정부신뢰	9점 척도: 1점은 전혀 신뢰하지않음, 9점은 아주 많이 신뢰함
Latinobarómetro	3	1995-2012(매년)	정부신뢰	4: 꽤 많이/어느 정도/약간/전혀 신뢰않음

나 자료군(dataset)은 분절되어있고, 자료들은 매년 생산되는 것은 아니며, 가장 최근 자료가 2005-2007년도 자료라는 한계가 있다. 유럽연합의 Eurobarometer는 가장 일관성 있는 자료군(연 2회의 측정점을 가지고 있는)을 제공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23개 OECD 회원국들만 포함하고 있다. The Edelman Trust barometer는 단지 제한된 인구표본에 대해서만 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표본 추출 기준은 대학교육을 받고 가구소득이 4분위수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국제적 조사들은 국가 간 비교(cross country comparisons)를 위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들의 정부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은 애매모호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질문들은 정부라는 용어의 정의가 보통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응답자들의 해석에 따라서 제한되기도 한다. 국제적 조사들은 표본추출에 있어서 유사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지만, 질문구성과(예를 들면 확신에 관한 질문과 정부신뢰에 관한 질문 간에 있는 미묘한 차이들, 서로 다른 응답 척도들) 비교기(comparators)가 제공할 수 있는 신뢰의 다른 척도들에(예를 들면 국회, 재정기관, 정치가, 공무원, 국제기구, 보건이나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 민간기업, 종교기관 등에 대한 신뢰)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제적 조사의 한계는 시민들의 정부신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가며, 그리고 무엇이 OECD 회원국들은 물론 그 밖의 국가들에서 정부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얻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기관에 접근하는가에 대해 문화적 요소들이 작용함으로써 순수한 의미의 정부신뢰 수준 비교에 어려움이 있다. 아마도 현존하는 조사들은 정책 분석을 지원하거나 정책 권고사항들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국가적 조사들이 국가간의 비교활동에 사용될 수는 없지만,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책분석에 더욱 유용하다. 국제적 조사들과 비교해보면 국가적 조사들은 정부신뢰의 결정요인들(drivers)에 대한 보다 훌륭한 통찰을 제공하고, 선거주기 동안에 교정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스페인의 Metroscopia에 의해 수행되는 The Barometer of Citizen Confidence는 정부에 대한 만족과 경제에 대한 인식의 비교를 허용하는 자료들을 한달 단위로 제공한다. 국가적 조사들은 또한 모든 공공 스펙트럼에서 정부신뢰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의 IPSSOS Mori는 모든 공공기관(예를 들면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와 의회), 공공 서비스, 경제정책(예를 들면 경제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구매력), 정당과 정치적 대표에(행정부의 리더,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의 추세와 정부에 대한 부패 인식을 일년에 두 번씩 공표하고 있다. 국가적 조사들은 또한 현행 정책에 대한 신뢰의 측정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IFOP는 시민들에게 그들의 정부가 취임 시 발표한 특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믿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 국가적 조사들은 또한 대개 훨씬 더 긴 시계열 자료를 갖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는 1950년대 말 이래로 정부신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된 것들은 인식조사들로부터 나온 자료들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정책 토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연구조사들이 대표성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연구조사들은 표본의 크기가 작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리적 대표성을 거의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응답자들의 부가적 특성들은 - 연령, 성별, 인종, 교육수준, 혼인여부, 소득수준, 정부서비스이용여부 등과 같은 - 정부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게 되며, 그래서 표본이 이러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둘째는, 조사의 질문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핵심용어들은 정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즉, Gallop World Poll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국가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이 국가정부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묻는다. 응답자들은 정부를

정치적 리더십 혹은 관료제와 동일시 할 수도 있다. 조사의 질문들과 질문에 첨부된 선택지들 또한, 정부가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는 - 예를 들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 방식으로 쓰여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 시점에서 국가들을 비교하는 것 외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와 개별국가들 내의 그리고 국가들간의 추세를 모두 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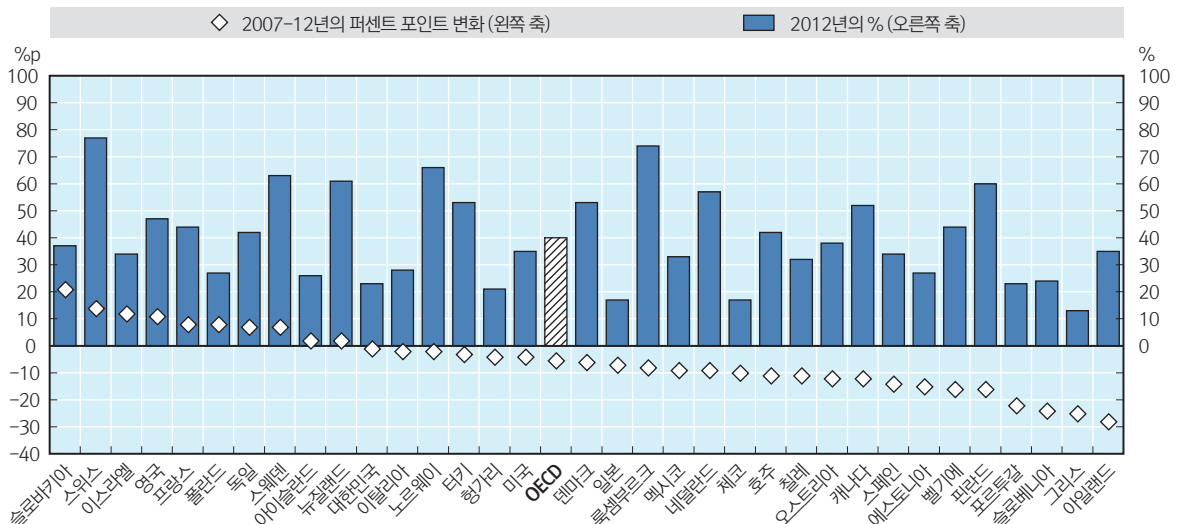
OECD 회원국 정부신뢰의 패턴과 추세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것에 관한 방법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용 가능한 자료들은 OECD 회원국 정부신뢰 상태를 보여주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뚜렷한 형태와 추세를, 그리고 상관관계들을 밝혀준다.

첫째, OECD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들은 시민들이 국가정부에 대한 그들의 확신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의 대답은 평균 50%(그림 1.1 참조) 훨씬 아래 수준에서 국가마다 본질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사를 통해 질문을 받았을 때, OECD 국가 시민들의 절반 이하가 자신들의 국가정부에 대하여 확신이 있다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국가 평균은 거의 80%에 달하는 스위스와 12%에 불과한 그리스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의 분포가 생활수준, 1인당 GDP 수준, 성장속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과 한국이 - 각각 소득수준이 상위에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인 - OECD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에, 1인당 GDP가 더 낮은 터키는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다. 이것은 정부신뢰가 문화적 요인들, 진화하는 기대들, 그리고 정치적 발전들에 대응하는 만큼, 장기적 경제발전이나 절대적 생활수준들과 대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론은, 시민들의 정부신뢰의 수준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부조치에 대한 기대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의 이용 가능한 증거들에 의해서 더욱 강하게 뒷받침 되고 있다(Box 1.1 참조).

그림 1.1. 2012년의 국가정부에 대한 확신과 2007년 이후 자신감의 변화

2007년과 2012년간 퍼센트 포인트 변화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설명: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퍼센트에 관한 자료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칠레, 독일, 영국의 자료는 2012년이 아닌 2011년의 자료이다.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자료는 2007년이 아닌 2008년의 자료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자료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의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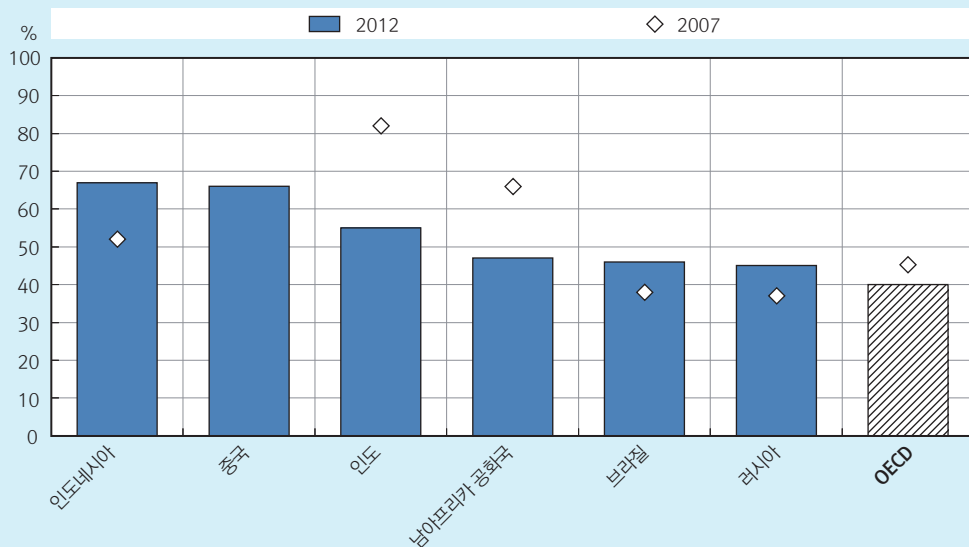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40>

Box 1.1. 브릭스(BRIICS) 국가들의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2012)

평균적으로 모든 브릭스(BRIICS) 국가들에서는, 다수의 시민들이 2012년에 그들의 국가정부에 대한 확신을 표시했다 (54%).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가장 높았고 (시민들 중 3분의 2), 남아프리카, 브라질과 러시아 연방이 (모두 45-47% 범위 안에 있음) 가장 낮았다. 모든 브릭스(BRIICS) 국가들에서 정부신뢰는 OECD 평균(40%)보다 더 높았다. 2007-12년 동안, 모든(중국은 제외) 브릭스(BRIICS) 국가들의 국가정부에 대한 확신은 평균 3%p 포인트 감소했으며, 이것은 모든 OECD 회원국가들 (평균5%p 감소) 보다 더 낮은 것이었다. 자신감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15%p), 인도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27%p). 모든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모든 브릭스(BRIICS) 국가들의 자신감 수준이 더 높은 것은 문화적이면서 맥락적 요인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상이한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로 인해 시민들이 정부 서비스와 성과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상이한 기대치로도 설명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간에는 정부신뢰의 최적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정부신뢰의 최대 수준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브릭스(BRIICS) 국가들에서 정부에 대한 자신감은 OECD 보다 더 높다



설명 : 이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국가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까 또는 없습니까? 국가 정부는 어떻습니까?”
출처 :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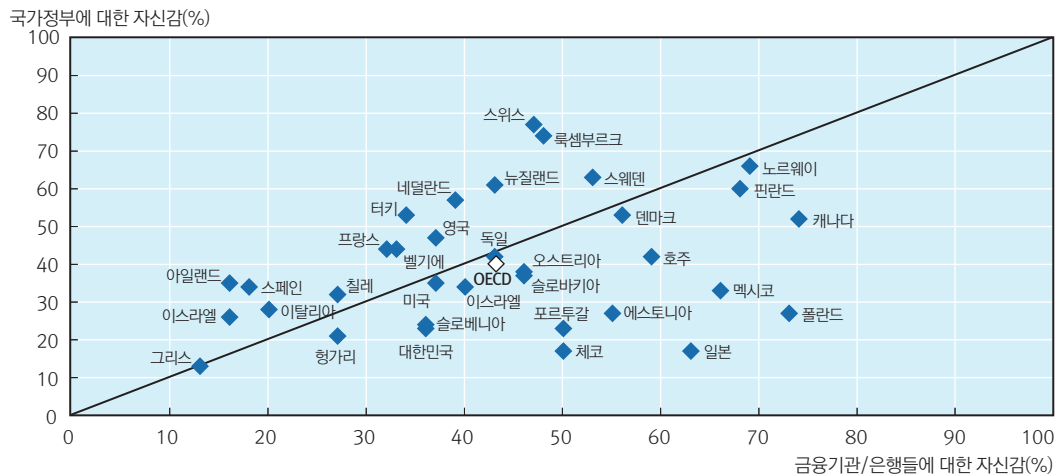
둘째, 증거에 따르면 2012년에 정부신뢰의 평균수준은 2007년의 위기가 있기 전 수준보다 낮았다(그림 1.1의 아래 쪽 패널). 2012년에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를 표시한 응답자들의 비중은 2007년보다 평균 5%p (45%에서 40%)로 더 낮다. 이러한 비교는 국가수준에서의 훨씬 더 큰 변화들이 있었음을 감추고 있으며, 실제로 OECD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이 2007년에서 2012년간 정부신뢰의 감소가 있었음을 보고했다. 정부신뢰의 더 큰 하락은 정치위기나 재정 또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나라들에서 발생했으며, 이러한 나라들은 그리스,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벨기에, 포르투갈이

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부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했고, 특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영국, 폴란드,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웨덴에서 증가했다.

셋째, 정부신뢰는 평균적으로 민간부문의 2개의 핵심 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유사하다; a) 금융 기관들과 은행들; 그리고 b) 언론,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모든 OECD 국가들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들(variations)이 있다. 전체적으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금융 기관들과 은행들은 정부보다(40%) 약간 더(43%) 신뢰를 받고 있다(그림 1.2 참조).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았던 일부 국가들에서는 금융 기관들과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신뢰를 향유하고 있고, 이러한 나라들은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멕시코, 호주, 일본이다. 반대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국가들에서는 정부신뢰가 금융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이러한 국가들은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이다.

그림 1.2. 정부와 비교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2012년 금융기관/은행들과 정부에 대한 자신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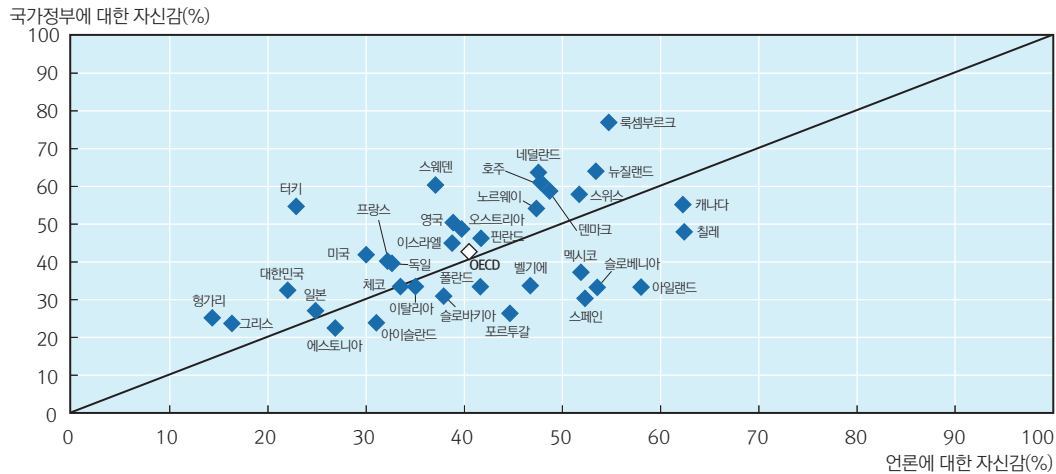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자료는 다음 질문에 대한 “예” 응답의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부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금융기관과 은행들에 대한 자신감 자료는 다음 질문에 대한 “예” 응답의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기관과 은행들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칠레, 독일, 영국의 자료들은 2011년이 아닌 2010년의 자료이다. 선의 아래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금융기관과 은행들에 대한 자신감이 정부에 대한 자신감보다 더 높은 국가들이다.

출처 :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59>

언론에 대한 신뢰는 2010년에 - 자료가 사용 가능한 연도인 -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정부신뢰보다 상당히 더 높았으며, 반면에 터키, 스웨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서는 상당히 더 낮았다(그림 1.3 참조).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정부신뢰가 가장 크게 약화된 국가들을 포함하고,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은 정부신뢰가 가장 높고 가장 안정적인 수준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는 언론에 대한 신뢰보다 정부신뢰의 전개를 더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는 정부신뢰와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뢰의 비교에서 - 후자가 전자를 지배하는 역동성을 보여주면서 - 일어날 수 있다.

그림 1.3. 언론과 정부에 대한 신뢰
국가정부와 언론에 대한 자신감의 비교(2010)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는 응답의 비율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부에 대하여는 어떻습니까?” 언론에 대한 자신감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는 응답의 비율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의 질과 진실성은 어떻습니까?”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자료는 2010년이 아니라 2008년 자료이다. 스위스와 에스토니아의 자료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의 자료이다. 선 아래에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 언론에 대한 자신감은 정부에 대한 자신감보다 더 높다.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78>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정부신뢰는 다면적인 것이며, 시민들과 정부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의 혼합에 기초하고 있다. 광범위한 실증적 문헌은 정부신뢰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파라미터들(parameters)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을 4가지의 광범위한 그룹으로 식별한다: 1) 문화; 2) 제도적인 설정(institutional setting); 3) 경제적 사회적 결과물들; 4) 기관들의 성과. 관련된 결정요인들의 범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있는 반면, 그들의 영향력이 갖는 중요도와 그들의 신뢰와의 상호적인 관계에서의 깊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일반적인 발견은 정부신뢰와 그것의 결정요인들 대부분이 상호 연결되어 있고, 자기충족적이라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공공 거버넌스와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Bouckaert(2012)는 정부신뢰는 3가지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거시적 수준에서 정부신뢰는 정치적 제도, 민주주의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중간 수준에서 정부신뢰는 정책결정과 - 경제사회적 현안들을 관리하고, 미래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만들어 내는 정부의 능력 -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시 수준에서, 정부신뢰는 서비스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말한다. 비록 구분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이들 세가지 수준들은 상호작용 하며, 한 수준에서 정부신뢰에 상당한 지연이 있으면 다른 차원들에서의 정부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그러므로, 서로 다른 영역 각각에서 모두 동반 상승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Bouckaert의 분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특별히 유용하다. 첫째, 그의 분류는 정부신뢰가 정부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들이 그들의 행동과 정책들을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것도 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그의 분류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하여, 공공정책들 중 무엇이나 뿐만이 아니며, 어떻게(how), 누구를 위하여(for whom), 누구와 함께(with whom)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민과 민간기업들에게는 최종 결과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과정들(processes) 역시 중요한 것이다.

정부신뢰에 관한 공공 거버넌스의 차원은 제도적 설정과 그것의 성과라는 개념을 시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을 요약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과정 요소들(process components)로 분해하여 보면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OECD는 아래의 요소들을 제안한다:

- 신뢰성(Reliability):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정부의 능력.
- 대응성(Responsiveness): 공공의 필요와 기대들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시민지향적인 공공서비스의 공급.
- 개방성과 포괄성(Openness and Inclusiveness): 이해관계자들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제도화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방법,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투명성, 책임성과 참여를 개선하는 수단으로서 적절하고 사용 가능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상호작용이 촉진되는 것.
- 청렴성(Integrity):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부패를 방지하면서 공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행동의 폭넓은 원칙, 기준들을 정렬하는 것.
- 공정성(Fairness):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과정들에서 시민들(그리고 민간기업들)을 절차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대우하는 것.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내용에서, 우리는 거버넌스 영역에서 정부신뢰의 잠재적 결정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Bouckaert의 3가지 수준의 기본 틀을 사용하고, 통계적 상관관계를 시사하는 국제적 연구조사들의 증거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아직도 인과관계 측면에서 결정적인 것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예비적 활동이지만,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안내해 줄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거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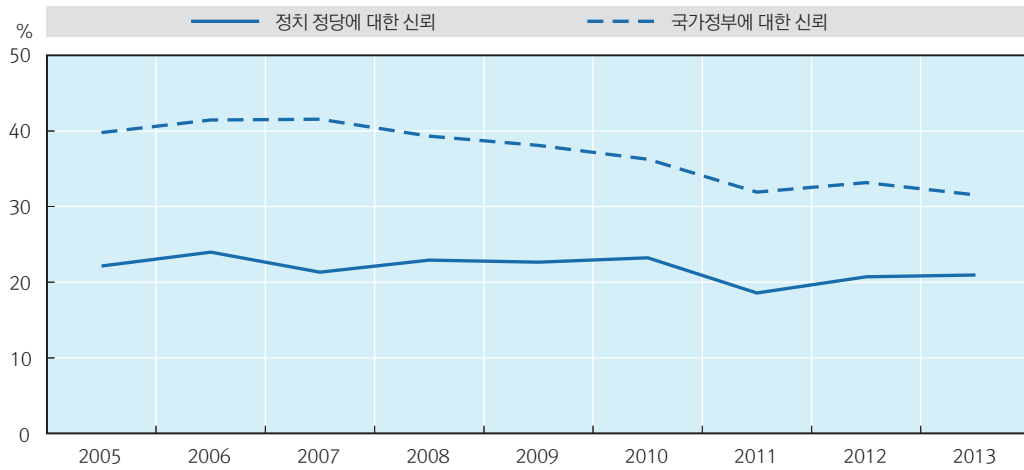
거시 수준에서, 정부신뢰를 위해 중요한 것은 정치적 제도와 민주주의의 기능이다. OECD의 회원이 되기 위한 중대한 전제조건은 잘 발달된 정치적 제도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²

정치적 제도/기관에 관하여, 최소한, 자료들이 이용 가능한 유럽국가들에서는 시민들이 정치적 정당들 보다 정부를 더 많이 신뢰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림 1.4와 1.5 참조). 2013년에는, 유럽의 OECD 회원국들 중 오직 한 국가에서만 - 덴마크 -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적 정당들을 같은 수준에서 신뢰한다.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는 정치적 정당이 덜 신뢰 받고 있다. 정치적 정당들은 재정 위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던 국가 - 응답자의 10% 아래 - 에서 가장 적게 신뢰를 받았는데, 이는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이외에도 결과와 과정 양자 모두에서 법의 지배 원리를 고수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이런 곳에서는 법률이 기본권을 보호하며 재판은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민들이 그들의 국가정부와 사법시스템에 대해 갖는 자신감들 간의 강한 상관관계에서도 나타난다(그림 1.6 참조).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결과물이자 핵심 거버넌스 차원을 의미하며, 이는 청렴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측정 수단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다. 그렇지만 유권자들의 투표율과 신뢰간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서로 경쟁하는 가설들이 존재한다 - 첫 번째 가설: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으면 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경쟁가설: 현정부에 대한 더 낮은 신뢰는 그를 패배시키기 위하여 투표하려는 더 높은 투표 성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신뢰와 유권자 투표율간의 상관관계수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림 1.4. 2005-13년의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정치정당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보다 훨씬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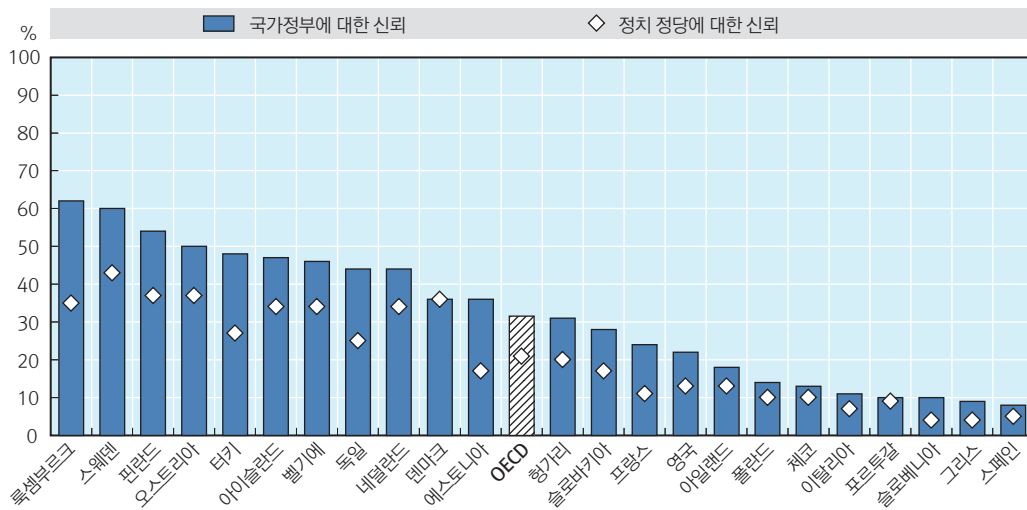


설명: 자료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다음 기관들의 각각에 대하여, 당신이 그 기관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 주시오: (국가)정부; 정치 정당.” 자료는 23개 OECD 회원국들의 연 평균에 관한 것이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출처: Eurobarometer(database), OECD calculation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97>

그림 1.5. 유럽 OECD 회원국들에서 정치 정당과 정부신뢰(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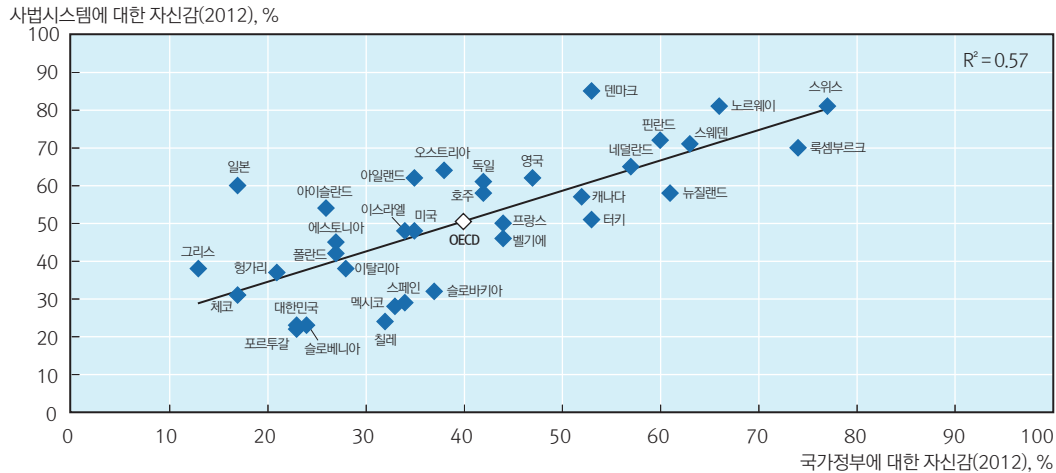
설명: 자료는 다음 질문들에 대해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다음 기관들의 각각에 대하여, 당신이 그 기관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 주시오: (국가)정부; 정치 정당.” 자료는 23개 OECD 회원국들의 연 평균에 관한 것이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출처: Eurobarometer(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816>

시민들이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할 때, 그들은 국가 지도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된다(R2:0.9)(그림 1.7 참조). 이 지도부가 단지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지 또는 고위 관료들까지 포함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점은 공공 거버넌스에서 지도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정부의 비전과 성과 그리고 청렴성을 뒷받침하는 잘 기능하는 정치 행정적 접점(interface)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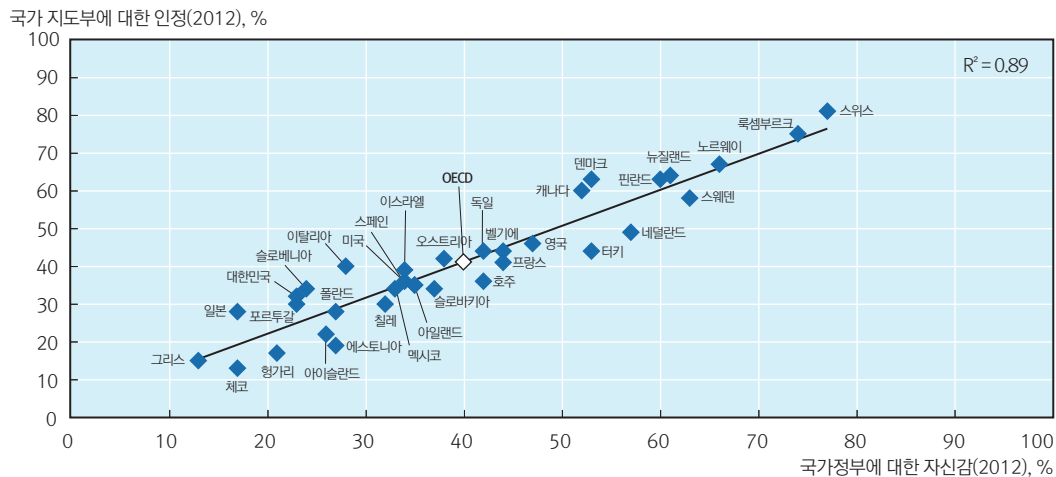
그림 1.6. 사법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은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의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과 사법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 (2012)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말한 응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시스템에 대한 자신감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법시스템과 법원은 어떻습니까?” 칠레, 독일, 영국의 자료는 2012년이 아닌 2011년 자료임.
출처: World Gallup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835>

그림 1.7. 지도부는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의 열쇠이다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과 국가의 지도부에 대한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2012)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 각 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국가리더십에 대한 인정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인정”이라고 답한 비율(%)을 말한다: “당신은 이 나라 지도부의 업무성과를 인정합니까 또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칠레, 독일, 영국의 자료는 2012년이 아닌 2011년 자료이다.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854>

중간 수준

중간 수준에서, 정부신뢰는 전략적 정책결과 - 정부의 경제 사회적 현안들을 다루고, 미래의 복지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생산해 내는 능력 - 관련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전략적 정책형성의 구성요소와 결과물들을 - 예산관행(제4장)뿐만 아니라, 공정성(제2장), 위험관리(제2장), 재정적 지속가능성(제2장), 재정수지균형(제3장), 채무 수준(제3장)과 같은 -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표들을 정부신뢰의 수준과 변화에 관련시켜 보면, 그 어느 것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회적 보호(실업, 보험, 연금, 복지를 포함한)에 대한 지출수준은 정부신뢰 수준과 보통 정도의 상관관계를 ($R^2: 0.44$) 보이고 있다. 사회적 프로그램들은 상당한 수의 국가들에서 재정 건전화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신뢰는 시민들과 국가 간 사회적 계약의 변화로 보여지는 이 프로그램들의 구성과 접근 규칙들의 변화로부터 추가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공공 신뢰에 대한 영향은 개혁들이 실행되는 과정들에 의해 완화될 수 있다. 이것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정에 도달하는 과정의 측정과 - 의사결정의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 결과물의 측면 - 누가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와 부담이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지는가에 초점을 두는 - 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신뢰 자체가 추가적으로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참여를 격려하고, 의사결정자들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기준과 증거에 대한 신뢰를(그리고 이에 따른 결정의 정당성을) 통해 가능하다.

재정적 신중함이 정부신뢰와 필연적으로 직접적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재정이 정상적일 때에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우선적인 관심대상이 된다. 이것은

그림 1.8. 공공부채의 역할은 재정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서만 중요하다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2012)과 공공부채(2011)간의 상관관계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공공부채는 일반정부의 총 재정 부채에 관한 것이다. 칠레, 독일, 영국의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자료는 2012년 이 아닌 2011년의 자료이다.

출처 : World Gallup Poll; and OECD (2013), “OECD Economic Outlook No. 93”,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May 2013, <http://dx.doi.org/10.1787/data-0065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873>

심각한 공공부채를(눈여겨 볼 것 참조) 갖고 있는 유럽의 5개 국가에서의 부정적이고 강한 상관관계($R^2: 0.81$) 보여주는 그림 1.8에 잘 정리되어 있다. GDP대비 높은 부채수준은 정부의 신뢰성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능력에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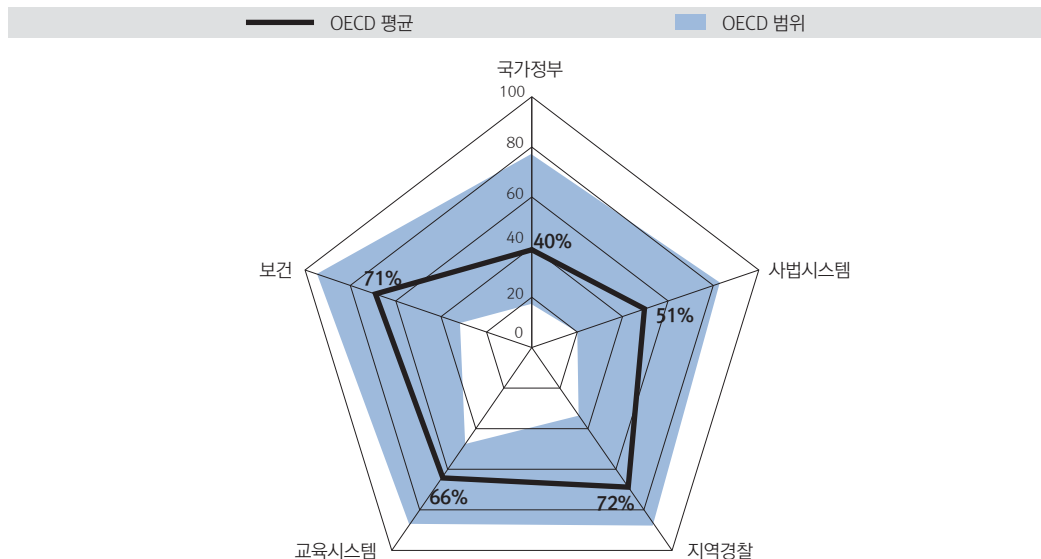
미시 수준

미시 수준의 초점은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통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경험에 있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정부 신뢰보다 훨씬 더 높지만, 더 높은 서비스 만족도가 반드시 정부에 대한 증가된 자신감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들로부터 나온 증거들은 시민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공공부문의 서로 다른 영역들과 기구들을 구분할 수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그림 1.9). 2012년 OECD 모든 회원국들의 평균을 보면, 자신감이 가장 높은 분야는 지역경찰과 보건(각각 72%와 71%)이고, 다음으로 교육(66%), 사법시스템(51%)의 순서이며, 가장 낮은 분야는 국가정부(40%)이다. 이것은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부신뢰의 수준을 밝힐 때 그들은 서비스가 전달되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행위자, 기관, 규제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어느 요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 그림 이외에도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감간의 관계 측면에서 국가간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측정값 간의 차이는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그림 1.9.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정부신뢰보다 더 높다(2012)



설명: OECD 평균은 모든 국가들의 2012년 자료에 기초했으며, 다만,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과 영국의 데이터는 2012년이 아닌 2011년의 자료이다. 국가정부에 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사법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찰에 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 혹은 지역에서, 당신은 지역 경찰에 대하여 자신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당신은 교육시스템 혹은 학교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보건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만족”이라고 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당신은 고급 보건서비스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만족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892>

일본, 슬로베니아, 체코에서 특히 크게 나타나지만 스위스, 룩셈부르크, 터키에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이 서로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제시된 것과 같이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현재의 답변들은 일부 국가들에서 기관들로서의 정부나 공공행정 보다는 정치 시스템에 관한 더 단기적인 인식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정부신뢰는 서비스가 전달되고, 정부 성과와의 연계가 더 구체적인 지역 수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신뢰는 또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정부수준들과 공공기관의 서로 다른 형태들에 걸쳐서 나타나는 정부신뢰의 변형들에 대한 탐구는 정부에 대한 대중의 인식들을 형성하는 요소들과 공공행정의 영역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책수단들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서비스의 질에 관한 제9장은 서비스의 질(quality)에 관한 일반적인 틀에 기초한다(표 1.2 참조). 이 장은 질의 중요한 관점들에 의해 제시되는 현행 서비스의 질에 관한 지표들로 - 접근, 시기적절성, 신뢰성과 서비스 만족 - 구성되어 있다. 덧붙여서 온라인 정부서비스의 개시에 관한 자료도 이 서비스들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업들, 그리고 시민들의 높아진 의존을 고려하여 제시된다. 이러한 서비스 질의 차원은 포괄성(접근), 대응성, 신뢰성과 같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핵심 거버넌스 차원들의 일부와 중복된다. 질과 관련된 이러한 핵심 차원들이 다양한 측면(facets)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도로써 자료들이 이용 가능한 4가지 정책영역의 각각에 대하여 한가지 측면을 제시한다: 비용감당능력, 시기적절성, 정확성과 보고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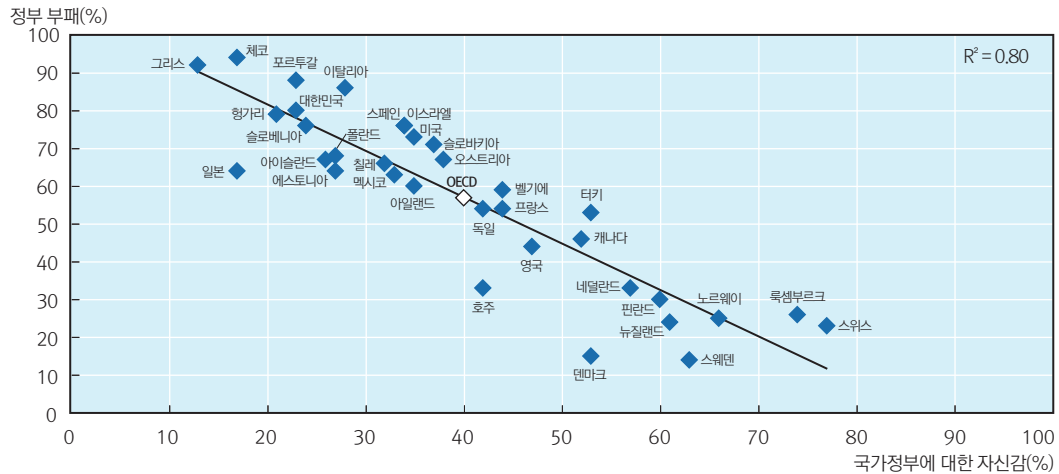
표 1.2. 서비스 질의 기본 틀

접근가능성	대응성	신뢰도	만족도
비용감당능력	시기적절성	정확성/능숙함/고객의 권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을 받을 가능성)	보고된 만족도(인식)
지리적 인접성	필요와 서비스의 "매치"	실재하는 기능(시설, 설비 등)	보고된 신뢰(인식)
장애인들을 위한 적응성	고객서비스(공손함과 대우)	일관성/공정성	
서로 다른 문화들에 대한 적응성 (예, 언어 등)	통합서비스(모든 전달경로에 대한)	보안(비밀보호, 안전)	
전자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보격차)			

청렴성: 전분야에 걸친 이슈

부패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그림1.10 참조) 청렴성은 정부신뢰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본질적 공공 거버넌스 과정들인 청렴성의 도구와 메커니즘들은 결과물인 부패를 방지하고 행위의 높은 기준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부패의 방지와 높은 행위 기준들은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공익을 보호하고, 정책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되찾게 해준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차하는 위험성이 높은 영역들을 담당하는 정책도구들은 - 이해갈등의 효과적 관리, 공공부문에서의 높은 행위 기준, 적절한 로비와 정치적 금융 규제를 포함하는 -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고 공익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림 1.10. 부패를 조심하라!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간의 상관관계(2012)



설명: 국가정부에 대한 자신감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정부는 어떻습니까?”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고 답한 비율이다: “정부 전반에 부패가 널리 퍼져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칠레와 독일 그리고 영국의 자료들은 2012년이 아닌 2011년 자료이다.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911>

이 출판물은 정부 내 청렴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관리 관행들에 관한 지표들을 담고 있다: 제8장, “이해 충돌과 재산공개”; 제8장, “예산 투명성”; 그리고 제7장, “공공 조달과 중소기업 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

결론

최근의 재정·경제 그리고 사회적 위기의 제도적 도전들에 대한 경험은 현대의 경제·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신뢰의 역할은 지도자들과 분석가들에 의해 더 나은 위기 관리, 더 나은 성과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놓치고 있던 요소로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정부신뢰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다중 섹터와 다중 행위자가 요구되는 중기적 시야를 가진 의제이다. 첫째, 정부신뢰에 관하여 그것의 결정요인에 대한 더 나은 식별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측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의 개념과 정부신뢰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와 지식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에 의한 정부신뢰의 주기적이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측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기존 연구조사들의 요소들을 결합한 새로운 조사방법이나 기존 연구조사들의 개선에 의해 [조사들의 대표성과 조사설계에 관하여, 그리고 질문 단어의 선택, 첨부된 등급(scales attached)을 포함하는 것] 수행될 수도 있다. 현재는 어떠한 국가 통계청도 정부신뢰의 측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둘째, 정부의 행동이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 내기 위해서는 분석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그 다음으로는 정부와 정부의 서로 다른 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정부 성과의 영역간의 관계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더 정교한 계량경제 기법들이 요구된다. 우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모든 수준들과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성들을 이해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달되고, 집행되는가에 있어서 국가 지도부, 다양한 정책섹터, 지방정부 수준의 서비스 전달 요원의 역할 등을 이

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OECD는 국제적 비교들의 개발을 도와주고, 정부신뢰를 다시 재건하는데 성공적이었던 전략들과 행동들을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서로 교환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이 작업의 선도자는 OECD 공공 거버넌스 논평(the OECD's Public Governance Reviews)의 일부로서 수행되는 - 다른 것들 중에서 - 특정국가사례연구들(country specific case studies)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신뢰를 새롭게 강조함으로써 공공 거버넌스에 시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수준에서 보면 이것은 시민들과 국가간의 사회적 계약이라는 개념을 보강 하도록 하며, 보강된 개념에서는 전자가 세금을 내고 법을 준수하는 방식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공정책을 수용하고 공공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협력함으로써 기여하게 된다. 그렇지만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투명하며, 더 수용적이고 더 효율적이 될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가 효과적인 공공정책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알아보고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정책들과 개혁안건들을 더 잘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정책과 개혁안건들의 결과물들도 개선될 것이다.

미주

1. GOV/PGC(2013)1을 찾아보기 바람([www2.oecd.org/oe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2013\)1](http://www2.oecd.org/oe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2013)1)).
2. 이 출판물은 (“국가의 맥락적 요소들 부록”에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함) 각 회원국들의 정부구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관들에 관한 기본정보들도 담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는 출판물의 다른 지표들에 의해서 포착된다.

참고문헌

- Aghion, P., Y. Algan, P. Cahuc and A. Shleifer(2010), “Regulation and distru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25(3), Oxford, pp. 1015-1049.
- Algan, Y. and P. Cahuc(2010),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 1, North-Holland Publishing, Amsterdam.
- Blind, P.K. (2007),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view of literature and emerging issues”, in *7th Global Forum on Reinventing Government Building Trust in Government*, pp. 26-29.
- Bouckaert, G. (2012), “Trust and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Vol. 60, No. 1, pp. 91-115.
- Bouckaert, G. and S. van de Walle (2003),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Vol. 69(3), pp. 329-344.
- Dalton, R.J. (2005),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Trust in Government”,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Vol. 15, No. 1, March, pp. 133-154.
- Dasgupta, P. (2009), “A Matter of Trust: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Annual Bank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ABCDE), Seoul, June.
- Easton, D. (1965),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John Wiley, NewYork.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York.
- Gyorffy, D. (2013), *Institutional Trust and Economic policy*,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Budapest.
- Johnston, W., H. Krahn and T. Harrison (2006), “Democracy, Political Institutions, and Trust: The Limits of Current Electoral Reform Proposals”, *Th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Vol. 31.2, pp. 165-182.
- Kampen, J.K., S.V. DeWalle and G. Bouckaert (2006), “Assessing the relation between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 delivery and trust in government: The impact of the predisposition of citizens toward government on evaluations of its performance”,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Vol. 29(4), pp. 387-404.
- Knack, S. and P.J. Zak (2003), “Building trust: Public policy, interpersonal trust, and economic development”,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No. 10, pp. 91-107.
- Knack, S. and 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 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4), Oxford, pp. 1251-1288

- Murphy, K. (2004), "The role of trust in nurturing compliance: A study of accused tax avoiders", *Law and Human Behavior*, Vol. 28(2), pp. 187-209.
- Nooteboom, B. (2006),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Trust*, Tilburg University.
- Putnam, R.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York.

정부신뢰 혹은 자신감을 측정하는 국제 설문조사 : 웹 링크

World Gallup Poll: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World Values Survey: www.worldvaluessurvey.org.

Eurobarometer: www.ec.europa.eu/public_opinion/index_en.htm.

Edelman Trust Barometer: www.edelman.com/insights/intellectual-property/trust-2013.

Latinóbarometro: www.latinobarometro.org.





제2장. 전략적 거버넌스

이 장은 정부를 위한 핵심적 전략적 결과지표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 중 일부는 엄선한 정책 부문들과 정부 활동들의 성과와 관련 있으며(조세행정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사법에 관한 효율성과 효과성 측정과 같은), 해당 정책공동체들이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규약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다른 지표들은 법의 지배, 위험관리 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정부 전체”의 성과를 나타낸다. 어떤 지표들은 또한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줄이려는 정부의 렌즈역할을 통해 법의 지배와 공정성과 같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핵심 원칙들을 반영한다. 지표들은 대부분 짧은 시간 기간에 중점을 두며(몇 개의 선택된 년도들에 나타난 값들), 반면에 재정 지속가능성은 정부의 재정적 위치를 2030년까지 투사한다. 이 지표들의 다양성은 정부가 수행해야 할 광범위한 책임성은 물론 정부에 대한 시민과 기업들의 다양한 기대들을 보여 준다. 이 모든 지표들은 전략적이다: 이들 모두는 사회·경제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 지표들 중 많은 것들은 다른 행위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정부 기능들의, 예를 들면, 법의 지배나 위험관리, 성과를 반영한다.

정부신뢰는 정부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행동을 할 것이라는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의 확신을 나타낸다. 이것은 정치 시스템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들 중의 하나이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통치능력에 영향을 주고 정부가 강제 없이도 행동할 수 있게 하므로, 사회통합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그의 기관들에 대한 신뢰는 또한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의 선호도, 정당하고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정부의 성과에 대한 그들의 인식 간의 조화에 의존한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매우 문화적으로 규정되며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신뢰가 높은 국가로는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있으며 신뢰가 낮은 국가로는 동유럽 국가들이 있고(그림 2.1), 정부신뢰의 수준은 경제 환경, 자연 재해 또는 부패의 정도와 같은 많은 맥락적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신뢰는 주로 인식조사(perception survey)에 의해서 측정된다. 문화적 요소와 그 밖의 맥락적 요소들의 영향 때문에 국가들 간의 비교를 해석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신뢰의 절대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신뢰수준에서의 변화들이 더 나은 직관을 제공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적인 OECD회원국들의 국가 정부신뢰는 45%에서 40%로 5%p 감소하였다. 심각한 금융, 경제, 재정 위기를 경험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그리스 그리고 아일랜드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슬로바키아, 스위스, 이스라엘,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승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은, 국민들이 국가 정부에 대한 그들의 신뢰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그들이 정치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교육, 보건, 공공안전 그리고 사법서비스와 같은 주요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이다. 독립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임사항들에 해당한다. 시민들은 국가정부의 추상적 개념보다는 이러한 공공 서비스에 더 높은 신뢰를 - 또는 만족 - 나타내고 있다(그림 2.2).

2012년도에 모든 OECD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신뢰/만족이 가장 높은 분야가 경찰이었고(응답자들의 72%가 경찰에 신뢰를 표시), 다음으로 보건과(71%) 교육이(66%) 매우 근접한 수준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사법시스템(50%) 순이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Gallup World Poll이 수집했다. World Poll은 비례 층화확률표집(proportional 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당 1,000명의 시민을 샘플사이즈로 하고 있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www.gallup.com/strategicconsulting/en-us/worldpoll.aspx.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Trust in government, assessing the evidence, understanding the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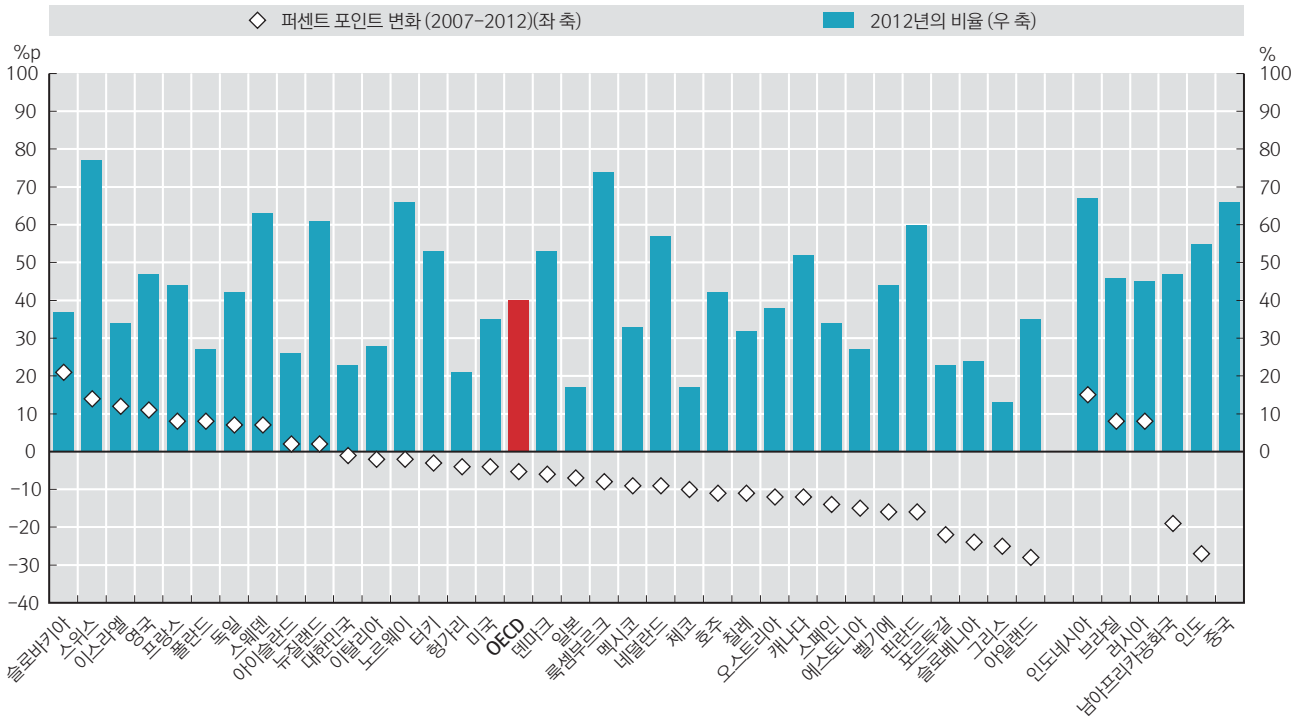
그림 설명

칠레, 독일 그리고 영국의 데이터는 2012년이 아닌 2011년의 것이다.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는 2007년이 아닌 2008년의 것이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위스 자료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의 자료이다

- 2.1: "당신은 국가정부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관한 것이다.
- 2.2: 일본, 대한민국 그리고 멕시코의 자료는 2012년이 아닌 2011년의 자료이다. 사법 시스템 자료는 다음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이 나라에서 당신은 다음의 각각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법시스템과 법원은 어떠한가?" 지역 경찰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을 말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당신은 지역 경찰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교육 시스템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말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당신은 교육시스템 또는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보건 자료는 다음 질문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에 관한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당신은 수준 높은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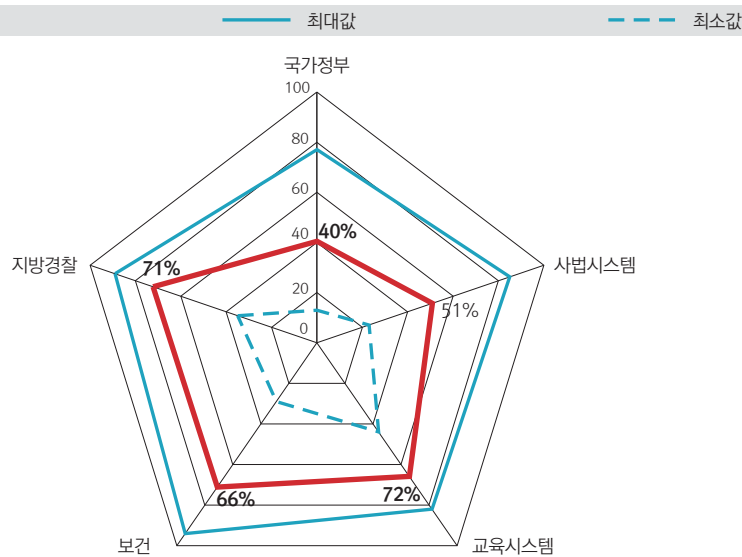
2.1. 2012년의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와 2007년 이후 신뢰의 변화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740>

2.2. 정부 기관들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2012)



출처: Gallup World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930>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하나는 정부가 따르는 과정과 - 절차적 정의 - 정부가 성취하는 결과 - 배분적 정의 - 양자 모두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s)을 만드는 것이다. 후자(배분적 정의)의 핵심요소는 개인들의 경제·사회 복지에 대한 서로 다른 기여도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이 성과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도에서 수입 차이의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불평등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해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긴밀히 연결된 두 가지 목표들은 누진과세(progressive taxation)와 현금이전(예: 연금, 실업보험)을 통한 소득 불평등의 완화로 이어진다.

1980년대 이래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간의 소득 격차는 더 넓어지고 있으며(OECD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이것은 경제적 성장의 혜택이 개인들간에 평등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계화, 기술적 변화, 규제와 제도의 개혁, 이들 모두가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결정요인들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적 경제위기는 실업자와 불안전 고용자들에게 위기에 따른 대부분의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인구의 각각 다른 그룹들에게 고르지 않게 영향을 줌으로써 이러한 국면들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사회 내의 소득 불평등과 경제발전에 대한 그것의 장기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정책의 혼합을 채택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와 보험 체계는 현금이전과 누진적인 소득세의 조합을 통해서 작동되어 오고 있다. 덧붙여서 위기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수요를 부양하고 더 가난한 가정을 보호하는 특별한 경기부양 패키지들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간에, 또한 더 많은 수요가 있는 노령층에게 지원책을 제공하기 위해 세대 간 기준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방식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니 계수는 한 국가 내에서의 소득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현금이전과 세금을 통해 중앙정부가 야기하는 사회적 보호 시스템에 대한 영향은 세금과 현금 이전과 이후의 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 중 세금 부과 전 소득 불평등 수준은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크기에 변화가 없었다(0.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와 같이 일부 국가들에서는 지난 5년간 세금 부과와 현금 이전을 하기 전 불평등의 지속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0.26인 지니 계수(평균은 0.16에 비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개입은 필수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칠레는 두 연도 사이에 가장 적은 재분배를 한 나라로 남아있으며, 지니 계수에 대해 영향은 0.02수준이다. 모든 국가들은 또한 누진소득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칠레는 아일랜드보다는(누진단계 간) 세율 차이가 더 적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니 계수의 값은 0 과 - 주민 각자가 같은 소득을 가질 경우 - 1에 - 가장 부유한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가질 경우 - 분포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과 가장 부유한 사람간의 격차는 소득 상위 10%의 평균소득 대비 하위 10%의 평균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재분배는 시장소득(즉, 공공연금이전과 가계의 세금을 조정하지 않은 총소득)과 가처분소득(즉, 현금이전과 세금을 고려한 순소득)의 지니 계수를 비교하여 측정한다. 가처분 가계소득의 정의에는 현물 이전(in-kind transfers)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료들은 소득불평등에 대한 각 국가들의 성과를 비교·응용하기 (benchmark) 위해 국가 데이터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인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에서 발췌되었다.

OECD Taxing Wages에서 가져온 세금자료는 과세년도에 적용 되는 세율을 사용한다.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과세년도와 통상 년도가 다르다. 자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평균임금의 67%를 버는 피부양자가 없는 독신자와 평균 임금의 167%를 버는 피부양자가 없는 독신자. 평균비율은 총 임금 소득의 비율을 나타낸다. 평균임금은 산업 내에서 성인이고 상근인 모든 노동자들의 연간 총 임금소득의 평균으로 측정한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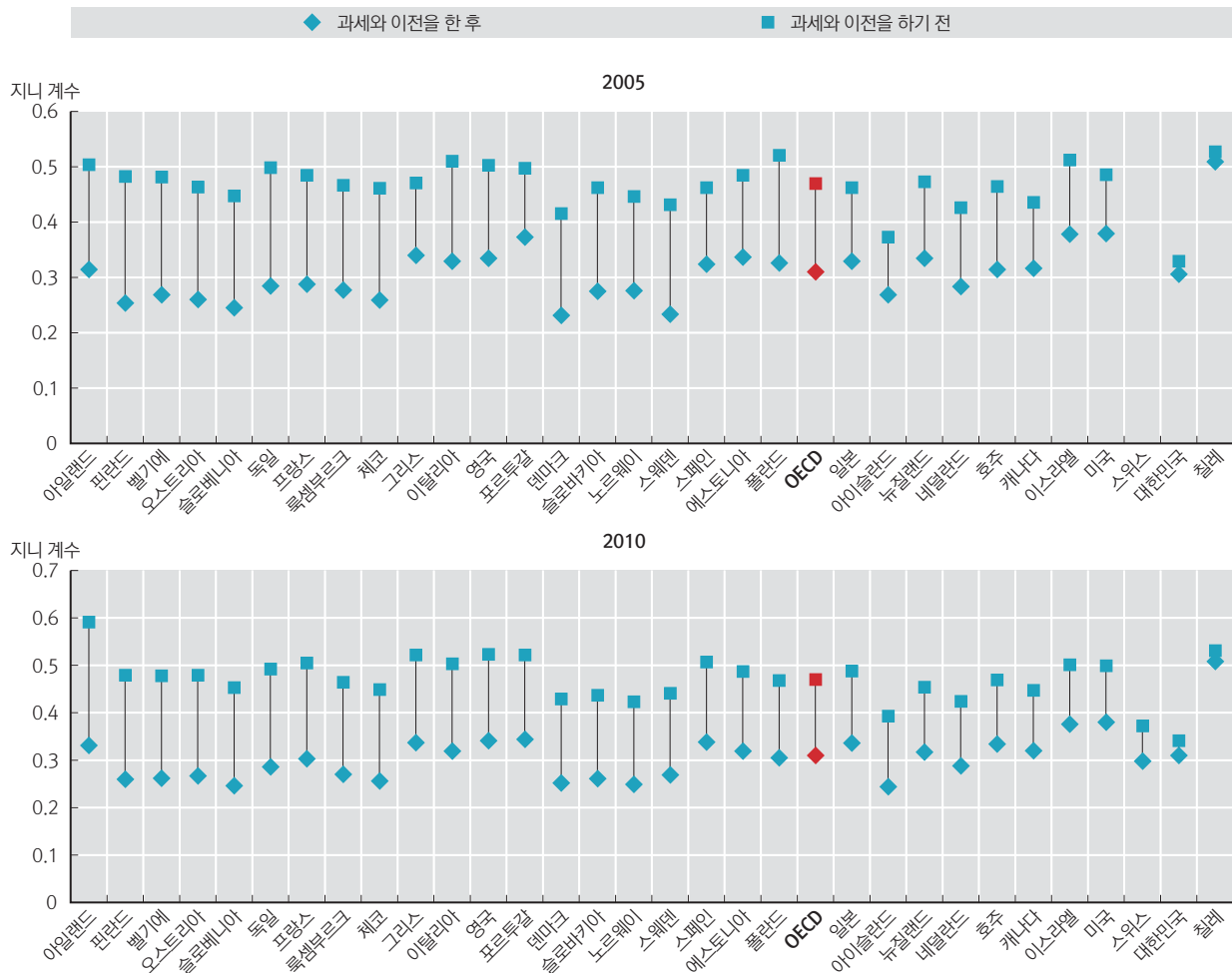
- OECD (2013), Taxing Wages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3-en.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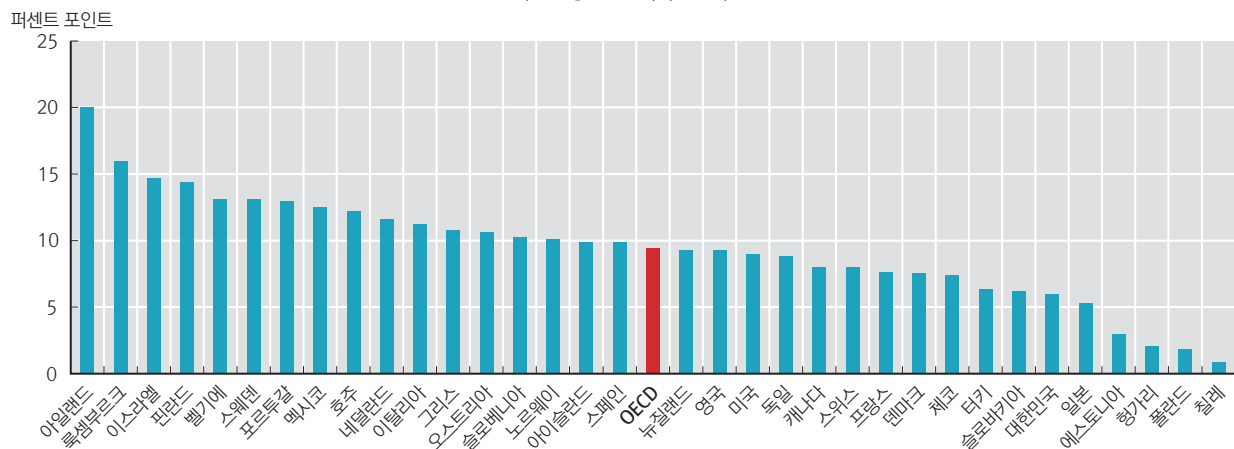
- 2.3: 헝가리, 멕시코 그리고 터키의 자료는 이용할 수 없음. 스위스의 2005년 자료도 이용할 수 없음. 2005: 호주, 핀란드, 독일, 이태리,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자료는 2004년의 것이다. 칠레,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료는 2006년의 것이다. 뉴질랜드 자료는 2003년의 것이다. 2010년의 칠레,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그리고 스위스 자료는 2009년의 자료이다.
- 2.4: 터키의 임금 수치는 평균근로자의 정의에 근거한다 (ISIC D, REV.3). 자료는 개인소득세와 사회안전에 관한 고용인의 기여금(총 임금소득의 %로서)을 합한 것이다. 칠레에서는, 평균 수입은 소득세가 면제되며 따라서 소득세는 총 조세수입에 미미한 영향만 미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2.3. 과세와 정부이전의 전과 후에서 소득 불평등의 차이 (2005년과 2010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949>

2.4. 평균소득의 167%와 67%를 버는 독신자에 대한 평균소득세율의 차이 (피부양자 없음) (2012)

출처: OECD (2013), Taxing Wages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tax_wages-2013-en.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968>

법의 지배

법의 지배란 정부를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법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은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신뢰성, 예측가능성 그리고 “법에 근거한 행정”을 위한 절차와 책임성의 체계를 통해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질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위한 일반적인 표준들의 한 묶음이 법의 지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법의 지배는 한 나라에 있어서 수준 높고 훌륭한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핵심적 차원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법의 지배는 몇 가지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가장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방법중의 하나인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가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의 지배 지표(Rule of Law Index)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법의 지배는 다음에 나오는 4가지 보편 원칙을 담고 있다: “정부와 정부의 공무원 및 기관들은 법에 근거해서 책임이 있다; 법은 명확 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안정적이면서 공정 해야 하고, 개인 및 사유재산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의 제정, 관리와 집행의 과정은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해야 한다; 재판은 자격이 있고, 윤리적이고, 독립적이고,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공동체 형성을 반영하며, 충분한 숫자의 대표성이 있고 중립적인 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는 그들의 법의 지배 지표의 기준을 형성하는 9가지 핵심요소를 개발하였다. 이것들 중 우리는 훌륭한 거버넌스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4가지 요소를 선택하여 소개 하고자 한다. 이들은 정부권력의 제한, 기본적 권리, 규제 집행, 소청이다. 덧붙여서 정부 자료의 공개는 별도로 제시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로 요약된 정보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인식을 나타낸다.

정부권력의 제한

정부권력의 제한은 7개의 핵심요인(하위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정부 권력은 기본법(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정부 권력은 입법부로 의해 효과적으로 제한된다; 정부 권력은 사법부에 의해 제한된다; 정부 권력은 독립적인 감사 및 재검토에 의해 제한된다; 정부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은 처벌된다; 정부 권력은 비-정부기구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권력의 이전은 법에 의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표는 단 하나의 정부기관이라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담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권한이 공식적 법률에 의하든 혹은 관례에 따른 것이든 간에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심지어 OECD 회원국들 간에도 정부권력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편차가 상당한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심하게 정부권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에, 터키, 멕시코와 그리스는 정부권력의 제한이 가장 약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이 지표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평균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정부권력에 관한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을 포함한 OECD의 파트너, 참여와 가입국들은 정부권력의 통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제한적이다.

이러한 복합지표에 합계된 하위요소(subfactor)들의 OECD 평균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점수로써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은 권력의 이전에 관련된 법률(0.87)(1점이 법의 지배에 관한 최고점을 의미)이고, 가장 발전이 늦은 분야는 정부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0.67)이며, 독립적 감사 재검토의 역할(0.73) 또한 발전이 필요한 요소이다.

기본적 권리

이 복합지표는 기본적 인권의 보호를 담고 있어서 결국 규범적 측정이다. 이것은 8가지 핵심요인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 피의자의 권리와 적법 절차;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신앙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집회와 결사 그리고 기본적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이 복합지표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확고히 설정되어 상대적으로 이견이 없으면서 법의 지배와 훌륭한 거버넌스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그러한 권리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점은 거의 0.8점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강력하게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권력의 제한에 대한 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적인 권리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가장 잘 보장되고, 뉴질랜드와 스페인 이 그 뒤를 잇고 있는 반면에, 가장 낮은 국가 역시 앞서 언급되었던 3개 국가인 터키, 멕시코, 그리스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간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R^2=0.81$). 그렇지만 규제집행의 절차는 OECD 회원국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트너와 참가국 들은 경우는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이 OECD 평균 보다는 비록 낮지만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는 기본적인 권리가 매우 잘 보장되는 반면에, 그 외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이집트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경우는, 차별이 없는 평등한 대우라는 요인(0.7)은 추가적으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한 반면에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의 보장(0.86)은 가장 발전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규제집행

복합적인 규제집행 지표는 규제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는 정도를 측정한다. 이것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대한 것은 평가하지

아니하며, 단지 규제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집행되는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는 영역인 공중보건, 사업장의 안전, 환경보호, 상업적 활동과 같은 분야들을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 지표의 핵심요인은 정부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 정부규제가 부당한 영향력 없이 적용되고 집행되는지; 행정적 절차는 불합리하게 지연되지 않으면서 진행되는지; 적법 절차가 반영되는지; 정부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합리적 보상을 하지 않고는 점·수용(appropriate)을 하지 않는지로 구성된다. 결국 이 지표는 컨설팅에 초점을 두었던 한눈에 보는 정부지표 2009에서 제시한 규제의 품질관리 지표들인 규제영향 평가와 규제간소화와는 다른 것이다.

규제집행은 스웨덴, 일본, 덴마크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강하며, 호주, 노르웨이, 네덜란드, 핀란드, 뉴질랜드가 근접해서 그 뒤를 잇는 반면에, 멕시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OECD 평균점은 0.71이며, 전반적으로, 많은 OECD 회원국들은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파트너와 참가국들은 모두 OECD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잘하는 곳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며, 가장 못하는 곳은 우크라이나이다.

규제집행의 요인들을 살펴보면, 정부규제의 집행과 적용에 관한 부당한 영향력은 상당히 드물어서 가장 높은 점수(0.77)를 받았고, 반면에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효과적 집행(0.67)이라는 요인이다.

소청

소청 지수는 보통 국민들이 민사사법 체계를 통하여 그들의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측정하며, 이 시스템은 접근 가능하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공정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유능할 것을 요구 받는다. 구성요소들은 국민들이 소청에 접근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 여부; 소청이 차별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 소청이 부패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 소청이 부당한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 소청이 불합리한 지연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여부; 소청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여부; 분쟁해결의 다른 대안들이 접근가능하며 공정하고 효과적 인지 여부이다.

소청에 대한 접근성은 네덜란드, 독일 뿐 아니라 북유럽에서 가장 높다. 이탈리아, 멕시코와 터키는 소청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은 OECD 회원국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법의 지배에 기여하는 핵심요소 4가지 - 제한된 정부권력, 기본적 권리, 규제집행 그리고 소청 - 들 중에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성과가 가장 낮은 분야는 소청(0.69)이고, 바로 조금 밑에 규제 집행(0.71)이 있으며, 반면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파트너 국가들 중에 가장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OECD 회원국들에 있어서, 소청시스템에 관한 가장 큰 접근성 문제는 시기적절성(0.47)이며, 반면에 시민 사법의 부패로부터의 자유는 가장 높은 점수(0.8)를 기록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 의해서 법의 지배 지표의 개념적 틀에 기초한 5가지의 설문지들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설문지들은 해당국가의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에게 배포되었다. 평균적으로 설문에 대답할 자격이 있는 지역 전문가들은 국가당 300명 이상이며, 지역의 여론조사회사들이 일반인들에 대한 조사 진행에 참여한다. 8개 파트너 국가와 참가국들뿐 아니라 28개 OECD 회원국들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복합지표 각각의 점수를 매기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변수들은 코드화 되고, 0과 1 사이에서 정규화(normalized) 된다. 여기서 1은 가장 높은 점수이고, 0은 가장 낮은 점수이다. 선정된 요소들인 정부권력의 제한(2.10), 기본적 권리(2.11), 규제집행(2.12) 그리고 민사사법(2.13)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3172>, <http://dx.doi.org/10.1787/888932943191>, <http://dx.doi.org/10.1787/888932943210>, <http://dx.doi.org/10.1787/888932943229>

더 읽어볼 것

Aghast, M. et al. (2013), *WJP Rule of Law Index 2012-2013*, The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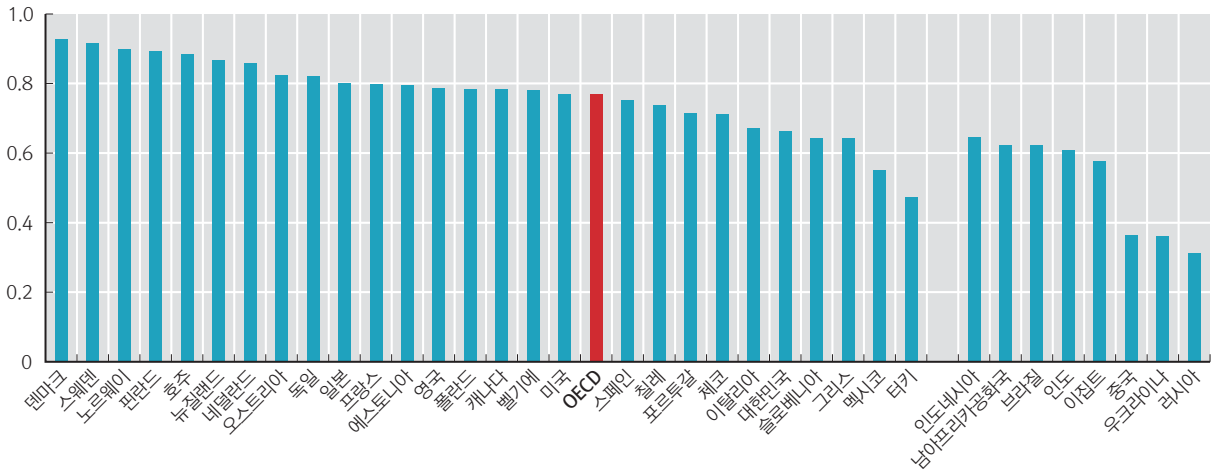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헝가리 자료는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2013년에 도입된 입법상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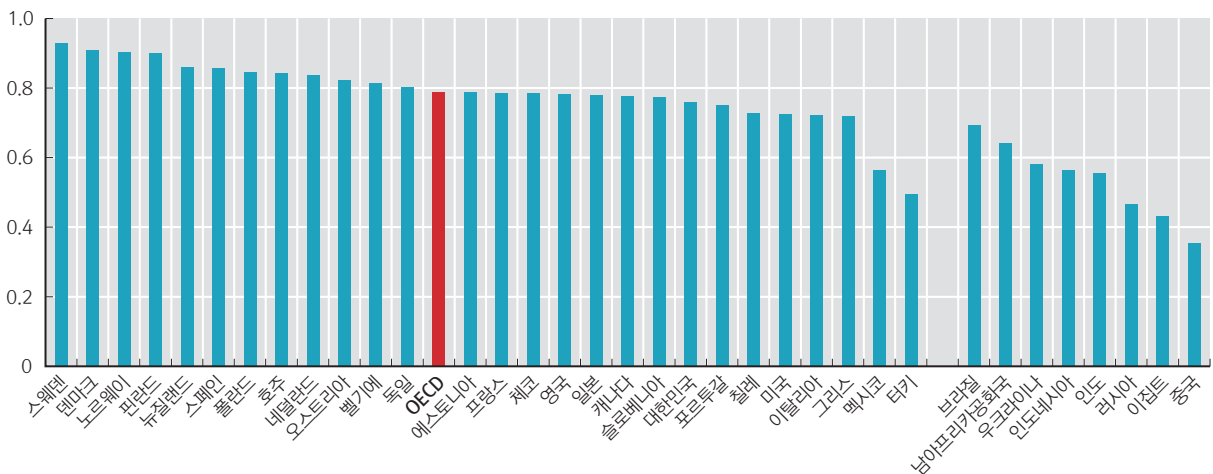
2.5. 제한된 정부권력 (2012-13)



출처: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0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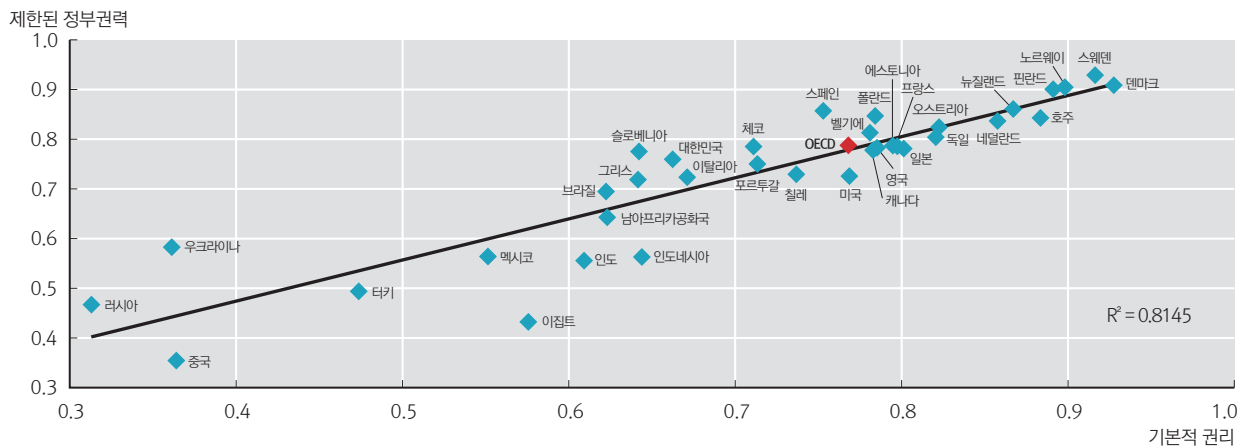
2.6. 기본적 권리 (2012-13)



출처: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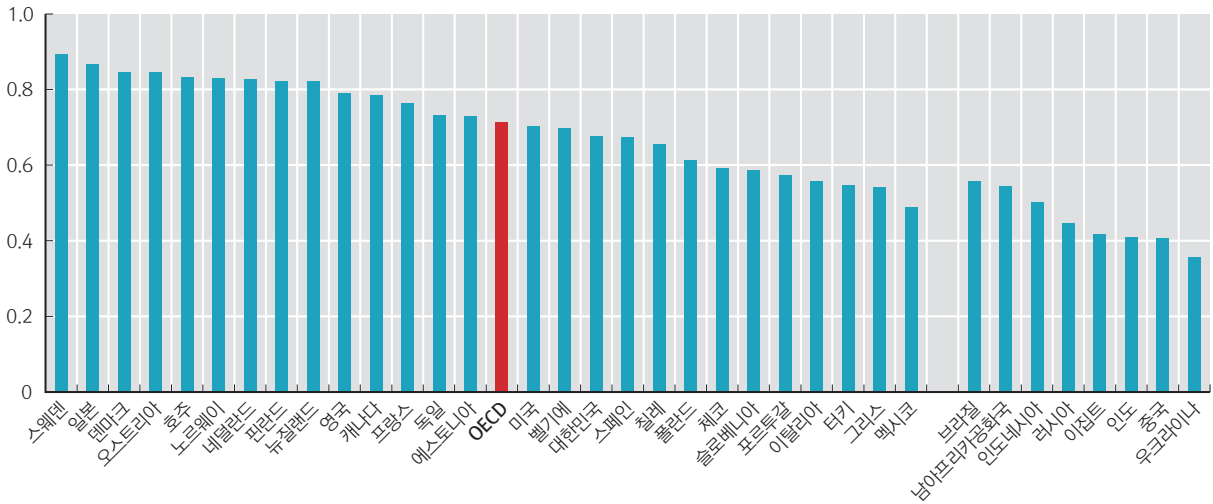
2.7. 제한된 정부권력 VS 기본적 권리 (2012-13)



출처: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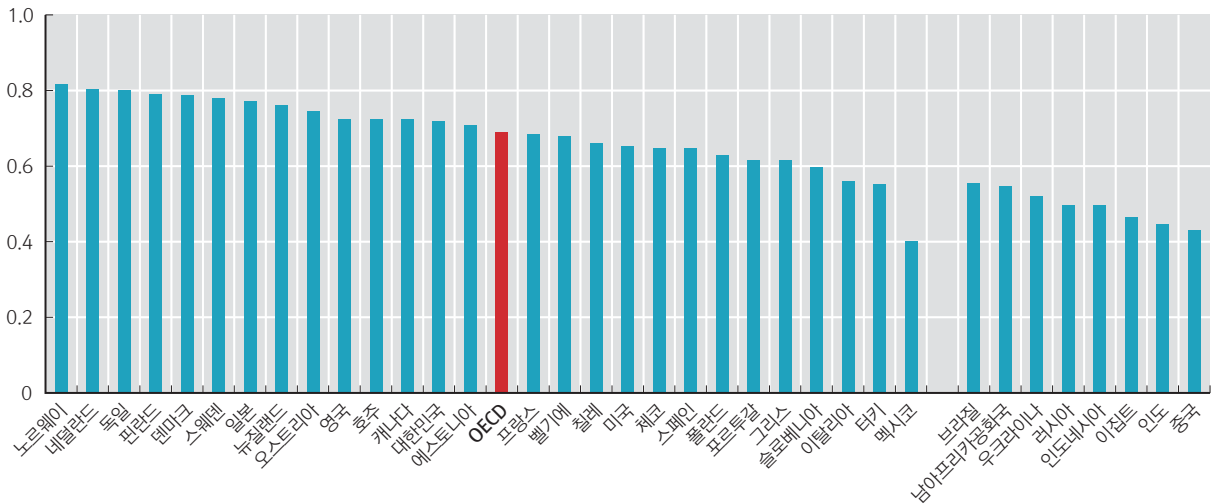
2.8. 규제집행(2012-13)



출처: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044>

2.9. 민사 사법 (2012-13)



출처: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063>

위험관리

OECD 회원국들은 지난 수십 년 간 파괴적인 쇼크(shocks)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왔고, 이 사건들의 경제적 영향력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쇼크의 횟수는 모든 OECD 회원국에 걸쳐서 매년 100회에서 때로는 300회 이상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천억 대의 연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에게 많은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의 활동은 물론 다국적 기업에도 똑같이 지장을 줄 잠재성을 갖고 있다. 거대한 주요 인프라시설 또한, 2011년의 동일본 대지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대단히 파괴적인 충격을 가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파괴적인 쇼크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회복력을 증가시킬 수단의 시행뿐만 아니라 위험에 대한 식별과 평가까지 포함하는, 위험관리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OECD 회원국들에서 핵심 위험을 정책 의제화하는 것은 가장 높은 정치적 수준에서의 지원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앙정부 모든 정부부문과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위험축소 관리에 관한 참여도 요구한다. 이것은 위험정보를 활용한(risk informed)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략, 능력 그리고 거버넌스를 포함하며 이들을 조정하는 전략적 틀을 요구한다. 위험축소는 4개 OECD 국가에서 정부센터(대부분은 총리실)에 의해 관장되고, 중앙조정(central co-ordination)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 보장되며, 종종 국가 시민보호 부처 안에 위치한다.

위험관리정책은 또한 전략, 계획과 정책도구들을 통해서 모든 부문 들에서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 위험관리를 공공 정책과 투자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의 경과에 대한 학제적 검토에 착수했던 거의 모든 OECD 회원국들은 부문별 공공 투자전략과 기획에서 재난위험관리를 고려 한다. 그렇지만, 회원국들 중 3분의 2 만이 주요 공공투자의 설계와 운영에서 위험관리의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한다. 지방수준에 관련된 중요성은 OECD 회원국들 중 86%가 지역 책임성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만들어 왔고, 회원국들 중 거의 3분의 2가 토지의 용도지정과 민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위험민감도 규제(risk sensitive regulation)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의해 알 수 있다. 아직도, 재난위험축소를 위한 정기적인 예산배분을 받는 지방정부들의 비중은, 약 62%로서 훨씬 더 낮은 수준이다. 법적인 환경조성은, 지방정부가 위험축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비효율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정부가 직면한 도전은 복합적인 도전들을 다룰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대응을 조직해 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위험 평가(the National Risk Assessments)는 모든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위험관리전략(all hazard integrated risk management strategy)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절반이 넘는 OECD 회원국들만이 그들의 평가에 있어서 모든 잠재 접근법과 미래 가능 위험(all hazard approach and future probable risks)에 기초한 통합적 방식으로 그들의 평가를 수행한다.

저소득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들과 비교했을 때, OECD 회원국들이 위험관리에서 달성한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험에의 노출이 증가하고, 위험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 변화하면서 재난사망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조기 경보시스템은 결과적으로 경보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관련된 공동체들에게 경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왔다. 특히 효과적 공공 홍보와 1차, 2차, 3차 교육기관의 표준교과과정에 위험관리의 원리들이 통합되면서, 많은 나라들에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재난에 대한 자료들은 EM-DAT와 벨기에의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Brussels에 의해 개발된 OFDA/CRED 국제 재난 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Disaster Database(www.emdat.be))에 기초한다. 손실들은 SwissRe 측정에 기초한다. UN의 UNISDR,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isk Reduction에 의해 관리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Hyogo Framework for Actions Objectives에 대한 국가 경과보고서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 여기에 보고된 자료들은 가장 최신의 보고기간(2011-13)을 반영한다. 경과보고서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절차(multi-stakeholder processes)를 통해 착수되는 자가 진단에 기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는 OECD High Level Risk Forum에 참여하는 공무원, 기타 위험전문가들과 협력하여, 2012년에 일련의 OECD 질문지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얻었다.

그림 2.17, 1980-2010년간 연간 재난의 총 횟수는 다음 온라인 주소에서 이용 가능하다(<http://dx.doi.org/10.1787/888932941101>).

더 읽어볼 것

OECD (2012), Disaster Risk Assessment and Risk Financing: AG20/OECD Methodological Framework, OECD, Paris, www.oecd.org/gov/risk/G20disasterriskmanagement.pdf.

SwissRe (2011), "Closing the financial gap: New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finance disaster risks", SwissRe Economic Research and Consulting, Zurich, http://media.swissre.com/documents/pub-closing-the-financial-gap_w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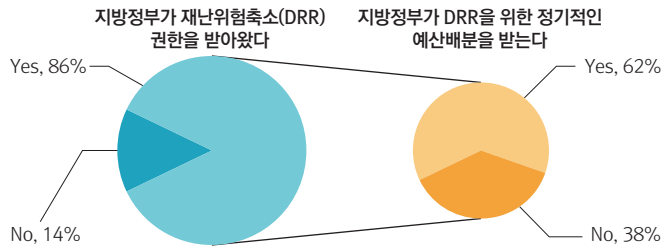
UNISDR (2013), Global Assessment Report on Disaster Risk Reduction - From Shared Risk to Shared Value: The Business Cas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Geneva, 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gar/2013/en/home/index.html.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그리고 슬로바키아 정보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2.16: 캐나다에 관한 정보는 2009-11년 기간의 HFA 자료에 의존한다.

2.14. 재난위험축소(DRR)에 관한 권한과 예산을 가진 OECD 회원국가의 지방정부들



설명: 출처: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출판된 HFA 경과보고서에서 추출됨: 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progress/?pid:3&pil: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082>

2.15. OECD 회원국들의 DRR조정에 관한 책임

DRR조정에 대한 책임 위치:	
총리실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터키
중앙기획/또는 조정기구	칠레, 이집트, 그리스,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폴란드, 스위스, 영국
시민보호 부처	호주,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웨덴
환경기획청	프랑스, 스위스
재무부	프랑스

설명: 출처: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출판된 HFA 경과보고서에서 추출됨: 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progress/?pid:3&pil: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248>

2.16. OECD 국가위험관리정책들

	국가정책기획에서의 위험 - 위험은 ~에 포함되어 있다:					위험평가				재정 비상 계획		조기경보			교육과 훈련
	공공투자와 기획 결정	국가개발계획	분야별 전략과 계획	시민보호 정책, 전략과 비상계획	토지용도지정과 부동산개발	국가적 위험평가	모든 재해 접근	전체 정부 접근	위험평가에서 미래 가능 위험의 통합	국가비상 재난기금	재난채권과 기타 자본시장 도구들	위험에 취약지역은 시기적절하고 이해할만한 경보를 받는다	경보들이 효과적으로 발령된다	의식홍수시스템과 규약들이 사용되고 적용된다	
호주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대한민국	●	●	●	○	●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브라질	●	●	○	●	●	●	○	..	●	○	○	○	○	○	●
중국	●	●	●	●	○	●	○	..	●	○	●	●	●	●	●
이집트	●	○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	●	●
OECD 계															
● 예	22	16	22	18	17	14	16	8	15	22	8	23	21	23	23
○ 아니오	0	7	1	5	6	0	8	1	8	2	16	1	3	1	0

설명: 출처: 자료는 아래 주소에서 출판된 HFA 경과보고서에서 추출됨: www.preventionweb.net/english/hyogo/progress/?pid:3&pil: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267>

재정적 지속가능성이란 공공 재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신뢰할만하고 사용할 만한 위치로 유지하는 정부의 능력을 말한다. 장기적 관점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미래 수입과 부채, 환경적 요소들, 사회경제적 동향들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적 예측에 관여해야 한다. 높고 증가하는 부채수준은 정부의 재정적 위치를 해롭게 하고, 자금들이 생산적 투자와 격리되면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부채증가의 악순환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OECD회원국들은, 재정경제 위기 이후, 상승하는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에 계속하여 직면하고 있다. 이미 예상된 노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기침체를 다루기 위한 비용들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제들을 제공하고 있다.

OECD는 총 공공부채를 2030년까지 GDP의 60%까지 줄이도록 요구 받고 있는 주요 기초재정수지(UPB)에서의 증가를 측정해 왔다. 이 모델에 따르면 그리스, 영국 그리고 미국은, 이 기간 동안 공공 부채를 GDP의 60%로 줄이기 위해서 전체 평균적으로 각국의 2012년 주요 기초재정수지 보다 잠재적 GDP(경제가 전체 용량으로 활동하는)가 6% 넘게 증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GDP 대비 부채를 60%까지 낮추기 위해 잠재적 GDP의 13%가 필요하지만, 요구되는 건전화 노력이 너무 커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반대로,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대한민국, 스위스의 현 공공재정 상태 (예: 재정수지균형과 부채수준)는 매우 좋아서 GDP 대비 60%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부채를 줄여 흑자를 낼 필요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 2009-15년의 기간 동안 GDP의 5.5%가 넘는 수준에 상응하는 재정 건전화 계획들을 실행해 왔거나 발표했으며, 이중 3분의 2는 세출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세입정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누적된 재정 건전화 계획의 규모와 구성은 OECD 회원국들간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경제적 불균형이 가장 크고, 공공재정이 더 큰 재정건전화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GDP의 12% 이상의 재정 건전화 패키지들을 발표해 왔다. 반대로,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는 GDP의 1.6% 미만의 재정 건전화 패키지들을 시행하거나, 공표해 왔다. 세출정책은 대부분 국가들에서 재정 건전화 패키지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한다. 세입정책은 다음 7개 국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다: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고 터키.

올바른 전략적 추계 활동(forecasting exercises)은 인구통계학적인 변화와 관련된 비용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노령화와 관련된 지출의 증가, 보건분야에서의 기술적 변화, 장기 요양, 그리고 연금으로 인해 증가하는 예산상의 압력에 직면한 이후부터. 평균적으로, 정책변화가 없다면 OECD 회원국들의 노령화 관련 공공지출은 2014년과 2030년 사이에 GDP의 거의 3%p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그림 2.18과 2.20의 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No.93 에서 가져왔다. 2030년까지 GDP의 60%수준으로 GDP대비 총 정부부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총 부채정리(consolidation)는 두 개의 시간대로 측정된다: 2012년과 2014년간은 주요 기초재정수지의 변화로서, 2014년과 2030년간은 2014년에 도달한 수준과 가장 최근 기간의 평균과의 차이로서. GDP 대비 부채비율을 60%로 감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를 산출 하기 위한 가정은 OECD Economic Outlook, No. 93의 Box 4.5와 Table 4.2 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림 2.19를 위한 자료는 재정 건전화에 관한 2012 OECD 설문조사에서 가져왔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계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총 부채 자료는, 국가회계시스템에서 정의한 것처럼 일반정부의 부채 (장·단기)에 관한 것이다. 이 개념은 이러한 개념정의는 유럽연합의 재정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의 부채의 정의와 다르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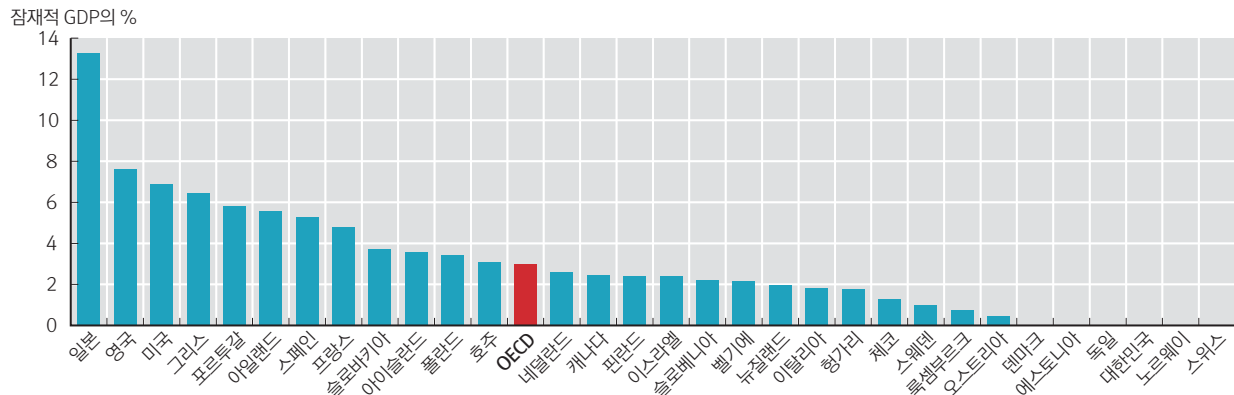
- OECD (2013), "OECD Economic Outlook No. 93",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http://dx.doi.org/10.1787/data-00655-en>.
 OECD (2012), *Restoring Public Finances, 2012 Updat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455-en>.

그림 설명

- 2.18과 2.20: 칠레, 멕시코, 터키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대한민국,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는 2030년까지 GDP대비 총 재정적 부채의 비율을 60%로 달성하기 위한 채무감축계획은 필요 없다. OECD 평균은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 재정 추계는 정형적인 재정건전화 경로를 적용한 결과이며, 예측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2.19: 자료들은, 2009/10년부터 2015년까지에 대한, 국가당국이 보고한 연간 채무정리 증가분의 합이다. 2009년 채무정리 자료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그리고 슬로베니아만이 보고했다. 헝가리의 2007-08년도 채무감축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2016년까지 채무 정리액을 보고하였다. 다음 참여국들은 공표된 구체적인 정리계획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그래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 대한민국, 미국. 호주는 부채감축을 보고(특히 2013년도)하였지만, 이 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채정리라는 용어의 개념정의보다 더 넓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슬로베니아는 세입정책을 보고했지만 완벽하게 수량화하지는 않았다.
 2.20: 2014-30년의 기간 동안에, 추계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노령화 관련 지출은 선형보간법(linear interpolation)을 적용하였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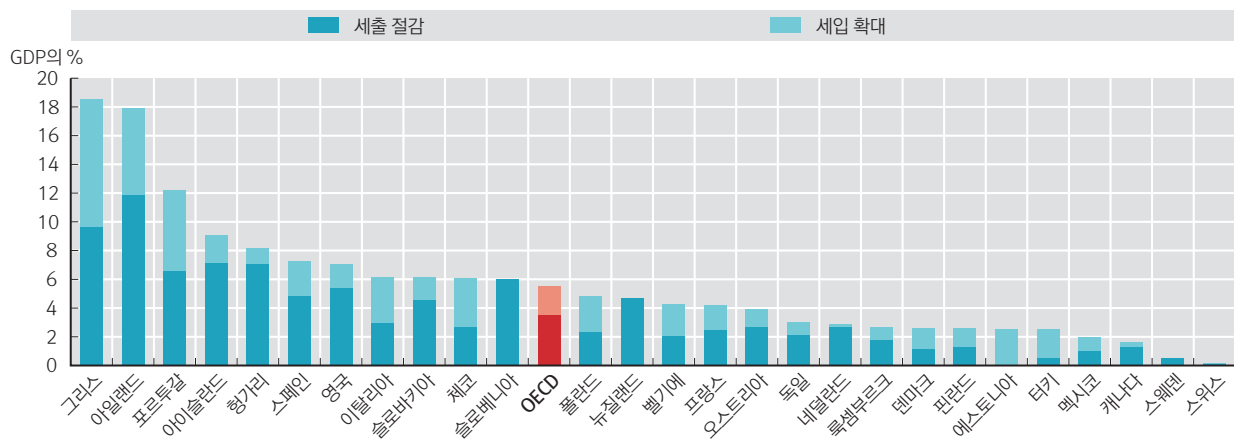
2.18. 정부의 총 재정부채를 GDP의 60%로 줄이기 위한 2012년과 2030년간 총 재정건전화 요건



출처: OECD calculations; OECD (2013), "OECD Economic Outlook No. 93",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May 2013, <http://dx.doi.org/10.1787/data-0065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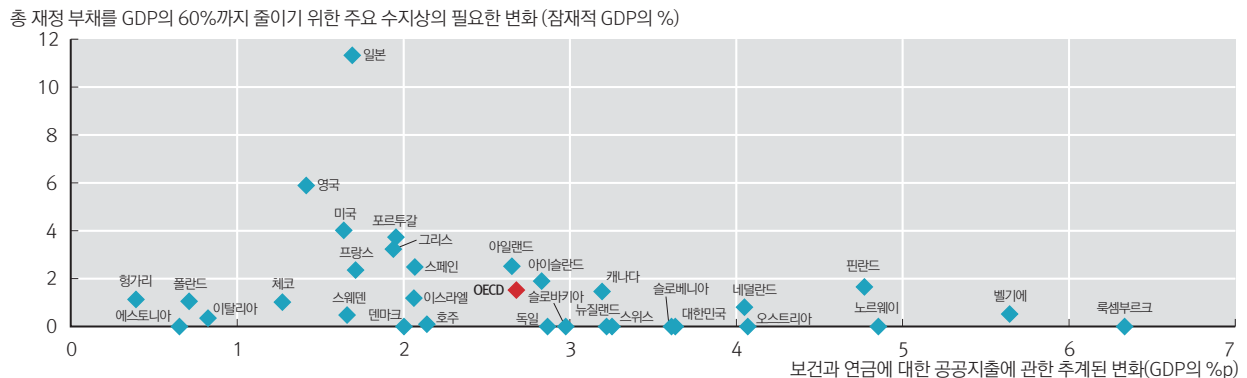
2.19. GDP 비율로 표시한 세출 기반과 세입 기반의 재정 건전화 (2009-15)



출처: 2012 OECD Survey on Fiscal Consolid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139>

2.20. 재정 건전화 요건과 노령화 관련 지출에 관한 추계 변화 (2014 에서 2030까지)



출처: OECD calculations; OECD (2013), "OECD Economic Outlook No. 93",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May 2013, <http://dx.doi.org/10.1787/data-00655-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158>

효율성을 측정한다는 것은 투자된 투입들(inputs)과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생산된 산출들(outputs) 간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이다. 지출 통제的方法으로 이 조치를 개선하는 것은 OECD 정부들의 핵심 목표이다. 거대한 경제 금융 침체기를 전후하여 많은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는 공공부문의 성과를 최우선의 과제로 만들었다.

효율성 지표들은 산출측정치와 투입측정치를 비교한다. 두 가지 차원에서 효율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기술적(운영적) 그리고 배당적 효율성 차원이다. 성과 평가와 측정에는 경제적(혹은 비용적) 효율성, 즉 운영적 효율성과 배당적 효율성 양자 모두의 결과물에 기초해야 한다.

효율성 지표들은 보건, 교육, 사법과 조세행정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투입과 산출 양자 모두의 자료들이 존재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효율성 측정법에 관한 국가들 간의 합의가 진전되고 있다.

보건

이 부문에 있어서 보건효율성에 대한 몇 가지 측정방법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핵심수치는 병원 평균재원일수(ALOS)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그대로 라는 전제 하에 병원 재원일수가 짧으면 퇴원 당 비용은 줄고, 병원보다 비용이 저렴한 의료기관에서 회복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평균재원일수가 짧으면 의료서비스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하루당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단축되는 경우에는 건강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환자의 안정과 회복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1년 모든 신체이상으로 인한 병원 평균재원일수는 OECD 평균으로 8일이었다. 멕시코와 터키는 재원일수가 아주 짧아 OECD 평균의 절반 미만이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가장 길었는데,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거의 18일에 이르러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병원 평균 재원일수는 2000년에 9.2일에서 2011년에 8.0일로 지난 10년간 줄어들고 있다. 시스템 수준에서, 실행안내서나 지불시스템과 같은 요소들은 병원에서 ALOS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침상의 충분한 공급과 진료비(hospital payment) 구조가 환자들이 더 오래 머물게 할 유인을 제공한다.

사법부문

정부들은, 시민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데 따른, 법정대리 비용을 포함한 추가적 시간, 재정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이고 반응적인 사법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에 관하여 큰 압력을 받고 있다. 민사 재판제도의 효율성에 관한 중심이 되는 지표는, 소송목적가액에 대한 비율로서의 재판 비용과(투입) 제1심의 국가 평균 재판기간을(산출) 연관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법원의 절차가 느리면 사법부문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키며, 결국은 사기업 영역의 비용이 늘어나고 사적 투자를 지연시킬 수 있다. 게다가, 재판기간이 길어지면 또한 국가와 시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욱 증가된다. OECD 회원국들에서, 재판비용은 소송가치의 19%에 해당하는 반면에, 제1심은 평균적으로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노르웨이는 성과 척도에 있어서 최상위에 속하지만, 슬로바키아는 기간도 더 길고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제도적 마찰과 사법적 자원의 불균등한 지리적 배분으로 이탈리아의 1심 기간은 놀랄 만큼 길다. 그렇지만, 이 부문에 있어서 효율성비교는 서비스의 질과 적법 절차 혹은 법원의 결정의 질에 대한 것들의 척도로 고려되면 안 된다.

교육

인적 자본의 개발과 축적은 국제노동시장에서 훌륭한 경쟁력을 갖춘 고도의 기술인력을 창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사회의 능동적 시민이 되는데 필수적이다. 각 개인들의 교육적 성취는 인적 자본 생산의 산출에 대한 적절한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매 학생당 국가적 누적 지출과(교육적 투입) 비교할 때, 어느 시스템들이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비록 그 관계가 매 학생당 누적지출 수준이(OECD PISA in Focus 13) 낮은 경우에만 설립되는 것 같지만, 읽기와 수리에 관한 능력을 측정하는 PISA는(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는 초등과 중등 학습 양자 모두에 대한 지출과 관련하여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 지출측면에 덧붙여서, 학생들의 성과는, 다른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교사들의 질, 각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들, 학교 관리 행위들과 같은 것에 의존하고 있다. 핀란드, 대한민국,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은 매 학생당 OECD 평균보다 덜 지출하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은 성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는 학생들의 점수는 평균 이하이지만, 학생당 지출이 더 높다.

조세행정

시민들과 사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주된 자원이다. 연간 행정비용과 회계연도 중에 징수된 총 수입을 비교하는 “징수비용” 비율은, 때때로 수입주체들에 의해 채택되는, 효율성의 표준 측정치이다. 이 비율의 하향추세는, 기타 모든 다른 것들이 같다면, 상대비용에 있어서(효율성의 개선으로) 감소, 또는 개선된 조세 이행(효과성의 개선으로)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향 또는 안정화 되는 추세는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관찰되고 있는데, 주로 비용감소에 기인하는 듯 하다. 반면에, 몇몇 수입

주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그들의 추세가 역전되는 것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이 증가한 것은 그 이유가 대체로 경제적 위기의 여파로 조세 수입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 듯 하다.

조세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적 비교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조세비율과 전체 등록된 조세부담 주체의 차이점; 징수된 조세의 범위와 본질의 차이들; 조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조건들; 정부조직체계로부터 (예; 수입행정에 있어서 복수의 주체가 관련되는 이탈리아) 야기되는 근본적 비용구조에 있어서의 차이점들, 그리고/또는 비과세 기능(예; 세관)의 활동 등과 같은 모든 요소들은 여기서 제시된 효율성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병원에 평균적으로 머무는 기간(ALOS)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머무는 평균적인 날짜의 수를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입원 혹은 퇴원의 숫자로 1년 동안의 모든 입원환자들이 병원에 총 머문 숫자를 나눔으로써 측정된다. 입원하지 않은 경우(day cases)는 제외된다. 자료들은 모든 입원환자의 경우를 포함한다(치유적 치료와 급성적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재판에 관한 사법자료들은 OECD의 “사법적 수행과 그것의 결정 요인: 국가 간 관점(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에서 발췌하였다. 재판의 길이는 추정치이다(더 자세한 정보는 159페이지 참조).

법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을 무시한 재판에 소요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적 비용 (소송가치의 비율로써)의 총액은 하나의 특정한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세계 은행의 Doing Business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상업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3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비용들인; 법원 수수료, 법 집행 비용과 평균적인 변호사 수수료와 같은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학생당 지출에 관한 자료들은 2009회계연도에 관한 것이다. 학생당의 지출은 전일제 또는 이와 상응하는 등록기관으로 나누어진 교육 기관(사립이든 공립이든 차별하지 않음)들에 의한 총지출과 같으며, 핵심적 서비스와 부수적 서비스 양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국가 간에 교육과정의 기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생당 연간 지출은 한 학생에 관한 모든 지출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성취한 점수는 PISA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는 15세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

조세행정에 관한 자료는 수입주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받거나 혹은 각국의 공식적인 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조세행정의 지출은 3가지 범주를 포함하는데; 행정적 비용, 직원 월급 비용과 IT비용이다. IT지출은 모든 행정적 운영(조세는 물론 비-조세와도 관련된)을 위한 IT지원 제공에 대한 총 비용으로 정의된다. 비교 목적을 위하여, 조세와 관련된 기능들과 비-조세관련 기능들에 대한 비용들과 사용된 자원들을 각각으로 분리해서 구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a),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814-en>.

OECD (2013b,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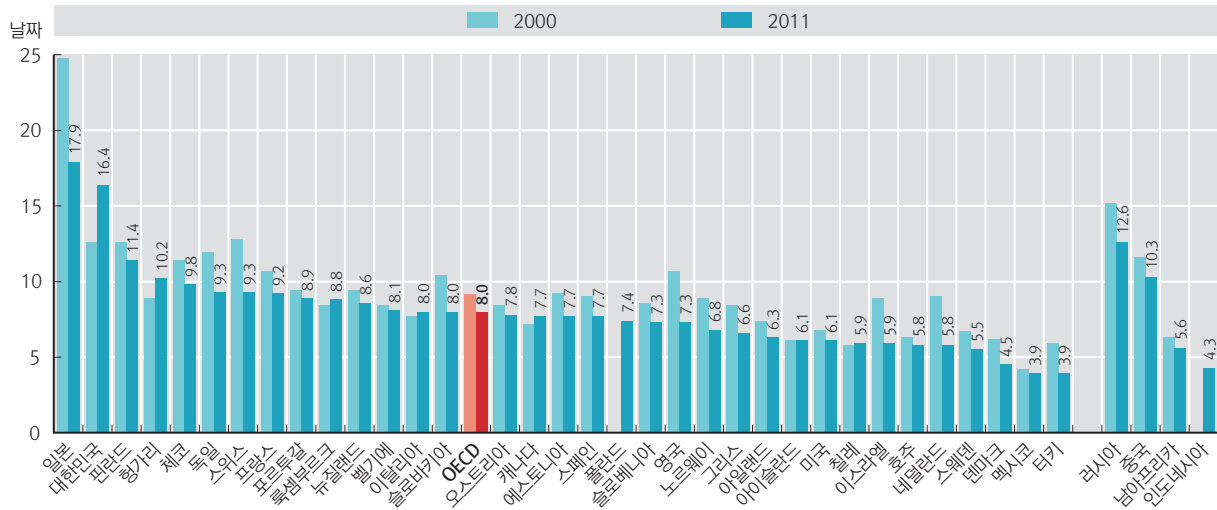
Palumbo, G. et al. (2013),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4x00md5g8-en>.

그림 설명

- 2.21: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의 자료들은 치유적(급성의) 치료를 위하여 머문 평균적 기간에 관한 것이다(그 결과로 과소추정 되었음). 2011년에 관련된 자료들로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중국, 프랑스, 노르웨이와 러시아연방은 2010년 자료들이고;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2009년이며; 그리스와 인도네시아의 자료는 2008년이다. 2000년과 관련된 자료들로는: 중국과 한국은 1999년 자료이고; 오스트리아와 칠레는 2001년의 자료이며; 룩셈부르크는 2002년의 자료들이다.
- 2.22: 영국의 자료는 단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만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들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Doing Business(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기 바람.
- 2.23: 캐나다의 지출자료들은 2008년에 대한 것이다. 칠레의 지출자료는 2010년도의 것이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위스, 브라질, 러시아연방의 자료들은 오직 공공기관들만의 자료들이다.
- 2.24: SSC와 소비세는 체코공화국, 프랑스, 독일,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은 포함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와 스페인은 SSC를 포함하지 않았다. 핀란드,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슬로베니아는 소비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브라질, 아일랜드와 남아공의 비용에는 관세가 포함되어 있다. 에스토니아의 비용은 2005년의 관세가 포함된다. 스페인의 비용은 2008년과 2011년의 관세가 포함된다. 칠레와 스웨덴의 비용은 부채 징수가 제외되었다. 스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 행정만이 유일하게 고려되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이번 년도들의 계산비율은 보고목적의 설문조사를 위하여 모든 비용들을 정량화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만큼 과소평가 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정량화 할 수 없는 다른 기관들에 의하여 조세와 관련된 작업들이 수행되면서 발생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년도들의 계산 비율은 상당히 과소평가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표시된 비율들은 분모로써 “총량”이 아닌 “순” 수입징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국세청(IRS)이 사용하는 비율과는 다르다. 이탈리아의 자료들에는 수입징수를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수행중인 재정개혁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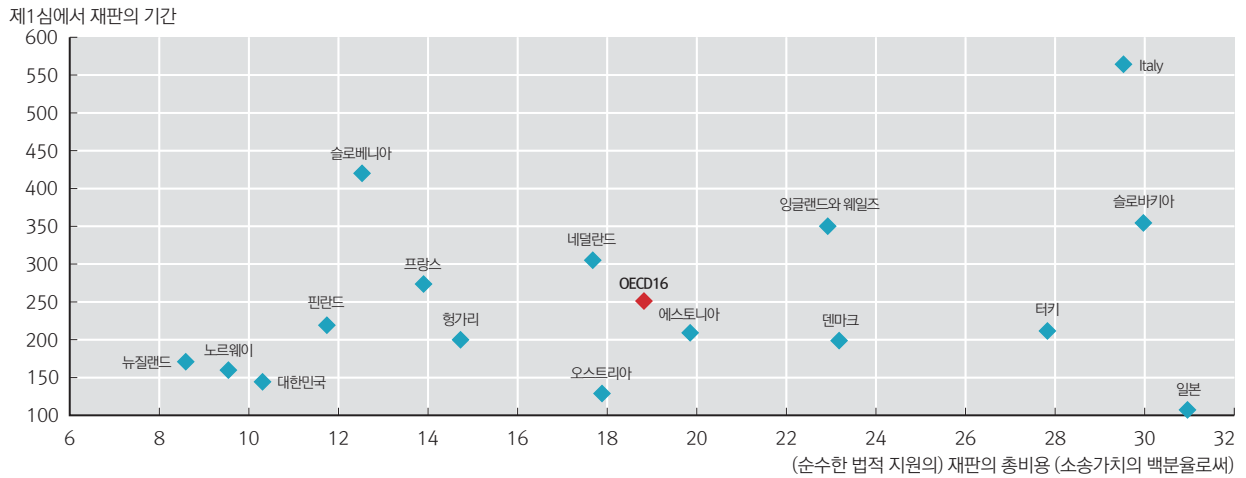
2.21. 모든 조건에 대한 평균적인 체류기간(2000년과 2011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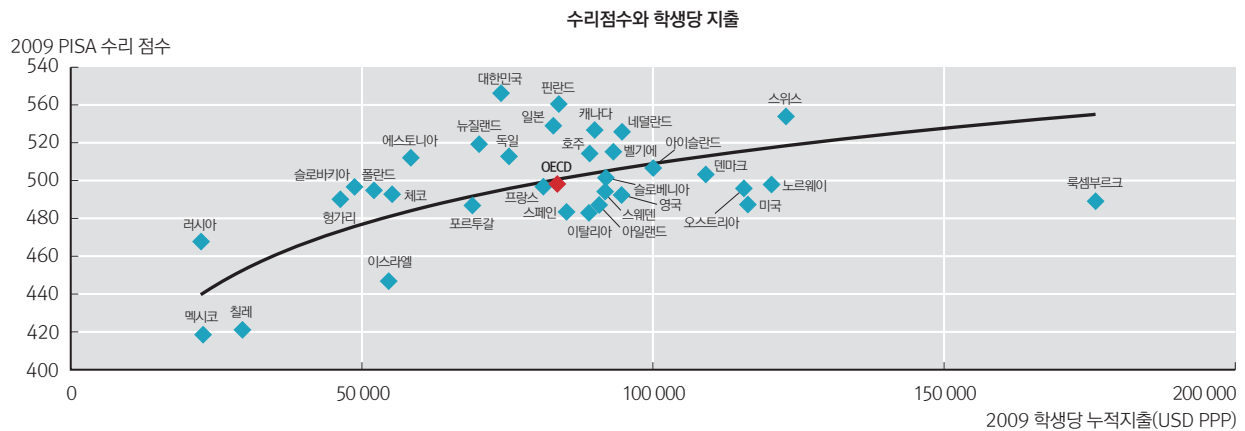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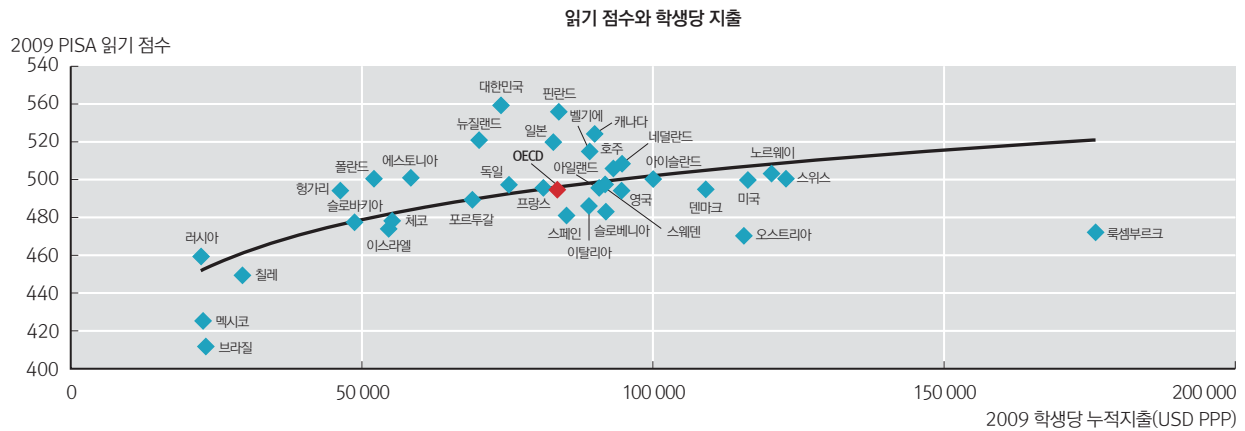
2.22. 제1심 재판의 기간과 비용(소송가치의 비율로써, 2012)



출처: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and Palumbo, G. et al. (2013),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4x00md5g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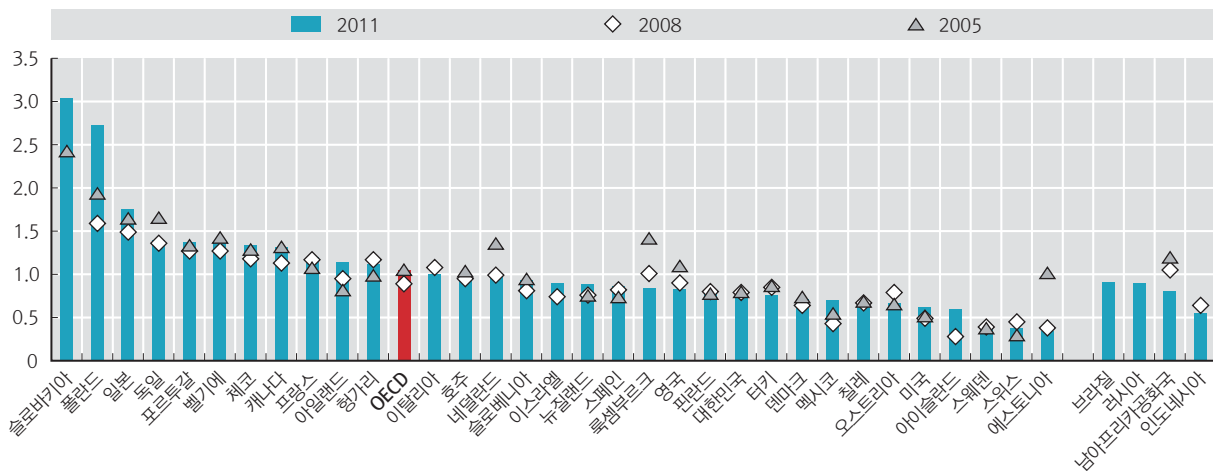
2.23. 6세부터 15세까지의 교육에 대한 학생당 PISA점수에 관한 성과와 누적지출(USD PPP)



출처: OECD (2012), Education at a Glance 2012: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2-en>, Table B1.3b; and OECD (2010),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Volume I), PISA, OECD Publishing, Paris, Table I.2.3, <http://dx.doi.org/10.1787/9789264091450-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215>

2.24. 징수비율의 비용(행정적 비용/ 순 수입징수) (2005, 2008과 2011)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234>

효율성의 개념이 투자된 자원들이 생산적으로 원하는 산출로 변형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는 반면, 효과성의 개념은 한 활동이 원하는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용효과성, 즉 중간재나 혹은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투입의 비율은 사용된 자원들과 달성한 결과물들 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이 효과성은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데에 결정적인 것이다.

정부성과에 대한 평가는 교육과 보건과 같은 분야들이 특별히 중요한데, 이들 분야는 시민들의 복지와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두 분야는 또한 충분히 개발되고 표준화된 국제적인 투입과 산출의 측정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효과성은 국가간에 의미 있는 비교를 허용한다.

교육

교육분야에 있어서, 인적 자본의 창조와 기술 개발은, 고용에 대한 전망과 평생의 소득(the life-long earnings)에 유익한 영향을 주므로, 공공분야의 두 가지 핵심 목표이다. 게다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은 노동력은 더 높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그 결과로 사회의 번영에 더욱 기여한다. 이러한 효과들은 또한 정부가 활용 가능한 자원에 반영되고 있는데; 더욱 고용할 만하고 더 숙련된 개인들은 더 많은 기여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수입 기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지원에 대한 공공지출의 필요성을 감소시킨다.

교육분야에 대한 핵심결과물 측정방법의 한가지는 학교교육에 대한 공공적 순 현재가치(NPV) 방법이다. 순 현재가치는 그들의 비용들을 고려한 이후에 이 분야에 공공투자의 경제적 수익들을 측정하는 것이다. 추가적 학교 교육은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초년생들과 더 높은 소득들로부터의 보충적인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정부의 경제적 편익들을 창출한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은 제3차 교육에 100,000(USD)를 초과 하는 순 현재 가치를 보이고 있다. 공공투자의 크기와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NPV의 3분의 1이다.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정부의 장려정책은 명백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OECD 회원국들 중, 헝가리, 아일랜드, 미국은 제3차 교육의 공공 NPV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평균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NPV가 더 낮으며, 에스토니아는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초과하여 최악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

이와 마찬가지로 각국 정부는 자국 보건의료제도의 비용효과성 평가에도 관심이 높는데, 이는 그 성과가 상당히 중요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지출이 전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분야에 속하면서 기술발전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 1인당 국민의료비와 비교하는 것이 기대수명 향상(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교가능 성과)이다. 그러나 총 보건지출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들이 기대수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총 보건지출은 공적 지출과 사적 지출(미국과 멕시코는 보건분야의 지출에 있어서 사적 지출 비율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 양자 모두로 구성되기 때문에 결론의 도출은 조심스럽게 내려져야 한다.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총 보건지출과 기대수명은 긍정적 관계가 있으며, 보건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면 각 개인의 수명은 더욱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은 그들의 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명을 보여주는 두드러진 국가들이다. 반면에, 헝가리, 멕시코, 미국은 그들의 투여된 총 보건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 보건의료지출만 고려했을 때에도 그 결과는 유사하여(온라인으로 도표2.27 참조) 전체적으로 기대수명과 긍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에 대하여 오직 공적인 지출만을 고려한다면, 멕시코와 미국이 OECD 평균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를 다소나마 설명해주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남성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공공분야에서의 경제적 수익은 순 현재가치 관점으로 측정된다. 공적 비용은 재학기간 중에 상실되는 소득세 수입을 포함한다. 공공지출은 재학기간을 고려한 교육적 성취와 관련되며, 직접적인 지출과 공적·사적 두 영역의 이전지출을 포함한다. 공공분야의 혜택은 고소득에 따른 부가적인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 수입, 그리고 특정 소득수준을 초과함으로써 정부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이전지출의 절감액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순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들의 가치는 고등교육 혹은 제3차 교육이 아닌 2차 교육 이후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에 근거한다. 제3차 교육에 대한 순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들의 가치는 제3차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차이에 근거한다.

기대수명은, 주어진 연령대에 특정 사망률에 근거 해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총 인구에 대한 출생에서의 기대수명은 여성과 남성들에 가중되지 않은 평균으로 계산 된다. 보건에 관한 총 지출은 보건 관련 재화와 서비스(즉, 현재적 지출)의 최종 소비에 다 보건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합한 것으로 측정한다. 이는 공적인 그리고 사적인 양자 모두의 의료 서비스와 재화, 공적 보건과 예방프로그램 및 관련 행정 모두를 포함한다.

그림 2.27은, 2011년의 출생 시 기대수명과 1인당 보건에 관한 공적 지출로, <http://dx.doi.org/10.1787/888932941291>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a),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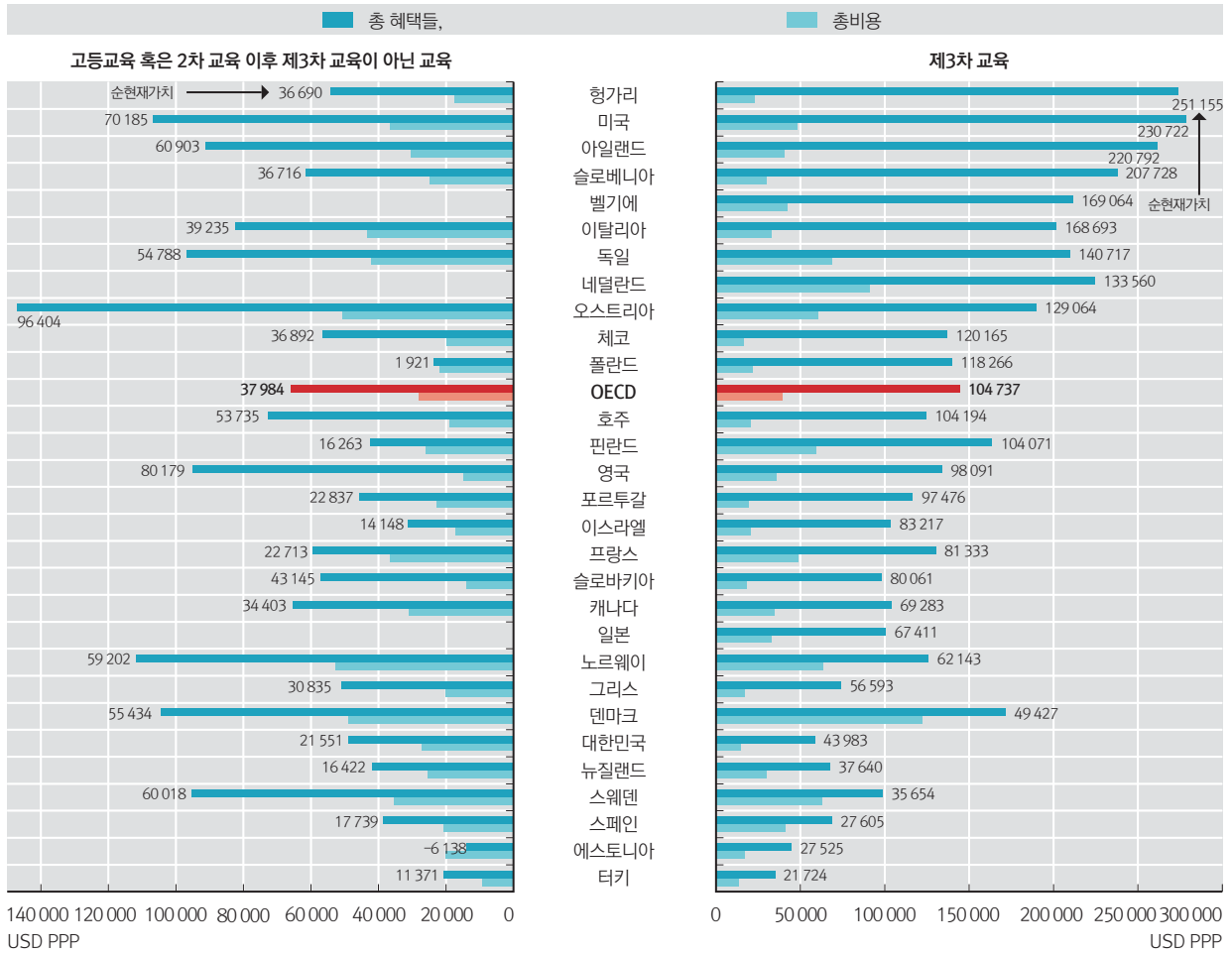
OECD (2013b,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 2.25: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대한 고등교육에 관한 자료들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고등교육 자료들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분리되어있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의 자료 들은 2008년도의 것이다. 일본은 2007년의 자료들이다. 터키는 2005년의 자료이다. 부록3 의 주석을 참조 바람 (www.oecd.org/edu/eag.htm).
- 2.26.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지출자료들은 투자가 제외되었다. 네덜란드의 지출자료는 현재의 지출 자료들이다. 벨기에, 멕시코, 뉴질랜드의 지출자료들은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칠레, 이스라엘, 멕시코의 지출자료들은 추정치이다. 호주,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의 기대수명 자료들은 추정치이다. 호주, 이스라엘, 일본, 룩셈부르크의 지출자료들은 2009년 자료들이다. 터키의 지출자료들은 2008년치 이다. 캐나다의 기대수명자료들은 2009년 자료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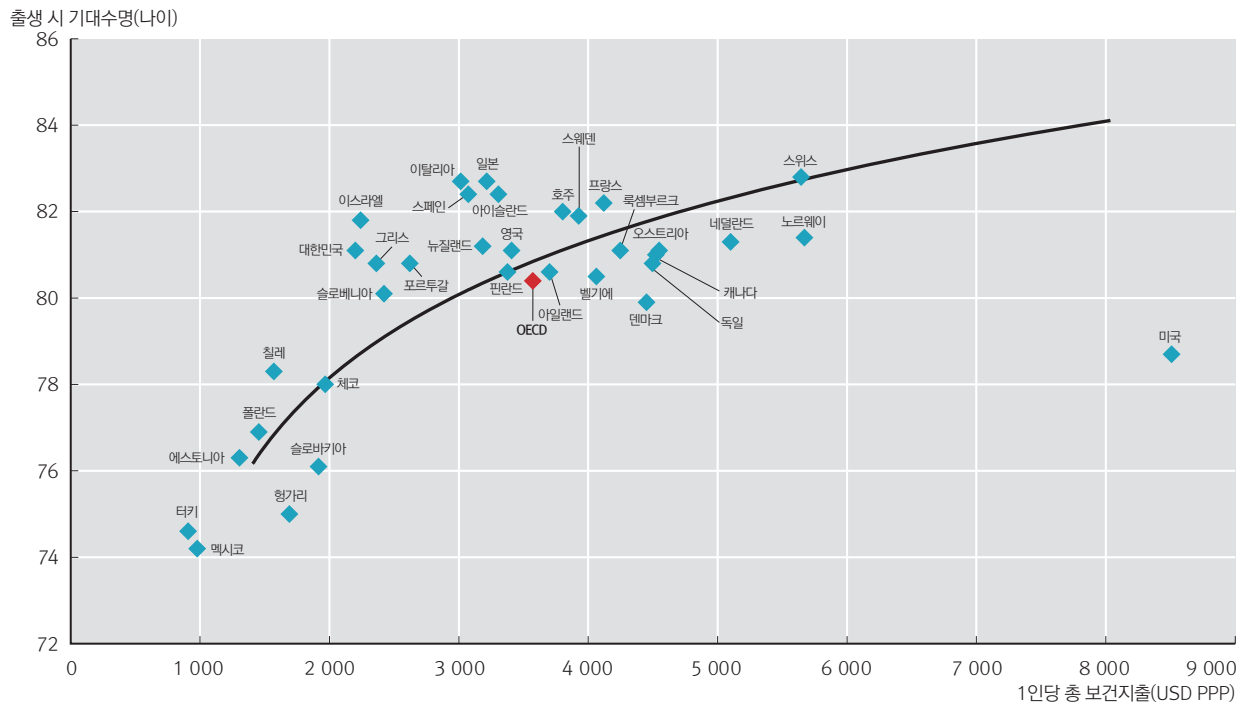
2.25. 기본교육(initial education)의 한 부분으로서 고등교육 또는 2차 교육 이후 제3차 교육이 아닌 교육을 받은 사람에 관한 공적 순 현재가치(NPV) (2009년 또는 이용 가능한 최근 년도)



출처: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Table A7.2a and Table A7.4a,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253>

2.26. 출생 시 기대수명과 1인당 보건에 관한 총 지출(2011)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272>





제3장. 공공 재정과 경제

정부의 두 가지 주요 책임은 재화와 서비스(예: 교육, 보건)의 공급과 소득 재분배(예를 들어 사회적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서)이다. 다른 많은 책임들 가운데 정부는 위험관리, 사회 정의 구현, 부패의 척결, 환경보호 등의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런 활동에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 (예: 조세) 이나 차입의 형태로 자금을 마련한다.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의 여파로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공공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실시된 재정규칙, 새로운 예산 관행, 재정건전화 계획 등으로 인해 2010년부터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은 정부가 올바른 경로를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경제회복의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면서 공공채무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은 여전히 재정 건전화와 경제성장 활성화의 긴급한 필요성간의 균형을 잡아 나가는 복잡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장은 회원국들 간 공공재정과 경제의 주요 지표들의 편차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 재정적 압력에 각국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적자/흑자 및 채무에 대한 지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크기와 구조,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비용, 이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정부 역할, 또한 정부 투자의 규모 등의 추세도 산정하고 있다. 정부혁신과 생산성에 있어 정보통신기술(ICT)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 장은 정부 ICT 지출에 대한 탐색적 자료도 제공한다. 장기 추세와 경제 위기의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 지표의 자료는 2001년(기초 연도), 2009년(위기 진행 중), 그리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최근 연도(대부분 2011년)로 제시되어 있다.

재정 수지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다. 재정 적자는 해당 연도에 정부 지출이 수입을 상회할 경우 발생하는 반면, 수입이 지출을 상회하면 흑자를 낸다. 연속적인 고액의 재정 적자는 추가적 채무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강한 악영향을 미친다. 채무잔고의 수치가 높은 경우, 채무 변제를 위한 비용(이자비용금액과 높은 이자율 모두)은 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며 따라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정부는 이자 지출을 제외한 재정 수지인 기초수지 향상을 통해 향후 채무 변제 비용을 삭감할 수 있다.

2011년도에 OECD 회원국 평균 재정 적자는 GDP의 3.5%이었다. 가장 높은 적자는 아일랜드(13.3%), 미국(10.1%), 그리스(9.6%), 스페인(9.4%), 일본(8.9%)에서 발생했다. OECD 회원국 중 겨우 6개국만 재정 흑자를 냈다: 노르웨이(13.4%), 헝가리(4.3%), 대한민국(2.0%), 에스토니아(1.2%), 스위스(0.5%), 스웨덴(0.03%).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재정적자는 스위스와 독일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증가했는데, 평균적으로 GDP의 0.7%에서 5.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악화의 대부분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의 결과물인데, 이 시기에 정부지출이 수입이나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명목국내총생산 기준, 그리고 이스라엘과 헝가리는 제외). 이러한 추세는 2009년 이후 반전되었는데, 주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재정규칙, 새로운 예산 관행, 그리고 재정건전화 계획 등으로 인한 것이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4개 국가(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의 지출(명목시세) 성장률은 수입이나 GDP 성장률보다 낮았다. 그 결과로서 GDP 대비 재정 수지는 평균 2%p가 향상됨과 동시에 재정 적자는 헝가리(적자를 8.7%p 줄여 4.2%의 흑자가 됨), 그리스(6%p), 그리고 포르투갈(5.8%p)에서 가장 많이 감소되었다. 헝가리 재정수지의 큰 개선은, GDP의 9.7%에 달하는 가계부문에서 일반정부로의 자본이전(민간 연금기금에서의 인출)에 기인한 것이다. 2009년에서 2011년간에 오직 일본,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 국가에서만 재정 수지가 개선되지 않았다.

2011년도 OECD 회원국의 기초 재정 수지는 평균 GDP 대비 0.8%의 적자를 반영하고 있다. 채무 이자지불이 재정 수지의 남은 몫을 차지했다. 기초수지는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GDP 대비 10% 적자인 아일랜드에서 0.1% 적자인 덴마크에 이르기까지 19개 국가가 기초수지 적자를 낸 반면, GDP 대비 0.2% 흑자인 오스트리아에서 14.5% 흑자인 노르웨이에 이르기까지 14개 국가가 기초수지 흑자를 냈다.

재정수지에 있어서 이자지불의 중요성 역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기초수지 적자를 내고 있는 19개 국가 중 이자지불은 평균적으로 GDP의 2.9%를 차지했고, 그 범위는 체코 1.4%에서 그리스 7.2%까지 이르렀다.

비록 그리스의 기초수지 적자는 GDP 대비 2.4%로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높지는 않았지만, 당국의 이자지불액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 수지 데이터는 OECD 국가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가 회계를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가회계시스템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funds)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정부의 순 대출(+) 또는 순 차입(-)이라 일컫는 재정수지는, 일반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서 계산된다. 수입은 사회적 기여금, 사회적 기여금을 제외한 조세, 보조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지출은 중간소비, 고용인 보수, 보조금, 사회 혜택, 기타 경상지출(이자지불 포함), 자본이전, 그리고 기타 자본지출로 구성된다. 기초수지는 일반정부 채무에 대한 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 수지이다. 국내 총생산(GDP)는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a),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OECD (2013b), *OECD Economic Outlook*, Vol. 2013/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3-1-en.

그림 설명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 대신 2010년의 것을 사용했다.

3.1: 칠레와 터키의 2001년도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아서 (not available)이 국가들은 OECD 국가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칠레는 2011년 대신 2010년의 것을 사용했다. 러시아 연방은 2001년 대신 2002년의 것을 사용했다.

3.2: 칠레 자료 부재.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자신의 적자를 감당하기 위한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자금을 빌리게 되고 공공부채는 증가하게 된다. 시간에 따른 채무의 변화는 과거 재정수지균형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계속해서 큰 적자가 나면 그 결과로 더 많은 부채가 쌓인다. 반면에 흑자가 이어지면 채무가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정부 부채가 많을수록 시장은 정부의 대출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인식하며, 그에 따라 시장이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채무비용도 상승한다.

평균적으로, 2011년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정부 채무는 GDP 대비 78.8%인데, 10%의 에스토니아부터 228%를 기록한 일본까지 국가간 큰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2001년보다 2011년에 채무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패턴의 변화가 포함된 것으로, 2007년까지는 경제성장으로 부채-GDP 비율이 감소하였다. 2007년 이후에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줄어든 수입, 경제활동의 축소, 또는(그리고) 양양책을 위한 추가지출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정부개입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 기간 동안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곳은 일본 (76.6%), 아일랜드 (67%), 영국 (55.1%), 그리고 미국 (48.1%)이다.

일인당 부채부담은 2,207 USD인 에스토니아부터 77,134 USD인 일본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다. OECD 회원국 평균은 26,774 USD이다. 일본의 경우 채무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채무의 대부분은 일본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가능성 (따라서 위험 프리미엄을 지불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간주된다.

호주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는 주식 이외의 증권이 채무수단(debt instrument)으로 선호된다. 주식 이외의 증권에 심하게 의존하는 채무발행구조는 시장변동과 연계되어 있고 채무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채무는 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며, 포함되거나 제외된 금융수단의 종류에 따라 식별되는 부채의 하위집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미래의 주어진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및 원금지불을 해야 하는 모든 부채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채무수단은 부채이지만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같은 일부 부채는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채무는 기관의 금융대차대표에 사용/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채 범주(1993년도 SNA에 따라)를 합산해서 얻는다: 통화 및 예금; 주식 외 증권(securities other than shares); 대출; 기술적 보험적립금; 그리고 기타 계정지급 (accounts payable). SNA에 따르면 대부분 공채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된다.

개념정의가 다르고 채무구성요소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국가간의 비교분석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몇몇 OECD 국가들(예: 호주와 캐나다)과 IMF경제전망 (IMF Economic Outlook)을 자료원천으로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채무구성요소에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미지불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의 부채상황은, 큰 규모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거나 1993년 SNA 기준의 핵심 계정에 기록되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장되어 있다. 국민계정체계가 사용하는 채무의 정의는 유럽연합의 재정상황 평가에 사용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한 채무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그림 3.7의 2011년도 마스트리히트 채권자 별 일반정부 채무는 <http://dx.doi.org/10.1787/888932941424>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인당 정부부채는 정부부채를 GDP 대비 OECD/Eurstat을 구매력 평가 (PPP)를 사용하여 USD로 변환하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IMF 경제전망을 자료원천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우는 내재 구매력 전환 비율이 적용되었다. PPP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A의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국가B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그림 3.6 (2001년에서 2011년) 일인당 실질적 정부부채의 연간성장률은 <http://dx.doi.org/10.1787/88893294140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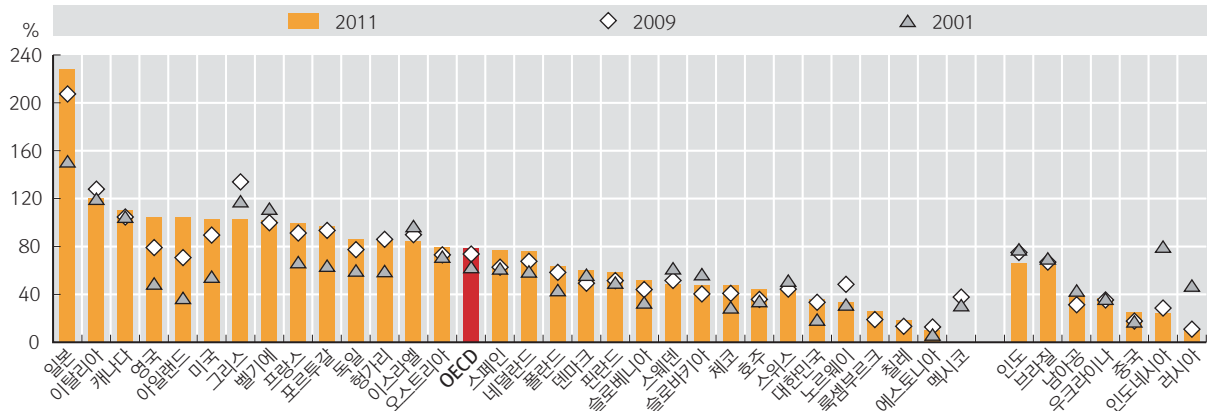
OECD (2013), *OECD Factbook 2013: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3-en>.

그림 설명

-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음. 칠레, 일본, 대한민국, 영국은 통합되지 않은 기준의 보고자료임. 스위스는 2011이 아닌 2010년 자료임
- 3.3: 칠레와 룩셈부르크의 2001년 데이터와 멕시코의 2011년 데이터는 사용 불가하고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는 2001년이 아닌 2002년 것을 사용했다. 덴마크의 데이터는 2001년이 아닌 2003년 것을 사용했다.
- 3.4과 3.5: 멕시코 데이터 부채.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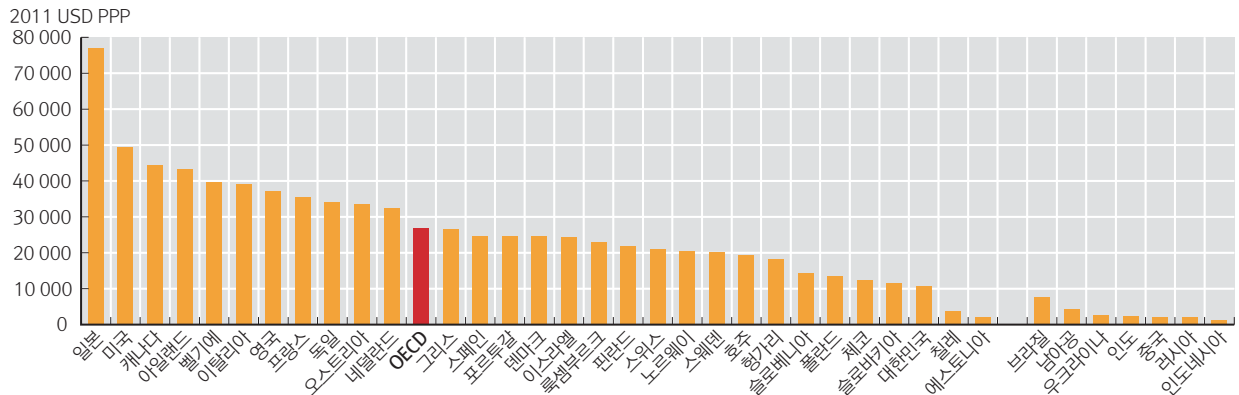
3.3. 일반정부 부채의 GDP에 대한 백분율(2001, 2009, 2011)



출처: OECD 국가: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그 외 국가 (러시아 연방 제외):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Economic Outlook, April 2013, IMF, Washington D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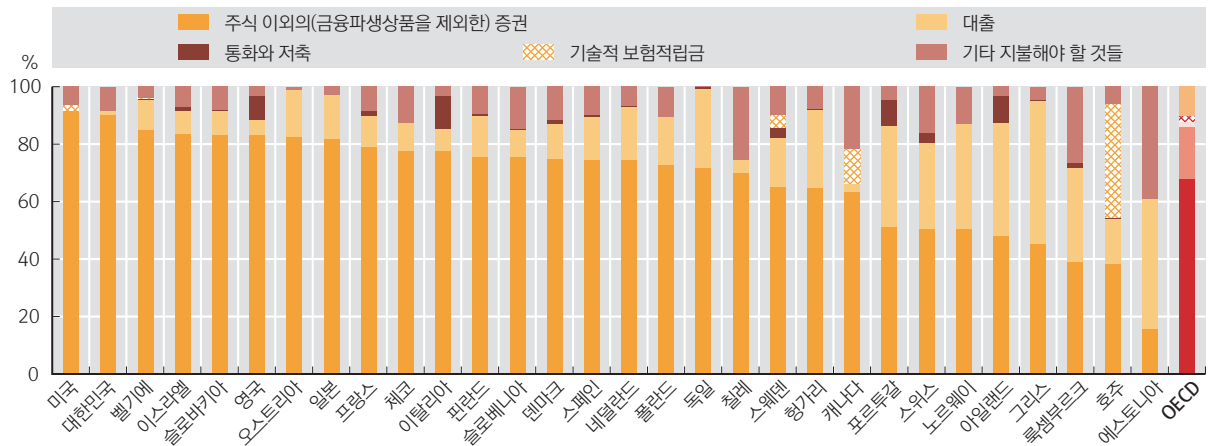
3.4. 일인당 일반정부의 부채 (2011)



출처: OECD 국가: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그 외 국가 (러시아 연방 제외):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3), Economic Outlook, April 2011, IMF, Washington DC.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367>

3.5. 금융수단별 채무 구조 (2011)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386>

중앙정부는 하위정부와는 다른 정도의 주권을 나누어 가진다. 결과적으로 그 하위정부들이 다양한 재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채무 부담에 관한 자율성 정도는 정치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데, 하위정부는 보통 엄격한 재정규칙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특히 채무부담 권한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차입을 통해서 적자를 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위정부의 부채(liabilities)는 하위정부의 채무(debt)로 간주한다. 다수의 정부기관(예를 들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다지 현저하지 않은 정도의 채무증가 초차도 일반정부(모든 정부수준에 걸쳐)의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고, 따라서 예산수지에 영향을 주면서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율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앙정부와 비교하면, 하위정부의 수입기반은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작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OECD 회원국의 하위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금 이전에 의존한다. 2011년도에, OECD 회원국 평균 중앙정부 적자는 GDP 대비 3.2%이고, 이는 일반정부보다 겨우 0.2%p 낮았다. 호주, 캐나다, 독일, 스페인의 경우 일반정부 수지의 3분의 1 이상이 주정부 수지에 의해 견인되었다.

몇 개 국가들(주로 연방 및 준 연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OECD 회원국들의 하위정부의 부채 수준은 일반정부 부채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는 않다. 2011년에는 평균적으로 하위정부의 부채가 GDP의 11.8%를 차지했으며, 지방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1.3%인 그리스부터 38%인 일본 등 차이의 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 독일, 미국(주정부와 지방 정부), 스페인의 경우, GDP 대비 주 정부 부채는 각각 53.3%, 26.0%, 24.7%, 18.7% 이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OECD 회원국의 정부 수준간 부채구조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하위정부는 7.1%p 감소 되었지만 이러한 추세는 주택수입계정(Housing Revenue Account: HRA)의 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HRA 개혁은 아마도 지방정부의 대출을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네덜란드,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하위정부의 부채 비중이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전반적 부채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므로 이러한 감소는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에 비해 하위정부 수준의 부채 증가가 둔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하위정부들이 종종 엄격한 재정규칙의 적용을 받고, 중앙정부의 요구에 따라 전 국가적인 건전화 노력에 참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에 따르면,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주 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의 순 대출(+) 또는 순 차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서 계산된다. 채무에 관한 추가적 정보는 64페이지에 “일반정부 채무” 지표에 관한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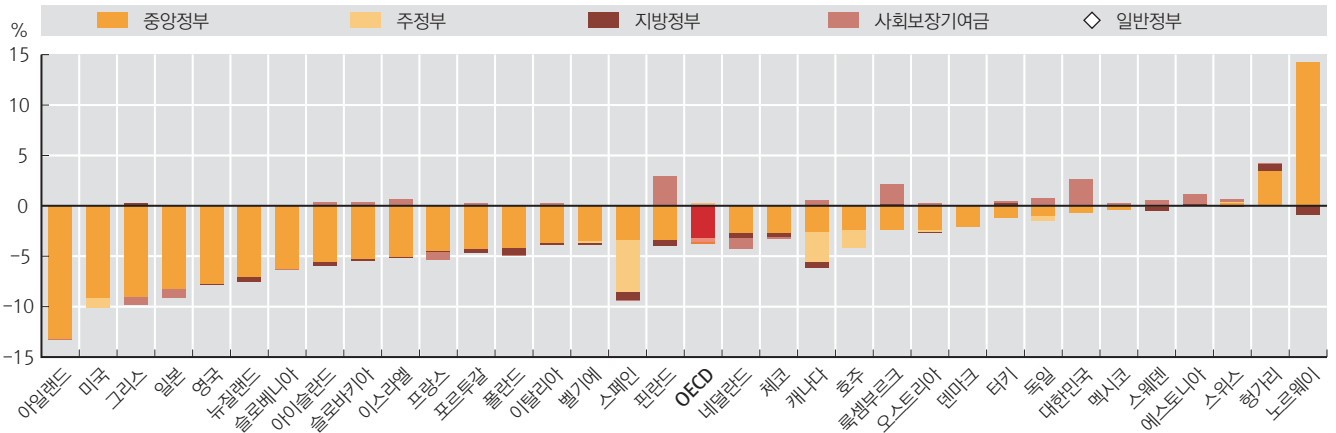
더 읽어볼 것

Teresa Ter-Minassian (2007), “Fiscal Rules for Subnational Governments: Can They Promote Fiscal Discipline?”,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6/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budget-v6-art17-en>.
 Vammalle, C. and C. Hulbert (2013), “Sub-National Finances and Fiscal Consolidation: Walking on Thin Ice”,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No. 2013/0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9m8c9kcf3-en>.

그림 설명

-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사회보장제도(government social insurance scheme)를 운영하지 않는다.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된다.
 3.8: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3.9: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중앙 정부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대한민국, 영국, 미국의 자료는 통합되지 않은 기준의 보고자료이다. 스위스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3.10: 아이슬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과 룩셈부르크의 2001년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는 통합되지 않은 기준의 보고자료이다(호주 제외). 스위스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덴마크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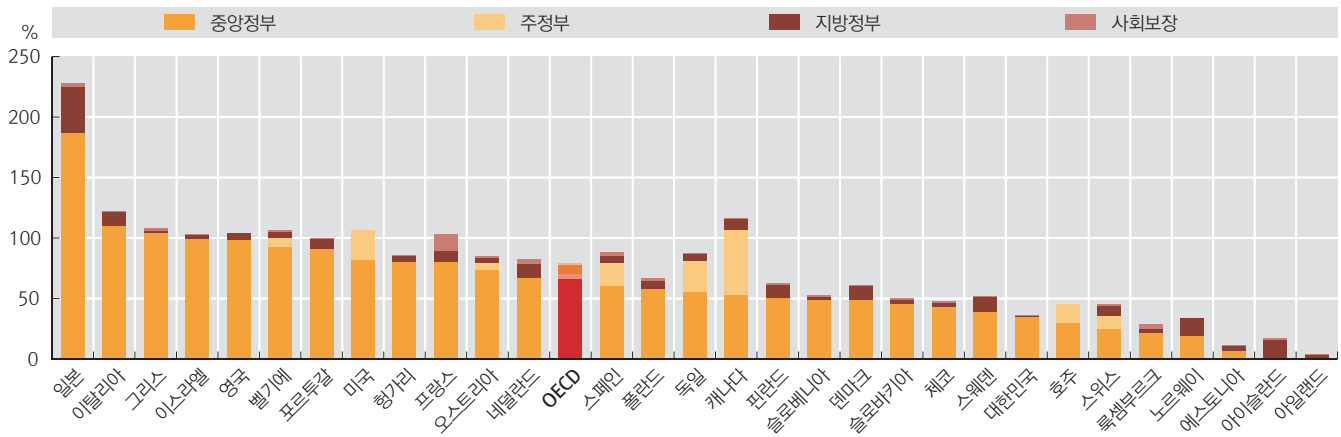
3.8. GDP의 백분율로 나타낸 정부수준별 정부재정수지 (2011)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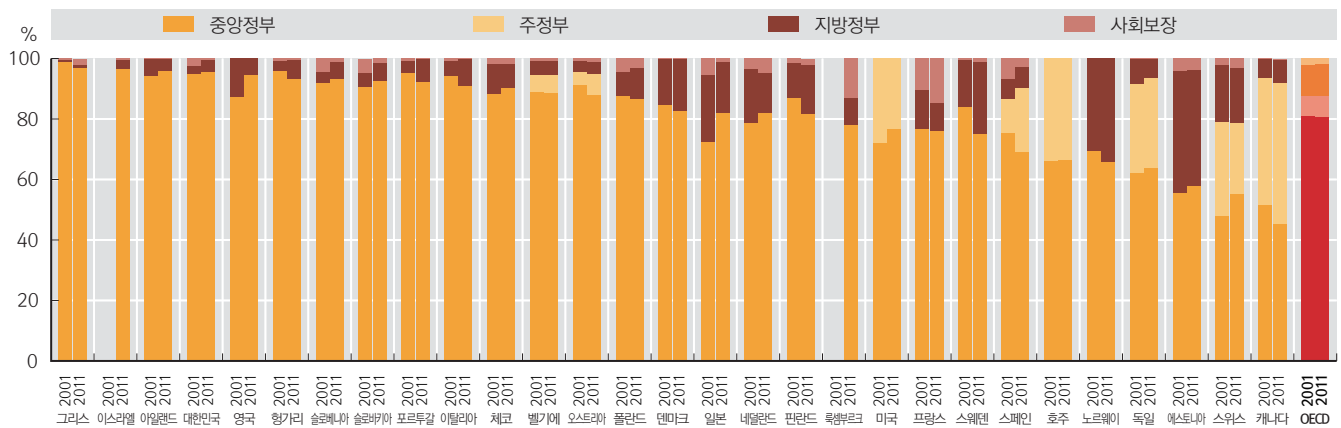
3.9. GDP 대비 정부수준별 정부채무 (2011)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462>

3.10. 모든 정부수준별 정부채무의 분포 (2001, 2011)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481>

정부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재화와 서비스를 시민들과 민간기업에게 공급하는 것과 재분배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가계와 법인으로부터의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이다. OECD 회원국들의 정부수입 비교는, GDP 대비 일인당이든, 재정적 자원의 관점에서 경제에 대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정부수입의 규모는 주로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은 또한 사회 재분배, 재정적 제약, 경제 변동과 성과 등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수입의 수준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2011년 일반정부 수입은 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41.9%였으며, 이는 10년 전 보다 겨우 0.2%p 높은 수치이다(2001년도는 41.7%). 국가간의 수입은 57.3%인 노르웨이에서 22.7%인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났다. 북유럽 국가들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입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가계에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social benefits) 대부분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2001년에서 2011년도 사이의 OECD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GDP 대비 정부 수입은 안정적이었으나, 회원국가 간의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 가장 많은 증가는 헝가리(10.1%)와 포르투갈 (6.6%)에서 볼 수 있었지만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2009년도 이후 재정 위기에 대응하면서 나타난 것이다. 같은 시기에, 비록 이스라엘의 수입은 2009-2011년 사이에는 증가했지만, GDP 대비 정부 수입은 이스라엘 (7.3%)과 스웨덴(4.9%)에서 가장 감소했다; 2009-2011년 동안, OECD 회원국 3분의 2에서 정부 수입이 증가했다.

2011년도 OECD 평균 정부수입은 일인당 PPP 15,141 USD로 나타났다. 인구로 표현하면 OECD 회원국 중 정부수입이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9배가 넘지만(일인당 36,800 USD인 룩셈부르크와 4,000 USD인 멕시코), GDP 대비로 표현하면 2.5배만 차이가 난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OECD 회원국 일인당 정부수입은 매년 평균 1.5% 증가했다.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는 에스토니아(5.3%)와 대한민국(5.0%)에서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 중 4개 국가에서만 정부수입이 0.1%와 0.3% 사이로 매우 미약하지만 감소했다: 4개국은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캐나다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 (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었다. 수입은 사회적 기여금을 제외한 조세, 보조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국내 총생산(GDP)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일인당 정부 수입은 총 수입을 OECD/Eurostat 구매력 평가를 활용해 2011년 USD 가치로 전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IMF 경제전망을 자료원천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우 내재 구매력 전환 비율이 적용되었다. PPP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A의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국가B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그림 설명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일본과 멕시코의 2003년 자료는 추정치이다.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3.11: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3.12: 터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일반정부의 수입구조를 수입원에 따라 분석해 보면, 정부지출에 자금을 지불하는 시민들 그리고/또는 경제부문들의 기여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2011년에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수입의 60% 이상이 사회적 기여금 이외의 세금, 약 25%가 사회적 기여금, 그리고 나머지가 보조금과 기타 수입이었다. 정부지출을 위한 자금마련 방법은 OECD 회원국 각각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호주 경우, 사회적 기여금이 아닌 조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총 수입의 80% 이상), 사회보장지출을 일반 조세로 충당한다. 반면에 체코, 프랑스, 독일, 일본,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페인은 사회적 기여금에 상대적으로 보다 더 의존한다(총 수입의 약 40%). 노르웨이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이 총 수입의 25%를 초과하는 유일한 국가이다(석유 부문의 순 수입 축적을 통해 자본이 구축되는 국부펀드의 배당과 이자가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의 정부수입 구조는 평균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사회적 기여금 이외의 세금의 비중은 0.4%p 증가, 사회적 기여금의 비중은 0.6%p 감소, 그리고 보조금과 기타 수입은 0.2%p 증가했다. 사회적 기여금 비중의 감소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취업을 저하에 따른 결과이다. 정부수입 구조가 가장 큰 변동을 보인 국가는 헝가리(보조금과 기타 기여금 16.7%p 증가), 멕시코(사회적 기여금 이외의 세금 9.3%p 증가), 그리고 포르투갈(보조금과 기타 기여금 6.8%p 증가)이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010년도의 총 수입(사회보장기여금의 3분의 1이 소득과 이윤에 대한 세금이다. 3분의 1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그 중 VAT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4분의 1 이상이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세(5.4%), 근로 소득세(1%), 기타 세금(0.6%)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내역은 2001년의 것과 매우 유사하나, OECD 회원국마다 강조하는 세금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의 수입의 대부분은 소득과 이윤에 대한 세금을 통해 징수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수입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소비, 소득, 부, 재산, 자본에 대한 세금), 사회적 기여금(연금, 건강, 사회보장), 보조금(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매각, 수수료, 자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OECD 국민계정(NA)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 항목들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부록 A 참조). 그림 3.16에 제시된 자료는 OECD 정부수입통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OECD 정부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체계(SNA)에 사용된 조세소득에 대한 정의는 조금 다르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정부가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강제적이고 일반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기여금은 사회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체계에 지불하는 것이다. 이런 기여금은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 체계는 이를 위한 자금이 수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OECD 정부수입통계는 강제적인 사회적 기여금을 조세로 취급한다. 반면에 국민계정체계는 이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혜택의 수령은 비록 혜택의 규모가 기여금의 양과 반드시 관련이 있지 않을지라도 적절한 기여금을 지불했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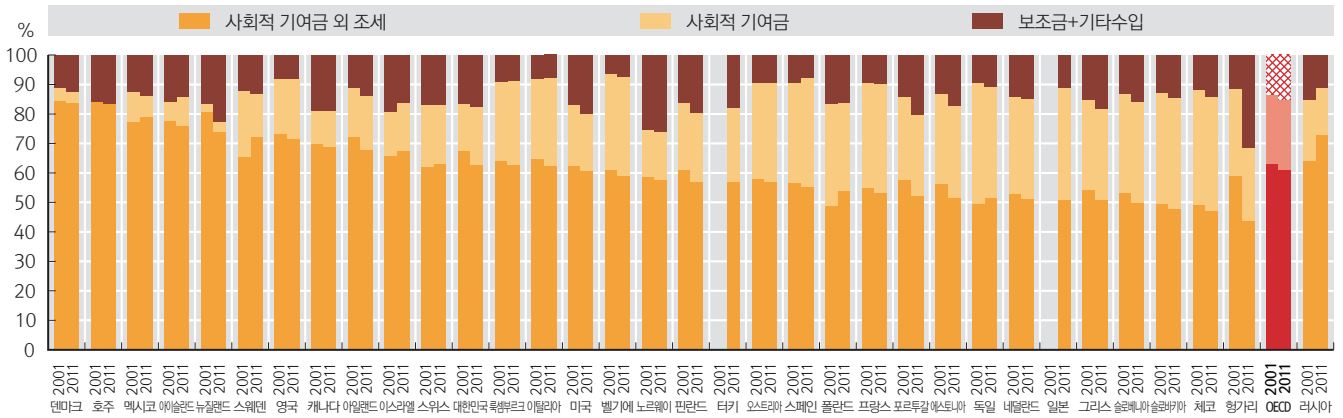
OECD (2012), *Revenue Statistics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v_stats-2012-en-fr.
 OECD (2010), *Tax Policy Reform and Economic Growth*, OECD Tax Policy Studies, No. 2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1085-en>.

그림 설명

- 3.14, 3.15: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일본과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는 정부사회보장제도 (government social insurance scheme)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여금을 통해 수입을 모으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의 자본세(capital tax)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 멕시코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 3.16: OECD 회원국 중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경우 총 조세는 유럽연합을 위해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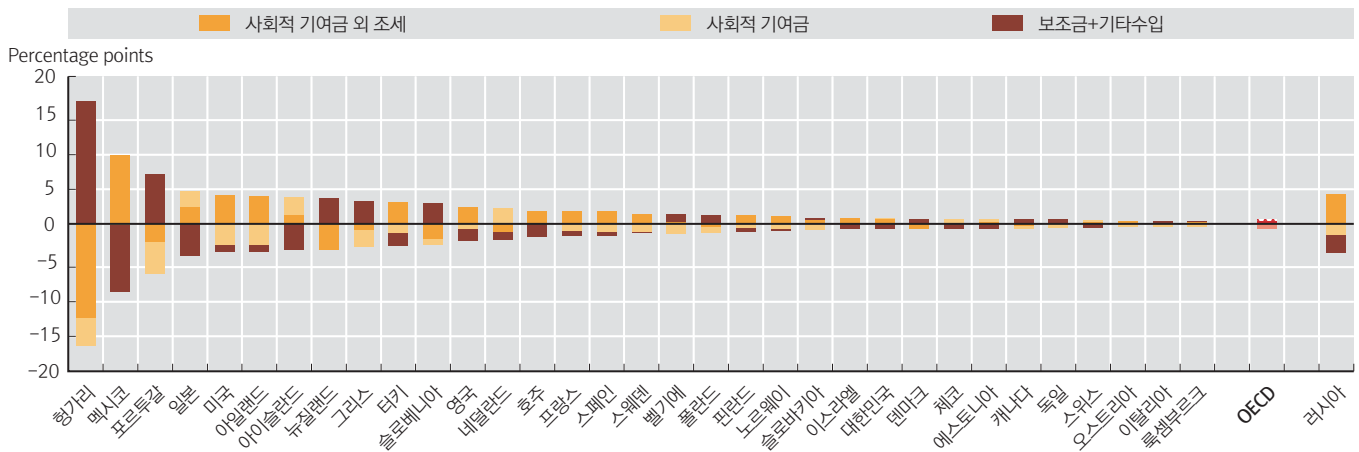
3.14. 일반정부 수입구조 (2001,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5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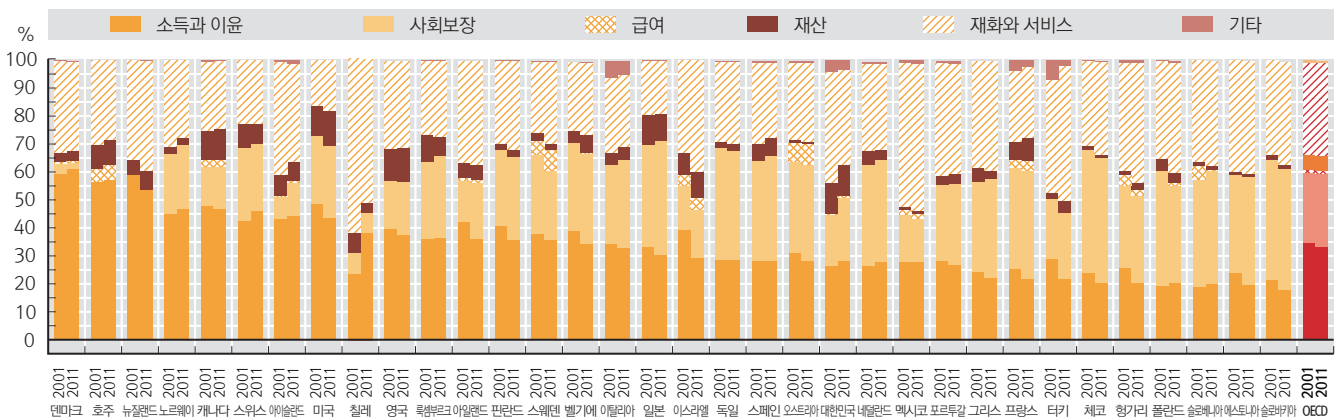
3.15. 일반정부 수입구조의 변화 (2009-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576>

3.16. 총 조세부과의 백분율로 본 조세수입 구조 (2001, 2010년)



출처: OECD (2012), Revenue Statistics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rev_stats-2012-en-fr.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595>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조세징수 및 사회적 기여금 징수능력이 각각 다르다. 이들 각 정부 간 수입 이전의 정도는 정부 수준 간에 재정적 상호의존도를 반영한다. 하위정부에 의해 징수된 조세수입의 규모는 그들의 재정적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2011년도에 OECD 회원국에서 중앙정부는 평균적으로 정부수입의 대부분(60.3%)을 징수했다. 하위정부(주정부, 지방정부)가 평균 총 수입의 21%를, 나머지 18.7%는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징수되었다. OECD 국가 간 정부수준별 수입구조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영국(90.6%), 뉴질랜드(89.6%), 노르웨이(86.2%)의 경우 85% 이상의 정부수입이 중앙정부에 의해 징수되었다. 반면, 중앙정부가 총수입의 절반 이하를 징수하는 OECD 회원국은 8개 국가인데, 그 중 3개 정부는 연방국가가 아니다 : 핀란드(42.9%), 프랑스(34.1%), 일본(24.1%). 일본과 북유럽 국가(노르웨이 제외)의 지방정부는 총수입의 31.2%로 비교적 큰 몫을 징수하는데, OECD 평균은 13.3%이다. 9개 연방국가 중 주정부가 총수입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46%), 캐나다(43.2%), 그리고 호주(38.8%)이다. 프랑스 정부 총수입의 절반은 사회보장기금을 통해 징수된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총수입 중 중앙정부에 의해 징수된 조세수입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1.7%p 감소했다. 반면, 하위정부의 수입 비중은 1.3%p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조세수입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7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덴마크(9.4%p), 헝가리(8.2%p), 노르웨이(4.0%p), 그리스(3.3%p), 독일(2.4%p), 스위스(1.6%p), 그리고 포르투갈(0.1%p)이다.

중앙정부는 대부분 사회적 기여금을 제외한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2011년의 경우 조세수입이 총수입의 평균 77%를 차지했다. 수입원이 비교적 동질적인 중앙정부와 달리, 하위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정부 수입의 대부분은 정부간 보조금(intergovernmental transfers)과 기타 수입이다(2011년에는 평균 61% 이상). 지방수입의 나머지 39% 중에서 재산세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지방정부가 자신들의 세금기반, 세율과 조세감면을 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을 받을 경우, 지방정부가 스스로 수입원을 만들고, 보다 나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수입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연방제를 운영하는 9개 국가에서만 적용되는데, 이들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미국이다. 3.17과 3.18의 자료는 호주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 사이의 이전을 배제한 것이다. 그림 3.18 “정부수준별 정부소득 분포의 변화(2009-2011)”와 그림 3.19, 3.20, 3.21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수입구조)는 각각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1633>, <http://dx.doi.org/10.1787/888932941652>, <http://dx.doi.org/10.1787/888932941671>, <http://dx.doi.org/10.1787/888932941690>) 정부수입은 사회적 기여금을 제외한 조세(소비, 소득, 부, 재산, 자본에 대한 세금), 사회적 기여금(연금, 보건, 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외국이나 국제기구로부터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매각, 수수료, 자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OECD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 항목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부록 A 참조).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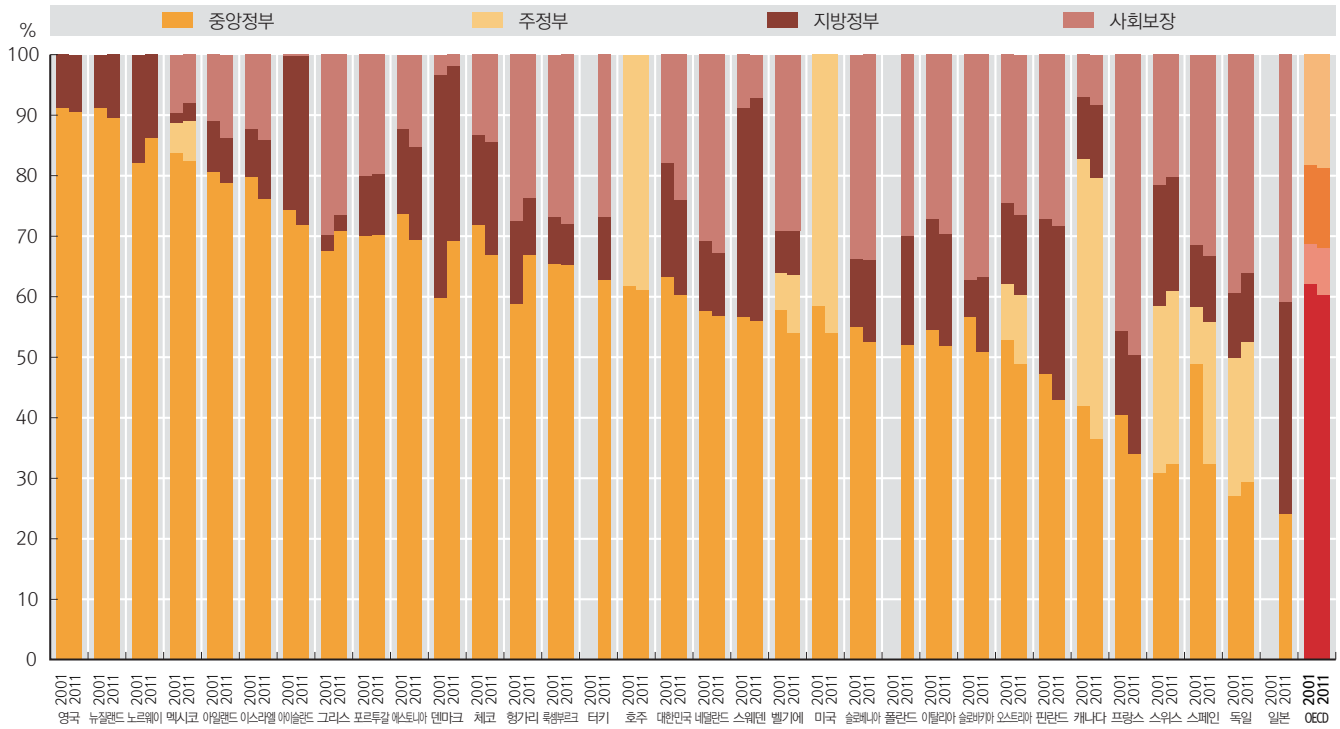
Blöchliger, H. et al. (2010), “Fiscal Policy Across Levels of Government in Times of Crisis”,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97b10uqn46-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일본과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수준 간의 보조금(transfer)은 포함되지 않았다(호주, 일본, 터키 제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멕시코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사회보장제도(government social insurance scheme)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에 포함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3.17.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수입의 분포 (2001,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614>

정부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소득 재분배를 위해 지출한다.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과 일인당 지출비중은 자원(財源)소비라는 측면에서 경제에 있어 정부 크기를 OECD 국가간 비교하는 지표가 된다. 정부 수입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출은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의사결정 또한 사회적 재분배,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수준, 재정적 제약, 경제 변동과 성과에 대한 문화적 기대를 기반으로 삼는다. 따라서 정부지출의 수준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지출의 규모가 정부의 효율성 혹은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1년 OECD 회원국의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은 45.4%이다. 덴마크의 57.6%에서 멕시코의 22.8%에 이르기까지 회원국 간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OECD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다른 국가보다 이 비율이 높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가 55% 이상으로 가장 높고, 대한민국과 멕시코가 각각 30%와 23%로 가장 낮다.

2001년에서 2011년까지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큰 변동을 겪었다.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평균 4.5%p의 큰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아일랜드(15.4%p), 영국(11.1%p), 에스토니아(10.7%p)가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 기간의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2007년 이후에 전반적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동적 안정화 조치들이 시행되고 재량지출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2001년에서 2009년 사이에 오직 3개 국가에서만 GDP 대비 정부지출이 감소했는데, 이는 이스라엘(8.1%p), 슬로바키아(2.9%p), 스위스(0.7%p)이다. 2009년에서 2011년까지 GDP 대비 정부지출이 평균 1.4%p 감소하면서 전반적 추세가 뒤집혔는데, 주 원인은 GDP 성장 대비 지출의 둔화(어떤 경우는 감소) 때문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에스토니아(7.2%p), 스웨덴,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모두 3%p 이상)이다. 같은 시기에 GDP 대비 정부지출이 증가한 나라는 오직 3개 국가, 뉴질랜드(2009-2010년에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6.6%p 증가), 슬로베니아(1.4%p), 일본(0.1%p)이다.

2011년에 OECD 회원국의 평균 정부지출은 일인당 USD 16,240 PPP(구매력 평가)로 나타났다. 인구 측면에서 보면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는 9배가 넘는(일인당 USD 37,000 PPP인 룩셈부르크, USD 4,000 PPP인 멕시코) 반면, GDP 대비로 표현하면 2.5배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일인당 정부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연 2.2%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대한민국(연 6.1% 증가)과 에스토니아(5%)인 반면,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미미하지만 감소했다(0.1%).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지출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었다. 지출은 중간소비, 직원 보수, 보조금, 사회적 혜택, 기타 현금지출(이자지불 포함), 자본이전, 그리고 기타 자본지출로 구성된다.

국내 총생산(GDP)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일인당 정부지출은 총 지출을 OECD/Eurostat 구매력 평가를 활용해 2011년 USD가치로 전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IMF 경제전망 자료를 원천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우 내재(implied) 구매력평가 환산율이 적용되었다 (Implied PPP conversion rate는 IMF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1USD 당 국가 화폐를 말한다). 구매력 평가(PPP)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A의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국가B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일본과 멕시코의 2001년 자료는 추정치이다.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 3.22.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 3.23. 터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정부는 육아시설에서부터 다리 건설,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자금을 투입한다. 공동정책목표에 대한 국제적 협정이 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유럽연합 회원국이 경제성장, 농업,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과 같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한민국과 미국을 제외한 OECD 회원국 정부지출의 가장 큰 부분은 실업 급여, 노령연금, 장애인 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며, 2011년에는 평균적으로 총 지출의 35.6%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은 (산업지원을 포함한) 경제분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으며, 미국은 보건분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2011년 총 지출의 21.4%를 차지했다.

정부의 지출구조는 사회적 및 정책적 선호를 반영하는 반면, 인구 고령화나 상당한 이자지급을 요구하는 높은 수치의 공공부채 또한 일반정부의 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서로 다른 정책 분야에 쏟는 자원의 몫이 변동했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사회보호(social protection)와 보건지출의 비율을 각각 2%p, 1.2%p 늘렸다. 오락, 문화, 종교에도 약간(0.05%)의 증가가 있었다.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 증가는 주로 금융·경제 위기의 영향(실업자보험과 기타 복리후생)으로 일어난 반면, 보건에 대한 지출 증가의 주 요인은 새로운 의료기술, 혁신, 인구 고령화이다. 모든 기타 정책분야의 지출 점유율은 감소했다: 일반 공공서비스(1.1%p), 경제분야(0.6%p), 국방(0.5%p), 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조성(0.5%p), 교육(0.3%p), 공공질서(0.1%p), 치안(0.1%p), 환경보호(0.1%p).

보건은 하나의 정책분야 내에서 일어나는 지출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보건지출의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추세는 경기침체와 보건지출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인해 둔화되거나 뒤집혔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에서 나타난 감소는 대부분 임금의 삭감, 보건분야 근무 직원수의 축소, 전문의와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인하에 기인한 것이다.

. 아이슬란드는 의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유보하면서 병원의 합병을 통해 효율성 개선을 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지출에 대한 자료는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라 세분화 되었는데 이는 정부지출을 10개의 기능, 즉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보건, 여가·문화·종교, 교육, 사회보장으로 분류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B를 참고하면 된다.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3.27(<http://dx.doi.org/10.1787/888932943324>)과 그림 3.28(<http://dx.doi.org/10.1787/888932943343>)은 2011년의 각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과 이들에 대한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의 변화를 보여준다.

선정된 COFOG II 수준의 우선 기능별 정부구조는 그림 3.29 (일반 공공서비스), 그림 3.30 (공공질서와 안전), 그림 3.31 (경제), 그림 3.32 (보건), 그림 3.33 (교육), 그림 3.34 (사회보장)에 표기되어 있으며 각각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1766>, <http://dx.doi.org/10.1787/888932941785>, <http://dx.doi.org/10.1787/888932941804>, <http://dx.doi.org/10.1787/888932941823>, <http://dx.doi.org/10.1787/888932941842>, <http://dx.doi.org/10.1787/888932941861>.

더 읽어볼 것

OECD (2012),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83896-en>.

그림 설명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일본, 스위스, 터키의 시계열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폴란드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3.25.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구조 (2011년)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보호	주택과 지역공동체	편의시설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호주	12.5	4.1	4.8	11.4	2.6	1.8	19.2	2.1	14.5	27.1
오스트리아	13.1	1.4	2.9	10.5	1.0	1.2	15.3	2.0	11.0	41.6
벨기에	15.0	1.8	3.4	12.3	1.4	0.7	14.8	2.4	11.6	36.6
체코	10.7	2.1	4.3	13.9	3.1	1.9	18.1	2.9	11.4	31.7
덴마크	13.7	2.4	2.0	6.1	0.7	0.6	14.5	2.8	13.5	43.8
에스토니아	8.4	4.1	5.6	12.0	-0.9	1.6	13.3	5.0	16.9	34.2
핀란드	13.3	2.6	2.7	8.8	0.5	1.0	14.2	2.2	11.6	43.1
프랑스	11.5	3.2	3.1	6.3	1.9	3.4	14.7	2.5	10.8	42.6
독일	13.6	2.4	3.5	7.8	1.5	1.2	15.5	1.8	9.4	43.3
그리스	24.6	4.6	3.3	6.2	1.0	0.4	11.6	1.2	7.9	39.3
헝가리	17.5	2.3	3.9	14.4	1.5	1.6	10.4	3.5	10.5	34.5
아이슬란드	17.8	0.1	3.1	12.4	1.3	0.7	16.1	7.0	17.1	24.6
아일랜드	11.4	0.9	3.7	16.4	2.1	1.3	15.6	1.8	10.9	35.9
이스라엘	14.7	14.7	3.8	5.8	1.5	1.0	12.3	3.9	16.5	25.9
이탈리아	17.3	3.0	4.0	7.1	1.8	1.4	14.7	1.1	8.5	41.0
일본	11.0	2.2	3.1	9.8	2.9	1.8	17.3	0.8	8.4	42.7
대한민국	15.2	8.6	4.2	20.1	2.4	3.3	15.2	2.2	15.8	13.1
룩셈부르크	11.4	1.0	2.5	9.9	2.8	1.8	11.4	4.0	12.1	43.2
네덜란드	11.2	2.7	4.2	10.9	3.3	1.2	17.0	3.5	11.6	34.5
노르웨이	9.7	3.6	2.2	9.6	1.5	1.6	16.5	2.9	12.6	39.8
폴란드	13.4	2.7	4.2	13.0	1.6	2.0	10.9	3.0	12.8	36.6
포르투갈	17.1	2.7	4.0	8.2	1.1	1.3	13.8	2.2	12.9	36.7
슬로바키아	15.4	2.7	6.4	9.8	2.7	2.6	15.5	3.0	10.6	31.3
슬로베니아	12.4	2.3	3.3	11.4	1.6	1.3	13.5	3.7	13.2	37.3
스페인	12.5	2.3	4.8	11.6	2.1	1.3	14.1	3.3	10.5	37.4
스웨덴	14.4	2.9	2.7	8.2	0.7	1.5	13.7	2.2	13.3	40.5
스위스	9.9	2.9	5.0	13.7	2.3	0.6	6.1	2.6	17.9	39.0
터키	16.4	4.1	5.2	11.9	1.1	3.5	12.1	2.3	11.4	31.9
영국	11.6	5.1	5.3	5.3	2.0	1.8	16.5	2.1	13.4	36.8
미국	12.4	11.7	5.5	9.4	0.0	2.1	21.4	0.7	15.5	21.3
OECD	13.6	3.6	3.9	10.5	1.6	1.6	14.5	2.7	12.5	35.6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들은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286>

3.26.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구조 변화 (2001-2011년)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보호	주택과 지역공동체	편의시설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호주	0.4	-0.4	0.3	-1.4	1.0	-0.7	2.4	-0.1	0.0	-1.5
오스트리아	-2.5	-0.3	0.0	0.3	0.0	-0.3	1.7	0.1	0.2	0.8
벨기에	-6.3	-0.7	0.2	3.4	-0.1	0.1	1.5	0.5	-0.2	1.6
체코	1.6	-1.4	-0.6	-6.4	1.0	-0.7	2.2	0.5	1.5	2.3
덴마크	-1.6	-0.6	0.2	0.1	-0.4	-0.7	1.9	-0.3	-0.1	1.5
에스토니아	-0.9	0.2	-1.4	1.4	-3.0	-0.2	1.6	-0.7	-2.1	5.0
핀란드	-1.1	-0.1	-0.1	-0.8	-0.2	0.1	2.0	-0.1	-0.9	1.2
프랑스	-2.7	-0.7	0.2	-0.5	0.3	-0.2	1.0	0.4	-0.6	2.9
독일	1.0	0.0	0.1	-1.4	0.0	-0.9	1.4	0.0	0.7	-0.8
그리스	1.1	-2.8	0.7	-3.8	-0.2	-0.5	0.3	0.4	1.8	2.8
헝가리	-4.6	-0.3	-0.5	1.9	-0.1	-0.2	0.1	0.2	-0.6	4.0
아이슬란드	2.5	0.0	-0.4	-4.0	-0.4	-0.2	-2.5	-0.1	-1.1	6.1
아일랜드	0.4	-1.0	-1.1	3.1	-0.7	-4.3	-3.1	-0.2	-2.6	9.5
이스라엘	-4.3	-1.2	0.7	0.3	0.3	-0.7	1.2	0.5	1.8	1.6
이탈리아	-2.9	0.6	0.1	-1.9	0.0	-0.3	1.6	-0.7	-1.3	4.8
대한민국	1.8	-1.9	-0.9	-3.2	-0.3	-0.6	4.2	-0.1	-2.2	3.2
룩셈부르크	-0.6	0.2	0.1	2.7	-0.5	-0.3	-1.3	-0.4	0.1	0.0
네덜란드	-3.6	-0.8	0.4	-1.4	0.1	-0.5	5.8	-0.2	0.2	0.0
노르웨이	-1.8	-0.7	-0.1	-1.0	0.3	0.8	0.3	0.5	-0.7	2.4
폴란드	-0.1	0.0	0.8	5.0	0.2	-1.7	1.0	0.6	-1.0	-4.9
포르투갈	3.0	-0.5	0.0	-4.8	-0.5	-1.0	-1.1	-0.8	-2.2	7.8
슬로바키아	-1.7	-2.3	0.2	-5.2	1.0	0.8	4.5	0.9	3.3	-1.5
슬로베니아	-2.0	-0.4	-0.7	2.0	0.0	-0.1	-0.4	1.1	-0.6	1.1
스페인	-2.1	-0.5	0.0	-0.2	-0.2	-1.3	0.8	-0.1	-0.6	4.2
스웨덴	-0.5	-1.0	0.2	1.0	0.1	-0.3	1.8	0.2	0.1	-1.6
영국	1.0	-0.6	-0.4	-1.0	0.3	0.0	1.8	-0.4	0.3	-1.0
미국	-2.5	2.3	-0.4	-1.7	0.0	0.5	2.2	-0.2	-2.0	1.7
OECD	-1.1	-0.5	-0.1	-0.6	-0.1	-0.5	1.2	0.0	-0.3	2.0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들은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305>

공공재화와 서비스 조달 및 소득재분배에 대한 책임은 각 수준의 정부들 간에 분담된다. 각 수준의 정부지출에 대한 책임을 맡는 정도는 각 나라의 제도적 구조와 정부수준별 지출 권한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위정부가 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위정부가 정책과 프로그램을 더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2011년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지출의 46%를 중앙정부 지출이 차지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와 같은 하위정부는 32%를 차지했으며, 사회보장기금이 그 나머지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정 분권화의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의 경우 총 지출의 76.4%를 중앙정부가 차지했는데, 이는 2001년에 비해 27.1%p 증가한 수치다. 반면, 연방제도를 가진 스위스와 독일에서는 중앙정부가 총 지출의 20% 이하를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예: 연금, 실업 급여), 일반 공공서비스(예: 행정부, 입법부 운영, 공공부채 거래), 국방에 대해 예산의 큰 부분을 지출한다. OECD 회원국 절반 이상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중앙정부 지출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벨기에와 스페인의 중앙정부는 예산의 60% 이상을 일반 공공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교육이 지출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여가활동, 문화·종교는 대부분 하위수준의 정부가 자금을 대며, 이는 하위수준 정부와 시민 간의 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OECD 회원국에서 하위정부의 지출과 수입은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하위정부의 조세 자치권은 다양하다. 하위정부의 지방세 기반, 그 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의 제한은, 자체의 수입원을 만들어 내기 위한 권한을 축소하고, 세율을 올려 경제적 충격에 대처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더욱 잘 제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transfers)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OECD 회원국에서 분명한 재정분권화의 추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정부지출에 대한 자료는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라 세분화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지출을 10개의 기능, 즉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보건, 여가·문화·종교, 교육, 사회보장으로 분류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B를 참고하면 된다. 일반 정부는 중앙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 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그림 3.35와 3.37(2009-2011년의 정부수준별 일반 정부 지출분포의 변화)은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 사이의 이전을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각 수준의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대체적인 책임성을 볼 수 있는 대리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지출 자료(표 3.38, 3.39, 3.40)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간 이전을 포함한 것으로 각 수준의 정부에서 각 기능에 대한 지출의 규모를 보여준다.

그림 3.37 (<http://dx.doi.org/10.1787/888932941918>), 표 3.38 (<http://dx.doi.org/10.1787/888932941937>), 3.39 (<http://dx.doi.org/10.1787/888932941956>), 3.40 (<http://dx.doi.org/10.1787/888932941975>)은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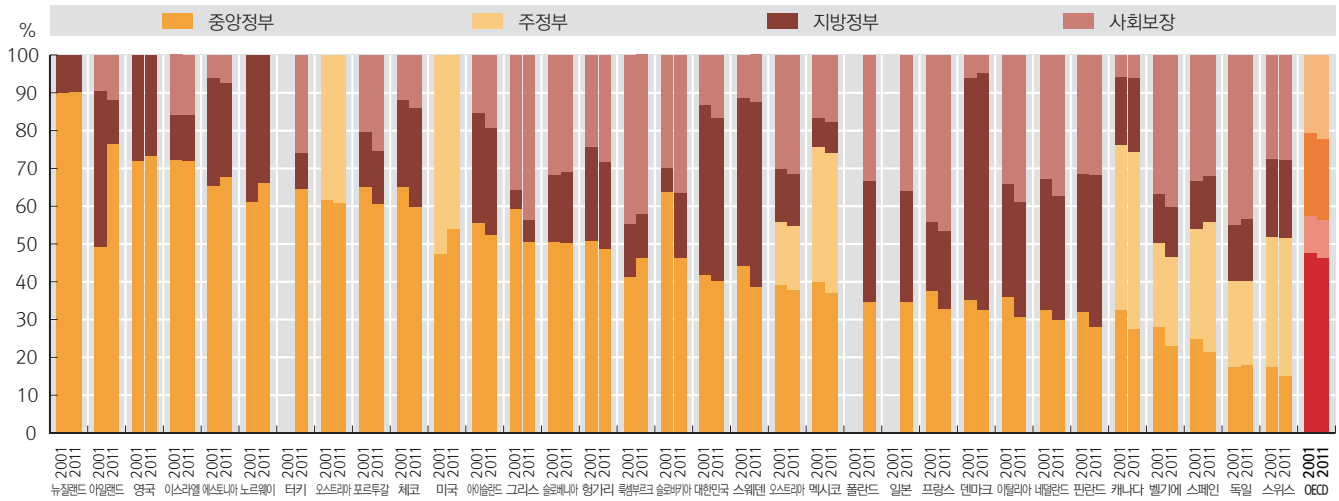
Blöchliger, H. and C. Vammalle (2012), *Reforming Fiscal Federalism and Local Government: Beyond the Zero-Sum Game*,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970-en>.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다른 수준의 정부 사이의 이전은 배제했다(호주, 일본, 터키 제외). 캐나다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3.35: 일본, 폴란드,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과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에 포함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3.35.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지출 분포 (2001,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880>

3.36. 재정 분권화: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하위정부의 비율(2011년)

총 정부수입의 비율로서 하위정부의 수입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899>

정부 투자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성장 촉진인데, 이것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로, 주택, 학교, 병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수익(공공재)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민간부문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의해 투자된다. 공공 직접투자는 경기대응 정책(countercyclical policy objectives)으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경제침체의 결과로 대부분 OECD 정부는 소프트 인프라와 하드 인프라에 대한 새로운 투자의 증가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다.

2011년에 OECD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정부의 직접투자가 총 투자의 15.5%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중 23개국은 긴축정책 시행으로 인해 이 수치가 2009년보다 낮다.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총 투자 중 정부직접투자의 비중이 늘어난 국가는 폴란드(3.6%p), 아일랜드(1.9%p), 덴마크(1.8%p), 헝가리(1.8%p), 캐나다(1.3%p), 호주(0.4%p), 벨기에(0.1%p), 그리고 스위스(0.1%p)이다.

일반정부지출 중 직접투자의 비중은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인프라 보유량과 연결되어 있다. 2011년에 OECD 회원국의 직접투자는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지출의 6.7%를 차지했다. 2001-09년과 2009-2011년 기간 동안, 4개 OECD 회원국에서 일반정부 지출 중 직접투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은 폴란드(5.4%p), 캐나다(3.5%p), 스웨덴(1.3%p), 덴마크(0.3%p)이다. 반면, 11개의 OECD회원국에서 감소되었는데, 가장 큰 감소는 아일랜드(7.5%p), 대한민국(7.2%p), 아이슬란드(6.6%p)이다.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국가는 이후 건전화 단계에서 정부직접투자 역시 가장 많은 감소를 겪었다. 이 결과는 기타 항목(고용보험 및 기타 자동적 복지지출)에 대한 높은 지출과 건전화 정책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수준별 직접투자지출의 분포는 국가들의 정치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주정부 수준의 투자는 연방국가에만 해당되는데, 평균 공공직접투자가 4분의 1 이상을 나타내지만 미국에서는 84%, 호주에서는 66%까지 도달한다.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적으로 정부 직접투자의 62%가 하위정부에서, 37.3%가 중앙 정부에서 수행된다. 2001-2011년 기간 중에는 투자 분권화를 향한 공통된 추세는 없다. 슬로바키아나 헝가리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상당한 재할당이 있었지만, 아일랜드나 폴란드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그와 반대의 경향이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체계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일반정부 투자는 직접투자(순 고정자본의 형성으로 측정)와 간접투자(자본보조로 측정)를 포함한다. 이 분석에는 직접투자만 고려했다. 순 고정자본의 형성은 주로 도로 인프라로 구성되지만 오피스 건물, 주택,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도 포함이 된다. 총 투자는 일반 정부, 가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비영리기구를 포함한 경제 전체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 (순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미국이다. 그림 3.44 “정부수준별 투자지출 분배의 변화 (2001-11년)”는 온라인 상에서 제공된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2051>.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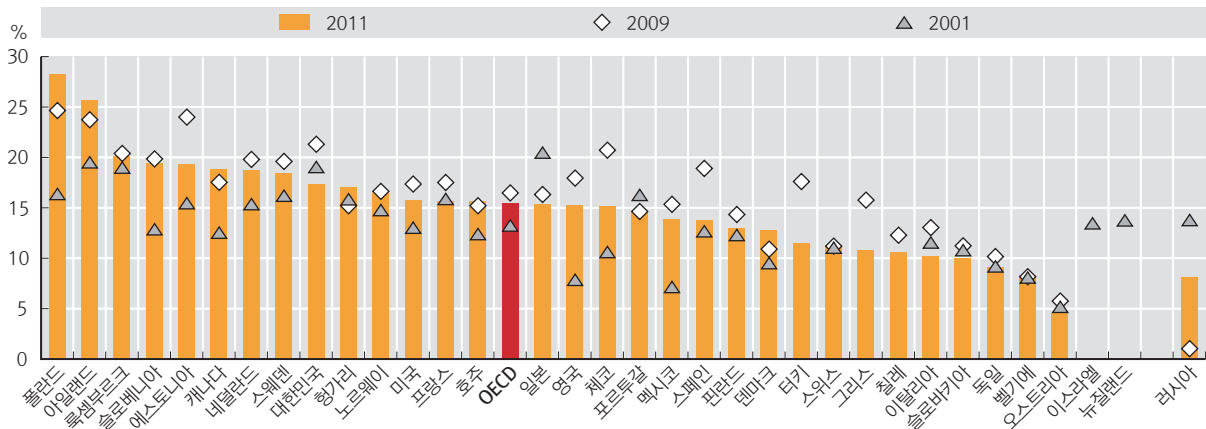
- OECD (2013, forthcoming), *Investing Together: Working Effectively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7022-en>.
- OECD (2011),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4470-en>.
- OECD/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12), *Institutional and Financi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7001-en>.

그림 설명

- 캐나다와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멕시코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그림 3.41과 3.42의 사용가능 자료가 다른 것은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중 자료 표의 차이 때문이다.
- 3.41: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다음 국가들의 시계열 데이터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칠레 (2001), 그리스 (2001), 터키 (2001), 이스라엘 (2009-2011), 뉴질랜드 (2009-2011). 호주와 칠레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아일랜드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 3.42: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일본과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 3.43: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호주와 미국에 경우 주정부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사회보장제도(government social insurance scheme)을 운영하지 않는다.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s)은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 중앙정부에 포함 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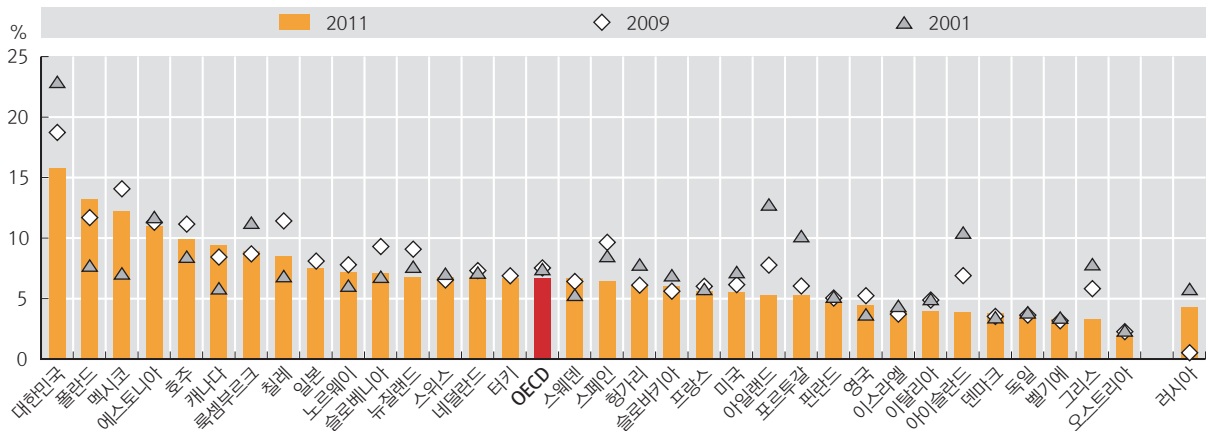
3.41. 총 투자에서 정부투자의 비중 (2001, 2009,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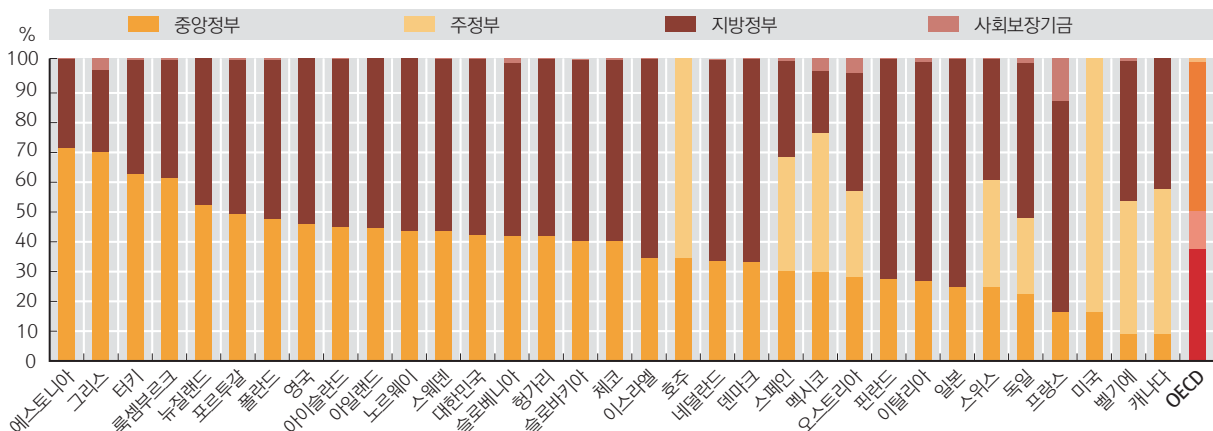
3.42. 정부 총 지출에서 정부투자의 비중 (2001, 2009,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013>

3.43. 정부수준별 투자지출 분포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032>

생산비용은 재화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정부 지출을 가리킨다. 어떤 정부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반면, 다른 정부는 생산의 많은 부분을 비영리단체나 민간부문에 아웃소싱한다. 아웃소싱 방법은 두 가지이다. 정부는 투입으로 사용될 재화와 서비스(정부가 사용할 재화와 서비스, 즉 중간소비)를 구매하거나,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영리단체나 민간 부문에 지불(정부가 자금을 대는 재화와 서비스, 즉 시장 생산자를 통한 현물이전)할 수 있다.

생산할 재화와 서비스의 양과 유형은 무엇이며, 최선의 생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이들이 시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아웃소싱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외부의 전문성을 얻고 재화와 서비스를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아웃소싱의 사용은, 수요주체로서 정부의 역할과 비-정부 부문의 고용을 강화한다. 정부의 아웃소싱은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크기로 측정된다.

2011년에는, OECD 회원국들에서 정부재화와 서비스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GDP의 4분의 1에 도달했고, 그 범위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 32%와 멕시코에서 12%까지 이른다. 2001년에서 2011년 사이에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정부생산 비용은 평균 1.6%p 증가했다. 그러나 이 추세는 2009년 이후에 뒤집혔고, 결과로 1%p 줄었다. 대략 56%의 조정은 일반정부 직원의 보상을 삭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생산비용의 구조 측면에서, 2011년도에는 정부직원에게 대한 보상이 거의 절반(47%)을 차지하고, 조금 낮은 비율(44%)이 아웃소싱에 대한 것(일반정부가 사용하고 자금을 제공한 재화와 서비스)이었다. 생산 비용의 나머지 9%는 고정자본의 소비를 나타냈다.

2011년에는 OECD 회원국 정부의 아웃소싱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10%를 차지했다. 그러나 아웃소싱의 중요성은 멕시코(2.8%), 스위스(5.4%), 핀란드(14.2%), 네덜란드(19%)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가 난다. 벨기에, 일본, 독일의 경우, 중간소비는 지출의 40% 이하를 차지하는데 이는 주로 자원이 제3자에 위임되어 소비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아웃소싱 자원의 80% 이상을 중간소비에 사용하고 따라서 정부가 여전히 직접 제공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생산비용의 개념과 방법론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있는 정부지출에 대한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 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생산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일반정부 직원에 대한 보상(현금과 현물보상, 고용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경제적 사회보장기여금, 자발적 기여금 포함)
- 일반정부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 이는 정부 아웃소싱의 첫 번째 요소이며, 국민계정 체계에 나온 용어로 중간적 소비이다. (회계나 정보기술서비스와 같은 정부의 생산에 필요한 매개적인 생산물의 조달.)
- 일반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정부 아웃소싱의 두 번째 요소이다. 국민계정 체계의 용어로 시장 생산자를 통한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처음에 시민이 지불하고 후에 정부에게 환불 받은 것, 예를 들어 공공 사회보장지불을 통해 환불 받은 의료비 등도 포함한다.)
- 고정자본 소비 (자본의 구매력 저하).

정부고용과 최종산출을 위한 매개적 소비에 대한 자료는 정부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예를 들어 정부 직원들이 건설한 도로나 기타 자본투자 사업이 있다. 여기에서 생산비용은 국민계정 체계에서의 산출가치와 동일하지 않다. 표 3.48 “GDP 대비 생산비용 비율의 변화 (2009-2011)”는 <http://dx.doi.org/10.1787/888932943362>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49 “일반정부 아웃소싱 아웃소싱(아웃소싱) 지출구조 (2011)”는 <http://dx.doi.org/10.1787/888932942127>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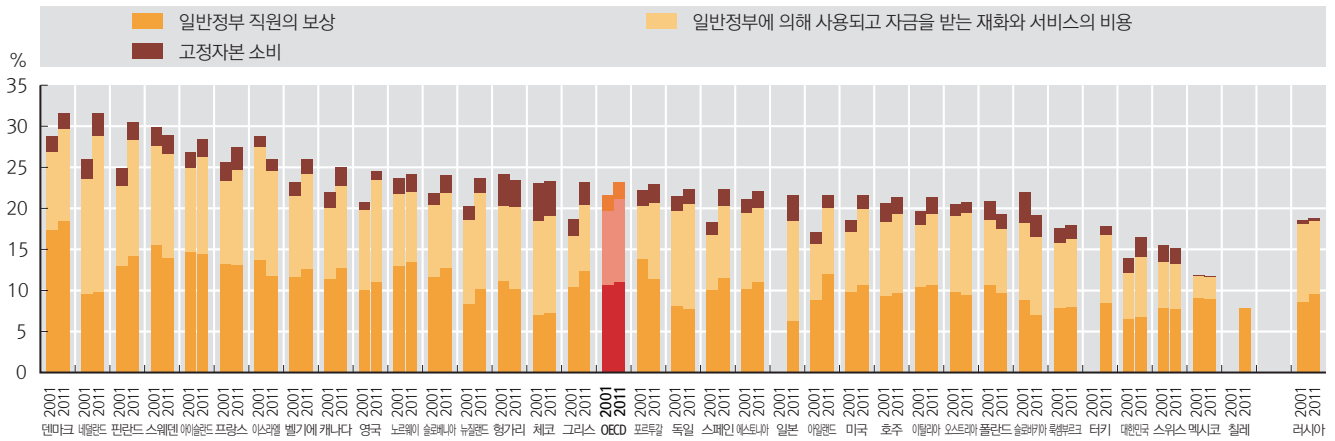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멕시코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3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러시아 연방의 자료는 2001년도 대신 200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영국, 그리고 미국은 일반정부가 자금을 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계정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3.45: 일본과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칠레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1년의 것만 이용가능하며 직원에 대한 보상의 자료만 있다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3.46, 3.47: 칠레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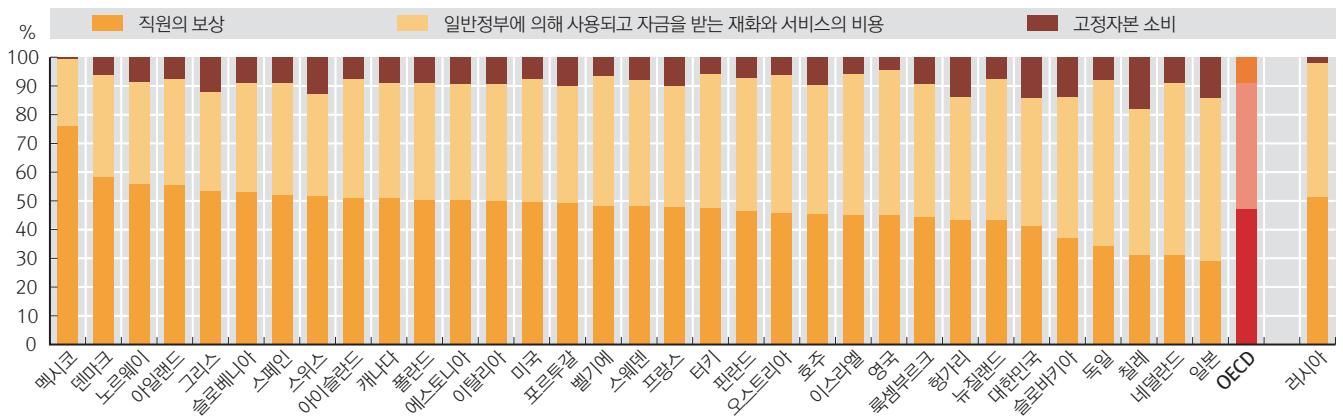
3.45. GDP의 백분율로 나타낸 생산비용 (2001,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와 국가회계자료들의 조합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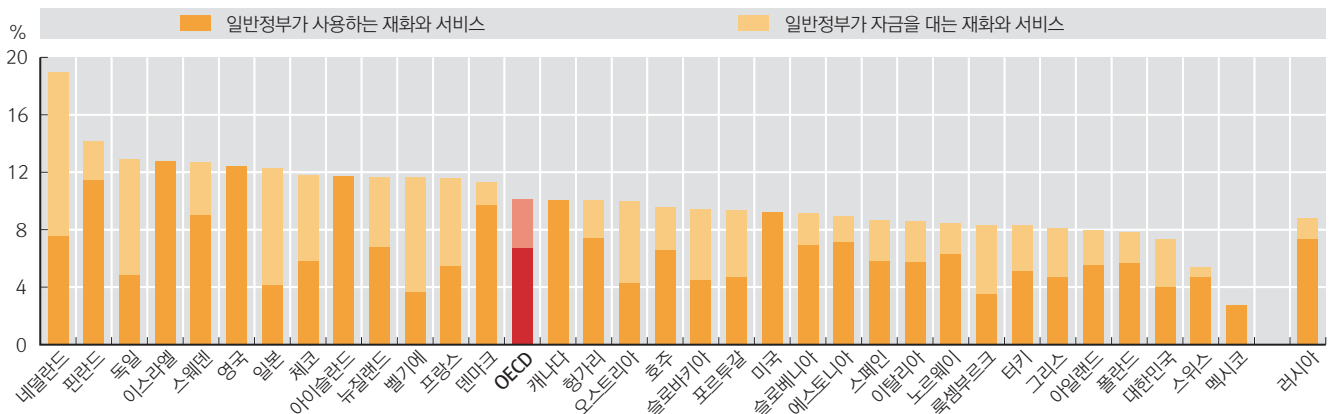
3.46. 생산비용의 구조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와 국가회계자료들의 조합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089>

3.47. GDP의 백분율로 나타낸 일반정부 아웃소싱 지출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와 국가회계자료들의 조합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108>

중앙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지출은 중앙정부예산 중 ICT에 사용되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한 투자, 정보통신 인프라의 유지비,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의 연봉과 훈련). 더욱 효율적인 내부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더욱 낮고 개방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정부는 기술(특히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다.

ICT에 대한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정책관련 성과물을 내는 것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 지출의 절대량을 통해, 근본적인 패턴에 대한 이해와 ICT 사용의 최적화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미국 중앙정부는 USD 750억, 영국은 USD 100억, 캐나다, 프랑스, 호주는 USD 40-50억). 일부 경우에는 ICT가 중앙정부 예산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ICT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우선순위, 성과, 또는 효율성의 지표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후 사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완전히 파악은 안됐지만 중요한 맥락적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ICT가 중앙정부 예산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는 고도의 중앙집권화 국가(뉴질랜드, 핀란드)와 연방국가(미국, 캐나다, 스위스), 또 인구가 측정했을 때 다양한 크기의 국가가 포함되었다. 공공행정의 절대적 크기 또한 지출 패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슬로베니아와 에스토니아 정부는 고용수치가 비슷하고 직원당 ICT 자본과 운영 지출액도 비슷하다. 이태리, 스페인, 독일의 공공행정은 더 크고 직원당 ICT 지출도 더 많다(USD 3000-4000PPP). 미국은 평균적으로 직원당 USD 26000이 넘는 ICT 지출로 두드러지며, 스위스, 영국, 대한민국, 호주가 뒤를 잇는다. 동시에, 공공행정의 크기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한다. 호주와 대한민국의 중앙정부는 크기는 비슷해도 칠레나 핀란드의 중앙정부보다 직원당 ICT 지출이 거의 3배이다. 프랑스와 미국은 중앙정부 직인의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많음에도 미국의 직원당 ICT 지출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 직원이 많은 정부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일인당 지출 절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정부들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저하시키는 공공정책 집행과 정상의 더욱 고도의 복잡성이 잠재해 있을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지출 패턴을 더 잘 이해하고 국내 사정을 고려하며 정부의 ICT 사용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지출에 대한 전용점검을 실시한다. 개별 자료 비교를 포함하여 ICT 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ICT 지출에 대한 결정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의 분석은 개인

ICT 지출 범주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웃소싱 대비 공공 고용비용, 중앙정부 ICT 지출과 지방정부 지출의 상호작용, 보건, 교육, 사법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과학 기술의 사용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등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ICT 지출 자료는 21개국에 대해 사용가능하며 자본자원, 운영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자료는 2010년과 2011년에 OECD Network on E-Government에 속한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정부 ICT 지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공식 자료원천에서 추가적 자료가 추출되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과 조정(harmonization)이 착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자료는 예비단계이며 추가적 조정이 행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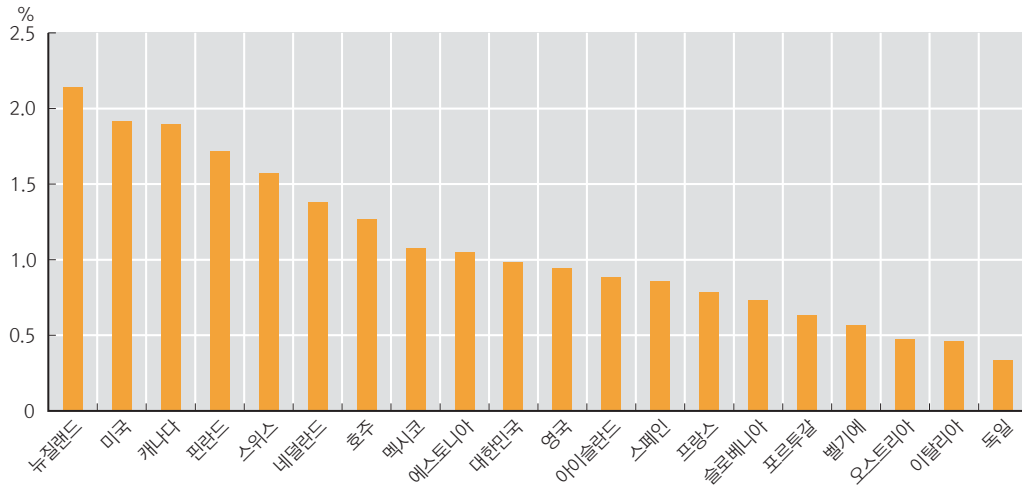
더 읽어볼 것

OECD (2010), OECD E-government Studies: Indicators Project, available at www.oecd.org/governance/public-innovation.

그림 설명

- 호주, 독일, 이태리, 대한민국, 스페인, 스위스의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벨기에와 슬로베니아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09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08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 3.50: ICT 지출은 자본자원, 운영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만 인적 지출 자료가 없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독일,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은 제외한다. 호주와 포르투갈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10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아이슬란드 자료는 2011년도 대신 2008도의 것을 사용했다. 칠레는 자세한 ICT 지출 자료를 제공했지만 중앙정부 지출이 제시되지 않아 표기되지 않았다.
- 3.51: 이 그림의 ICT 지출은 규모의 경제가 가장 기대되는 분야에 자본과 운영 지출만이 포함했다(네덜란드, 뉴질랜드, 미국은 인적 지출을 포함).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중앙정부 고용 자료는 직원수로 측정했지만, 정규직환산인력을 표기한 프랑스,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위스, 영국은 제외한다. 결과적으로 이 다섯 국가의 경우, 이러한 비교는 직원 수를 과소평가하고 ICT 자본과 일인당 운영비용의 합계는 과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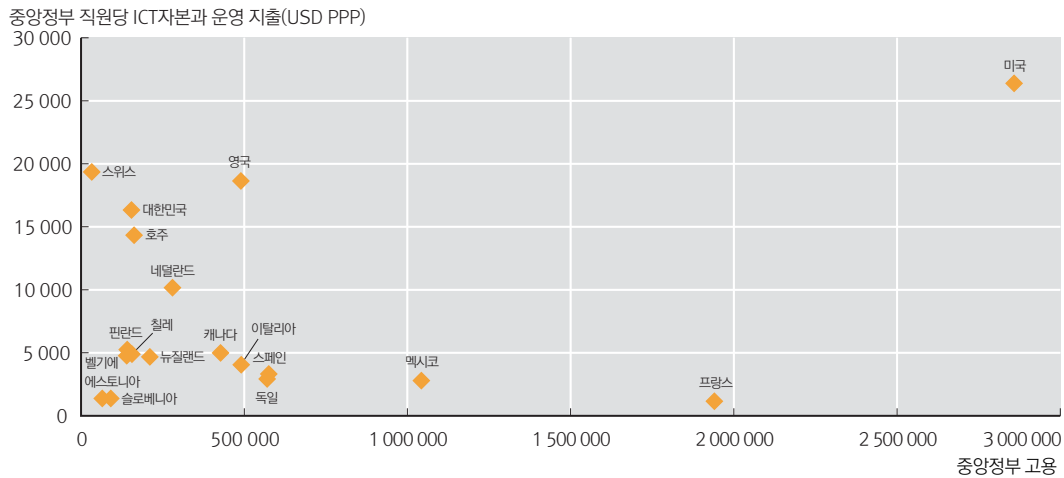
3.50. 중앙정부 지출 대비 총 ICT 지출
(2011년도 또는 자료가 사용 가능한 최근년도)



출처: OECD Survey of ICT Expenditures, 2010-11;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146>

3.51. 중앙정부 고용 대비 중앙정부 직원당 ICT 자본과 운영비용
(2011년도 또는 자료가 사용 가능한 최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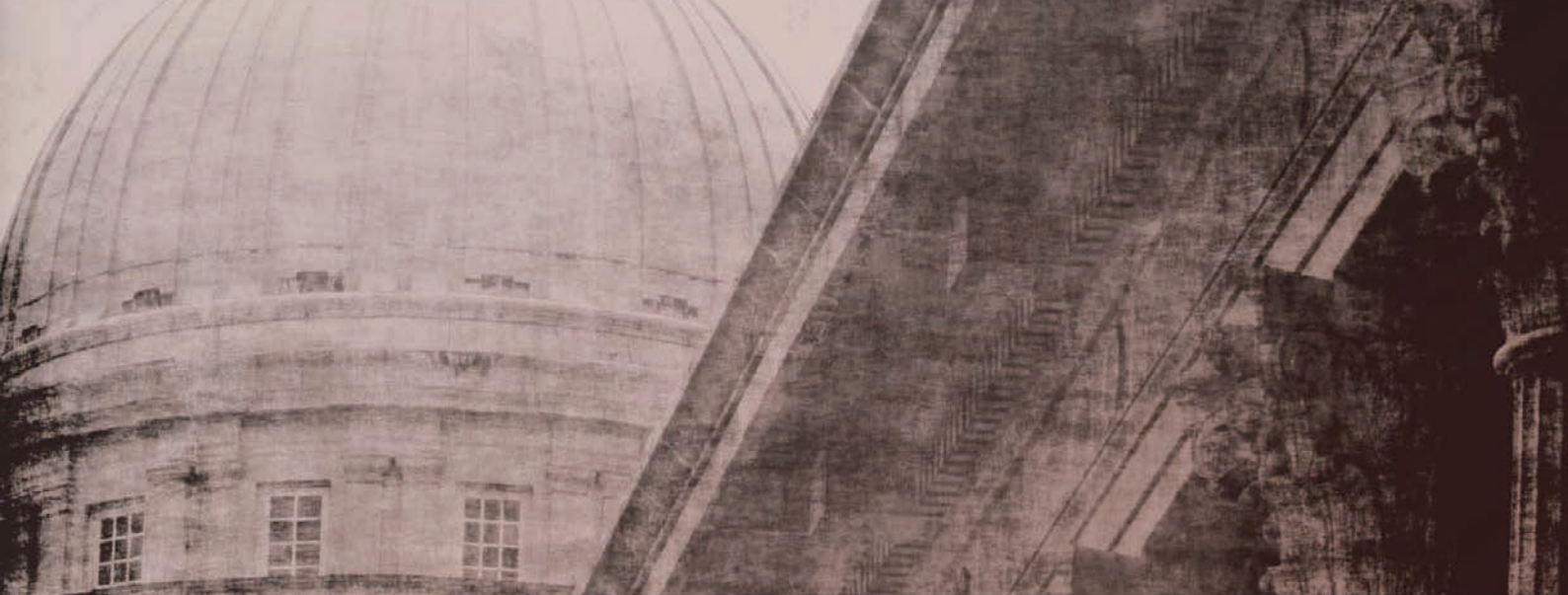
출처: OECD Survey of ICT Expenditures, 2010-1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칠레, 프랑스, 대한민국, 스위스, 영국의 고용자료는 OECD Public Employment Survey 2010에서 인용함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165>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통계국에 의해 제공된 정부재정통계와 국가회계자료들의 조합에 근거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108>





제4장. 예산 관행과 절차

성공적 재정 성과는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의 결과인데, 그것은 경제의 전반적 성과, 재정 규율에 대한 정치적 의지, 그리고 예산에 대한 제도적 체계이다. 본 장의 초점은 그 중 마지막 요소에 맞추어져 있다. 완전하게 기능하는 예산제도는 재정적 건강성 증진, 안정적 세입의 달성, 세대 간 공평성의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또한, 국가의 공공지출 시스템은 재정규율과 자원의 적절한 할당, 그리고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는 예산제도의 주요 특징들로 구성된 지표를 제공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제약을 둬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재정규칙의 존재여부; 다년간 계속해서 지출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기적 관점이 예산에 포함된 정도; 정부조직체가 자신의 예산결정에 자치권을 어느 정도 갖는지 여부; 예산편성에 성과정보가 활용되는지 여부; 민간협력에(전통적 인프라 프로젝트와 비교했을 때) 대한 평가; 마지막으로, 신중한 공공재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메커니즘으로서 독립적 재정기관이 설립 되어 있는지 여부. 비록 이러한 특징들이 건전한 예산설계에 있어서 서로 별개의 요소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의 패키지로 생각해야 한다.

이 장에 사용된 수치는 OECD 설문조사에 대한 각국의 응답을 기반으로 했으며 그들 스스로의 평가를 보여준다. 이 복합 지수들은, 예산 관행에 관한 분산된 질적 정보를 몇 가지의 분리된 변수들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보다 더 쉬운 종합 지표로 요약할 목적으로, 직원들이 계산하는 것이다. 복합 지수들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계산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될 것이다.

재정규칙

재정규칙은 예산총액에 대한 숫자적 제한으로, 재정정책에 관한 장기적 제약이다. 총괄적 제한이 없다면, 점증주의 예산(정부가 발전하면서 수입 증가, 기존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그 사이를 어떻게 채우는가)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함으로써 수요를 맞추는 끝이 없는 과정(open-ended process)이 될 수도 있다. 재정규칙에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다. 첫째,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을 제약한다. 둘째, 행정부 재정 관리의 구체적 지표가 된다. 재정규칙이 정부에게 재정적 목표나 원칙을 달성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 맞는 단 한가지 규칙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재정규칙은 세입, 지출, 예산 수지, 공공부채 등 정부 재정의 다양한 요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OECD 회원국들에서는 예산수지규칙(28개 회원국)과 채무규칙(23개)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재정규칙인데, 이는 유럽연합 가맹국들의 의무이다. 가장 드문 재정규칙은 이중에 겨우 5국가(호주,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슬로바키아)만이 마련하고 있는 세입 규칙이다.

재정규칙은 국가별로 다양한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고, 헌법, 기본적 또는 2차적 법률에 있을 수도 있다. 어떤 국가에서는 재정규칙을 정치적 의지의지나 재무부가 설정한 내부규칙에 명기한다. 호주는 네 가지 모든 규칙이 명시된 흥미로운 예이다. 그 중 셋은 Budget Honesty Act에 기반을 두며, 이는 강한 정치적 의지이며, 채무준칙의 경우는 법에 근거되어 있다(이는 굉장히 큰 정치적 의지를 보인 것임). 일본과 한국은 내부 규칙·정책 형태로 오직 지출규칙만 갖췄다.

마지막으로, 어떤 국가들은 또한 국제법상의 재정규칙을 채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하나의 채무준칙과 두 개의 예산수지규칙을 수립한다. 재정 건전화에 위한 새로운 재정협약(fiscal compact)과 Six Pack 방안(two pack, six pack이 있음; 재정규율을 강화하면서 요구한 rules, EU 각 나라에서 투표로 발효)의 결과로, 유럽연합 당국은 불이행에 따른 정치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재정규칙을 헌법 수준으로 격상시키도록 요구하여 왔다. 10개국(오스 트리아, 벨기에, 체코,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에서 재정규칙이 헌법에 명기되어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은 실행 불가능한 경향이 있으며 경제적 혹은 정치적 상황에 둔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강력한 재정규칙은 오히려 정치적 의지의 강도, 독립적 재정기관과 기타 행위자들에 의한 모니터링, 그리고 불이행에 대한 명확하고 효과적인 강행 절차에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강행 절차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이 가능한데, 입법부에 수정제안을 제기할 필요성에서부터 자동적인 수정 메커니즘과 제재까지 다양하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과다적자시정조치(Excessive Deficit Procedures: EDP)가 적용되는데, 이는 국가 재정 상황에 대한 단단계 조정과정이며, 제재로 이

어질 수 있다.

경제적 거버넌스 기본 틀의 최근 변화는 EDP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을 느슨하게 만들어 왔다. OECD 회원국들에서, EDP를 제외하면 자동적인 수정 메커니즘이 예산수지규칙에 사용되는 가장 흔한 강행도구인 반면, 부채를 가진 기관이 이러한 수단들을 채택하는 것은 채무규칙의 가장 흔한 수정 메커니즘이다. 모든 종류의 재정규칙들을 어겼을 경우에 자동적 제재가 따르는 국가들은 단지 5개의 OECD 회원국이다(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의 것이며 2012년 OECD 예산 관행과 절차 설문조사(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답변자들은 대부분 OECD국가의 고위 예산공무원들이었다. 답변들은 각 국가들의 현재 관행과 절차에 대한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 - 연방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수준의 예산 관행은 제외한다.

기본적 입법(또한 주요입법이나 기본법이라고도 칭한다) 입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규제이다. 2차적 규제는 정부수반, 각 장관, 또는 내각 등 - 즉, 입법부 이외의 당국자가 승인할 수 있는 규제이다. 2차적 규제는 입법부가 불허하기 쉽다.

더 읽어볼 것

- Anderson, B. and J. Sheppard (2010), "Fiscal futures, institutional budget reforms, and their effects: What can be learned?",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9/3, <http://dx.doi.org/10.1787/budget-9-5kmh6dnl056g>.
- Schick, A. (2010), "Post-Crisis Fiscal Rules: Stabilising Public Finance while Responding to Economic Aftershock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0/2, <http://dx.doi.org/10.1787/budget-10-5km7rpkqts1>.

그림 설명

- 4.1. 과 4.2: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자료는 국가들의 다수 재정규칙을 반영한다. 뉴질랜드와 터키는 재정규칙을 갖추지 않아서 표에 표기되지 않았다.
- 4.1: 이탈리아의 243/2012년 법률은, 유럽권의 필요조건에 따른 구조적 예산, 지출, 채무규칙을 도입했다. 처음 두 가지는 2014년, 채무규칙은 2015년 전에 발효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4.1. 재정규칙의 종류와 법적 기반 (2012년)

	지출 준칙	예산 수지 (적자/흑자) 준칙	채무 준칙	수입 준칙(cf. 세입: tax revenue)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캐나다		◆		
칠레	□	□		
체코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
독일		●■	■	
그리스	■	□■	■	■
헝가리		□■	■●	
아일랜드	◆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대한민국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네덜란드	◆	□■	□■	◆
노르웨이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영국		□■	□■	
미국	□		□	
러시아	□			□
OECD 계	21	28	23	5

- 헌법
- 국제조약
- 기본적 혹은 2차적 법률
- ◆ 내부 준칙 또는 정책
- 정치적 의지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381>

4.2. 재정규칙을 위한 시행 메커니즘 (2012년)

준칙/수정 메커니즘의 종류	자동 수정 메커니즘	수정 방안을 포함한 제안이 입법부에 제시됨	기관이 방안을 시행해야 함	자동 제재	안정과 성장 협약의 과도적 자시정조치	없음
지출	덴마크, 그리스, 미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스웨덴, 칠레, 스페인	미국		호주, 체코,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슬로베니아
예산수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그리스, 스페인, 칠레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채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스,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호주, 미국
수입	그리스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 러시아, 슬로바키아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00>

중기 재정계획

중기 재정 계획(MTEFs: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은 중앙/연방 정부조직체가, 단지 1년 단위의 예산 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채택하도록 도움을 준다. MTEFs는 전형적으로 예산이 마련된 재정 연도를 포함해 3-5년의 기간이며, 규범적 연간 상한선과 서술적 향후 추정치가 합산된다.

예산 과정에 중기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첫째로, MTEFs는 중앙정부 전반에 걸친 지출 관리를 돕고 재정규율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앙예산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지출 추정치는 기존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의 비용에 관한 정보를 담아내고 그 다음해의 예산을 위한 기준선을 만드는 반면, 지출 한도는 미래 지출에 대한 하향식 제약을 제시한다. 또한 MTEFs는 대형 자본 프로젝트들, 새로운 프로그램들, 조직 구조조정들 등 시행을 위해 긴 기간을 필요로 하는 다년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출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 나아가, 계선부처와 청의 관리자의 관점에서, 중기 관점은 정책과 자금 변화의 방향에 대한 신호를 보내어 그로 인하여 그들의 작업을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여준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중기 관점의 영향은 궁극적으로 지출 추정치와 한도의 신뢰성,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의사결정권자들과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다. 중기 예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흔히 준비, 입법, 시행을 둘러싸는 취약한 배분(arrangements)과 관련이 있다.

중기 지출 한도는 4개 국가(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헝가리, 벨기에)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 설치되어있고, 대부분 4년간에 걸친다. 이들 기본틀들의 강도는 OECD 회원국들 간 큰 차이가 나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도가 다르고, 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의해 결정되며, 이후 입법부나 독립된 기관이 감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출 한도는 총 합계 지출을 위해서 설치되었다. 일부 국가들(호주,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은 각 개별의 프로그램, 분야 그리고/또는 조직 별로 추가적 한도가 마련되어 있다. MFETs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나 독립된 재정기관에게 법률준수에 관해 보고하듯, 감시 및 집행 메커니즘이 설치 되어야만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의 것이며 2012년 OECD 예산 관행과실제와 절차 설문조사(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설문 조사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답변자들은 대부분 OECD국가의 고위 예산공무원들이었다. 답변은 국가의 현재 관행과실제와 절차에 대한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수준의 예산 관행은실제는 제외한다.

MTEF는 재정정책과, 현재의 정부정책들을 반영한 각 부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세한 중기예산 추정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화된 과정에 대한 재정적 예측을 취합하기 위한 결합물(linking)인, 중기 이상의 기간을 지닌 예산을 통합하는 기본 틀로 정의된다. 지출의 미래 추정치는 향후의 예산에 있어서 예산협상의 근거가 되며, 미래추정치는 재정 결과물 보고서에서 최종 결과물들과 조화시킨다.

그림 4.4의 복합지표는 예산과정에서 중기 관점의 존재 여부, 추정이 포함하는 년도 수, 기본 틀에 포함된 지출들의 형태, 당해 년도로부터 그 다음 년도로 미사용 기금이 넘어갈 가능성과 이들이 어떻게 감시되는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10가지 변수를 포함한다. 이 지수는 MTEF 시스템의 전반적 질을 측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서술이 목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부록Annex C에는 각 변수에 할당된 구체적인 가중치와 함께, 이 지표를 구성하는데 사용된 방법론에 관한 설명을 담았다.

더 읽어볼 것

- OECD (2013, forthcoming),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2),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3, pp. 7-14, <http://dx.doi.org/10.1787/budget-v1-art14-en>.
- World Bank (2013), *Beyond the Annual Budget - Global Experience with Medium-Term Expenditure Frameworks*,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http://dx.doi.org/10.1596/978-0-8213-9625-4>.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 4.3: 독일의 경우 MTEF의 법적 기반은 의회의 예산승인과 병행해서 논의되는 Finanzplan이며, 예산 한도를 포함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조직 지출은 전체지출과 분야지출에 포함되어 있다.
- 4.4: 지수의 국가별 점수에서 벨기에, 헝가리, 이스라엘,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MTEF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0점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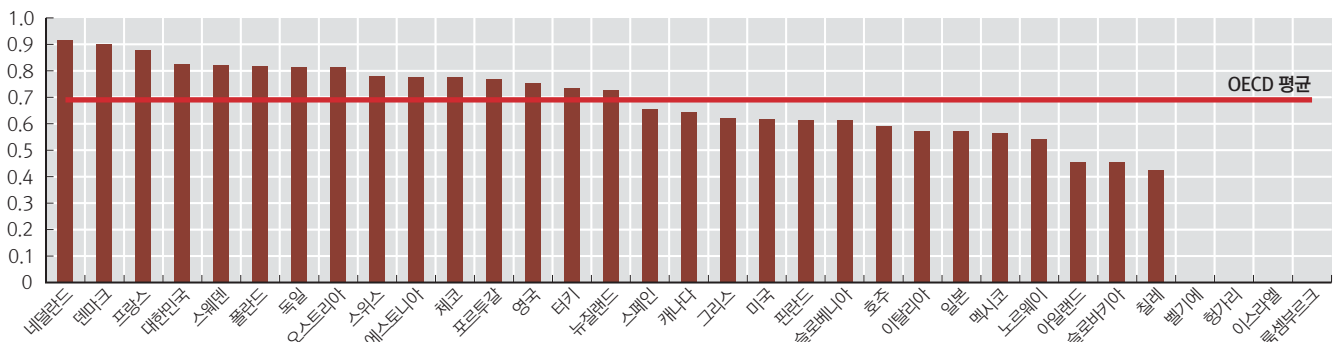
4.3. 중앙정부수준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중기 관점 (2012년)

	MTEF의 존재여부와 법적 기반	한도의 기간 (다음 예산연도 포함)	지출 한도의 대상		
			총 지출	프로그램별 또는 분야별 지출	조직 지출
호주	◇	4년	✓		
오스트리아	●	4년	✓	✓	
벨기에	○	x	x	x	x
캐나다	◇	3년			✓
칠레	◇	3년	✓		
체코	■	3년			
덴마크	●	4년		✓	
에스토니아	◇	4년			✓
핀란드	◇	4년	✓		
프랑스	●	3년		✓	
독일	■	4년	✓	✓	✓
그리스	●	5년			✓
헝가리	○	x	x	x	x
아일랜드	◇	3년			✓
이스라엘	○	x	x	x	x
이탈리아	◇	3년	✓	✓	
일본	◇	3년	✓		
대한민국	●	5년	✓	✓	
룩셈부르크	○	x	x	x	x
멕시코	●	5년	✓		
네덜란드	●	4년	✓	✓	
뉴질랜드	◇	4년	✓	✓	
노르웨이	◇	6년 이상	✓		
폴란드	●	4년			
포르투갈	●	4년		✓	
슬로바키아	■	3년			✓
슬로베니아	□	4년	✓		
스페인	■	3년	✓		
스웨덴	■	3년	✓		
스위스	●	4년	✓		
터키	■	3년	✓		✓
영국	◇	4년			✓
미국	●	6년 이상		✓	
러시아	□	3년	✓	✓	✓
OECD 계			17	10	8
● 예, MTEF의 존재와 지출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	11				
■ 예, 예산 지출 한도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MTEF의 설립이 법에 명시되어 있음	6				
□ 예, 지출한도가 중기 추정치를 초과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1				
◇ 예, MTEF 또는 예산 한도가 전략/정책에 명시되어 있음	11				
○ 아니요	4				
x 해당 없음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19>

4.4. 예산과정에 있어서 중기 관점 사용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184>

예산집행의 유연성

많은 OECD국가들에서, 예산개혁의 특징은 중앙 재정당국이 각 정부조직들에게 그들의 목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치권과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투입통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각 정부조직의 장들은 그 조직의 정책과 프로그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관리자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지시). 또한, 건전한 예산형성과정에서 조차도,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들은 변화할 수 있고, 투입가격은 등락할 수 있으며, 정치적 우선 순위들이 바뀔으로써 예산으로 이미 결정된 자원들을 다시 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계선 관리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주는 것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지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반면에, 이러한 당국자들에 대한 아무런 제약과 감시도 없다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권한의 남용, 정부적자의 증가, 효율성 감소 등의 잠재적 위험을 동반한다. 또한 과도한 유연성은 자원의 우선순위와 멀어짐으로써 입법자의 의도와 책정된 예산안을 훼손시키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부처별 유연성을 가지고 하향식 지도와 감독의 적절한 균형을 채택하고 있다. 중앙예산 당국은 정치적 우선순위와 중기지출을 고려하여 하향식 예산제약조건을 설정하지만, 계선부처와 청 및 기타 공공조직들은 각 프로그램의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자금의 사용과 배정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유는 보다 더 많은 성과관리의 사용 및 책임성이 따른다(성과예산에 관한 지표 참조). 이는 새로운 우선순위들, 새로운 환경들과 새로운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정치가들이 투입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산출과 결과물에 관심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예산집행의 유연성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총액배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관리자들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더욱 유연한 자금배정을 가능케 한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이러한 총액예산에도 2차한도를 두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피고용인들의 임금과 보상에 관한 지출이다. 유사하게, 승인된 예산 중 한정된 숫자의 계선행목들은 행정부에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 1/4의 OECD 회원국들이 300개 이하의 계선행목을 갖고 있다. 또한 회원국들 중에서 대다수의 중앙예산당국들은 계선부처와 청들이 책정예산을 다 쓰지 못하면, 비록 기준치를 넘지는 못하거나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혹은 양자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예산들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운영지출보다는 투자지출에 더 많은 유연성이 부여되는데, 자본 프로젝트는 때때로 몇 년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행정부가 미래에 책정될 예산에서 빌려오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을 사용하는 국가 중 7개 국가에서는 당해년의 회계 년도에서 초과 지출할 수 있는 한계기준치 총액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행정부는 입법부의 사전승인 없이도 당해 예산 년도 동안 지출의 증감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추가적 유연성은 공공자원들의 최적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고,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한 것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2012년도의 것이며, 2012년 OECD 예산 관행과 절차 설문조사(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들에서 추출하였다. 설문조사 답변자들은 대부분 OECD 회원국들의 고위예산담당자들이었다. 답변들은 각 국가들의 현행 관행과 절차들에 대한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들은 중앙·연방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수준의 예산 관행은 제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forthcoming),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4.5: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 다음 재정연도 예산에 동일한 목적의 항목이 포함되어있고 현재 재정연도에 금액의 균형을 맞출 의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계선부처는 미래 예산에서 빌릴 수 있다. 추가지출이 선지출로 처리될 수 없으면 초과 지출로 처리해야만 한다. 스페인의 경우, 계선부처는 총액 예산을 받을 수 없지만,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재할당 할 수는 있다. 핀란드, 대한민국, 슬로베니아에서는 지출의 특정항목들만 다음 재정연도로 이월 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연간 예산책정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는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예산책정의 한도를 지켜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간 예산책정은 그 책정예산액을 다 쓸 때까지 이용가능하며, 연간 연간지출법(the annual Appropriation Acts) 있는 식감조항에 따라서 삭감할 수 있거나, 혹은 이와 관계된 연간 책정예산법들은 다른 법률로 대체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자료들은 규모가 큰 부서/계선부처들의 것이다. 터키의 경우, 어떤 책정예산들은 예외적으로 이월이 될 수 있는데, 이는 1년 단위로 연간 중앙정부예산법에서 (Annual Central Government Budget Law) 결정 되고, 이월에 관한 결정권한은 재무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4.5. 개선부처가 미사용 자금을 이월하고, 미래의 책정예산에서 빌려오는 권한(2012)

	개선부처의 총액예산에 대한 2 차한도의 숫자	개선부처가 미래 예산에서 빌리는 권한		개선부처가 미사용 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권한	
		운영 지출	투자 지출	운영 지출	투자 지출
호주	0	○	○	x	x
오스트리아	x (총액예산 없음)	○	○	●	●
벨기에	2	○	○	○	○
캐나다	2	○	○	■	■
칠레	3 이상	○	○	○	○
체코	3 이상	○	○	●	●
덴마크	1	■	○	●	●
에스토니아	1	○	○	■	●
핀란드	0	○	○	●	●
프랑스	0	○	○	■	■
독일	x (총액예산 없음)	■	■	○	○
그리스	3 이상	○	○	○	○
헝가리	1	○	■	●	●
아일랜드	0	○	○	○	■
이스라엘	3 이상	○	○	●	●
이탈리아	1	○	■	○	■
일본	0	○	○	●	●
대한민국	3 이상	○	○	●	●
룩셈부르크	1	○	■	○	●
멕시코	3 이상	○	○	○	○
네덜란드	0	○	○	■	■
뉴질랜드	0	■	■	■	■
노르웨이	0	○	○	■	■
폴란드	0	○	○	○	○
포르투갈	1	○	○	●	●
슬로바키아	2	○	○	○	●
슬로베니아	1	○	○	●	●
스페인	x (총액예산 없음)	○	○	■	■
스웨덴	0	■	■	■	■
스위스	0	○	○	●	●
터키	x (총액예산 없음)	○	○	○	○
영국	x (총액예산 없음)	○	○	■	■
미국	3 이상	○	○	■	■
러시아	3 이상	■	■	■	●
OECD 계					
● 예, 제한 없음		0	0	11	14
■ 예, 한도 내에서		4	6	10	11
○ 아니요, 허용되지 않음		29	27	11	7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38>

성과예산

각 정부들은 예산 및 거버넌스 과정에서 성과 정보를 보다 더 많이 활용 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좋은 결과를 달성하고, 투입비용 대비 가치(VFM)를 높 이며, 지출결정의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좋은 성과정보 는 자원의 활용과 특정 프로그램들의 경영방법과 관련하여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원 배정과 성과의 보다 많은 투명성은 정 부 기관들의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증가시킨다.

비록 성과예산 관행이 OECD 회원국들에서 널리 사용되기는 하지만, 나라 별로 접근방법들은 다양하며, 적응해야만 하는 최적의 지배적 모형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OECD는 성과예산시스템의 3가지의 큰 범 주를 구분하고 있다: i) 제시적 성과예산으로, 성과정보가 자금배정 구분에 따라서 생산되고 제시되지만, 이러한 정보가 지출결정에서 반드시 사용되 지는 않는다. ii) 성과정보가 있는 예산으로, 이러한 정보가 자원의 배정에 명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iii) 직접적 성과 예산으로(공식에 근거한 예산), 자 금이 엄격하게 산출이나 결과물에 연계된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범주에 속하며, 소수의 국가들에 있어서만 일부 지출 (예: 고등 교육이나 병원 자금)에 두 번째 범주를 채택하고 있다.

2011년도 OECD 성과예산에 관한 연구조사(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의 결과에 따르면, 예산관행은 일반적으로 중앙/ 연방 정부 내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계선부처들은 자신들에 속한 청이나 부서들에 대한 계선부처 자신의 예산 할당 한도를 배정함에 있어서 성과예산 관행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더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예외 사항은 지출검토인데, 이 부분에서는 중앙예산당국과 최고 집행권자가 보다 더 중앙집권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들은 보다 더 중앙집권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데, 성과정보를(평가와 성과측정) 개발하고, 예산과 책임성 과정상에 성과정보를 통합하고, 의사결정에 이를 활용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점검과 보고를 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멕시코,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계선부처와 청들을 위해 가인드라인들, 보고서 양식, 성과순위와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표준화되고 종합적인 기본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성과목표달성에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은 재정적 결과를 촉발하지는 않지만, 성과가 빈약하다는 보고서가 뒤따르며 향후에는 더 엄격한 점검이 이어진다.

성과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 수 있는데, 재정적이고 운영적 자료들, 평가, 심지어는 독립적 통계자료와 외부기관의 보고서들도 포함된다. 예산협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는 재정적이고 운영적인 자료들(표 4.6참조)과 같은 투입조치들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1년도의 것이며 2011년 OECD 예산 관행과 절차 설문조사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에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답변자들은 대부분 OECD국가의 고위 예산공무원들 이었다. 답변은 국가의 현재 예산 관행과 절차에 대한 자기 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연방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수준의 예산 관행은 제외한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연합 자금은 제외한다. 지출 심사는 특별한 종류의 정부 평가의 일종이며 정부 차원의 예산 절약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목적으로 의뢰된 것이다. OECD의VFM 프로젝트는 세 가지 특징을 통해서 지출심사를 기타 종류의 평가들과 차별화 한다:

1. 지출심사는 현재 자금수준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 할 뿐만 아니라, 자금수준이 다를 경우의 산출과 결과물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기능적(예: 운영 효율성)이나 전략적 (예: 효율성과 더불어 새로운 계획이 고차원적 정책 우선 순위와 조정 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양자 모두에 초점을 두는)일 수 있다.
2. 지출심사 절차에 대한 책임은 재무부 혹은 총리실이 맡고 있다.
3. 지출심사의 후속조치는 예산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림 4.7에 이러한 복합 지수는 11개의 변수들을 포함하는데, 개발된 성과정보의 형태와 이용가능성에 관한 정보, 그 결과들에 관한 보고와 모니터링에 관한 과정들, 성과정보가 예산과정에서 중앙예산당국과, 계선 부처, 정치가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협상하는데 사용되는지(그리고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이 지수는 성과예산시스템의 전체적인 질을 측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단지 그 본질을 기술하는데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본질적으로 기술적이다). 부록 C는 이러한 지수의 구성을 위하여 사용된 방법론을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변수에 할당된 특정한 가중치도 포함하고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08), "Performance Budgeting: A User's Guide", *OECD Policy Brief*,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governance/budgeting/40357919.pdf.
 OECD (2007), *Performance Budgeting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34051-en>.

그림과 표 설명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 예산 협상에서는 성과정보가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사용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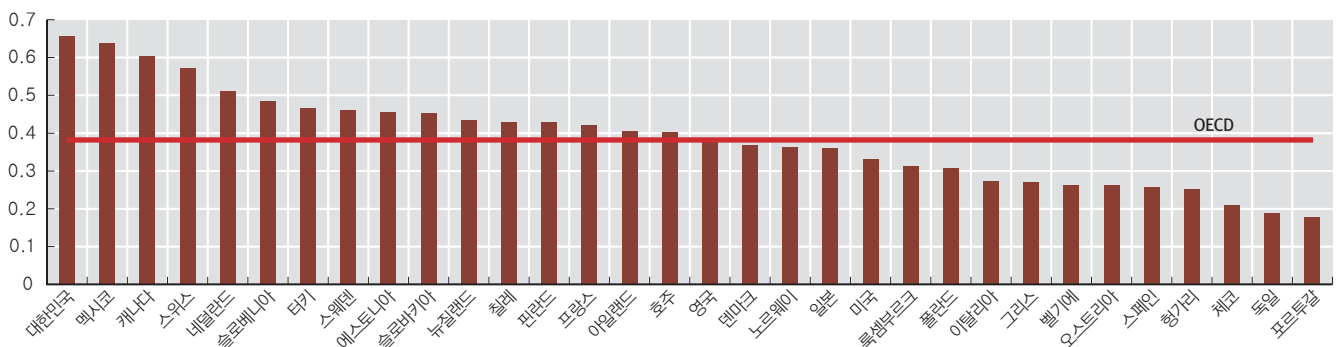
4.6.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성과예산관행(2011)

중앙정부를 위한 표준화된 성과예산 기본 틀의 존재	중앙예산당국과 협상시 성과정보 사용						빈약한 성과에 대한 결과			
	재정적 자료	운영적 자료와 성과보고서	지출검토	통계적 정보	독립적 성과정보	성과평가	조직/프로그램의 실적부진이 공개됨	조직/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예산 감소	
호주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오스트리아	예	x	x	x	x	x	x	○	○	○
벨기에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캐나다	예	●	●	■	■	□	■	◇	■	◇
칠레	예	●	□	x	□	□	■	●	□	○
체코	예, 존재하지만 의무적이지 않음	◇	◇	x	○	○	x	○	○	○
덴마크	예	●	◇	□	◇	◇	□	■	□	●
에스토니아	예	●	□	○	◇	◇	◇	◇	○	○
핀란드	예	●	◇	■	◇	○	◇	■	◇	■
프랑스	예	◇	◇	◇	□	□	●	□	■	◇
독일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x	○	◇	◇	□	■	□
그리스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x	◇	◇	□
헝가리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아일랜드	예	●	□	●	□	◇	■	□	□	◇
이탈리아	예	●	○	□	○	○	◇	○	□	○
일본	예	□	□	x	□	□	□	●	○	□
대한민국	예	■	■	■	□	◇	■	■	■	■
룩셈부르크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멕시코	예	●	●	●	●	□	■	●	●	◇
네덜란드	예	●	□	■	■	□	□	◇	□	□
뉴질랜드	예	■	◇	□	□	◇	◇	■	□	◇
노르웨이	예	○	○	x	○	○	○	◇	□	◇
폴란드	예	□	□	□	□	x	x	○	○	○
포르투갈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슬로바키아	예	●	●	●	●	□	□	◇	□	□
슬로베니아	예	●	●	○	◇	□	□	■	◇	◇
스페인	예	◇	◇	○	○	○	◇	○	○	○
스웨덴	예	●	■	◇	□	□	□	□	□	□
스위스	예	●	■	□	●	●	□	◇	□	○
터키	예	●	□	◇	■	○	□	◇	◇	◇
영국	아니오, 각 계선부처/청마다 소유	●	■	●	□	■	□	●	□	◇
미국	예	x	x	x	x	x	x
러시아	예	●	■	□	■	□	■	□	◇	◇
OECD 계										
● 항상		21	5	5	4	2	1	4	1	1
■ 보통		2	5	5	4	2	6	5	5	2
□ 가끔		2	9	5	9	10	10	6	12	7
◇ 드물게		4	9	4	8	9	8	8	6	11
○ 결코없음		1	2	6	5	6	2	8	7	10
X 해당 없음 (정보가 없거나 협상을 하지 않음)		2	2	7	2	3	5	0	0	0

출처: 2011 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57>

4.7. 중앙정부 수준에서 성과예산관행의 사용 (2011)



출처: 2011 OECD Survey on Performance Budgeting.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03>

민관협력사업

민관협력사업(PPPs)은 정부와 민간파트너의 장기 계약이며 전형적으로 후자가 자금을 대고, 자본적 자산을 사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한다(예, 교통 및 에너지인프라, 병원, 학교건물 등). 민간부문은 미리 지정된 기간 동안 서비스의 설계, 구축, 자금, 운영, 관리, 전달을 맡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확정 단일가격 혹은 이용 정도에 따른 비용을 사용자에게서 받는다. 민관협력사업은 연간 중앙정부 자본지출의 15% 미만이며, 활용 정도는 국가간에 큰 차이가 난다: 영국이 이런 프로젝트가 가장 많고(648), 그 뒤에는 대한민국(567)과 호주(127)가 따른다.

정부가 민관협력사업을 추구하는 이유로는, 전통적 인프라 조달과 비교해서 민관협력관계가 자산의 운영과 설계를 결합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사업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데 충분한 경험과 자료가 있는 정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민관협력 사업이 시기적절성, 건설비용, 품질 측면에서 전통적 방식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능가한다(그림 4.8). 그러나 일부 OECD 회원국들의 경험에 따르면, 모든 PPPs가 잘 관리되는 것을 아니며, 따라서 기대했던 혜택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서비스들을 위한 장기적 계약은 공공의 수요와 과학기술의 변화를 고려할 때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PPPs 조달 과정은 종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측 모두에게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어떤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래비용도 전통적 인프라 조달과 비교해 양자 모두에게 더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공공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을 삭제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활용할 유인도 있다. 만약에 이러한 목적으로 설계되었다면, PPPs 프로젝트는 공공부문 순채무 합계에서 제외 될 수 있지만, 결국 미래의 부채와 재정 위험에 대한 투명성이 약화된다.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OECD는 민관협력력을 위한 공공 거버넌스 원칙들을(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개발했다. 이 원칙들은 세 가지 폭넓은 주제하에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 i) 능력 있고 자원이 준비된 당국자에 의해 지원되는 PPPs를 위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며 정당성 있는 제도적 기본 틀의 확립; ii) VFM을 기반으로 PPPs를 선정; iii) 재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명한 예산과정의 사용과 조달절차의 청렴성 보장.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계산을 했을 때, 특정한 조달 방법 중 하나가 일관되게 다른 방법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다. 사후에 특정 프로젝트가 PPPs 계약을 위해 좋은 후보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VFM 평가를 더 많이 사용 할 것을 추천한다. 특정 프로젝트의 VFM은 자산의 전체 생애주기에 모든 단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그 프로젝트가 공공분야에서 갖게 되는 잠재적 위험에서도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21개국) 전통적 방식(TIPs)에 비하여 PPPs의 VFM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한정된 프로젝트에만 적용한다(표4.9). 절대적 VFM 평가는 더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국가들은 PPPs의 VFM 평가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

해서, 명시된 목적을 민간분야의 이윤목표와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전용 민관협력 구성단위를 설정하였다. 2010년도에는 17개의 OECD 국가들이 이러한 구성단위들을 설치했고 더 많은 국가들이 이 추세를 따르기 시작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의 것이며 2012년 OECD 예산 관행과 절차 설문조사에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대한 국가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했다. 설문조사 답변자들은 대부분 OECD 국가의 고위 예산공무원들이었다. 답변은 국가의 현재 예산 관행과 절차에 대한 자기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연방 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수준의 예산 관행은 제외한다.

PPP의 개념은 - 순수한 PPP-에, 민간파트너의 주 수입원이(일정한 정규적인 지불형태 혹은 단가의 형태) 프로젝트들은 물론, 권한의 양도(민간파트너가 제공된 서비스의 수혜자에 부과하는 사용료가 주 수입원인 경우), 양쪽을 포함한다.

상대적 VFM 테스트는 가장 높은 VFM을 나타내는 조달형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몇 가지의 형태들을 비교한다. 절대적 VFM 테스트는 프로젝트가 전반적으로 사회를 위한 VFM이 있는지를(예, 댐, 공항, 고속도로) 결정한다. 이 두 종류에 대한 평가방법론들은 국가마다 다르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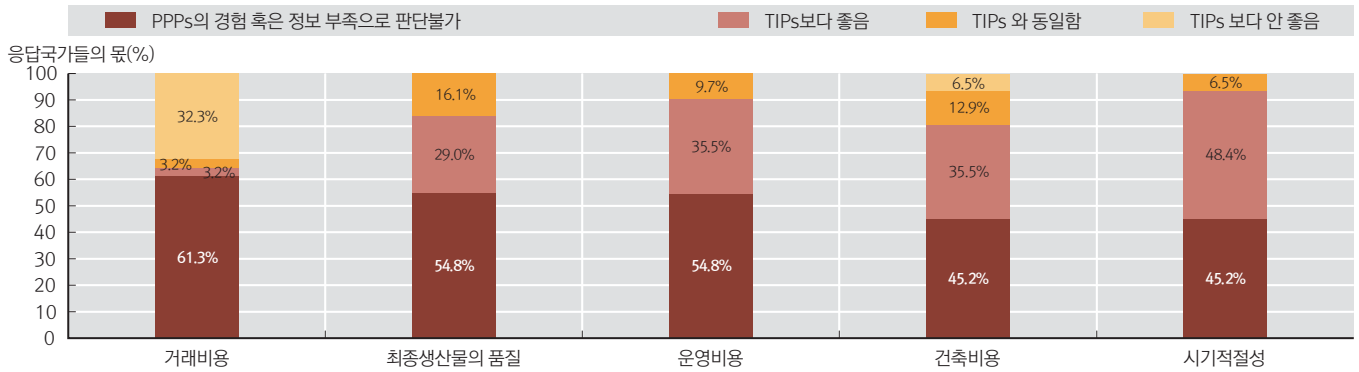
Burger, P. and I. Hawkesworth (2013), "Capital budgeting and procurement practices - towards an integrated approach?", presented at the OECD Annual Network Meeting of Senior Public-Private Partnership Officials, 15-16 April 2013.
 OECD (2012), *Principles for Public Governance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s*, May 2012, OECD, Paris, www.oecd.org/gov/budgeting/PPPProSG.pdf.
 OECD (2010), *Dedicated Public-Private Partnership Units: A Survey of Institutional and Governance Structur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64843-en>.

그림과 표 설명

4.8과 4.9: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4.8. 여러 차원에서의 TIPs(전통적 방식) 대비 PPPs(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국가들의 평가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22>

4.9. PPPs와 TIPs 그리고 전용 민관협력 구성단위에 대한 VFM 평가

	상대적 VFM 평가의 사용		절대적 VFM 평가의 사용		전용 민관협력 구성단위를 재무부에 보고 함	전용 민관협력 구성단위는 계선부처에 존재함	중앙/연방 정부에는 전용 민관협력 구성단위가 없음
	PPPs 에서		PPPs 에서	TIPs 에서			
호주	●		●	■			✓
오스트리아	x		x	○			✓
벨기에	x		x	x			✓
캐나다	●		●	□	✓	✓	
칠레	●		●	■	✓	✓	
체코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x		x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헝가리	□		□	x		✓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대한민국	■		●	■	✓	✓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		●	●			✓
네덜란드	■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x		x	■			✓
폴란드	x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x		x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			✓
러시아	○		●	●	✓	✓	
OECD 계							
● 예, 모든 프로젝트	10		17	7	14	9	15
■ 예, 일정 금액 이상의 프로젝트	4		4	13			
○ 예, 임시적	8		5	8			
□ 아니오	4		1	3			
X 해당 없음	6		5	2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76>

독립적 재정기관

1990년대 중반 학계의 경제학자들은, 독립적 중앙은행의 좋은 경험을 재정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위기에 따라 정부의 재정적자와 채무가 갑자기 늘어난 이후에서야 보다는 많은 OECD 회원국들에서 독립적 재정기관들(IFIs, 재정위원회 또는 의회 예산사무국이라 칭함) 신설하는 결정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들이 신설되면서, 정부들은 공공 재정의 신중한 관리를 적절하게 보장한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기존 재정규칙들을 보강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에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확약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준칙들 자체만으로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화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 특히 유럽연합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국가들에서의 새로운 규제들은 각 나라의 독립적 조직체가 재정규칙들과 절차를 준수하는지 점검토록 하거나 그 조직체가 거시경제에 촉을 보증토록 각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사례들은(캐나다, 호주) 예산과정에서 재정적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런 신생 독립재정기관들 이외에 의회 예산사무국(CBO-미국), 네덜란드 경제정책 분석 사무국(CPB) 등과 같은 훨씬 더 오래된 몇 개의 기관들도 있다.

오늘날의 독립재정기관들은 극단적으로 다양한데, 그 역할, 자원, 구조는 나라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재정정책과 예산 제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 이외에도 예측을 하고, 재정규칙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서의 비용을 산정하고, 특정 이슈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 등이 일상적 기능으로 포함된다.

유럽연합 내에서 새로운 유럽연합 규제들에 있어서의 요구사항들은, 비록 아직 개별 국가의 필요와 지역적인 제도적 환경에 따라 선택이 되지만, 하나의 지배적 모형에 모아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CPB를(그리고 최근까지 덴마크 경제위원회)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내의 OECD 회원국들의 재정위원회는 재정규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맡고 있다.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는 OECD 회원국들 중에는 이런 권한을 가진 기관들은 없다.

예측에 관한 기관들의 역할은 여러 형태가 있다. 네덜란드의 CPB와 영국의 예산책임청(OBR)은 공식예측을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른 기관들에서는(예: 미국, 캐나다) 대안 예측을 담당한다. 반면에, 어떤 기관들은 정부의 예측에 대한 의견을 제공한다(예: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도 제공한다. OECD 회원국들 중 절반이 안 되는 기관들이 정책 제안서의 비용을 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능은 의회 예산사무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의 CPB와 호주의 의회적 예산사무국(PBO)은 둘 다 선거 공약의 비용산출을 담당한다.

IFIs의 구조와 자원들에는 유사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일부는 행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반면, 입법부 아래에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2012년 12월에 승인되고 2014년에 발효하는 법에 따르니]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미

국). 국가회계감사기관 내에 자치적 단위로 설립된 경우가 2개(핀란드와 프랑스) 있다. 이 둘은 개별적 혹은 합의적(위원회) 리더십 구조를 가질 수 있다. CBO는 가장 규모가 큰 예산인 4천5백만 USD와 약 250명의 직원이 있는 반면에,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는(Irish Fiscal Advisory Council) 1백만 EUR 미만의 예산과 5명 이하의 사무국 직원으로 운영한다. 이들 중 정책 비용 산출에 관한 역할을 - 특정한 프로그램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한 가장 자원이 집약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들 중 하나 - 가진 기관은 직원수가 많은 경향이 있다. 세 기관들(호주, 네덜란드, 영국)이 다년간에 걸치는 자금배정을 받고 있으며(다년도 예산을 통해 확약해주는 것), 이에 따라 독립성이 강화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기관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2-13년도에 독립적 재정기관들에 대한 심도 있는 국가 보고서를 얻기 위한 질문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17개 OECD 회원국들의 기관들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OECD 사무국은 선택된 독립적 재정기관들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회 공무원들, 정부 공무원들, 학자들, 기타 적절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광범위한 상담을 거쳤다. 새로운 기관들에 관한 추가적 자료들은 현재 수집 중이다. 칠레는 2013년 초에 재정자문조직체를(Fiscal Advisory body) 설립했다. 스페인은 독립적 재정당국에(Independent Fiscal Authority) 관한 법안을 제안했고 2013년 말에 통과될 예정이다.

더 읽어볼 것

Calmfors, L. and S. Wren-Lewis (2011), "What Should Fiscal Councils Do?", *Centre for Economic Studies and IFO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CESifo)*, Vol. 26, No. 68, pp. 649-695, London.

Hagemann, R. (2011), "How Can Fiscal Councils Strengthen Fiscal Performance?", *OECD Journal: Economic Studies*, Vol. 2011/1, http://dx.doi.org/10.1787/eco_studies-2011-5kg2d3gx4d5c.

Kopits, G. (2011),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Developing Good Practices",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1/3, pp. 35-52, <http://dx.doi.org/10.1787/budget-11-5kg3pdgcpn42>.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 Paris.

표 설명

국가별 보고서는 StatLink 참조.

4.3. 중앙정부수준의 예산과정에 있어서 중기 관점 (2012년)

기관명	설립 연도	예산	직원	거시경제적 가정들의 예측에 관한 역할	장기 재정적 지속가능성 분석	재정규칙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	정책비용 산정 역할	선거공약의 비용산정 역할	
호주	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2011	4년 이상 2.4백만 AUD, 선거주기 동안의 추가적 단기자금 포함	30-35명의 직원을 유지함	◇	●	○	●	●
오스트리아	Government Debt Committee (GDC)	1970	자료이용 불가능	15 위원, 3 사무국직원	■	●	●	○	○
벨기에	High Council of Finance (HCF)	1936	자료이용 불가능	27 위원, 14 사무국직원	■	●	●	○	○
캐나다	Parliamentary Budget Officer (PBO)	2008	2.8백만 CAD	15	□	●	○	●	○
덴마크	Economic Council	1962	23.5백만 DKK	25 위원, 30 사무국직원	□	●	●	○	○
핀란드	Fiscal Policy Audit and Executive Office	2013	1.4백만 EUR	7(+ 자원인력과 의사소통인력)	■	●	●	○	○
프랑스	High Council for Public Finances (HCFP)	2013	782,000 EUR (2013재정년도)	10 위원, 5명의 직원 유지	■	○	●	○	○
아일랜드	Fiscal Advisory Council	2011	800,000 EUR (2013재정년도)	5 위원, 3 사무국직원	■	○	●	○	○
대한민국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2003	12.7백만 USD	125	□	●	○	●	○
멕시코	Centro de Estudios de las Finanzas Públicas (CEFP)	1998	50.9백만 MXN (2009재정년도)	59	□	●	○	●	○
네덜란드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1945	13.5백만 EUR	117	◆	●	○	●	●
포르투갈	Conselho das Finanças Públicas (CFP)	2011	2.65백만 EUR (2013재정년도)	5 위원, 15-20명의 직원 유지	■	●	●	○	○
슬로바키아	Council for Budget Responsibility (CBR)	2012	2백만 EUR (2013재정년도)	3 위원, 15-20명의 직원 유지	◇	●	●	●	○
슬로베니아	Fiscal Council	2009	100,000 EUR (2012재정년도)	7 위원, 사무국직원 없음	■	●	●	○	○
스웨덴	Fiscal Policy Council (FPC)	2007	7.55백만 SEK	6 위원, 5 사무국직원	■	●	●	○	○
영국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OBR)	2010	1.75백만 GBP	3명의 예산책임위원, 2명의 비집행위원, 17명의 직원	◆	●	●	●	○
미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1974	45.2백만 USD	250	□	●	○	●	○

- 예
- 아니오
- ◇ 역할 없음
- ◆ 공식예측을 준비
- 예측 평가만
- 대안예측을 준비

출처: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Country Notes, OECD Publishing, Pari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495>





제5장. 공공부문의 고용·보수

정부의 규모는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와 종종 관련된다. 정부 기능의 아웃소싱이 늘어나고 있고 정부내 고용이 정부 범위 측정의 정확한 기준이 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교사, 간호사, 경찰과 같은 핵심적인 직업군에서 정부는 여전히 최대 고용주이다. 정부의 규모는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종종 관련이 된다.

이 장에서는 2001년과 2011년의 공공부문 고용에 관한 추세를 탐색한다. 우리가 가진 자료들은 공공 고용이 “다루기 힘들다(sticky)”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많은 OECD 회원국들이 그들의 재정 건전화 계획의 한 부분으로 신규채용을 동결하고 고용을 감축한다고 선언하고는 있지만, 공공 고용에 있어서 상당한 감축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용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생산성 향상과 아웃소싱이 그것이다. 생산성 향상은 정량화하기 어렵고 그리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아웃소싱은 민간부문에 서비스 생산을 위탁하고 그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공공고용자료 이외에도, 정부의 피고용인들의 보수가 얼마인지 보다 더 흥미로운 기타 몇 가지의 주제들이 있다. 2011년판과 비교할 때,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상에 관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핵심 중앙정부 직군에 있는 확장된 집단들을 대상으로 개선된 서베이(survey)를 사용하여 수집되었다. 고위 및 중견 관리직, 전문직과 비서직군(secretaries)에 관한 자료에 추가하여 교사들, 이민국 직원들, 조세/세관 직원들, 경찰관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들의 보수에 관한 자료들도 보여주고 있다. 자료수집에 참여한 국가들의 숫자는 2011년에 20개국에서 2013년에 2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참여한 국가들 모두가 모든 직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각 정부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지를 선택한다. 어떤 국가들은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한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에서 교사, 보건의료인력, 안전/비상요원, 그리고 일반행정담당자는 공무원(civil servants)으로서 중요 서비스를 담당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민간과 비영리부문을 더 많이 활용한다. 정부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비중은 이러한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이것은 납세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종적인 서비스 전달비용을 결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정부고용의 상대적인 크기는 경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반영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 노동인구대비 정부고용 규모는 OECD 회원국 사이에도 매우 다양한데, 다른 나라에 비해 북유럽 국가 정부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2011년에 노르웨이와 덴마크정부는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고용한 데 반해, 한국, 일본, 그리스 그리고 멕시코 정부는 9% 이하만을 고용하였다.

OECD 회원국에서 전체 노동인구 대비 일반정부 고용비율은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약 16% 이하로 상대적으로 안정수준을 유지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 비중은 단지 명목상으로 줄었으며 가장 많이 줄어든 슬로바키아, 스웨덴, 멕시코, 그리고 포르투갈에서는 2%p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몇몇 회원국의 우편, 철도 등 공기업 고용률은 노동인구의 적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일반정부의 고용보다 적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중동지역과 유럽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공기업은, 비록 1990년대 초 이들 국가에서 민영화가 거세었지만,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노동 인력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을 고용 한다. 전반적으로, 전체 노동인구 중 공기업의 고용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2001년 평균 5.7%에서 2011년 4.7%까지 감소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2001년과 2011년에 관한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이 자료들은 국가계정체계(SNA)의 정의에 근거하며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고용에 관한 것이다. 일반정부 부문은 모든 수준의 정부들로(중앙, 주, 지방 그리고 사회보장기금) 구성되어 있고, 핵심 부처, 청, 국 그리고 정부당국에 의해서 통제되고 주요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법적 기관으로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공기업은 준 공기업(quasi-corporation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료들은 피고용인의 숫자를 나타낸다. 다만, 호주, 체코,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의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FTEs)을 나타낸다. 그 결과, 이 5개국의 고용통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축소하여 보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동인구 혹은 활동인구는 취업자 혹은 실업자중 자격조건을 충족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하여 취업연령에 도달한 인구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으로 본다. 노동인구는 특정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모든 취업대상인력을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Pilichowski, E. and E. Turkisch (2008), "Employment in Government in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Costs of Goods and Services in the Public Domain",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8,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45160338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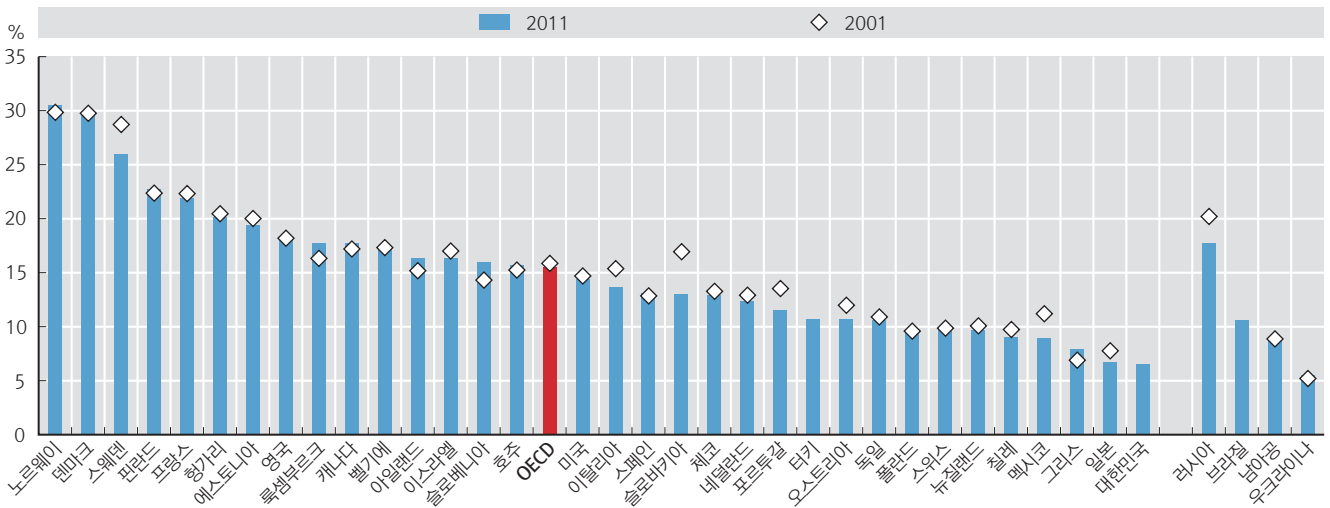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의 자료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와 칠레의 자료들은 공공부문(일반정부와 공기업)에 관한 것이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과 우크라이나의 자료들은 2011년 대신에 2010년의 자료이다. 헝가리, 일본, 멕시코, 브라질과 러시아의 자료들은 2011년 대신에 2009년의 자료이다. 칠레, 그리스,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자료들은 2011년 대신에 2008년의 자료이다. 프랑스는 2011년의 자료가 아니라 2006년의 자료이다. 우크라이나는 2001년의 자료가 아니라 2002년의 자료이다.

- 5.1: 한국과 터키의 2001년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아서, 이들 국가는 OECD의 평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르웨이의 자료는 2011년 자료가 아니라 2010년 자료이다. 남아공의 자료는 2011년의 자료가 아니라 2006년의 자료이다.
- 5.2: 호주, 벨기에,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포르투갈, 영국의 공기업자료는 분실되었으며, 그래서 이 국가들의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체코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니라 2010년의 자료이다. 핀란드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니라 2008년의 자료이다. 노르웨이는 2011년의 자료가 아니라 2007년의 자료이다. 네덜란드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니라 2005년의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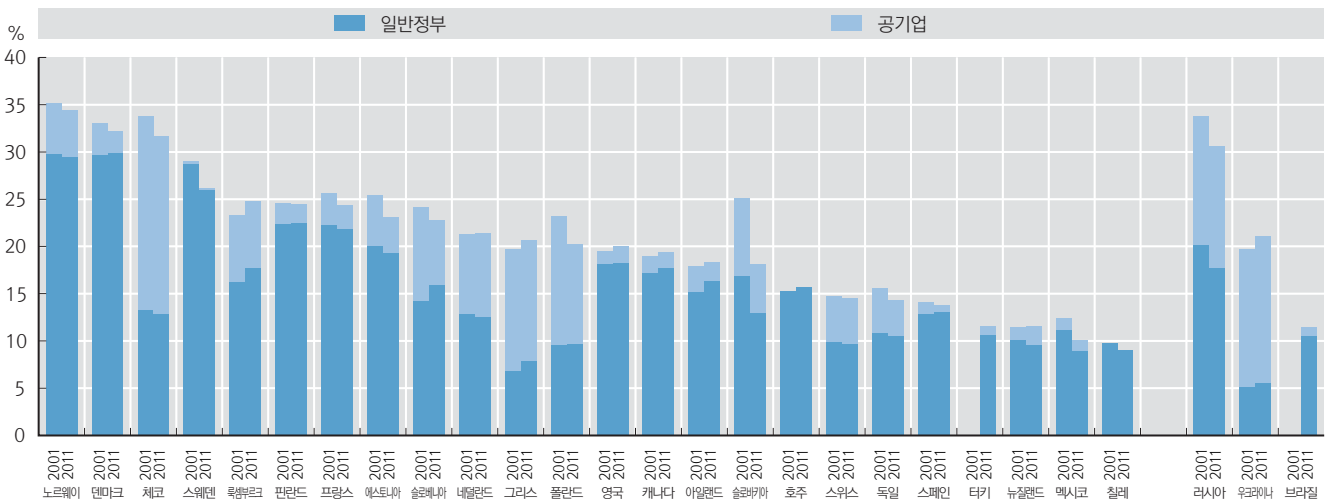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1. 노동력 비율로서의 일반정부의 고용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Korea were provided by government official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41>

5.2. 노동력 비율로서의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고용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60>

하위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의 비중은 공공행정의 분권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보보다 하위정부에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된다면 이것은 공공서비스 공급 책임이 지역사무소나 지방정부에 더 많이 위임되었음을 의미한다. 분권화를 통해 지역별 필요나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국가내의 지역별 서비스 전달의 차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

2011년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앙정보보다는 하위정부 수준에서 더 많은 직원을 고용했다. 연방정부의 고용률은 중앙수준에서 전체 정부 직원의 1/3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분권화의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 고용률은 단일국가에서 더 다양한데, 일본과 스웨덴의 경우 20% 미만, 아일랜드, 터키, 뉴질랜드의 경우 약 9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1년과 2011년 사이에 중앙정부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며, 대다수 OECD회원국에서 분권화 추세가 약하게 진행되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 기간 중 상당한 정도의 분권화가 진행되었으며 스페인, 체코, 일본 등 국가에서는 하위정부의 고용률이 10%p 이상까지 증가하였다. 스페인의 경우, 이러한 증가는 2010년 이래로 시행된 직원감축과 더불어 하위정부에 책임이 위임된 것에 기인한다. 다만 노르웨이만이 이 기간 중 상당한 집권화 경향을 보였는데 중앙정부의 고용률이 13%p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거의 2/3에 해당하는 정부 직원이 하위정부 수준에서 고용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에 의해서 수집되었으며, 표시된 것 이외에는 2001년과 2011년 자료이다. 이 자료는 국가계정체계(SNA)의 정의에 따르며 중앙과 하위정부의 고용을 포함한다. 하위정부는 지방정부를 말하며 지역(regions), 주(province), 시(municipality)를 포함한다. 중앙과 하위정부를 포함하여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로 정의한다. 또 국가는 일반정부의 사회보장기금요소에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때 일반정부는 사회적 편익 제공이라는 주요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중앙, 지방의 기구를 포함한다. 사회보장기금은 다른 수준의 정부에도 적용되며 이 영역에서의 고용은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분리되어 기록되어왔다. 그러나 프랑스, 멕시코,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금은 적은 수의 직원만을 고용하고 있고, 전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다. 다음 국가들은 연방국가로 본다: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독일, 멕시코, 러시아, 스페인(준-연방국가로 고려됨), 스위스와 미국.

자료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를 제외한 직원수로서 전일제 근로자(FTEs)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이 세 국가에서의 직원 수는 다른 국가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과소평가되어 있다.

더 읽어볼 것

Charbit, C. and M. Michalun (2009), "Mind the Gaps :Managing Mutual Dependence in Relations among Levels of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221253707200>.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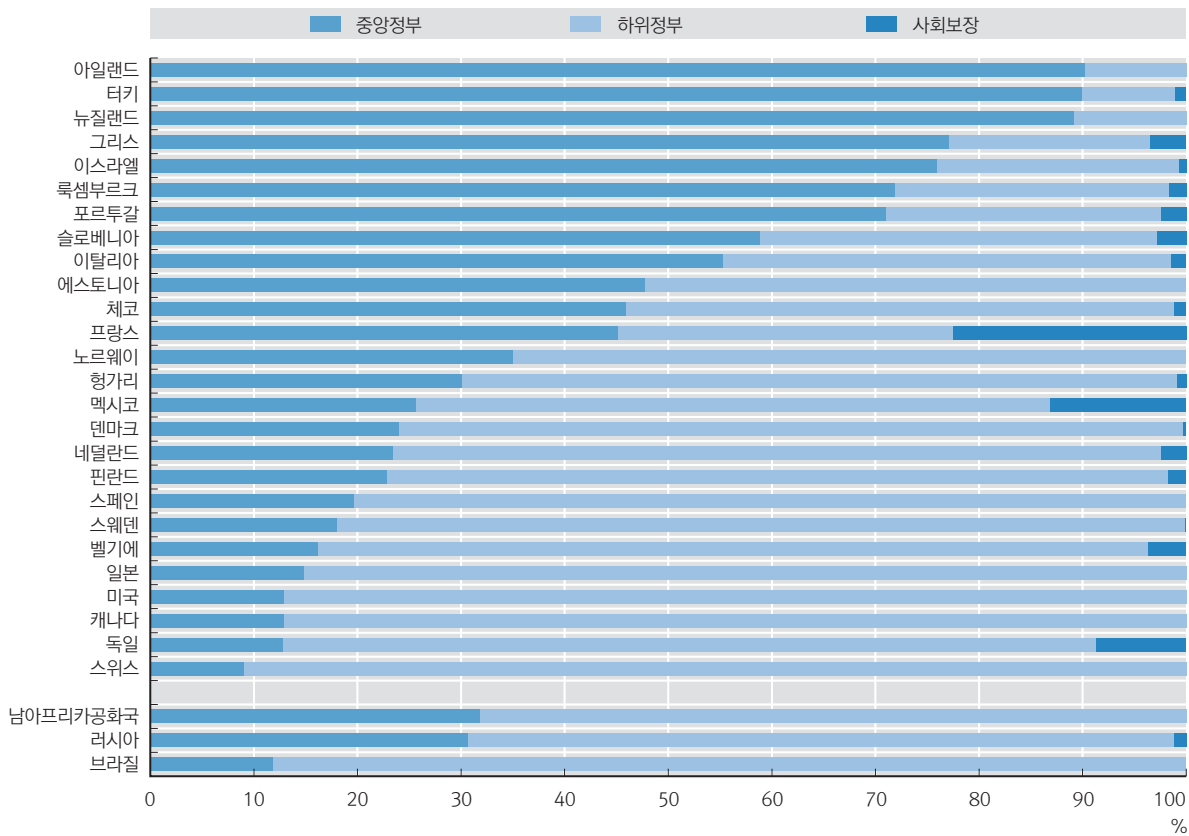
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아이슬란드, 대한민국,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의 자료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미국의 사회보장기금에 해당하는 고용통계는 별도 계산하지 않았다(즉, 중앙정부와 하위정부 통계에 통합되어 있다). 독일,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닌 2010년 자료이다. 일본, 멕시코와 러시아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닌 2009년의 자료이다. 그리스, 헝가리, 스위스는 2011년이 아닌 2008년 자료이다. 체코의 자료는 2011년이 아닌 2007년 자료이다. 프랑스와 남아공은 2011년이 아닌 2006년의 자료이다.

5.3: 브라질자료는 2009년이고, 포르투갈은 2008년이다.

5.4: 포르투갈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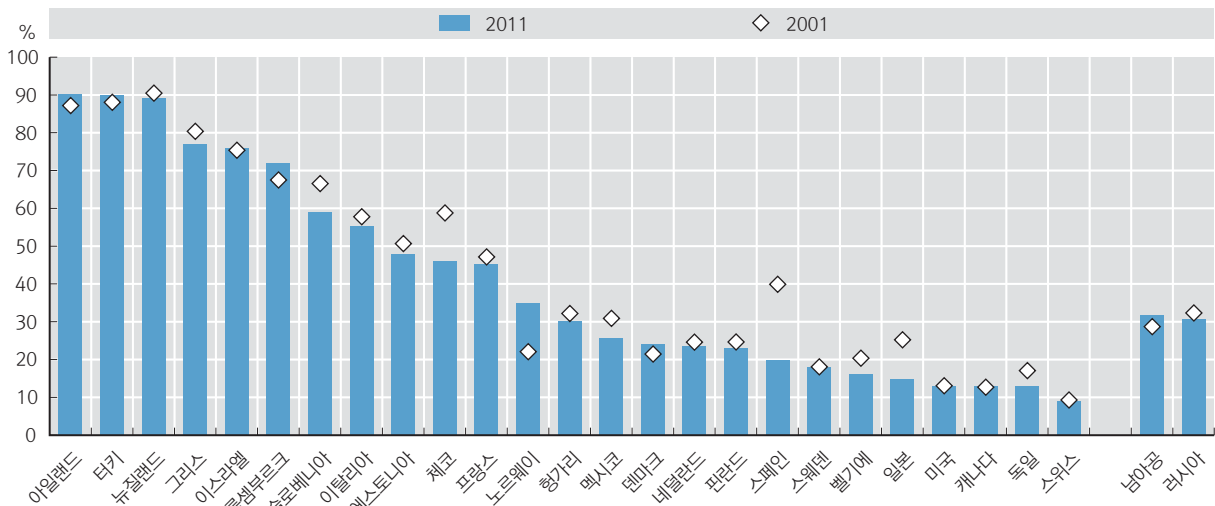
5.3. 정부수준별 일반정부고용의 분포(2011)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79>

5.4. 중앙수준에서 정부직원고용의 비율변화(2001년과 2011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298>

고위관리자에 대한 보상

공공부문에서 고위관리자에 대한 총 보상 수준은 공공부문에 대한 유인과 정부에 책임성이 높은 직위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보유하는 정부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런 (고위관리)직위에서의 보상은 공공지출의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직원에 관한 것이고, 그러한 직원들의 임명은 종종 자유재량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가치를 갖는다.

D1 관리자는 장관 또는 국무장관의 아래에 있는 최고위 공무원을 말하고, D2 관리자는 D1(자세한 것은 부록D 참조)의 바로 아래의 직급을 뜻한다. D1 관리자는 D2 관리자 보다 평균 32% 높은 보상을 받고 있으나, 그들의 근무경력이 짧은 경우(당해 직위에 재직된 기간이 더 짧은 경우) 종종 D2 관리자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평균적으로, D1 직급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보상은 약 USD 230,000 PPP 인데, 여기에는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 약 USD 36,000 PPP와 연간 휴가 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보정임금(working time correction) USD 31,000 PPP가 포함된다. 국가별 보상수준의 차이는 높은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비중, 연공서열 수준, 고위 직책(senior occupation) 중 여성의 비중의 차이 등 때문이다. 차이점들은 또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조직구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또 1인당 GDP(국가의 경제발전의 차이를 나타내는)를 감안하면 이탈리아, 뉴질랜드, 칠레의 D1 고위관리자는 가장 높은 보상을 받는 반면,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노르웨이의 D1 고위관리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이 주어진다.

보수수준의 차이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 특히 비교할만한 유사한 난이도(skill)를 가진 민간분야의 보수에 따라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의 일부는 고위관리자들에 대한 평균보상과 제3차 교육을 받은 피고용인들에 대한 보상을 비교함으로써 파악된다. 평균적으로, D1 고위관리자에 대한 보상은 제3차 교육을 받은 피고용인에 대한 평균 보상보다 3.4배 높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2011년에 관한 것이며, 2012년 OECD 중앙/연방 정부의 근무자들의 보상에 관한 보상설문조사들에서 수집되었다. 중앙부처와 청의 공무원들이 공공고용과 관리에 관한 OECD 네트워크를 통해서 응답하였다.

자료들은 6개의 중앙정부 부처/부서들에 관한 것이다(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과 환경 혹은 동등한 부처).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국제표준직업분류 (ISCO)를 적용하였다. 보상수준은 현직에 있는 직원들의 보상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총 보상은 임금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기여금 (기금 형태 혹은 비기금형태)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내용은 국가별 일관적 비교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금에 한정하였다.

보상은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자료들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평균 휴일의 숫자만큼은 조정해 주었다.

전체 방법론은 부록D를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2), *Public Sector Compensation in Times of Auster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7758-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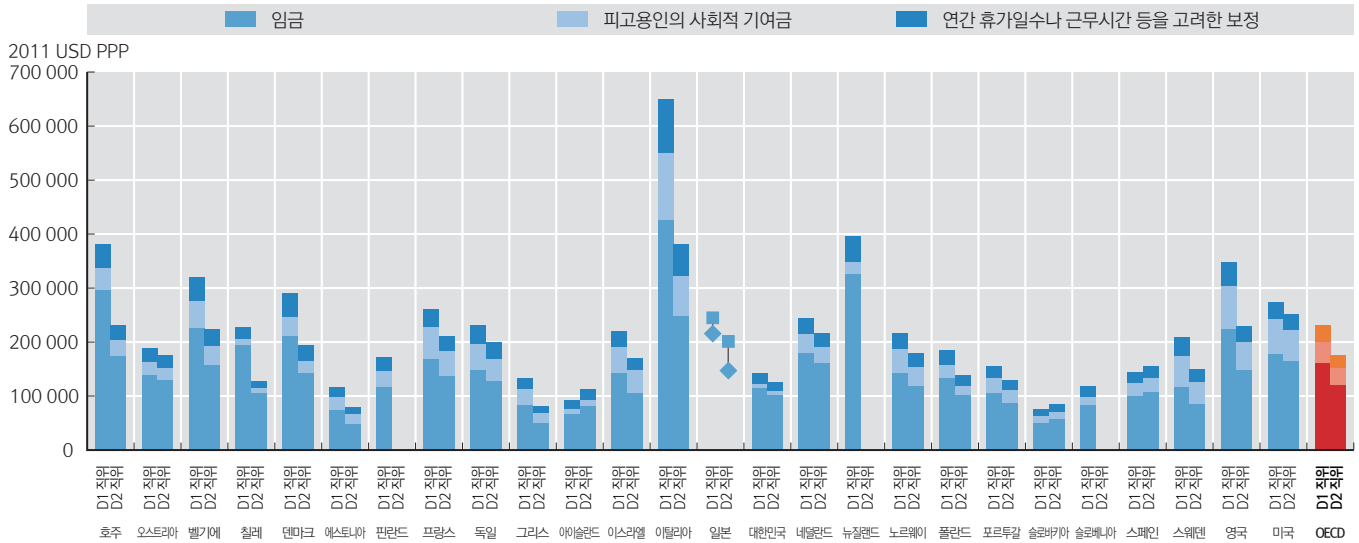
캐나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D2 직위에 대한 보상자료는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D1 직위와 섞여 있다. **벨기에**: 교육과 환경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서들은 연방당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부서의 많은 업무들이 다른 부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교육과 환경부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 **뉴질랜드**: 보상에 관한 초기수준과 최대 수준의 자료들만이 이용가능하며, 따라서 평균은 실질적인 평균이 아니라 초기수준과 최대수준의 중간만을 의미한다.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내무부에 속한다. **이탈리아**: 2011년 법률은 2012년부터 고위관리자의 보상을 최대 USD 370,000 PPP로 제한하였다. **일본**: 자료는 신규채용 시 그리고 최고호봉 시의 보수(최대값)를 토대로 제시되었고, OECD 평균에서는 산술평균을 반영하였다. **슬로바키아**: 법무부 직원의 절반만이 통계적 이유로 (ISCO코드의 일관성) 포함되었다. 공공서비스의 부서장은(각 부처의 D1 한 명) 가장 높은 등급의 월 급여액의(최고등급의 월 급여액은 935.5 유로) 121%를 매달 비과세 균등비율로 업무추진관련 비용과 개인적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인**: D1위치에 대한 자료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았다. **스웨덴**: 내무부는 수상수속에 속하며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2012년의 자료(2012년의 PPP사용)는 산술적 평균이라기 보다는 중앙값이다.

부가적 설명은 부록 D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5. 중앙정부 고위관리자의 평균 연간보상(2011)

휴일 차이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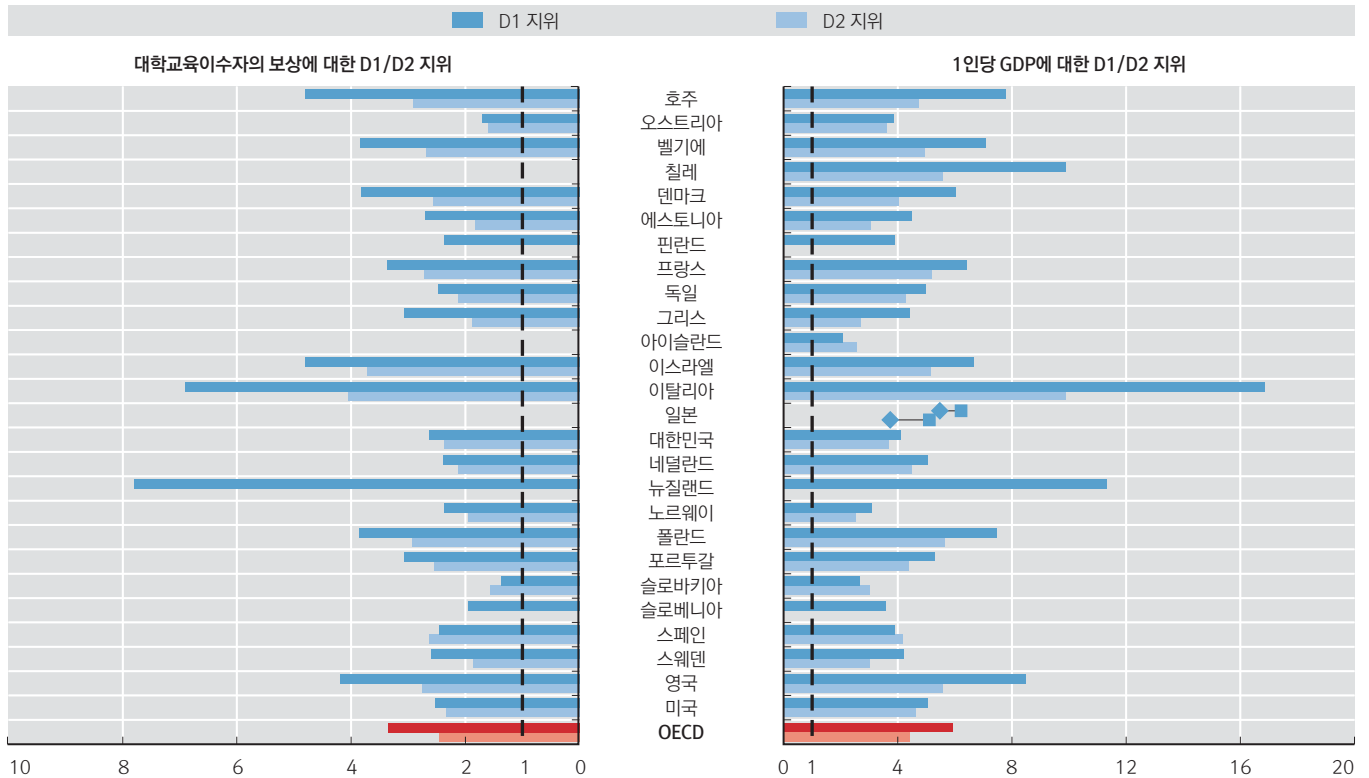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317>

5.6. 1인당 GDP 및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수수준을 고려한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의 연평균 보수

2011년 비율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336>

중간관리자에 대한 보상

중간관리자는 정부 인력의 계층구조에서 고위관리자와 전문가의 중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적자원관리의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작용하며 직원들과의 신뢰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중간직위를 담당한다.

평균적으로, D3 수준 중간관리자의 보상은 약 USD 126,000 PPP인데, 이 중에 17%는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이며, 14%는 업무시간조정에 관한 것이다. D4 중간관리자의 총 보상은 약 USD 113,000 PPP정도(고용자의 사회적 기여금과 휴일 포함)이다.

D3관리자는 부처 내에서 국/행정적 단위의 기능을 계획, 지휘, 조정하며, D4는 D3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자세한 것은 부록C 참조). D3와 D4 직위간 보상의 차이는 위의 두 고위직간의 차이에 비하여 적다. D3 관리자는 D4 관리자보다 평균 10%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추가적으로, 중간관리자의 보상은 고위관리자의 보상보다 상당히 낮다 - D1 직위의 고위관리자는 D3 직위의 중간관리자가 버는 것보다 84%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D4 직위의 관리자의 수입에 비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D1과 D4간 직위간의 이러한 차이는 이탈리아, 호주,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미국과 한국에서는 가장 그 차이가 적다.

1인당 GDP 를 고려했을 때, 폴란드와 칠레의 D3 중간관리자는 최고수준의 보수를 받는 반면, 노르웨이와 에스토니아는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또 미국의 D4 중간관리자는 가장 높은 수준 보수를 받고, 노르웨이와 이스라엘, 그리스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보상수준의 차이는 또한 국가 노동시장들간의 차이가 원인일수 있다. 평균적으로, D3 중간관리자의 보상은 제3차 교육을 받은 피고용인들의 보상과 비교해서 1.8배 높다. D3 직위는 상대적으로 폴란드에서 더 잘 보상받는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에서는 매력도(attractiveness)가 훨씬 낮은 편이다.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의 임금수준과 비교하면, 미국과 벨기에의 D4 직위는 (민간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경쟁이 심하고(인기가 있고), 반대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노르웨이에서는 약하다.

자료들은 6개의 중앙정부 부처/부서들에 관한 것이다(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과 환경 혹은 동등한 부처).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적용하였다. 보상수준은 현직에 있는 직원의 보상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총 보상은 세전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기금형태 혹은 비기금형태)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별 일관적 비교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금에 한정하였다.

보상은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자료들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평균 휴일의 숫자만큼은 조정해 주었다. 전체 방법론은 부록D를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2), *Public Sector Compensation in Times of Auster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7758-en>.

그림 설명

캐나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D4에 대한 보상자료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일본, 슬로베니아에서는 D3와 섞여 있다. **벨기에**: 교육과 환경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서들은 연방당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부서의 많은 업무들이 다른 부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교육과 환경부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그리스**: 보상에 관한 초기수준과 최대수준의 자료들 만이 이용가능하며, 따라서 평균은 실질적인 평균이 아니라 초기수준과 최대수준의 중간만을 의미한다.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내무부에 속한다. **일본**: D3 직위에 대한 자료는 신규 채용 시 그리고 최고호봉 시의 보상(최대값)을 토대로 제시되었고, OECD 평균에서는 산술평균을 반영하였다. **슬로바키아**: 법무부 직원의 절반만이 통계적 이유로 (ISCO코드의 일관성) 포함되었다. **스웨덴**: 내무부는 수상소속에 속하며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자료는 2012년(2012년의 PPP사용)에 관한 것이며, 평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다. 부가적 설명은 부록 D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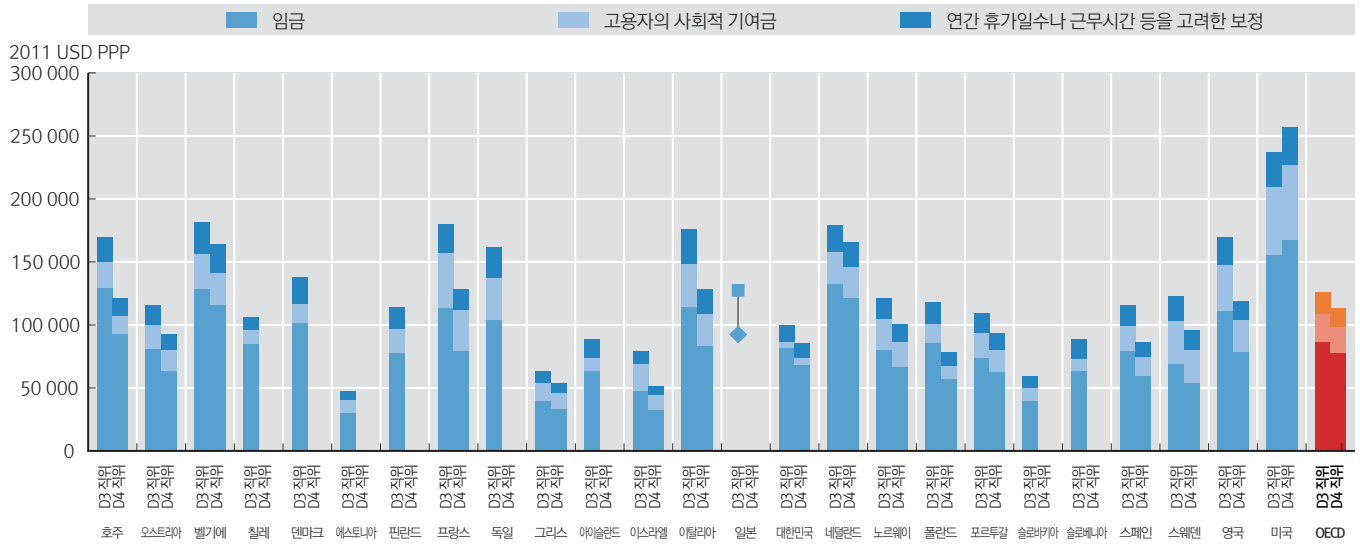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1년에 관한 것이며, 2012년 OECD 중앙/연방 정부의 근무자들에 대한 보상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OECD 네트워크(PEM working party)에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5.7. 중앙정부 중간관리자의 평균 연간보상(2011)

휴일 차이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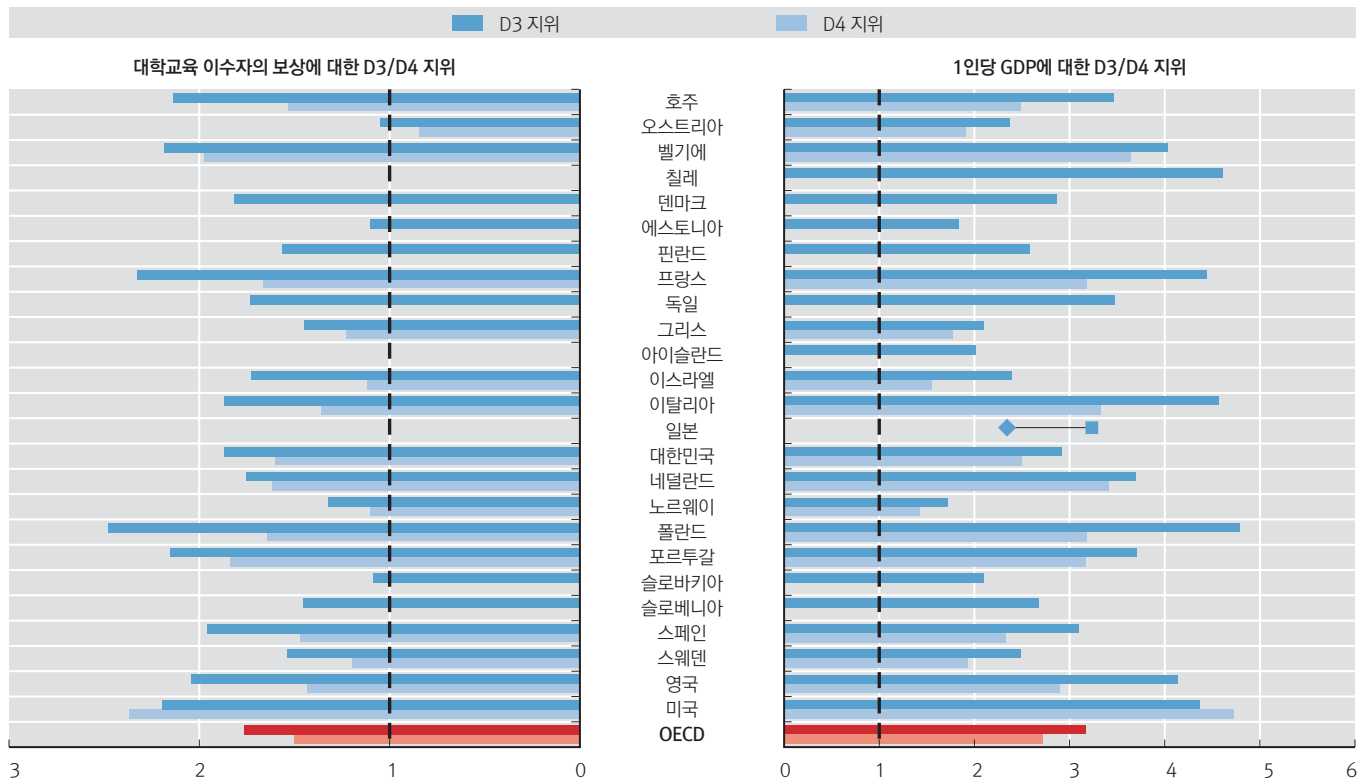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355>

5.8. 1인당 GDP 및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상수준을 고려한 중앙정부 중간관리자의 연평균 보상

2011년의 비율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374>

중앙정부의 전문직에 대한 보상

경제학자와 정책분석가의 분석기술은 증거기반의 정부 의사 결정을 개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전문직들은 관리적 책임(최대 3명의 직원에 대한 관리를 넘어서는)을 갖지 않으며, 행정/비서직군 직원의 순위보다는 높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C 참조). 자료들은 고위 전문직과 하위전문직을 나타낸다.

평균적으로, 고위전문직의 보상은 약 USD 89,000 PPP이며, 이중에 17%는 고용주의 기여금과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것이다. 하위전문직의 보상은 거의 USD 72,000 PPP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과 근무시간 및 휴일 포함)이다.

고위전문직은 하위전문직보다 평균적으로 24%이상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두 수준간의 차이는 벨기에, 칠레, 덴마크에서 가장 크며, 한국에서는 가장 차이가 적다. D1 고위관리자는 평균적으로 고위 전문직보다 2.6배 더 받는다. D1 고위관리자와 고위 전문직간의 차이는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가장 크며, 슬로바키아, 스페인,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차이가 적다. 설문조사는 이들 두 직업 집단에 대한 국가간 보상수준의 차이가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간의 보상수준 차이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보상수준의 차이는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에 따라 나타난다. 1 인당 GDP와 관련하여 볼 때, 칠레의 전문직은 최고수준의 보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는 이 직업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보상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제3차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보상과 비교해보면, 하위 전문직은 보상수준이 거의 같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1년에 관한 것이며, 2012년 OECD 중앙/연방 정부의 근무자들에 대한 보상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중앙부처와 청의 공무원들이 공공고용과 관리에 관한 OECD Network을 통해서 응답하였다. 자료들은 6개의 중앙정부 부처/부서들에 관한 것이다(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과 환경 혹은 동등한 부처).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국제표준직업 분류(ISCO)를 적용하였다. 보상수준은 현직에 있는 직원의 보상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총 보상은 세전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기금형태 혹은 비기금 형태)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국가별 일관적 비교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금에 한정하였다.

보상은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자료들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평균 휴일의 숫자만큼은 조정해 주었다. 전체 방법론은 부록D를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2), *Public Sector Compensation in Times of Auster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7758-en>.

그림 설명

호주, 캐나다, 체코,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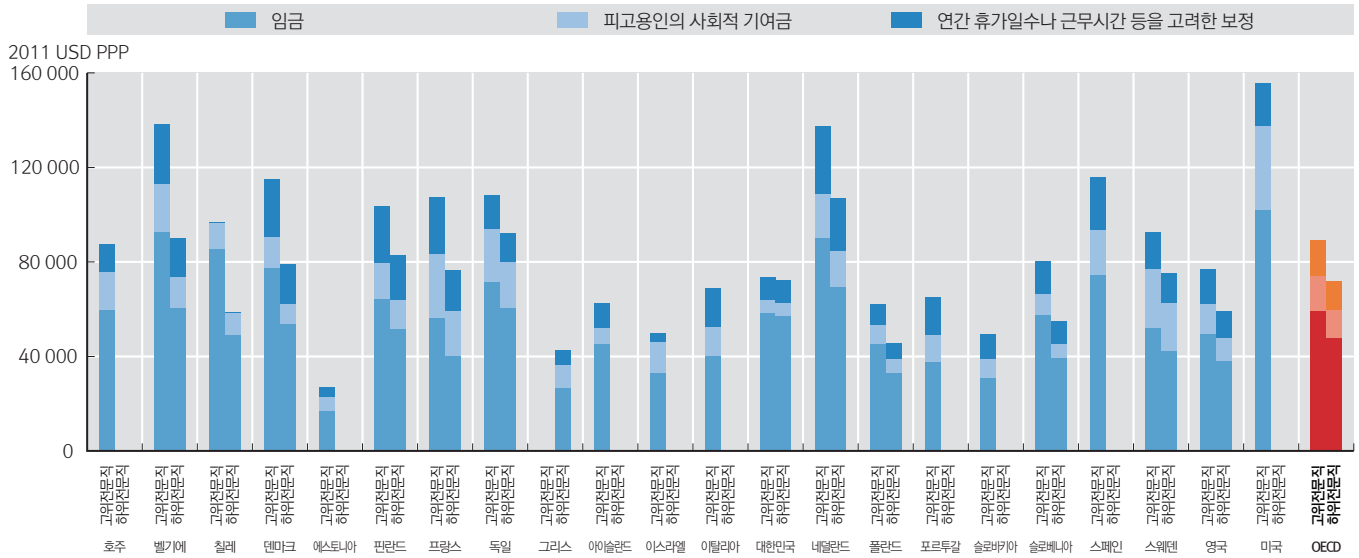
고위전문직과 하위전문직은 호주,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미국의 경우 혼합되어 있다. **벨기에**: 교육과 환경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서들은 연방당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서의 많은 업무들이 다른 부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교육과 환경부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독일**: 두 영역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 때문이며, 경력수준의 차이 때문은 아니다. **그리스**: 보상에 관한 초기수준과 최대수준의 자료들 만이 이용가능하며, 따라서 평균은 실질적인 평균이 아니라 초기수준과 최대수준의 중간만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피고용인 수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피고용인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내무부에 속한다. **슬로바키아**: 법무부 직원의 절반만이 통계적 이유로(ISCO코드의 일관성) 포함되었다. **스웨덴**: 내무부는 수상관할에 속하며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2012년 자료(2012년 구매력지수 기준)에 의하며, 평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중앙값(mean)을 의미한다.

부가적 설명은 부록 D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9. 중앙정부에 있어서 고위전문직과 하위전문직의 연간 평균보상(2011)

근무시간과 휴일의 차이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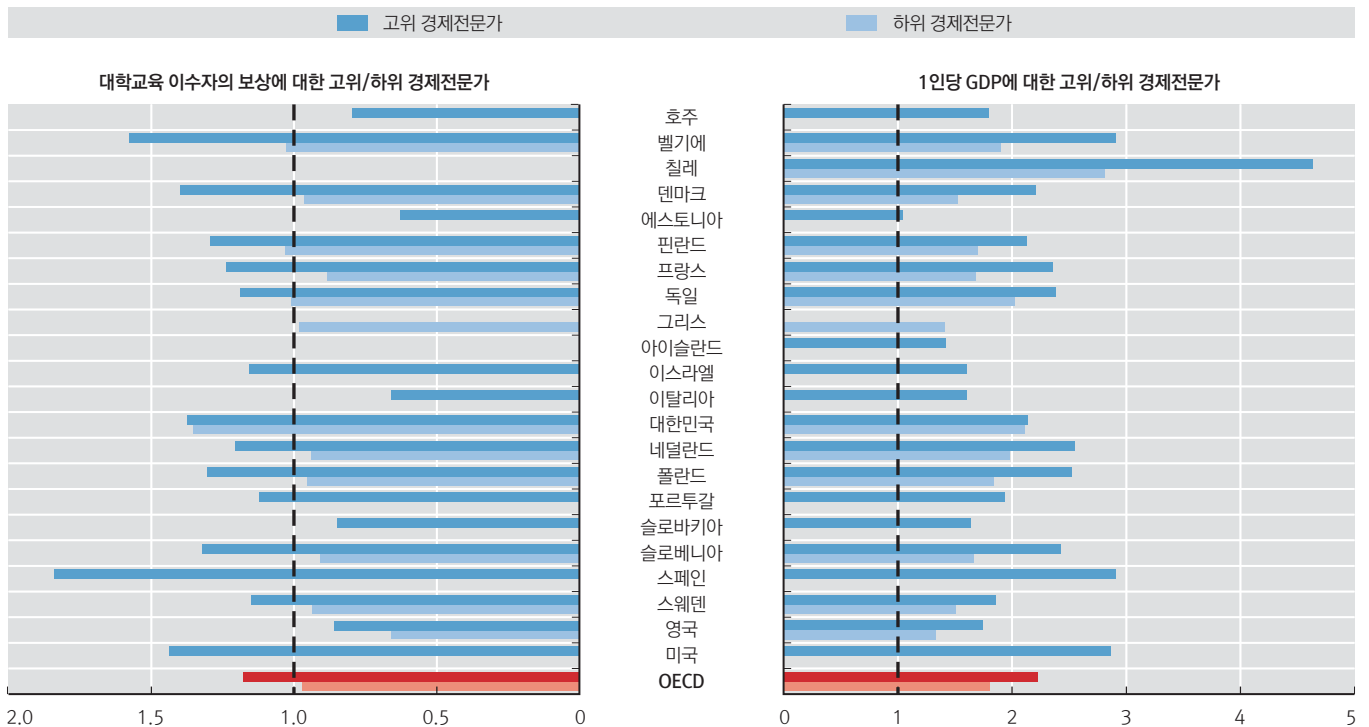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294239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355>

5.10. 1인당 GDP 및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상수준을 고려한 중앙정부 고위/하위 전문직군의 연평균 보상

2011년 비율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412>

비서직군에 대한 보상

여러 중앙정부 직군 중에서 비서업무 담당자 보수의 국가별 차이가 가장 적다. 평균적으로, 비서직군에 대한 보상은 약 USD 50,000 PPP이며, 이중에, 약 USD 8,600 PPP는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이고, USD 8,500 PPP는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보정에 관한 것이다. 결국, 총 임금은 총 보상의 66%이다.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기여금 총액을 고려하면, 총 임금에 포함된 공무원의 사회적 기여금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직종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국가별로 공무원의 임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은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회보장시스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합의와 연결되어 있다. D1 직위에 있는 고위관리자는 비서직군보다 평균적으로 4.6배 더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는 이탈리아, 호주, 영국에서 가장 크며,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에서 가장 낮다. 1인당 GDP로 교정하면, 폴란드와 네덜란드에서 비서직군에 대한 보상이 가장 높고, 슬로바키아와 에스토니아가 가장 낮다.

보상수준의 차이는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 특히 비교할만한 유사한 난이도(skill)를 가진 민간분야의 보상에 따라 나타난다. 이러한 비교에 있어서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면 한국과 스페인의 비서업무 담당자의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반대로 이 직위들은 슬로바키아에서는 덜 인기 있다. 주목할 점은 평균적인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수수준 대비 비서직군의 보수에 대한 비율은 모든 국가에서 1보다 낮으며 평균 0.7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비서직무 수행을 위해 대학교육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국가별 노동시장의 차이, 특히 민간분야의 유사직위에서의 보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2011년에 관한 것이며, 2012년 OECD 중앙/연방 정부의 근무자들에 대한 보상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중앙부처와 청의 공무원들이 공공고용과 관리에 관한 OECD Network를 통해서 응답하였다. 자료들은 6개 중앙정부 부처/부서들에 관한 것이다(내무부, 재무부, 법무부, 교육부, 보건과 환경 혹은 동등한 부처). 직군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국제표준 직업분류(ISCO)를 적용하였다. 보상수준은 당해 직위 재직자의 보상을 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총 보상은 임금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기여금(기금 형태 혹은 비기금형태)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내용은 국가별 일관적 비교를 위해 건강보험과 연금에 한정하였다. 보상은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s을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자료들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평균 휴일의 숫자만큼은 조정해 주었다. 전체 방법론은 부록D를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2), *Public Sector Compensation in Times of Auster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7758-en>.

그림 설명

캐나다,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벨기에: 교육과 환경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서들은 연방당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덴마크:** 교육부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부처의 많은 업무들이 다른 부처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 교육과 환경부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아이슬란드:** 법무부는 내무부에 속한다. **이탈리아:** 피고용인 수에는 전일제와 시간제 피고용인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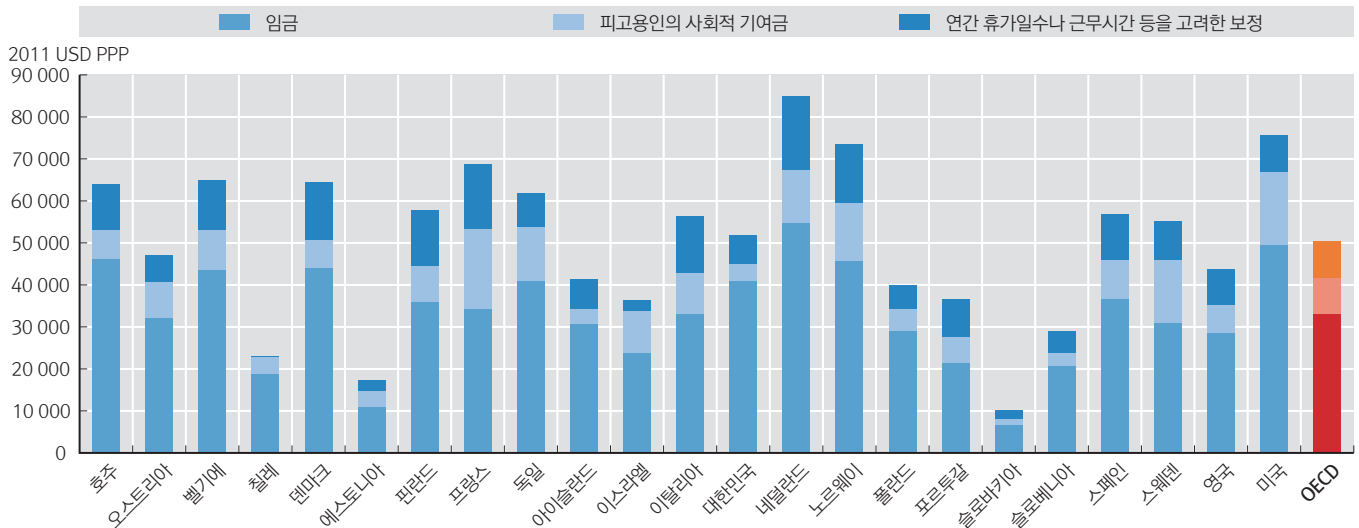
슬로바키아: 법무부 직원의 절반만이 통계적 이유로(ISCO코드의 일관성) 포함되었다. **스웨덴:** 내무부는 수상소속에 속하며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 2012년 자료(2012년의 구매력지수 기준)에 의하며, 평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중앙값(mean)을 의미한다

부가적 설명은 부록 D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11. 비서직위 피고용인의 평균 연간보상(2011)

근무시간과 휴일의 차이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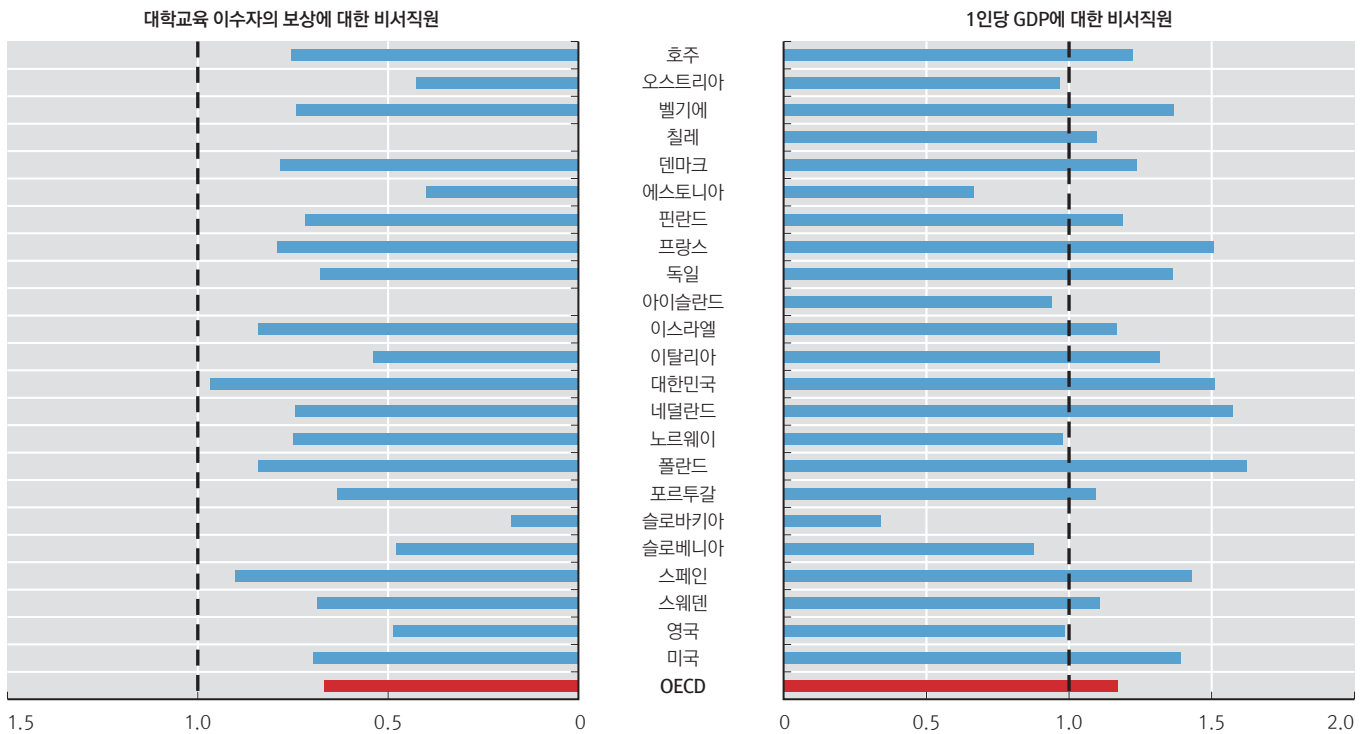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431>

5.12. 1인당 GDP 및 대학교육 이수자의 보상수준을 고려한 비서업무 담당자의 연평균 보상

2011년 비율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450>

주요직종별 보수

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직원들은 서비스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며 최 일선에서 일한다. 자료는 법과 질서, 조세와 관련된 직군을 포함한다: 경찰 관리직(police inspector)과 수사관, 일선경찰(police officer), 출입국업무 담당자, 세제담당공무원. 비록 모든 나라들에서 이러한 직무들을 담당하는 피고용인 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기능들 중에 몇 가지는 또한 하위정부에 의해서 수행된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특정한 기능들 (이민 또는 조세)은 구 별하지 않고 있다.

평균적으로, 경찰관리직에 대한 보상은 약 USD 83,000 PPP 이며, 이중에 18%는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이며, 19%는 근로시간조정에 관한 것이다. 일선경찰에 대한 보상은 대략 USD 63,000 PPP(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과 근무시간 및 휴일을 포함)이다.

5개 직군의 보수수준의 차이는 적다. 경찰관리직은 일선경찰보다 평균적으로 33%를 더 보상을 받는다. 미국과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일선 경찰과 비교하여 경찰관리직에 더 많이 투자한다. 반면에, 아이슬란드와 네덜란드, 노르웨이의 일선경찰과 경찰관리직은 거의 동일하게 보상을 받는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중앙정부에서는 일선경찰보다 세제담당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포르투갈, 영국, 미국에서 일선경찰보다는 세관담당공무원의 보수수준이 훨씬 더 높다. 이 국가들 외에 네덜란드에서도 일선경찰보다 출입국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더 높다.

다른 직군과 마찬가지로, 총 보수에서 임금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장 기여금의 비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보장시스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합의와 연결되어 있다.

1인당 GDP와 대학교육이수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경찰관리직과 일선 경찰의 임금이 분석되었다. 평균적으로 대학교육 이수자의 평균보수 대비 경찰관리직의 보수는 거의 같고 일선경찰의 보수는 약간 낮은 편이다. 이것은 보수측면에서 경찰직종의 보수에 대한 매력도가 전체 경제에서의 평균과 같거나 약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2011년에 관한 것이며, 2012년 OECD 중앙/연방 정부의 근무 자들에 대한 보상설문조사에서 수집되었다. 중앙부처와 청의 공무원들이 공공고용과 관리에 관한 OECD Network을 통해서 응답하였다.

자료들은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일부 직원들에 관한 것이다(경찰관리직, 경찰관, 이민국 직원, 세관 조사관, 세금 조사관).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개발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적용하였다.

총 보상은 임금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기여금(기금 형태 혹은 비기금형태)을 포함한다.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에 의하지 않고 국가예산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지급액(대체로 연금의 부과방식: pay-as-you-go 방식을 의미)도 포함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내용은 국가별 일관적 비교를 위해 건강 보험과 연금에 한정하였다.

보상은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s을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자료들은 주당 근로시간으로 조정되지 않았는데, 관리자들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평균 휴일의 숫자만큼은 조정해 주었다. 전체 방법론은 부록D를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2), *Public Sector Compensation in Times of Auster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7758-en>.

그림 설명

캐나다, 칠레, 체코,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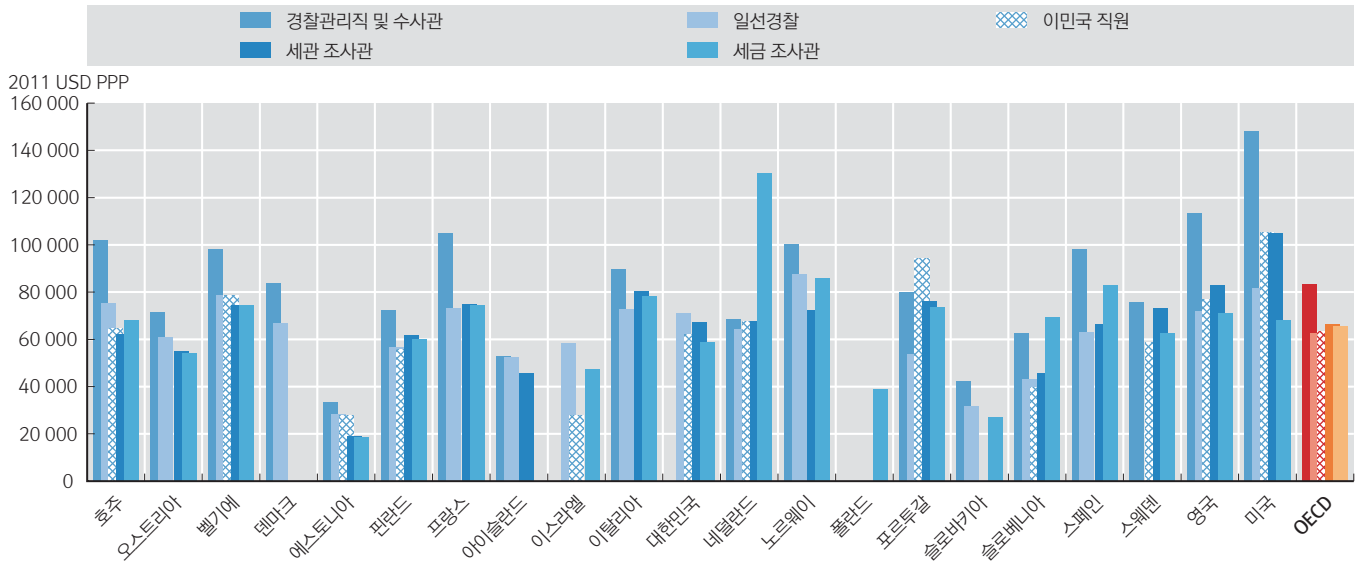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은 이민국 직원들은 경찰관에 포함된다. 경찰 조사관과 경찰관은 이스라엘, 대한민국, 스웨덴에서는 혼용된다. 슬로바키아에서는 세관 직원은 경찰관에 포함된다. 아이슬란드에서 세금 조사관과 이민국 직원은 경찰관에 포함된다. **호주:** 시와 지방경찰은 경찰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계약직 근로자들만 고려되었는데, 이들이 서비스전달 요원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세금 조사관을 제외하면, 서비스전달 직무는 공공서비스의 외부에 존재한다. **영국:** 2012년 자료(2012년의 구매력지수 기준)에 의하며, 평균은 산술평균이 아니라 중앙값(mean)을 의미한다

추가적 설명은 부록 D를 참조.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13. 서비스전달 직종의 피고용자에 대한 연간 평균보상(2011)

근무시간과 휴일의 차이를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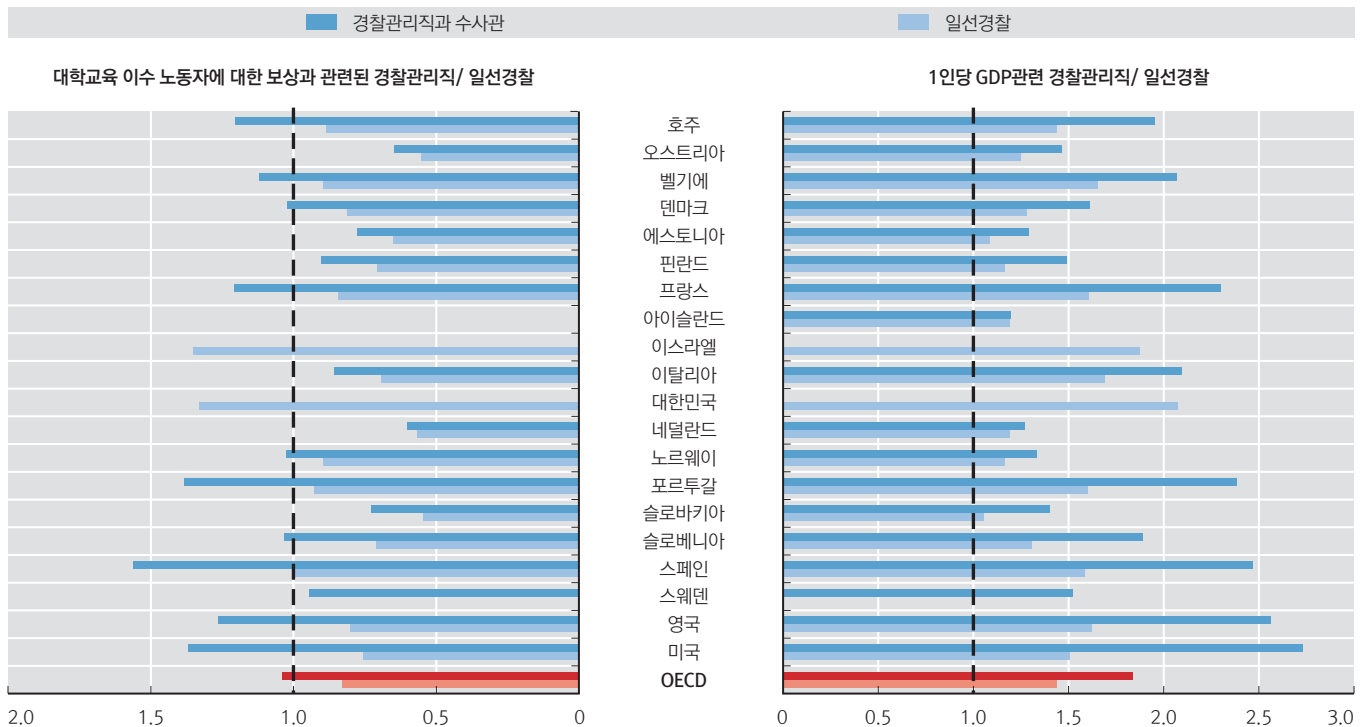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469>

5.14. 1인당 GDP 및 대학교육 이수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한 중앙정부 경찰관리직과 일선경찰의 연평균보상

2011년 비율



출처: 2012 OECD Survey on Compensation of Employees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STAN/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488>

교사의 급여

교사는 교육부문의 근간으로 생산성과 (국가)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이다. 교사들의 급여는 노동집약적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큰 단일 비용항목을 대표한다. 급여와 근로조건은 숙련된 교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교직에 남아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원은 초등(primary), 중등(lower secondary), 고등(upper secondary) 교원으로 구분한다. 이들의 급여는 교사의 채용자격요건, 경력, 직무, 지도하는 교육수준에 따라 증가한다. 이 자료는 중등교원의 초임, 중간경력, 최고경력일 때의 법정 세전 임금을 비교하고 있다. 이들은 공립학교 채용에 필요한 최소수준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들이다. 그러나 국제비교에서 법정임금은 단지 하나의 주요한 비교요소일 뿐이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너스와 수당뿐 아니라 사회적 편익,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등에 따라 총 보수수준이 달라진다. 또한 교사의 급여자료에는 국내, 국제 비교 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근로시간과 휴가에 대한 차이가 보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자료는 OECD 회원국 사이에 교사의 근무경력 별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15년 경력 중등교원에게 지급하는 법정 세전 기본급 총액은 2011년 기준으로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USD 15,000PPP 보다 낮고, 룩셈부르크, 독일, 네덜란드에서는 USD 60,000PPP 이상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거의 USD 40,000PPP에 달한다. 한국, 일본, 멕시코에서는, 최고등급의 급여는 초임 급여의 2배를 넘는다. 최고등급의 급여는 초임 급여보다 평균 약 60%더 높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의 총 임금은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25세부터 64세까지의 제3차 교육을 받은 전일제 정규직 근로자) 피고용인들의 평균 연간 총 임금보다 낮다. 스페인, 한국,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의 교사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받는다. 뉴질랜드, 캐나다, 독일, 핀란드에서는 교사의 법정급여가 제3차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호주의 교사 급여는 제3차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보다 상당히 낮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법정 임금은 공식적인 호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의 임금은 총액(고용주가 지불하는 과세 전 총 임금)에서 고용주가 지급하는 사회보장비와 연금(호봉체계에 따른)을 차감한 것이다. 이는 교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위한 학력을 취득하고 15년간의 교사 경력 후 최고호봉에 도달한 전일제(fulltime) 교사에 관한 것이다.

이 지표에서 보고된 것처럼 법정급여는 실제 정부에 의한 임금지출, 교사의 평균 급여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총 교사급여는 OECD 국가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의 GDP에 대한 PPP를 사용한 USD로 변환되었다.

상대적 급여 지표는 이용 가능한 소득자료를 가진 최근 연도를 대상으로 계산되었다. 이 경우, 교원의 임금은 15년의 경력 이후 실제 지급액을 의미한다. 대학교육 이수자의 임금은 ISCED 5A/5B/6에 속하는 교육을 받은 25세부터 64세사이의 전일제, 전년제(full-year)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말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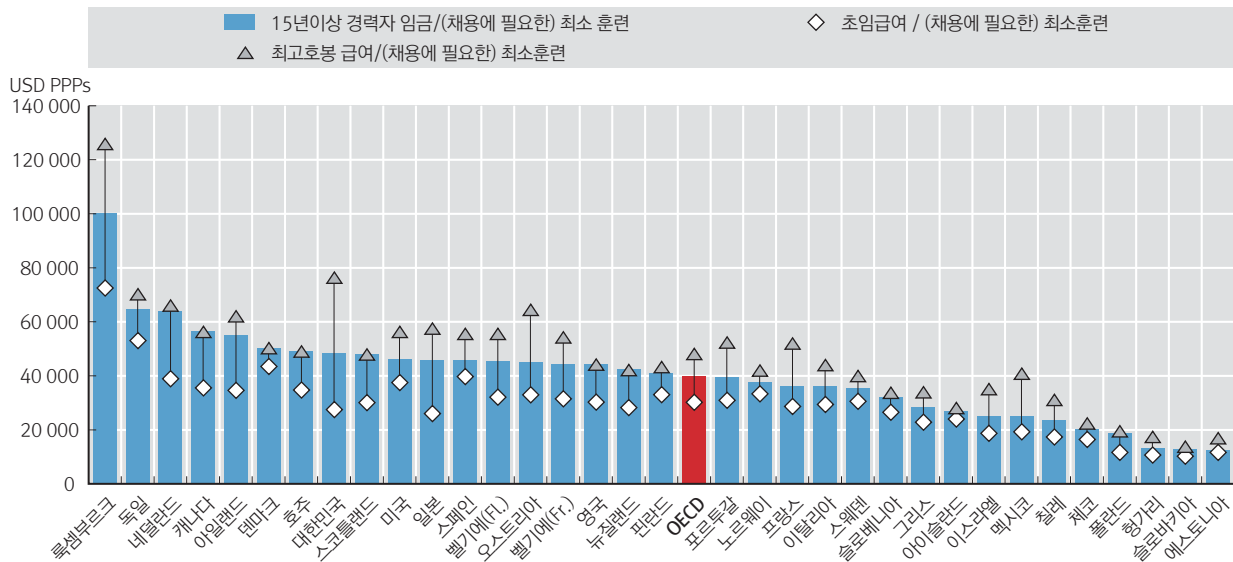
벨기에에는 벨기에(Fr.) 과 벨기에(Fl.)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로 제시되었다.

5.15. 스위스와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5.16. 그리스, 일본, 멕시코, 스위스, 터키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의 자료는 2010년 자료이다. 프랑스의 자료는 2009년 자료이며 아이슬란드는 2006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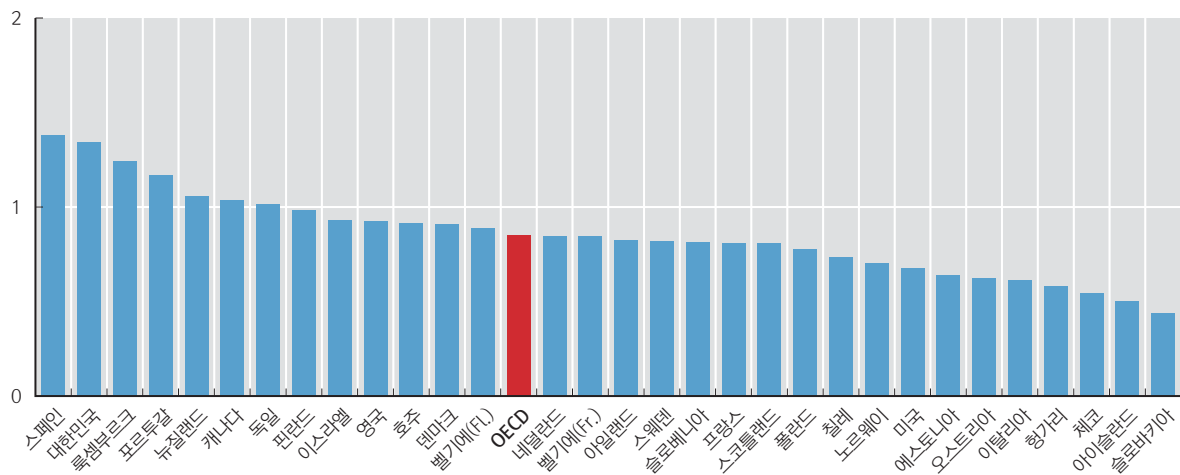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5.15. 공립학교 중등 교원 급여(2011)



출처: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507>

5.16. 대학교육 이수자의 임금 대비 교사의 임금 비율(2011)



출처: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526>





제6장. 정부에서의 여성

여성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공공인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중은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들은 남녀 근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의 제공을 보증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가령 더 나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채용 및 승진 목표와 조치들의 시행 등이 있다. 그러나 상당한 성별 격차가 여러 직업에 걸쳐 남아 있으며, 여성은 고위직에 도달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상위계급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이것은 모든 시민의 동등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사법체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성별 격차를 줄이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설계와 집행에 성별 고려(gender considerations)를 내재화하는 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정책과 서비스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대응성을 개선할 수가 있다.

이 장은 OECD 회원국들에서 정부의 행정, 사법, 입법부 내의 여성비중에 대한 지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정부고용에서 파트타임(part-time) 일과 다양한 직위에 있어서 여성에 관한 자료도 공공부문의 여성고용과 전체 노동력을 비교하는 자료와 함께 제시된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직종분리를, 장기적으로 임금과 경력 전망에 대한 영향을 함께 가져간다.

정부고용의 여성비중은 공공기관의 개방성과 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 정부가 실적과 투명성 같은 공공 서비스의 기본적 가치를 더욱 더 추구함에 따라, 정부는 성별 대표성과 같은 다양성의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해 가고 있다. 더군다나 남녀인구에 비례하는 공공부문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보다 잘 인지하게 됨으로써, 공공정책의 질과 서비스 민감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는 또한 정부의 인력활용의 극대화를 보장하여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증대한다는 차원으로서의 좋은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인력 내에서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인력의 사회적 유동성을 강화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에서, 전체 노동인구에서의 여성 비율은 약 40~50%인 반면, 일반정부인력의 여성 비율은(56%) 이러한 전체 노동인구보다 높다. 일부 국가들에 있어 정부고용 정책은 여성인력을 모으는데 기여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비교하여 더 융통성 있는 노동 조건, 추가적 유급 육아휴가 그리고/혹은 더 많은 육아 보조금이나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국들에 걸쳐 격차는 존재한다: 가장 큰 차이는 북유럽 국가들, 에스토니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일반 정부인력의 여성비중이 전체 노동인구의 여성비중보다 20%p 가량 높은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와 터키의 경우, 일반정부에서 보다는 노동 인구에서 여성 대표성이 약간 높다.

2001년에서 2010년까지 자료가 있는 모든 21개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내 여성비중은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에스 토니아가 여성고용에서 가장 높은 상승을 경험하였다; 2010년에는 여성인력이 일반정부고용의 4분의 3을 차지 하였는데, 이는 OECD 회원국들을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대조적으로 가장 최근 수치에 의하면, 터키와 그리스에서는 일반정부 내에서의 여성직원비율이 각각 24%와 36% 밖에 되지 않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국제노동기구(ILO)를 기반으로 하며, 2001년도와 2010년도를 나타낸다. 일반정부부문은 모든 수준의 정부로 구성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 정부의 모든 단위; b) 각 수준의 정부에서의 모든 사회보장기금; c) 정부기관이 관리하며 대부분의 자원총당을 하는 모든 비-시장 비영리 기관들. 노동 인력은 취업자와 실업자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자료는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나타내며, 이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을 나타낸다. 그 결과, 이 두 국가의 고용수치는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었다. 캐나다, 칠레, 핀란드, 폴란드와 터키의 자료는 일반정부 대신에 공공부문(일반정부와 공기업)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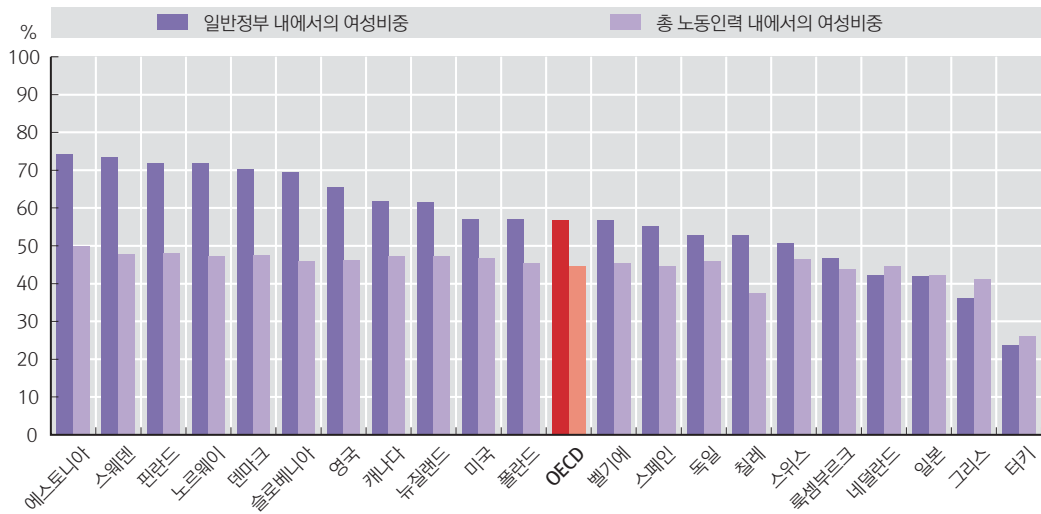
더 읽어볼 것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그림 설명

일본 자료는 2010년 대신 2009년의 것을 사용했다. 캐나다, 칠레, 핀란드, 그리스, 폴란드와 스위스 자료는 2010년 대신 2008년의 것을 사용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자료는 2010년 대신 2007년의 것을 사용했다. 터키 자료는 2010년 대신 2006년의 것을 사용했다. 네덜란드 자료는 2010년 대신 2005년의 것을 사용했다.
6.1: 일반정부 내에서의 여성비중 자료는 모두 ILO LABORSTA(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노동 인력의 여성비중 자료는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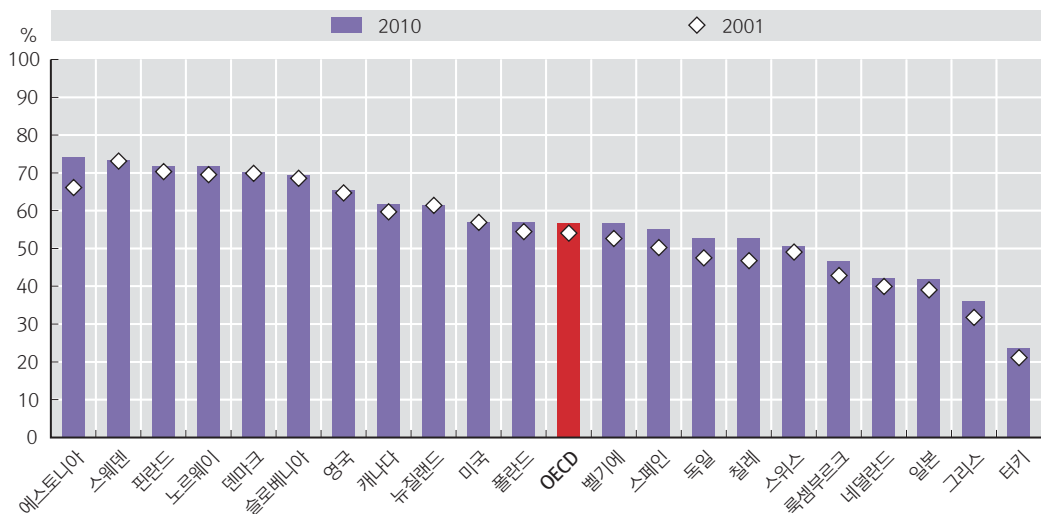
6.1 일반정부 내의 여성과 노동인력 내의 여성 간 비교 (2010)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and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545>

6.2 일반정부 내에서의 여성 (2001, 2010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LABORSTA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564>

중앙정부고용은 모든 일반정부고용의 일부이며, 중앙 정부 부처와 부서의 다양한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비서직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고위 관리직을 포함한 중앙정부 내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OECD 회원국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서 여성의 역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평균적으로, 자료가 있는 22개 국가들에서 2010년 여성은 전체 중앙정부 직원의 50%를 살짝 웃도는 비율을 차지 하였다. 이 수치는 주정부나 지방 정부에 더 많이 있는 여성주도직종인 교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정부 전체 고용에 있어서의 여성비중(57% 그림 6.2 참고). 보다 살짝 낮은 것이다. 칠레,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략 70%대의 여성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반면 일본은 가장 낮은 비율(16%)을 보이고 독일(39%)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앙정부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노동인력에서보다 조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많은 국가들에서 더 유연한 근로환경과 유급 육아휴가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자료가 있는 거의 모든 15개 OECD 회원국(두 나라 -에스토니아와 일본 -에서 1%p를 밑도는 비중 하락)에서는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앙정부의 여성고용률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앙 정부의 여성고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낮은 직급의 위치에 과다하게 대표되어 있다. 19개 국가 중 15개에서, 비서직군의 50%가 넘는 비율을 여성이 차지 하고 있으며 - 슬로베니아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대략 90%의 비서직군을 여성이 채우고 있다. 고위직에서는 여성 대표성이 훨씬 적으며, 불과 40%의 중간관리직과 29%의 최고관리직을 여성이 대표하고 있다(그림 6.4 참고).

또한, 여성은 중앙정부의 파트타임 근로자에서도 불균형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를 제공한 모든 16개 OECD 회원국에서, 2010년도 파트타임 근로자 중 여성은 3분의 2 혹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독일, 룩셈부르크와 프랑스에서는 85%를 웃돌았다. 파트타임 근로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더 많은 유연성을 가진 매력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는 장기적으로는 대체로 낮은 보수와 적은 승진기회로 이어진다. 파트타임에서 풀 타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를 주는 것이 국가로서 모든 직원이 장기적으로 경력을 끌고 나갈 수 있어서 해가 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제공하는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2011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를 통해 수집되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부서 소속 고위 공무원이다.

중앙정부(국가정부 혹은 연방정부)는 중앙단위의 정부에 의해 재원조달되고 관리되는 부처, 부서와 기관들을 가리킨다. 고용자료는 일반고용구조 아래 고용되어 있는 직원을 가리키며, 이는 대부분의 정부 근로자의 고용조건과 법정 근로자를 포함한다. 파트타임 고용은 풀 타임보다 적은 주당 근로시간을 요구하는 직무를 가리킨다. 국가마다 파트타임 고용의 정의에 차이는 있지만, 대개로 주당 30-35시간 이하이다.

최고관리직은 장관 혹은 차관 아래의 직위로 정의한다. 중간관리직은 최고관리직 바로 아래에서부터 3명 이상을 관리하는 직위까지로 정의한다. 이는 통상 부처내의 부서, 과, 팀(unit)의 수반들이 포함한다. 전문직은 관리직과 행정/사무직 사이의 직원으로 정의한다. 비서직군은 행정업무와 전반적 사무실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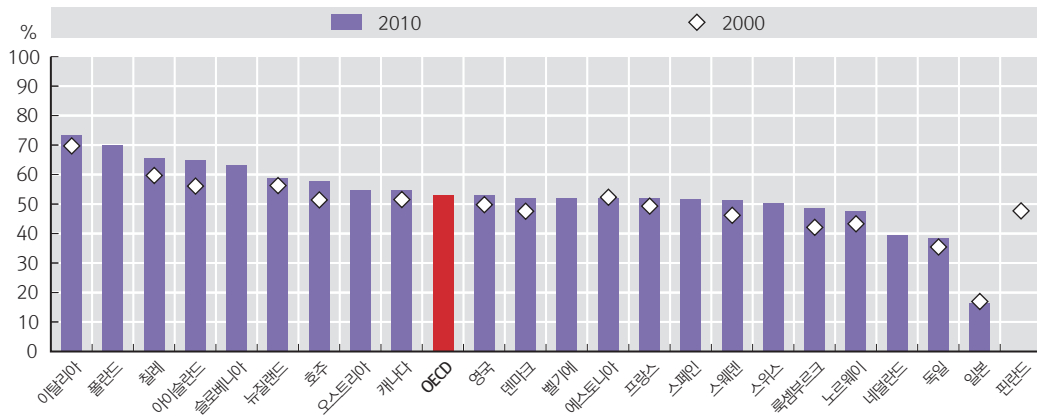
그림 설명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와 스웨덴 자료는 2010년 대신 2011년의 것을 사용했다. 프랑스 자료는 2010년 대신 2009년의 것을 사용했다. 네덜란드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을 나타낸다.

6.3: 에스토니아, 일본과 스페인 자료는 풀 타임 근로자 자료만을 사용했다. 핀란드의 2010년도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6.4: 스위스의 비서직군 자료는 기술직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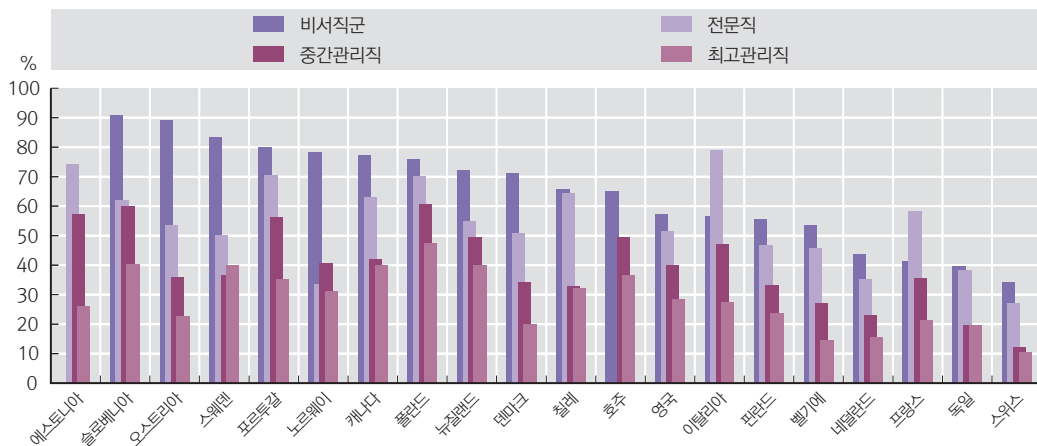
6.3. 중앙정부 고용에서의 여성비중 (2000, 2010년)



출처: 2011 OECD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5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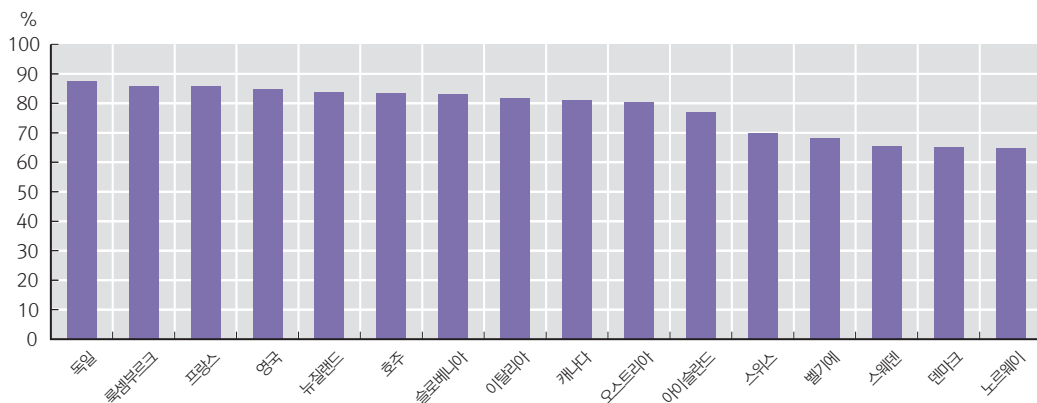
6.4. 직종별 중앙정부 고용에서의 여성비중 (2010년)



출처: 2011 OECD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02>

6.5. 중앙정부 파트타임 직위에서의 여성비중 (2010년)



출처: 2011 OECD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21>

중앙정부 내에서의 여성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림 6.3 참고), 고위 행정 직이나 요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여전히 미약하다. 중앙정부 고위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별 불균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한계를 만들게 되며, 이는 공공정책과 법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의 핵심적인 한 예로 사법체제에서의 성별 대표성이 있는데, 이는 사법체계에서 동등권리를 보장하고 성차별을 제거하는 데에 핵심이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에서 여성은 중앙정부 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자료가 있는 18개 국가에서는 오직 29%의 고위관리직을 맡고 있다. 여성이 중앙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는 회원국간 상당한 차이가 있다. 폴란드의 경우, 거의 50%의 고위관리직을 여성이 맡고 있는 반면, 이 수치는 벨기에와 스위스 같은 국가들에서 반으로 준다. 중앙정부에서의 여성비중에 비해 최고위직에 도달한 여성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이탈리아이다.

OECD 회원국들의 여러 가지 사법제도에서도 비슷한 동향을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사용 가능한 회원국 자료에 의하면, 직업법관들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여성이었지만, 같은 해 제1심 과 제2심 법원장의 단 29%가 여성이었다. 대법원에서도 여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대표성을 갖는다 (재판관의 28%). 자료가 사용 가능한 5개 회원국(체코, 아일랜드, 그리스, 핀란드와 스웨덴)에서만 여성이 대법원장이었다.

이러한 불균형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몇몇의 국가들은 현재 존재하는 동등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다양성 관련 제도들의 이용 혹은 성별 할당제, 동등 임금 규칙/지침, 리더십 교육과 멘토 프로그램 활용, 또한 유연한 근무시간과 같은 일과 삶의 균형 계획을 포함한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일부 국가는 사법부문 이용 가능한 후보자 풀(pool)에서 성별 다양성 향상을 추진하는 특별 사법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최고관리직과 중앙정부에 있는 여성의 수에 대한 자료는 2011 OECD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를 사용하였다. 중앙/연방 인적자원관리와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공무원에게서 답변을 수집하였다.

여성 전문판사와 여성 법원장의 수에 관한 자료는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s Commission for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 CEPEJ)에서 수집되었다. 달리 언급이 없는 한, 후자는 제1심 법원과 제2심 법원을 뜻한다. 여성 대법관 관련 자료는 유럽위원회의 여성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European Commission Database on Women in Decision Making)를 토대로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대법원을 각 국가의 시민법과 형사 관할권 내의 최고 사법기구라고 정의한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행정 또는/혹은 헌법적 관할권이 있을 수 있다. 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한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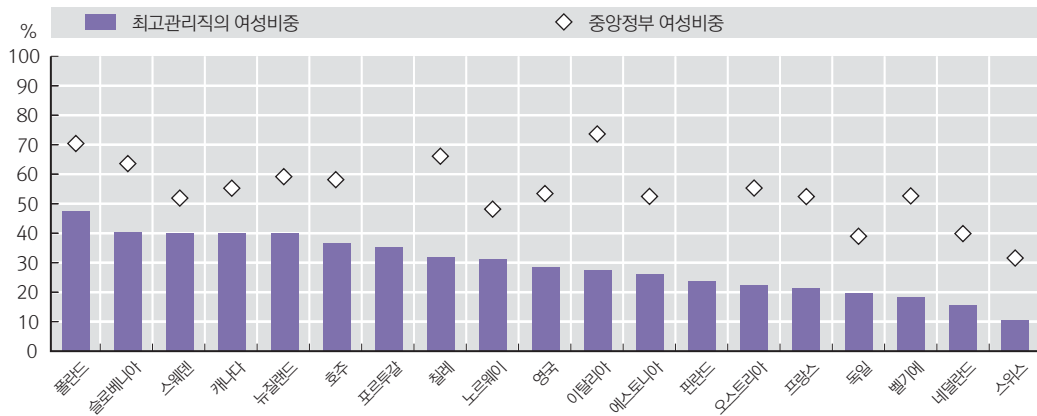
- CEPEJ (2012), *Evaluation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 2012 edition (2010 data)*, CEPEJ Studies No. 18,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그림 설명

- 6.6: 포르투갈과 핀란드의 중앙정부 여성비중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와 스웨덴 자료는 2010년 대신 2011년의 것을 사용했다. 프랑스 자료는 2010년 대신 2009년의 것을 사용했다. 에스토니아, 일본과 스페인 자료는 풀 타임 근로자만의 것이다. 네덜란드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을 나타낸다.
- 6.7: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위스와 터키의 법원장 비중 자료는 제1심 법원만 해당된다. 스페인 자료는 제2심 법원만 해당된다.
- 6.8: 호주, 캐나다,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와 우크라이나의 자료는 2010년도의 것이다. 칠레, 노르웨이와 이스라엘의 자료는 2011년도의 것이다. 미국과 일본 자료는 2013년도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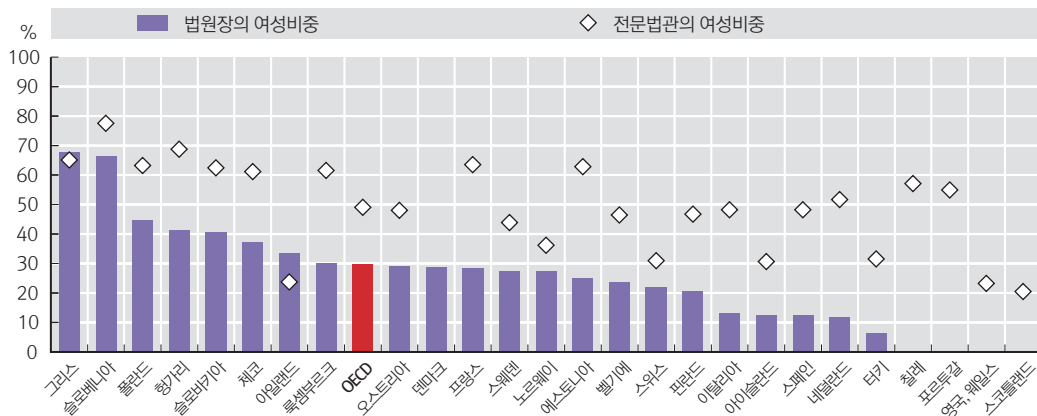
6.6. 중앙정부 대비 최고 관리직의 여성비중 (2010년)



출처: 2011 OECD Survey on Gender in Public Employ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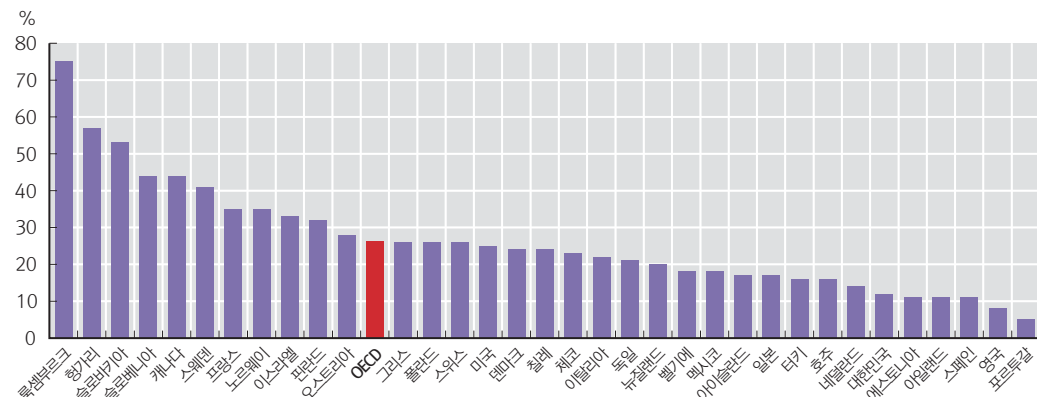
6.7 전문법관 대비 여성 법원장 여성비중 (2010년)



출처: CEPEJ (2012), Evaluation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 2012 edition (2010 data), CEPEJ Studies No. 18,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Data for Chil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59>

6.8 대법관의 여성비중 (2012년 혹은 사용 가능한 최신 년도)



출처: EU countries, European Commission Database on Women in Decision-Making. Non-EU countries: 2011 OECD Survey On Women in Public Leadership.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78>

정치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은 정치과정에서 성별평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개발, 성별 기반 폭력, 가족친화적 정책, 동일임금, 연금, 선거제도 개혁과 서비스전달 같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사안들에 관심을 불러오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여성은 의회와 정치적 집행분야에서의 정치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유리 천장 (glass ceiling)”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치분야에서 대표성이 부족하다.

OECD 평균적으로는, 여성은 하원 혹은 단독 의회의 4분의 1을 살짝 웃도는 자리를 차지 하였는데 - 2012년도 초 기준 - 오직 12개 회원국만이 여성 대표성에 있어 유엔과 세계의원연맹이 권장하는 30% 한계치에 도달하거나 넘어섰다. 2002년에 대비하여, 이것은 평균 6%p의 소폭 상승을 나타낸다. OECD 국가들의 의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며,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의 의회 의석 같은 경우 4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한다. 터키, 일본, 칠레와 헝가리 같은 경우 4분의 1보다 적은 의석 수를 여성이 차지하였다.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는 입법부에 더 많은 여성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정당후보명단에 보다 성별균형적인 후보자를 선발하는 관행 때문일 수 있다. OECD의 경우, 12개 국가 중 30% 대표성 한계치를 충족하는 9개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원선거에서 비례제를 사용한다. 시행되고 있는 선거제도 유형 이외에도, 문화적·경제적 장애와 더불어 정치와 사회적 생활의 책임을 조화하기 어려운 점 또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9개 OECD 회원국은 의회 내의 성별 평등을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할당제 적용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후보자 추천과정에서의 할당제(예: 정당 명부에 여성을 포함하거나 선거구에 추천을 위한 규칙)부터, 특정 의석 수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방식이 있다.

OECD 회원국의 행정부에서는, 여성장관의 비중이 2005년 21%에서 2012년 25%로 증가하였다. 2012년 자료에 의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50% 이상의 여성장관 비율을 나타낸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그리스와 터키는 10%가 되지 않는다. 여성은 대체로 사회적 문화적 정책 장관직을 지닌다. 비록 장관 임명 절차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의회에서 표결 혹은 임명하는 시스템과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시스템), 여성은 모든 시스템에서 동등하게 대표되지 않는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여성 의원에 대한 자료는 하원 혹은 단독의회를 가리키며, Inter-Parliamentary Union’s PARL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다. 자료는 2012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25일로 기록된 여성 의원 비중을 의미한다.

열은 파란색 국가들은 2013년 1월 부로 하원 혹은 단독의회의 입법 후보자 할당량을 의미한다. 입법부 할당제도는 해당 국가의 선거법, 정당법, 혹은 그와 견주어 비슷한 법에 명시 되어 있다. 정의상 두 형태 모두 법규 규정들을 기반으로 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단체들이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입법된 할당량 불이행 시 해당사항이 없는 정치 단체들도 처벌 대상일 수 있다. 성별할당제 자료는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Global Database on Quotas for Women에서 수집하였다.

여성 장관 관련 자료는 Inter-Parliamentary Union’s의 “Women in Politics” 포스터에서 수집하였다. 자료는 2012년 1월 1일과 2005년 1월 1일 부로 임명된 여성 장관을 나타낸다. 자료는 전체 장관직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총리와 장관직을 포함한다. 총리/정부수반 또한 장관직의 경험이 있을 경우 포함하였다. 부통령과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장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 읽어볼 것

International IDEA (2007), *Designing for Equality*, Stockholm, Sweden.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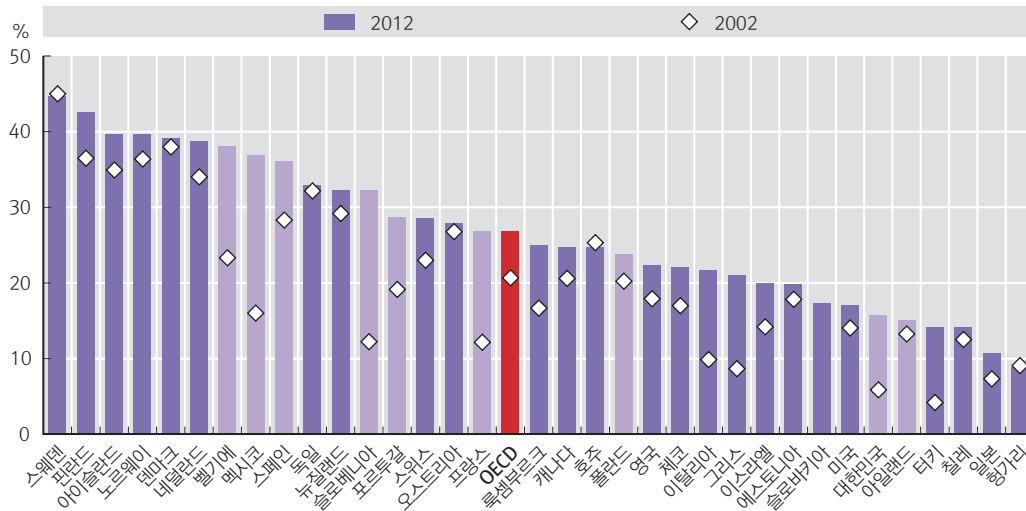
그림 설명

- 6.9: 자료는 2012년 10월 31일과 2002년 10월 25일 기록된 여성 의원 비중이다. 비율은 총 의회 의석 중 여성 의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슬로바키아의 2002년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 6.10: 자료는 2012년 1월1일과 2005년 1월 1일 부로 임명된 여성 장관들을 나타낸다. 총 합계는 부총리들과 장관들을 포함한다. 총리/정부수반 또한 장관직의 경험이 있을 경우 포함하였다. 부통령과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장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6.9. 여성 의원 비중과 입법된 성별할당제 (2012,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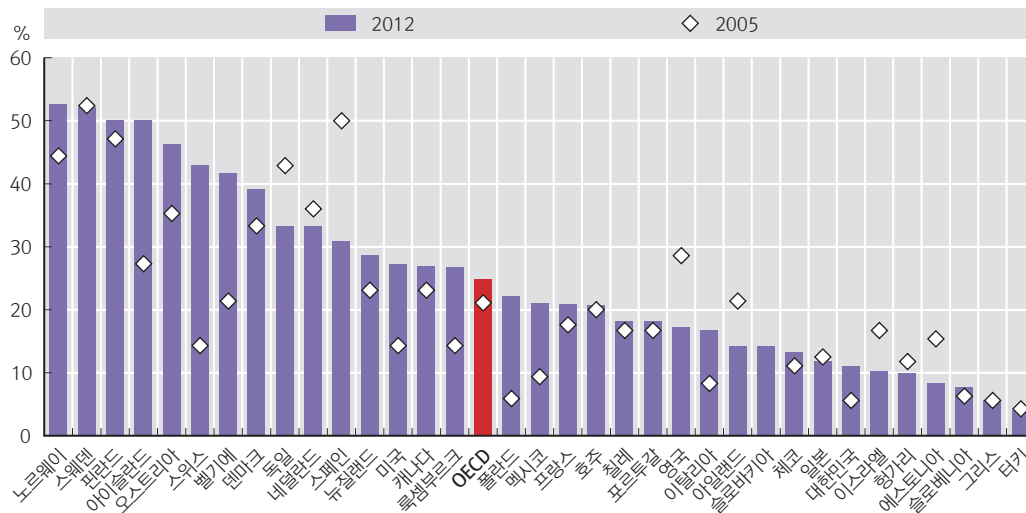
하원 혹은 단독의회



주석: 연보라색 막대는 2013년 1월 21일 부로 하원 혹은 단독의회의 입법된 후보자 할당제를 나타낸다.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and IDEA, Quota Project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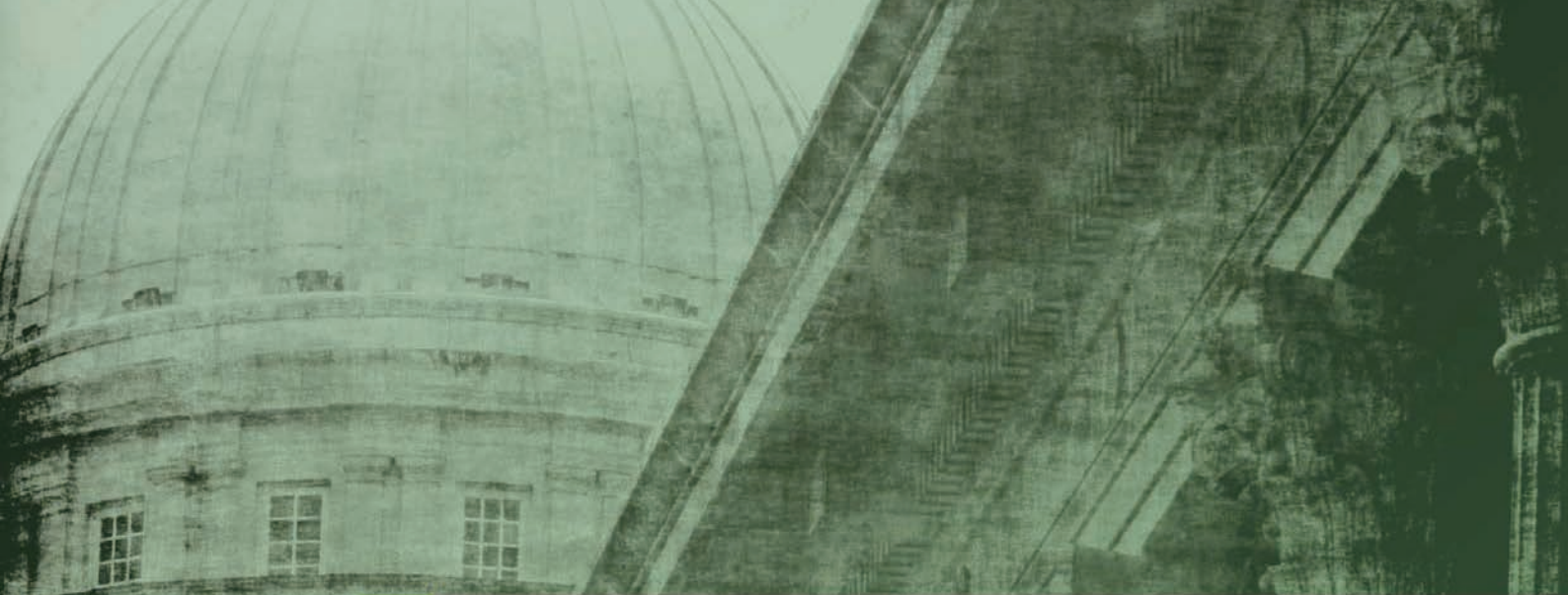
6.10. 여성 장관 비중 (2005, 2012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omen in Politics" Posters, 2012 and 2005.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716>





제7장. 공공 조달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13%이자 일반 정부지출의 29%에 해당하는 공공 조달은 매우 중요한 정부 활동이다. 이 장은 공공 조달의 추정 지출 규모를 제공하며, 공공조달이 비용대비 가치(value for money)와 지출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 목표를 추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날 OECD 회원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공공재정을 건전화하고 다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여유를 만들기 위하여 비용절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OECD 회원국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혁신적 수단을 동원하여 구매기능을 재구조화하고, 구매를 통합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왔다.

그밖에 여러 OECD 회원국에서 공공 조달 정책은 비용대비 가치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이러한 정책목표로는 혁신 촉진,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중소기업 성장 지원, 경제적 기회 균등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 조성 등이 있다. 이 장은 이러한 정책과 공공 조달에 대한 전략적 접근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부과제는 조달을 통한 다양한 목표의 조화, 조달지출과 결과에 대한 감시와 평가 강화, 그리고 조달 기능 전문화의 격차 해소일 것이다.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기업이 재화, 용역 그리고 노동을 구매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정부 총 지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반 정부조달 지출액은 총 일반 정부지출의 29%를 차지하였다(혹은 국내 총생산(GDP)의 13%).

정부조달의 소비력을 감안할 때, 공공조달 지출의 효율성의 개선을 달성하는 국가는 상당한 비용절감을 통해 경제, 사회 정책을 위한 여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의 평균으로, 효율성 개선을 통한 10% 조달지출 감소(예: 재화와 용역을 같은 바스켓을 써서 함께 조달하는 것)는 총 일반정부 지출의 2.9% 감소에 이르고, 이는 2011년도 국내 총생산(GDP)의 1.3%에 해당한다. 효율성 향상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통합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하위정부도 조달지출 효율성 개선 노력에 동참하여야 하는데, 이는 OECD 국가 평균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지출이 총 일반정부 조달 지출의 55%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방국가에게 특히 중요한데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 스위스와 미국 - 이는 그들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가 총 정부조달의 평균 76%를 지출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국가 또한 평균적으로 조달지출의 48%를 차지하는 하위정부의 노력을 돋우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저히 나타나는 국가는 이탈리아(80%), 핀란드(72%), 덴마크(69%), 일본(69%)과 스웨덴(69%)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 정부조달 지출 SNA를 기반으로 한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하여 추산하였다. 일반정부 조달의 정의는 중간소비(자체 사용을 위한 정부의 재화와 용역 구매, 예를 들어 회계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총 고정자본형(매출과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본 취득,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건설) 그리고 시장 생산자를 통한 현물 형태의 사회 보조금(일반정부의 시장 공급자가 생산하여 가구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의 총합이다. 그림 7.3은 2011년도 국내 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조달의 비율이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2773>).

여기서 정부조달은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조달 가치를 포함한다. 하위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킨다. 사회보장기여금은,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그러나 그림 7.4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각 정부단위의 정부조달은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2792>). 주정부는 9개의 OECD 연방국가에만 해당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연방국가로 간주), 스위스, 미국. 공공 기업체 또한 조달지출 추산에서 제외하였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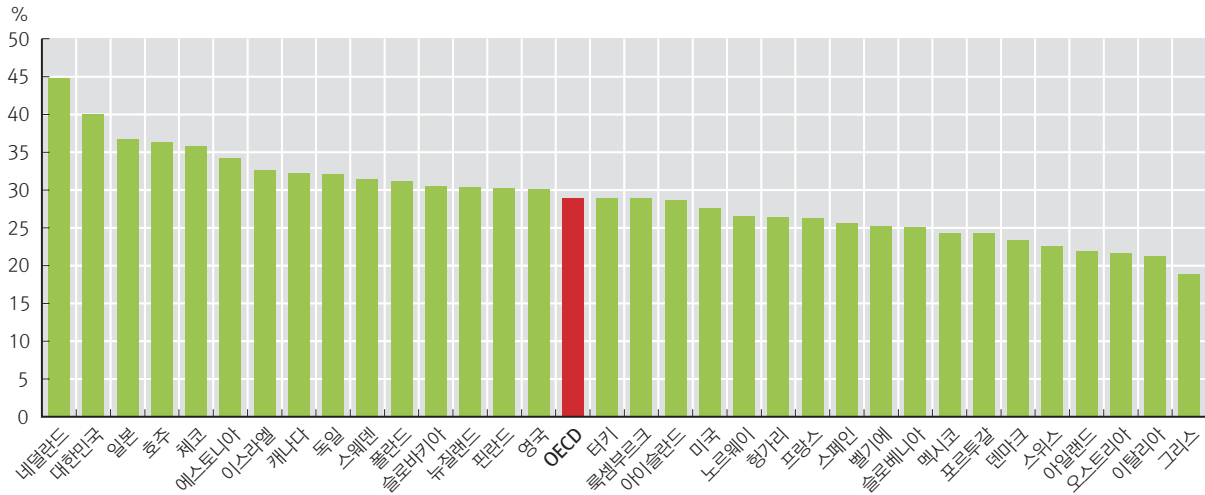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1-en.

그림 설명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와 뉴질랜드 자료는 2011년 대신 2010년의 것을 사용했다.
7.2: 호주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과 미국의 중앙정부에는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지방정부 자료는 회계연도를 가리킨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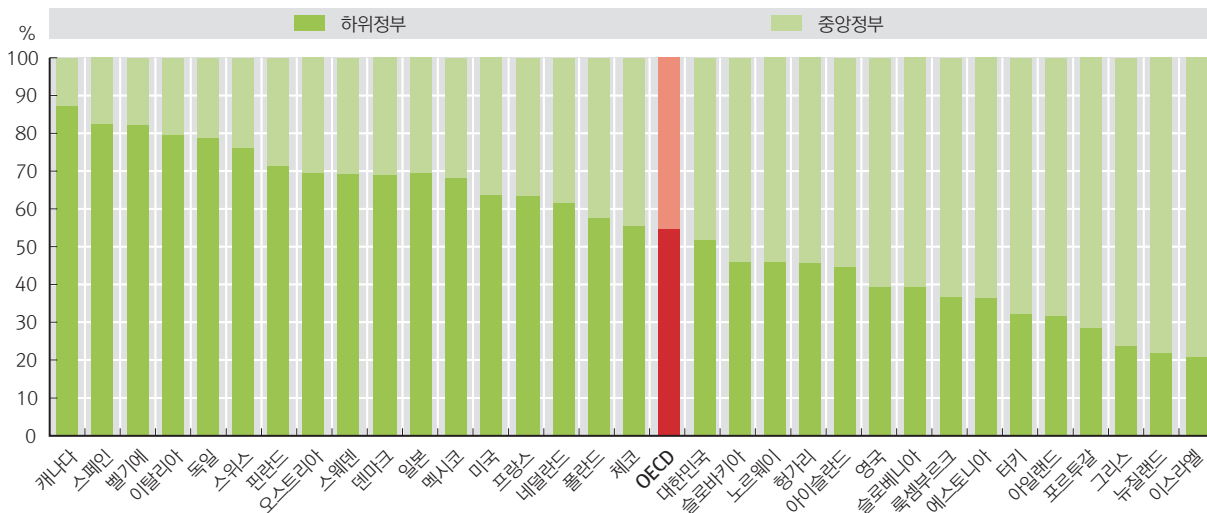
7.1. 총 일반정부 지출의 몫으로서의 일반 정부지출 비율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 자료는 정부 재정 지표(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가 제공하는 National Accounts 자료를 조합한 것을 기반으로 한다.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735>

7.2.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조달의 몫 (2011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754>

긴축상태에서 생산성을 증대 시켜야 하는 긴요한 필요에 의해 여러 OECD 회원국은 조달절차를 능률화하고 공공조달 지출에서 더 높은 비용대비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수단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전자조달 시스템, 프레임워크 계약(범 정부 공통 단가계약), 사전자격심사제도, 전자 역경매와 옵션계약 등의 수단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공공조달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조달은 공공입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증대시킬 수 있다. 더불어 전자조달 수단은 행정적 부담을 감소 시키고, 조달계약 주기를 단축하며, 법령이행수준을 높이는 등 정부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 중앙정부는 전자조달 시스템에 투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수단의 잠재적 장점 들을 아직 완전히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회원국의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이 공급자와의 양방향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의 모든 OECD 회원국(97%)이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입찰을 공고하고 있는 반면, 공급자가 전자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국은 48%에 불과하다. 2011년도에 새로운 입찰 서비스를 도입하여, 입찰 과정이 새로 개발된 보안 토큰과 애플리 케이션들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대한민국의 공공조달 시스템이 이러한 추세 의 한 가지 예외이다.

국가들은 새로운 조달절차를 통해서도 비용절감에 노력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거의 모든 OECD 회원국(94%)이 프레임워크 계약(범 정부 공통 단가계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오직 3분의 1 정도의 OECD 회원국만이 이러한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추산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역으로, 답변을 제공한 OECD 회원국 중 절반이 채 되지 않는(42%) 국가들이 전자 역경매를 일상적으로 사 한다. 이 조달 수단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는 성공에 필요한 요건과 잠재적 악영향이다. 경쟁이 증대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반면, 생산량과 수익률이 낮은 중소기업들은 경쟁이 어렵다는 점 등의 위험성도 따른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1 OECD Survey on Reporting Back on the 2008 Procurement Recommendation(29개 OECD 회원국이 답변)과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33개 OECD 회원국이 답변)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두 설문조사의 답변자는 모두 중앙정부 단위의 조달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담당자이다.

그림 7.6 에서의 전자입찰은 재화와 용역을 인터넷을 통해 그 국가 정부 당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옵션 계약은 계약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조달기관이 사전 지정된 추가적 재화나 용역을 입수할 수 있는 옵션이 있거나, 혹은 계약기간을 사전 지정된 기간 동안 연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전자 역경매는 온라인상을 통해 실시간 이루어지는 구매 기법을 의미하며, 조달 기관이 입찰 제안들 중 선택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공급자들이나 계약자들이 잇따라 낮은 값을 지정된 기간 동안 제의하는 것과 제안에 대한 자동 평가를 포함한다.

프레임워크 계약(범 정부 공통 단가계약)의 종류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달기관과 공급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특정한 조건이나 추후 계약을 주는 것을 가능케 한다. 프레임워크 계약은 2단계로 실시 된다: 첫 단계에서는, 조달 기관과의 프레임워크 계약을 위한 공급자(혹은 공급자들)와 계약자(혹은 계약자들)를 당사자(혹은 당사자들)로 선발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프레임워크 계약을 따르는 공급자 혹은 계약자 당사자에게 프레임워크 계약에 의하여 조달계약이 낙찰된다.

사전심사제는, 초기단계에 계약 이행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급자나 계약자를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더 읽어볼 것

- European Commission (2011), *Evaluation Report: Impact and Effectiveness of EU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Part 1*, Commission Staff Working Paper, SEC(2011)853 Final,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2010), *Green Paper on Expanding the Use of E-procurement in the European Union*, COM(2010)571 Final, Brussels.
-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과 표 설명

- 7.5: 그리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은 유럽연합 공공조달 웹사이트 (www.ted.europa.eu)에 조달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 운영될 예정인 전자조달 시스템의 기능을 반영한 것이다.
- 7.6: 모든 기업들은 10명이나 그 이상을 고용한다(금융부문을 제외하고).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 그리고 미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터키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을 사용하였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7.5. 중앙정부의 혁신적 조달수단 사용 (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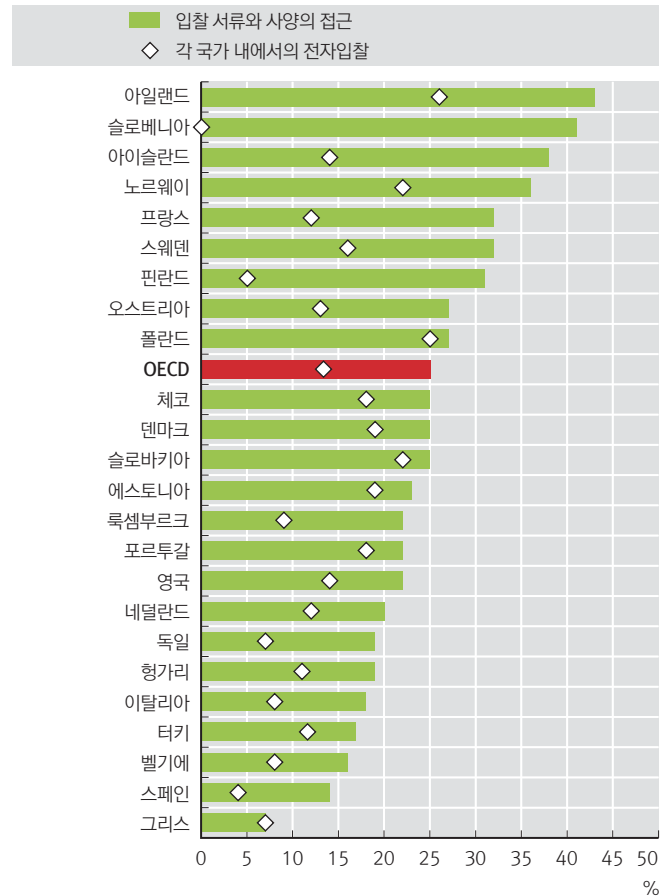
	전자조달 시스템의 기능				다른 조달수단과 방법			
	조달계획 발간 (정부수요 예상 관련)	입찰 발표	전자식 입찰제출 (이메일 제외)	전자식 송장제출 (이메일 제외)	프레임워크 계약 (범정부 공통 단가계약) 절차	옵션계약	사전심사제도	전자 역경매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대한민국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OECD 계	● 20	32	16	8	□ 22	10	10	3
	■ 8	7	13	10	◆ 9	14	15	11
	○ 10	0	6	15	◇ 2	9	8	19

- 예, 국가 중앙 전자조달 시스템에서는 그렇습니다.
- 아니오, 특정 조달기관의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그렇습니다.
- 아니오.
- 이 수단은 모든 조달기관들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 ◆ 이 수단은 몇몇의 조달기관들에서 정기적으로 사용된다.
- ◇ 이 수단은 정기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출처: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514>

7.6. 전자 조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율 (2012년)



출처: Eurosta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811>

OECD 회원국은 더 이상 가격과 품질을 공공조달의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엄격한 의미의 “비용대비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회원국은 점차 중소기업 지원, 혁신, 환경적 고려 등 보다 전략적인 목표를 포함시키고 있다.

새롭게 대두되는 정부의 당면 과제는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거의 70%의 OECD 회원국(33중 23)은 공공 조달을 사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촉진시키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이나 정책을 개발하였다.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개발한 국가 중 절반은 공공조달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무규정이 있고, 3분의 1 정도가 자발적 목표치를 조건으로 하는 임의규정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76%의 OECD 국가는 중앙 정부 차원의 녹색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전략 혹은 정책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OECD 회원국은 사회-경제적, 환경적 목표의 추구에 수반되는 기회비용을 항상 측정하지는 않는다. 그로 인해 정부가 상호 경합하는 목표(예를 들어 비용대비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이와 상치하는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마땅한 수단 이 없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그 결과, 정부는 조달에 있어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지 못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중소기업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1%의 OECD 회원국들은 중소기업에게 낙찰된 계약의 건수나 금액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 없이 효과성을 측정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추세에 따라 조달 공무원들은 점점 더 복잡해 지는 규칙을 준수하고 비용 대비 가치 목표를 추구하며, 전략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OECD 회원국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조달 시스템들의 최대 취약점은 적절한 역량의 결핍인데, 이것은 조달 공무원의 부족과 유효한 기술, 혁신, 그리고 시장발전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 부족 두 가지 모두 포함된다.

공공조달은 많은 국가에서 아직도 행정적 기능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3분의 1 이상의 국가(39%)에서 조달 공무원을 전문직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달 소속공무원을 전문 직종으로 공식적으로 인식하는 18개 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에서 조달 공무원 직무에 관한 업무해설서가 있고, 8개 국가(호주, 캐나다, 칠레, 아일랜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에서 일정한 면허장 혹은 적절한 면허 제도가 있다. 그러나 오직 5개 국가만이 조달 공무원을 위한 별도의 청령 가이드라인(예: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1 OECD Survey on Reporting Back on the 2008 Procurement Recommendation (29개 OECD 회원국 응답)과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33개 OECD 회원국 응답)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두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단위의 조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 담당자이다.

조달 공무원이 특정직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증 및 자격제도를 통한 경우, 명확한 교육과정(공식 직무/역할 해설서)을 거친 경우이거나 혹은 청령 가이드라인 (예: 조달 공무원을 위한 별도 복무규정)을 통한 경우이다.

유럽위원회는 녹색조달을 “본래 재화, 용역과 시설공사 조달의 주요 기능과 견주었을 때 그들의 생애 주기에 환경적 영향을 줄여서 정부 당국이 동일한 기능의 재화, 용역과 시설공사를 조달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1), *Making the Most of Public Investment in a Tight Fiscal Environment: Multi-level Governance Lessons from the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4470-en>.

OECD (2007),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Public Procurement: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Council Recommendation”, *OECD Papers*, Vol. 7/9, http://dx.doi.org/10.1787/oe.cd_papers-v7-art26-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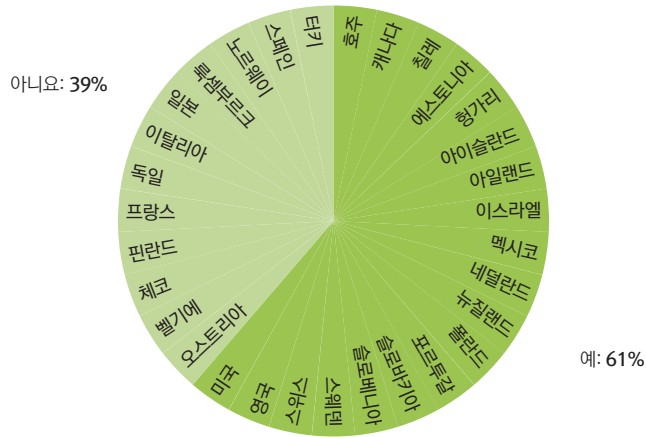
그림과 표 설명

7.7: 덴마크, 그리스와 대한민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7.8: 그리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는 정부조달 입찰하는 기관내의 성별 평등을 개선하는 조달정책을 개발하였다. 독일 응답자는 연방 단위 정부의 상황을 반영한다. 그러나, 독일 Länders가 녹색 공공조달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을 강조한다. 덴마크는 2013년도에 인텔리전트 공공조달(intelligent public procurement) 계획을 개시할 예정인데, 이는 혁신, 녹색조달,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과 같은 전략적 과제들을 다룰 것이다. 터키 자료는 Turkish Statistical Institute가 제공하였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7.7. 조달 공무원이 특정직종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년)



출처: 2011 OECD Survey on Reporting Back on the 2008 Procurement Recommendatio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830>

7.8. 사회-경제적 그리고/혹은 환경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달 정책과 계획 (2011년)

	사회-경제적 그리고/혹은 환경적 목표를 지원하고자 조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계획			사회-경제적 그리고/혹은 환경적 목표를 지원하고자 조달의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과 계획의 결과		
	부채 공요조급	중소기업	혁신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원	부채 공요조급	중소기업	혁신적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원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x	x
캐나다	●	●	●	■	■	■
칠레	□	●	□	x	■	x
체코	●	□	□	◆	x	x
덴마크	●	●	○	◇	◇	x
에스토니아	○	○	○	x	x	x
핀란드	●	□	●	■	x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헝가리	□	●	○	x	■	x
아이슬란드	●	○	○	◇	x	x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x
대한민국	●	●	●	■	■	■
룩셈부르크	□	□	○	x	x	x
멕시코	●	●	○	◇	■	x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x	x	x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x
슬로바키아	□	○	○	x	x	x
슬로베니아	●□	●□	○	■	■	x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x	x	x
스위스	●□	●	●	■	◆	■
터키	○	○	○	x	x	x
영국	●□	●□	●□	■	■	x
미국	●	●	●	■	■	■
OECD 계	● 25	23	16	■ 15	15	6
	□ 10	7	6	◆ 2	1	3
	○ 3	6	13	◆ 2	2	2
				◇ 6	5	5
				x 8	10	17

- 예, 이 계획/정책은 중앙정부 단위에서 개발되었다.
- 예, 몇몇 조달기관들이 내부정책을 개발하였다.
- 아니요, 그러한 계획/정책은 없다.
- 예, 정기적으로
- ◆ 예, 임시적으로.
- ◇ 모른다.
- ◇ 아니요.
- x 해당사항 없음.

출처: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533>

잠재적 공급자가, 특히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정부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場)을 보장하는 것은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유럽연합과 같이 국경을 뛰어넘는 통합 시장에서의 조달은 총 계약수주의 4% 미만이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쟁 입찰에서의 예외의 허용이 경쟁을 제한한다.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부양책에 의한 OECD 회원국에서의 예외의 사용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속성조달 절차 때문이다. 조달절차의 효율성은 보장하면서 경쟁을 극대화하려는 국가에게 있어서, 예외는 제한된 몇몇 상황에서만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 입찰의 예외는 남용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이는 조달의 행정적 효율을 해치게 된다.

중소기업이 세계경제와 노동시장에서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정부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낮다. 공정한 경쟁의 장(場)을 촉진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의 85%는 입찰에 참여시 비교적 불리한 중소기업에 직접적 목표를 두고 있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도입된 가장 보편적인 방안은 중소기업에 위한 교육훈련과 워크샵을 실시(OECD 회원국 58%가 도입)하는 것과 온라인 상으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자료와 안내서를 만드는 것이다. 3분의 1에 못 미치는 OECD 회원국(30%)이 입찰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1(33%)은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입법 조항 혹은 정책(예: 할당분)을 내놓았다. 이러한 특혜를 주는 국가의 예를 들자면 호주, 프랑스, 대한민국과 미국이 있다. 규제방안과 더불어, 중소기업은 오직 6%의 OECD 회원국에서만 수수료 면제와 같은 금융우대혜택(preferential financial treatment)을 받을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중앙정부단위의 공공조달에 중점을 둔 두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2011 OECD Survey on Reporting Back on Progress made since the 2008 Procurement Recommendation는 29개 OECD 회원국과 브라질, 이집트, 모로코와 러시아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덴마크, 그리스, 대한민국과 스페인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는 33개 OECD 회원국, 브라질과 콜롬비아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그리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응답자는 중앙정부 단위의 조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담당자이다. 표 7.11, 절차에 의한 중앙정부의 공공조달: 계약 수치와 가치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3571>

더 읽어볼 것

- European Commission (2010), *EU Public Procurement Legislation: Delivering Results*, Office for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Brussels.
- OECD (forthcoming), *OECD Review of the United States Federal Public Procurement*,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13, forthcoming),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9), *OECD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6527-en>.
- OECD (2008), *OECD Framework for the Evaluation of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ies and Programm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0090-en>.


그림과 표 설명

- 7.9: **체코**의 경우, 계약자는 비차별적 입찰 조건을 기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경쟁과 소비자 당국이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설립하는 데 있어 규칙과 절차 그리고 핵심 이슈에 관한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별도 방안은 없다. **핀란드**의 경우, 중앙조달기관이 입찰과정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계획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중소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공급자의 의무준수비용을 절감하는 여러 방안(예: 절차 간소화, 온라인 가이드라인과 견본 개발, 그리고 공급자와 조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워크샵의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스페인**의 경우, 공공조달의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기구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연합회와 연락을 유지하여 그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한다.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지출을 끌어올리고 납세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들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중소기업에 중점을 둔 근거 자료의 한 예는 “Winning the Contract”이며, LearnDirect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조달과정 또한 간소화 되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서는 유럽연합 기준점인 대략 영국 (£)100,000 파운드 이하의 거의 모든 조달에서의 사전심사 질문서(PQQ)의 사용을 제거하였다.
- 7.10: 벨기에와 그리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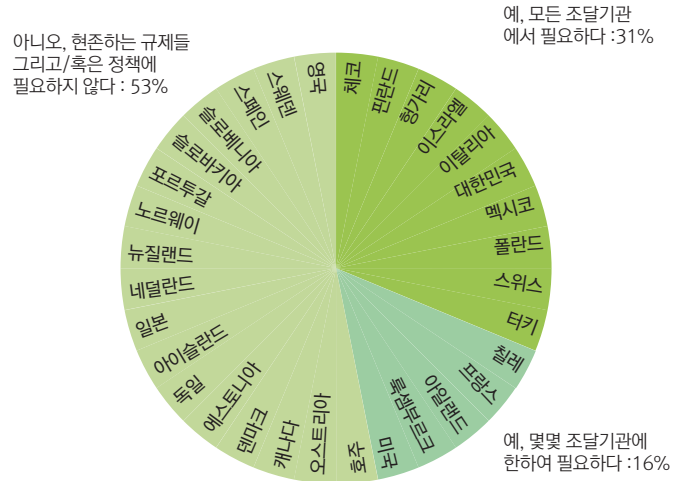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7.9. 중앙정부 공공조달에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조치방안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조항 혹은 정책 (예: set-asides)이 존재한다	중앙정부단위에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특정 기관이 존재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온라인상으로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을 집중대상으로 하는 문서 혹은 지도자료가 존재한다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다	중소기업들이 재정우대혜택을, 예 수수료면제, 받는다	해당사항 없음, 중앙정부 공공조달에서의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는 특정한 방안은 없다	기타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대한민국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OECD 계								
● 예	12	15	19	17	11	2	4	6
○ 아니오	21	18	14	16	22	31	29	27

출처: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552>

7.10. 중앙정부단위의 수의계약을 위한 예외의 사용은 사후 평가/감사가 필요하다



출처: 2012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849>





제8장.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개방성과 포괄성을 기대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와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나의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제도화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용 가능한 관련정보가 제공되고, 상호작용은 투명성, 책임성과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입안 과정은 보다 나은 정보에 입각한 정책과 시민의 요구에 더 부응하는 정책을 가능케 하는데 기여한다.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전달과 같은 부문에서의 민주주의적 참여를 강화하고, 정부신뢰를 구축하며, 생산적 책임소재 활용을 가능케 한다. 정보접근과 정보개방 정책은 개방형 정부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둥이다. 또한 개방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는 예산투명성인데, 이는 금전적 관점에서 예산은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정책목표를 수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명성이 더 많은 책임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투명함으로 인해 개방적일 수 있다. 반면, 정보개방을 하면서도 매우 불투명하고 무책임할 수도 있다. 포괄적 정책결정은 특정 정책으로 인한 여파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회의 주요 단체들에 대한 정책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공공자료 공개(OGD)

공공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광범위한 자료를 생산·수집한다. 이런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확대와 정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다. 공공자료 공개(OGD)는 또한 정부성과를 어떻게 개선하고, 책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부여한다. 또한, 공공자료 공개는 혁신적이고 대중의 요구에 수응하며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와 정책의 개발에서 의미 있는 공공참여의 기초를 제공한다. 그럼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부와 개인 양자 모두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더 나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공공자료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정부는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더 폭넓은 자료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자료 공개는 경제성장의 잠재적 자원으로 볼 수 있고, 새로운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혁신의 기반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공공자료 공개는 아직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이므로 정보공개 의 준비성과 질적인 면에서의 정부 실적에 대한 비교평가 가능여부는 장담하기 힘들다. 첫째로는, 공공자료 공개에 관한 전략과 정책은 계속 진화 중이다. 또한 공공자료 공개에 관한 생산 및 관리는 종종 지역 혹은 지방 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셋째로, 합의된 국제적 개념정의가 없다(예: 자료군(dataset)).

OECD 회원국은 공공자료 공개에 대하여 전략적 접근을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56%의 국가들이 국가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12%는 각 부처별 별도 전략이 존재하고, 28%는 국가적 전략과 부처 개별적 전략이 공존하고 있다. 오직 4%의 국가에서만 공공자료공개 전략이 없다.

공공자료공개 주요 전략 목표는 OECD 회원국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투명성과 개방성, 민간 비즈니스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가 우선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자료 공개로 인한 잠재적 서비스전달의 개선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공개 토론과 정책입안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는 우선순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주요 목표에 대한 이해는 어떤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선 공개 될 것인가를 정하는데 중요하며, 이는 각각의 목표가 다른 자료군의 공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책임소재와 투명성은 군집형 자료(aggregated data)를 공개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분화(granular)하여 특정 자료군을 공개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료에 대한 사용자의 이용가능성, 접근성과 관련성은 가치 창출의 핵심이다. 이용가능성에 관해서는 캐나다, 네덜란드, 슬로베니아와 미국이 가장 많은 자료군을 중앙관리의 “원스톱샵(one-stop shop)” 공공자료 공개 포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료군 공급에 관한 국가간 비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자료군의 적용 개념과 선택한 공표 계수의 국가간 차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앙관리의 “원스톱샵” 공공자료 공개 포털 대비 지방당국의 공공자료 공개 포털 등이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중앙/연방정부 단위의 공공부문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둔 2013 OECD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OECD 25개국과 이집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답변을 수집하였다. 응답자는 전자정부와 공공부문 자료를 담당하는 국가별 대표자이다.

공공자료 공개의 정의는 두 가지의 자료를 포함한다. 첫 번째 공공단체가 생산하였거나 위탁한 모든 자료이다. 두 번째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재사용·배포를 할 수 있는 자료 중 출처를 밝히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유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자료를 포함한다. 자료군은 수집된 자료로 간주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표의 형태로 제공된다.

정책목표는 국가 중앙/연방정부 단위에서 실행되고 있는 공공자료 공개의 정책/전략과 일치한다. 설문조사에서는 국가정책의 최고 5대 목표를 열거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다른 목표들이 정책 목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공공자료 재사용은 초기 목적(소프트웨어 개발과 보도자료와 같은)과 다른 상황의 공공정보 공개자료를 포함하며, 저작권법을 통해 금지되거나 허가 성명(licensing statements)을 통해 허용될 수 있다.

표8.3, Availability of Open Format Data on Line Ministries' Websites (2013), 는 온라인 상에서 얻을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3609>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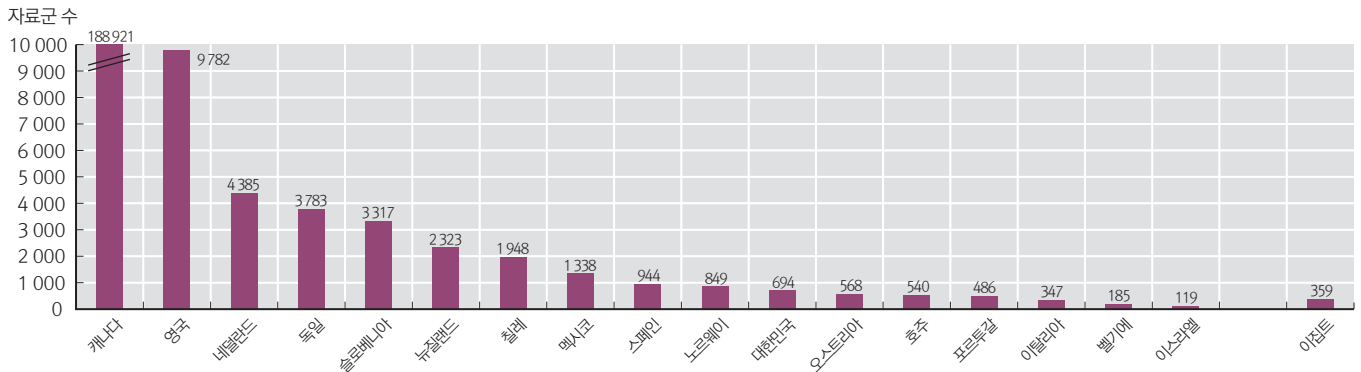
Ubaldi, B. (2013), “Open Government Data: Towards Empirical Analysis of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22,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6bj4f03s7-en>.

그림 설명

8.1: “원스톱샵” 공공자료 공개 포털이 없는 나라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 그리고 스위스, 덴마크와 프랑스. 호주 자료는 연방정부 자료 계획만을 포함한다 (<http://data.gov.au>). 스페인 자료는 중앙정부 자료 계획만을 포함한다 (<http://datos.gob.es>).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1. 중앙관리의 “원스톱샵” 공공자료 공개 포털 내에서의 자료군 수 (2013년)



출처: 2013 OECD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868>

8.2. 중앙/연방정부 공공자료 공개 계획 최고 5대 목표 (2013년)

	투명성 증가	공개 수준 증가	결과/산출량에 대한 책임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 성과 증가	내부작업과 협력 개선을 통한 공공 서비스 전달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	자료 재사용을 통한 민간부문의 전담 가능케 하여 공공 서비스 전달 효율성과 효과성 증가	공공부문 경제적 가치 창출	민간부문 경제적 가치 창출 / 공공부문 사업활동량 증가	새로운 사업 창출 가능	공개 토론회에서 시민참여 가능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 가능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대한민국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x	x	x	x	x	x	x	x	x	x
영국	●	○	●	●	○	○	●	○	○	●
이집트	x	x	x	x	x	x	x	x	x	x
러시아	●	●	○	○	○	●	○	●	●	○
우크라이나	●	○	○	●	○	●	●	○	●	○
OECD 계	17	16	11	14	13	0	16	15	7	7

● 예
○ 아니요

출처: 2013 OECD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590>

이해관계 및 재산공개

공개적이고 공정한 공공정책입안에 대한 기대의 증가는 특히 금융경제위기 이후 사익에 의해 공식 결정사항이 부적절하게 영향 받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압력을 정부에 가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 민간, 그리고 비영리부문 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은 정책입안자와 공공관리자가 이런 일들을 청렴하게 처리하는데 있어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정부 의사결정의 청렴성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잠재적으로 자신의 공무성과 타협하게 되면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적절히 식별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익충돌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과도하게 엄격한 방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실행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력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유능한 신규 후보자들이 공직에 들어오거나 공무원이 되는 것을 단념시킬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자산과 사익에 대한 공개는 지속적인 이익충돌 문제의 핵심 관리수단이다. 그림 8.4는 3개의 정부 주체(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공개 수준과 공개자료의 공공 이용도의 합계를 나타낸다. 공개 수준은 최고 의사결정자의 자산, 부채, 소득원과 액수, 외부 유급 및 무급 직무, 선물 그리고 전직과 같은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는가 여부로 결정된다.

최고 의사결정자의 재산과 사익 공개는 OECD 국가들에서 흔한 관행이지만, 3개 정부 주체 내에서의 공개 수준은 차이가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개 관행도가 사법부보다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체코, 프랑스, 룩셈부르크, 그리고 뉴질랜드의 법관은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에서는, 3개 정부주체 중 어디에서도 의사결정권자에게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들은 포함된 사익의 내용 중 국가들은 외부 유급 직무와 선물 수령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의사결정권자의 공개자료에 대한 공공의 이용도 또한 OECD 회원국 간 많은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의 일부분만이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국가에서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자산과 소득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전직과 부채는 몇몇 국가에서만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공개 서류에 의하면, 공개 자격요건을 갖춘 OECD 국가의 80%를 살짝 웃도는 숫자가 공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8.5). 그러나, 절반 미만이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였다. 공개 서류의 수집 이후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나라들은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와 터키이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경우, 거의 모든 공개 자료를 대중들이 열람가능하며 이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정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 것이며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연방 정부의 청렴성 정책을 담당하는 각국의 담당대표자이다.

“공무원”의 정의는 한 국가의 입법부, 집행부, 행정부, 또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데, 이는 임명되었거나 선출된, 정규적이거나 임시직, 유급이거나 무급인 사람이 직위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는 공공기관 혹은 공기업, 혹은 해당 국가의 국내법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의사결정권자는, “행정부”는 대통령, 총리, 장관과 국무위원을 포함한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입법자를 포함한다. “사법부”는 법관과 검사를 포함한다.

특정 국가 자료의 합계를 계산할 때, 모든 사익과 지위는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따라서 동일한 비중을 배정하였다. 부록 E는 이익충돌의 공개에 관한 상세자료를 제공한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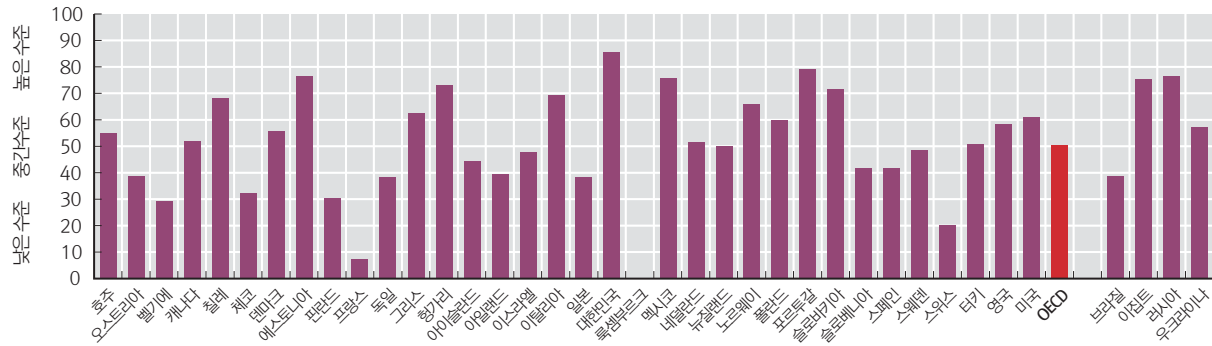
- OECD (2010), *Post-Public Employment: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6701-en>.
- OECD (2007),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Report on Implementation*,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Publishing, Paris.

그림과 표 설명

- 8.4: 브라질, 체코, 그리스, 이스라엘과 러시아 자료는 2012년도 대신 2010년 것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회원국의 관행 사항을 반영하였다. 부록 E에 각 국가에 대한 자료와 설명이 사용 가능하다.
- 8.5: 체코, 그리스와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와 미국의 정보는 정부의 행정부에 한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4. 자산 공개: 사익과 대중에게 제공된 정보 공개의 수준 (2012년)



출처: 2012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887>

8.5. 공무원의 사익 공개 관련 조치사항 (2012년)

	공개 형식서가 제출 되었음을 확인	모든 필요 정보가 제공되었음을 검토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내부 감사
호주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캐나다	●	●	○
칠레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헝가리	●	○	○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일본	○	●	●
대한민국	●	●	●
룩셈부르크	x	x	x
멕시코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키	○	○	○
영국	●	●	●
미국	●	●	○
이집트	●	●	○
우크라이나	□	□	○
OECD 계			
● 모든 해당자에 한하여 공개 형식서 제출을 위한 절차 시행	25	19	6
□ 몇몇 해당자에 한하여 공개 형식서 제출을 위한 절차 시행	0	4	8
○ 절차가 시행되지 않음	5	7	16

출처: 2012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628>

예산 투명성

국가예산은 정부의 주된 정책문서 중 하나로, 정부의 정책목표와 지출 우선 순위를 반영한다. 예산 투명성은 - 주요 재정과 예산 정보의 개방과 접근성 - 그러므로 적절한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경제적·사회적 위기로 더 높은 예산 투명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열린 정부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는 정부 예산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보의 질, 청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시민들과 입법부에게 알려주고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대중이 열람할 수 있으면서 포괄적인 예산 기록은 대중이 재정 정책과 정부의 우선순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산공개는 재정규율, 효과적인 자원배분, 그리고 운영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현실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예산을 산출하고, 계획된 정책방안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예산문건 내에서의 정보열람 가능성이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투명성은 시민, 입법자와 시민단체가 예산정보를 활용하여 정부가 더 개선된 예산 결과를 반영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 투명성은 정부 신뢰에도 기여한다.

투명성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행정부의 예산이 예산의 틀, 정부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제공되는 정보의 수량과 유형에 있어서 국가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재정정책의 목표, 거시경제적 가정, 그리고 중기적 관점(MTEF 관련 지표 참고)은 OECD 회원국의 예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조세지출, 성과정보와 장기적 재정목표를 포함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주장하건대, 재정목표와 적자 혹은 흑자 추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요소로는 허술한 거시경제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95% 정도가 중기적 재정정책의 목표와 예산안 그리고 승인된 예산을 대중에게 공람 가능하도록 한다. 예산의 혹은 추가예산 지출의 투명성도 중요한데, 이는 이러한 지정사항을 결산서에서 제외하려는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산외 지출은 사회보장기금(13개 국가), 의료보장기금(10개 국가), 그리고 대출담보(9개 국가)이다. 예외는 있지만(표 8.8. 참고), 대다수의 이들 국가는 이러한 지출을 예산에 포함한다.

정부재정과 예산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또한 복잡적일 수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을 의도치 않게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비전문가인 대중에게 전문적 용어와 입법부에 제출한 예산정보의 양은 그들을 위축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예산 밖의 활동의 역할과 범위로 인하여 혼

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몇몇 OECD 회원국들(14)은 시민을 위해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과 기술적 용어의 정의를 포함한 예산요약문서를 출판하는데, 이는 입법부에 제출하는 연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문건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 것이며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의 질문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별 답변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주로 OECD 회원국의 고위 재정관료이다. 답변은 국가의 현행 관행과 절차에 관한 자체적 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연방 정부만을 가리키며, 주/지방 단위의 예산 관행은 제외하였다.

예산외 기금은 정부소속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기금이며 목적세와 국세로부터의 수수료와 기여금과 같은 형태로, 추가 세원 수익으로 총당되기도 한다. 목적세는 수수료와는 별개로, 수익으로부터 총당되는 서비스의 시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특히,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이는 더 낮거나 높을 수 있다.

여기서 시민을 위한 예산 가이드는 입법부에 제출되는 것과 동일한 연도별 예산 제안의 주요 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요약본을 가리킨다. 이것은 연도별 예산제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상하는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갖추어져 있는 문건이다. 더욱 구체적인 문건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되, 이 가이드는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 조화하거나 그 내용을 인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8.8, 예산문건의 예산외지출 포함은,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다. <http://dx.doi.org/10.1787/888932943666>

더 읽어볼 것

- IMF (2001, 2007), *Manual on Fiscal Transparency*,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OECD (2013, forthcoming),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Paris.
- OECD (2002), “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 1/3, pp. 7-14, <http://dx.doi.org/10.1787/budget-v1-art14-en>.

그림과 표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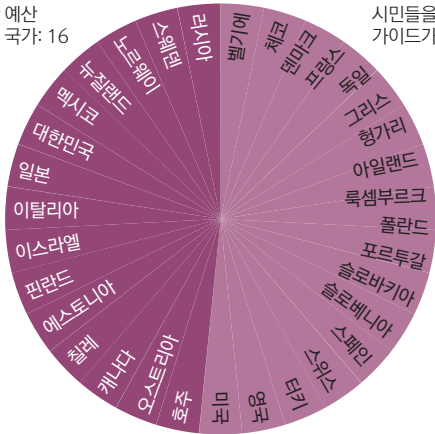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6. OECD 국가들의 시민을 위한 예산가이드 (2012년)

시민들을 위한 예산 가이드가 있는 국가: 16

시민들을 위한 예산 가이드가 없는 국가: 18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906>

8.7. 대중에게 공개되는 예산정보

중기적 국가 재정 목표	예산 계획서	승인된 예산	재정적 예측에 관한 방법론과 경제적 가정 사항	재정 그리고/혹은 거시적 경제모델의 민감도 분석	순환적 예산	독립적 (회계)감사/분석	예산 사전 보고서	총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기적 관점	
호주	●	●	●	●	○	○	x	●	
오스트리아	●	●	●	●	○	○	●	x	●
벨기에	●	●	●	●	x	●	●	x	x
캐나다	●	●	●	●	●	x	●	x	●
칠레	●	●	●	●	○	●	x	●	x
체코	●	●	●	●	●	○	●	x	○
덴마크	●	●	●	●	○	○	○	x	x
에스토니아	●	●	●	●	●	○	○	●	x
핀란드	●	●	●	●	○	●	x	x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x	●
그리스	●	●	x	○	x	○	x	●	x
헝가리	●	●	●	●	○	●	○	○	x
아일랜드	●	●	●	●	●	●	●	●	x
이스라엘	●	●	●	●	○	○	○	●	x
이탈리아	x	●	●	●	●	●	●	x	x
일본	●	●	●	●	●	●	x	●	●
대한민국	●	●	●	○	○	●	●	x	x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x	●	x
네덜란드	●	●	●	●	●	○	●	x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x	x
폴란드	●	●	●	●	●	○	x	x	x
포르투갈	●	●	●	○	●	●	●	●	x
슬로바키아	●	●	●	○	○	●	●	x	x
슬로베니아	○	●	●	●	●	●	x	○	●
스페인	●	●	●	○	○	●	●	○	x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	●	●	●	○	x	x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x	●	●	●
미국	●	●	●	●	●	●	x	x	●
러시아	●	●	●	●	●	●	●	●	●
OECD 계									
● 대중에게 공개	31	32	32	27	20	17	16	14	14
○ 대중에게 비공개	1	0	0	6	11	14	9	3	3
x 해당사항 없음	1	1	1	0	2	2	8	16	16

출처: 2012 OECD Survey on Budgeting Practices and Procedur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647>

포용적 정책결정

개방적이며 포괄적(inclusive)인 정책결정이라 함은 가능한 한 폭넓은 시민 층에게 투명하면서, 증거를 근거로 하고, 접근 가능하며, 대응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을 정책결정 과정에 아우른다. 성공적인 포괄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입안 및 전달의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 한다. 포괄적 정책결정은 투명성, 책임과 공공참여를 높이고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는 정부가 구체적 정책결과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 시민사회 단체들, 기업체들과 그 외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정책 결과물을 개선하는 길을 제공한다.

성별영향평가(GIA)는 정책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성별관련기준에 의해 새로운 법안이나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정책선택으로 인한 남녀간 잠재적 영향의 차이에 관하여 정책입안자 간의 인식과 이해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 정책결정의 핵심이다. 그러나, 외견상 성별 중립적인 정책결정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의도했든 아니든,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직업을 얻거나,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거나, 가정의 요구를 충족하고, 인권을 확립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픈 아동을 돌보기 위한 양친 모두의 휴가를 허용하는 근무환경규정은 주된 부양 부담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사전(예: 법안 제안되기 전 혹은 정책이 승인되거나 실행되기 전) 그리고 사후(예: 시행 이후)로 실행될 수 있다. OECD Survey on Gender Public Policies and Leadership에 의하면, 사전 평가가 더 흔하다. 예를 들어, 답변에 응한 OECD 국가 중, 37%(7개 국가)가 기본적 입법에 관한 사후 성별영향평가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84%(16개 국가)가 사전적 성별영향평가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결정의 일상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의 답변에 응한 국가에서는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보다는 기본적 그리고 2차적 입법을 위한 것이었다.

성인지 예산(GRB)은 알려져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최고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주기의 모든 단계에 성별적 관점을 부가한다: 이것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는 예산(gender-blind spending)"을 방지하고, 성별 불균형적 지출 처분으로 인한 결과를 식별하여 정부 프로그램의 효과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답변에 응한 국가 중 절반을 살짝 웃도는 국가들(10)이 성인지 예산분석을 위한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대한민국,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이 중앙/연방 예산에서 이러한 평가를 항상 실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중 시민에게 공개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민의 참여가 있다. OECD Guide-lines on Open and Inclusive Policy Making는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기회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부여되어야 하며, 그들과 협의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최대한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한 모든 타당한 노력은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OECD 국가의 정부는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협의를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는 국가간 큰 차이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유럽연합 국가의 시민 입장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은 낮은 추세이다. Eurostat의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시민의 10% 이하가 사회 혹은 정치적 문제(예: 도시계획, 청원서 서명)에 대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의 협의 혹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온라인 도구를 협의 혹은 투표에 사용하는 경향은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높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2년도 것이며 2011 OECD Survey on Gender Public Policies and Leadership 질문의 답변을 기초로 하였다. 답변자는 대개 OECD 회원국의 고위 예산 담당 공무원이었다. 답변은 국가의 현행 관행과 절차에 관한 자체적 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연방 정부만을 가리킨다.

시민과 민간기업에 관한 지표는 Eurostat의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는데, 이는 사회 혹은 정치적 문제(예: 도시계획, 청원서 서명)에 대하여 인터넷을 사용하여 온라인상의 협의 혹은 투표를 하는 시민과 민간기업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다. 자료는 Eurostat의 민간기업의 정보통신기술 사용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가계와 개인의 ICT 사용에 관한 지역사회 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통계청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더 읽어볼 것

-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 OECD (2009), *Focus on Citizens: Public Engagement for Better Policy and Services*, OECD Studies on Public Engag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8874-en>.

그림과 표 설명

- 8.9: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터키, 영국과 미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 8.10: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터키와 미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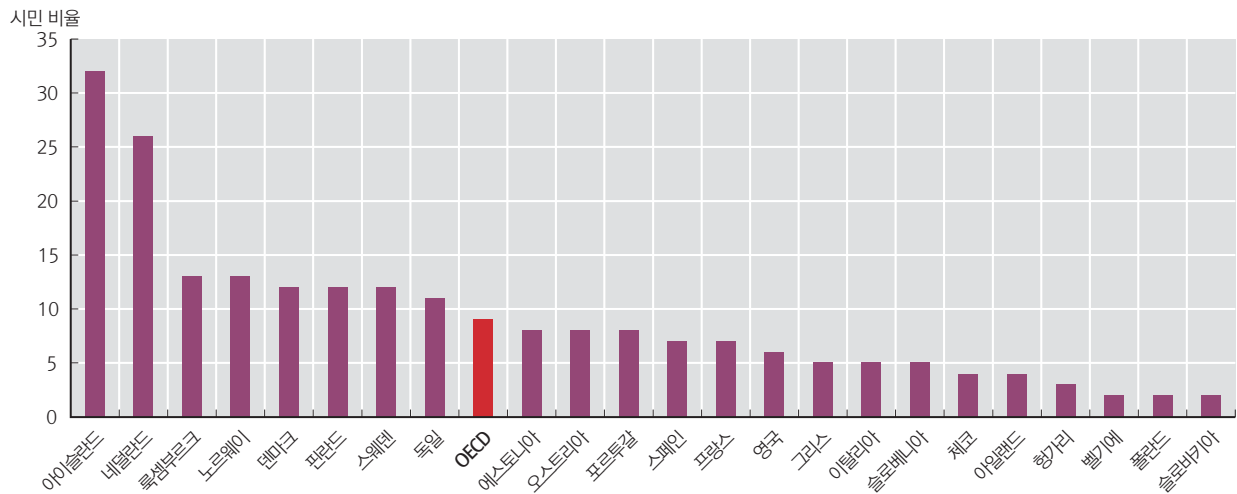
8.9. 중앙/연방 단위 정부의 성별영향평가 요구조건 (2011년)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부처/부서/기관 요구조건 (사전)			성별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부처/부서/기관 요구조건 (사후)			중앙 단위의 성인지 예산분석을 실행하기 위한 요구조건
	기본적 입법	이에 수반된 규제	정부 프로그램과 계획	기본적 입법	이에 수반된 규제	정부 프로그램과 계획	
호주	◇	◇	■	◇	◇	◇	◇
벨기에	○	○	■	○	○	○	●
칠레	■	■	■	◇	◇	◇	○
체코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대한민국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멕시코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OECD 계							
● 예, 항상	10	6	3	3	3	2	9
■ 예, 가끔	6	5	11	4	4	6	1
○ 아니오, 그러나 계획 존재	2	2	1	3	4	3	2
◇ 아니오, 그러나 계획 존재하지 않음	1	6	4	9	8	8	7

출처: 2011 OECD Survey on National Gender Frameworks, Gender Public Policies and Leadership.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685>

8.10. 온라인 협의 혹은 투표에 참여한 개인의 백분율



출처: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925>





제9장. 특집 - 대시민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OECD 회원국 정부들은 다양한 개별적 수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질의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가능한 한 넓은 범위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공공서비스와 성과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드백을 측정하고 서비스 전달과정에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수행하고 있다.

몇 가지 동기들이 보다 더 시민중심적인 전략을 향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고 박식한 시민들의 경우 정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성과로, 그 중에서도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여, 판단한다. 실제로, 정부기관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얻는 시민들의 경험과 그들이 받는 대우, 재화, 서비스 등에 대한 그들의 만족도가 정부기관의 능력 및 공정성에 대한 그들의 인지와 그들이 지불한 수수료나 세금으로부터 돈에 합당한 가치를 받는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다가, 긴축 재정시기에도, 서비스 질의 측정은 해당 서비스에 관한 예산을 축소할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며, 정부 부서나 조직체가 시민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없이도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지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역시 필수적이다.

제9장은 국가간뿐만 아니라 핵심 공공서비스(교육, 보건, 사법과 조세행정)분야들에서도 서비스 질에 대한 다양한 차원을 비교하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 여기서는 접근성과 질의 몇 가지 차원들에 따른 시민중심의 지표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있다: 비용감당능력(affordability), 온라인채널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of online channels), 시기적절성(timeliness), 신뢰성(reliability).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인지기관 자료들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들의 각각은 몇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자와의 지리적 근접성부터 전달통로나 설비를 다양한 필요에 따라 수용까지 몇 가지 요소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는 자료의 가용성과 회원국간 비교가능성에 기초하여 선택된 지표들의 하위집합(subset)만 제시한다.

제9장. 특집-대시민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비용충당능력

교육, 보건, 사법과 같은 기본적 공공 재화와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의도된 수령인들이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지에 현저하게 의존한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정부의 성과기준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필요들의 다양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전달 및 의사소통 채널을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게 창조하고 재단하는 능력, 그리고 전달과 배분에 있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

접근에 대한 장애물들은 몇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지리적 거리,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시설, 불충분한 숫자의 전달채널(인터넷, 전화, 인편 등), 부족한 정보 혹은 복잡한 용어의 사용, 비원어민을 위한 통역의 부족, 불편한 이용시간,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포함된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공공 서비스들의 적격성 및 존재여부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거나 잠재적 수령인들을 단념시킬 수 있다. 소득 대비 재화 및 서비스 구매의 경제적 비용인 비용감당능력은 접근에 대한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금전적 접근성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가 소비될지 아닐지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들은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 또는 다른 취약 계층들이 기본적 서비스를 누릴 여유가 있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고 공공서비스 공급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장려하는 노력을 통해 형평성과 복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자들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를 소비하거나 경쟁을 감소시키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자의 숫자를 줄이고 질적 개선을 향한 인센티브를 감소시킨다.

보건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이 서비스의 핵심영역들로 보편적인 건강보험보장을 제공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특정 서비스와 치료에 있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들은 어떤 시민들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나 병원 치료를 단념하거나 지연하도록 이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이 감소되거나, 더 늦은 단계에 가서는 더욱 비용이 발생하는 병원입원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 게다가, 보건서비스가 더 필요한 시민들에게 이런 비용의 일부를 면제해 주거나 지출총액에 상한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비용의 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최종 가계소비의 몫으로서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OECD 회원국들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다.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영국 등에서 최종 가계소비의 1.5%에 해당하지만, 칠레, 대한민국, 멕시코, 포르투갈(그림 9.1)에서는 4% 이상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의 소득계층별 분포이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저소득층의 보건 접근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

의 직접 부담을 면제해주거나 상한을 둔다.

사법

시민들 또한 법률시스템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때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직면한다. 어떤 사람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 법정 대리인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는 필요한 금전적 자원이 없는 사람들도라도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법적 지원란 무상 또는 국선 법정 대리인, 법률상담, 수수료 면제 등의 형식일 수를 댈 수 있다. 법적 지원을 받는 재판들의 비율은 공적 자금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지표가 된다. 이러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11개의 OECD 회원국 중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4개 국가에서 시민들이 제1심 재판의 10% 이상에서 법적 지원을 받았다. 그 나머지 나라들에서는 제1심 재판의 6% 이하가 법적 지원을 받았다(그림 9.2). 오스트리아와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다투어지지 않은 1심 사건의 경우에 법적 구조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기에, 이는 국가 지원 혜택을 받는 재판의 비율은 잠재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교육

직접비용 이외에도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하는 데에 직면하는 간접적 비용들이 있다. 예를 들면, 등록금뿐 아니라, 시민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기로 결정할 때 생활비뿐만 아니라 교육받는 동안 포기해야 하는 잠재적 소득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칠레,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 5개 국가들의 공공 제3차 교육기관들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의 14%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부과하였다(그림 9.3). 호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등 5개 국가에서 입학금은 1인당 가처분 소득의 3%에서 7%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시민들의 소득에 확연히 적은 부담을 주었다. 덴마크, 핀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국가들에서 공공 제3차 교육기관들은 수업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10개 국가들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들 국가들은 평균이상의 등록금을 부과하는 6개 국가 중 5개 국가들(호주, 칠레, 뉴질랜드, 영국, 미국), 1인당 가처분 소득 대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한 나라(네덜란드), 등록금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을 포함하였다. 평균적으로 이들 국가들에서는, 관련 연령집단에 속하는 약 71%의 시민들이 대학 교육에 입학하였다. 재정적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절반 이하인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45%의 관련 연령집단에 속하는 시민들이 대학 교육을 시작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신이 부담하는 지불에 관한 자료들은 OECD 보건통계 2013에서 추출하였다. 자신이 부담하는 지불이란 공적 혹은 사적 보험 중 어느 것으로도 보건에 관한 재화와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다. 이에 비용분담과 민간 가계가 직접 지불하는 기타 지출이 포함되며 어떤 국가의 경우는 의료인들에게 비공식으로 지불한 비용 추정액도 포함한다. 의료비를 위한 지출(즉, 장기치료 보건 분야에 지출을 덜기 위한 현재의 보건비)만이 여기서 제시되었는데, 사적인 장기치료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국가들의 능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법적 지원과 제1심 재판에 관한 자료들은 사법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법시스템 평가에서 추출하였다. 법적 지원은 법정 대리인에 대한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공적 기금으로 받는 재판을 말한다. 이는 또한 무상 법률상담 또는 특정 수수료 면제를 받았던 재판을 포함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은 국가별로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각 개인 유형들에서부터 자격을 갖춘 사건 종류들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재판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추정치에 대한 자료는 세계은행 그룹의 Doing Business(데이터베이스)에서 획득하였다. 비용은 1인당 소득의 200% 정도로 가정한 비용청구의 백분율로 나타냈다. 뇌물은 기록되지 않았다. 재판 비용, 집행비용, 평균 변호사비용 등 3가지 유형의 비용이 기록되었다.

A유형 대학수준교육에 등록금, 재정적 지원, 입학률에 관한 자료들은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 2013: OECD 지표(OECD, 2013)에서 추출하였다. 등록금은 2010-11학년도 동안에 공공기관에 속하는 A유형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만을 포함한다(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USD). 조정된 가처분 소득은, 정부보조에 의해서 조정된 한 단위가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 없이 소비 재화나 서비스에 사용할 형편이 있는 최대량으로 정의한다. 입학률은 한 연령 집단에서 최초로 A유형의 대학수준 교육에 입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백분율을 추정하였다.

더 읽어볼 것

CEPEJ (2012), *European Judicial Systems – Edition 2012 – Efficiency and Quality of Justic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OECD (2013a),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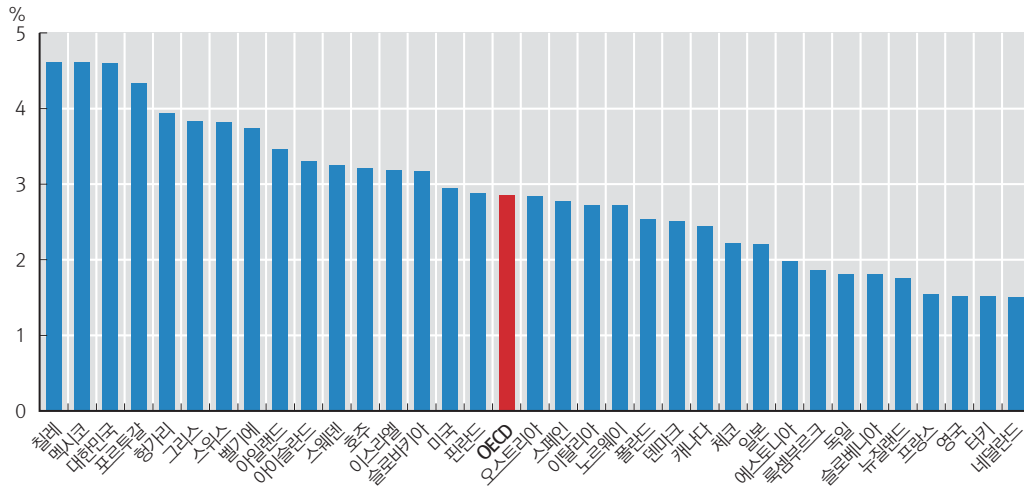
OECD (2013b,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 9.1: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자료는 2010년의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9년, 터키는 2008년이다.
- 9.2: 형사 이외의 재판만을 나타내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자료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은 형사재판 및 형사 이외의 재판 자료이다.
- 9.3: 미국의 경우, 입학률과 공적인 대출·장학금을 받는 학생(풀 타임 내국인 학생과 풀 타임 외국인 학생)의 비율에 관한 수치는 모든 학생들이 보고했으며, 입학률 자료는 A유형과 B유형 프로그램 양자모두를 포함한다. 프랑스의 경우, USD 200부터 USD 1402까지 이르는 대학 프로그램의 평균 등록금은 교육부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등록금은 공공기관의 것을 나타내지만, 3분의 2이상의 학생들이 사립기관에 등록되어 있다. 칠레의 경우, 공공기관만 고려한다면, 공적 대출 혹은 장학금/보조금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68%이다. 대출/장학금에 대한 자료 같은 경우, 호주의 자료는 외국학생들은 제외되어 있다. 멕시코와 영국의 자료는 2008-2009학년도를 나타낸다. 덴마크,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 미국의 자료는 오직 국립대학교만 포함되어있으며, 프랑스는 제3차 및 B유형도 포함되어 있다. 더 깊이 있는 설명을 위해서는 부록 3의 한 눈에 보는 교육지표 2013(OECD, 2013)을 참조하라(www.oecd.org/edu/eag.htm).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9.1. 최종 가계소비의 비율로서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지출
(2011년 혹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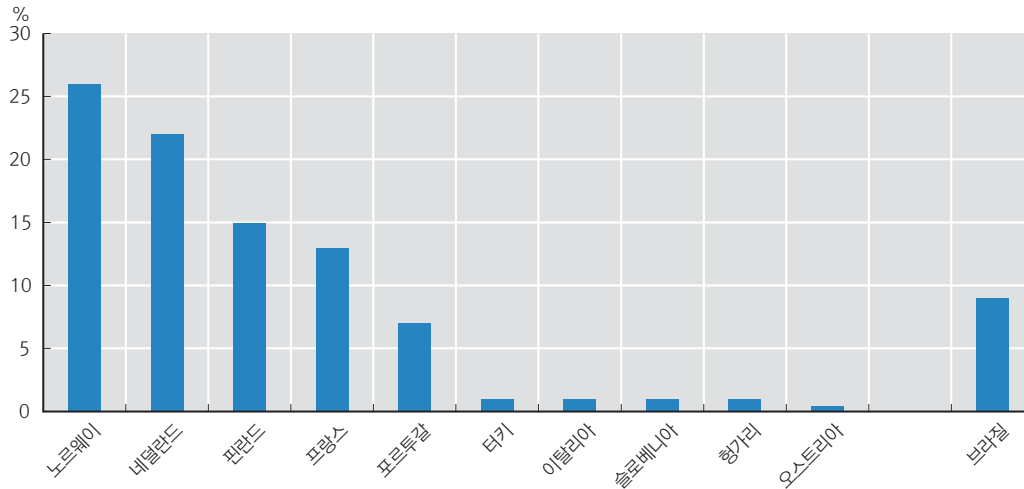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3.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944>

9.2. 법적 지원이 승인된 판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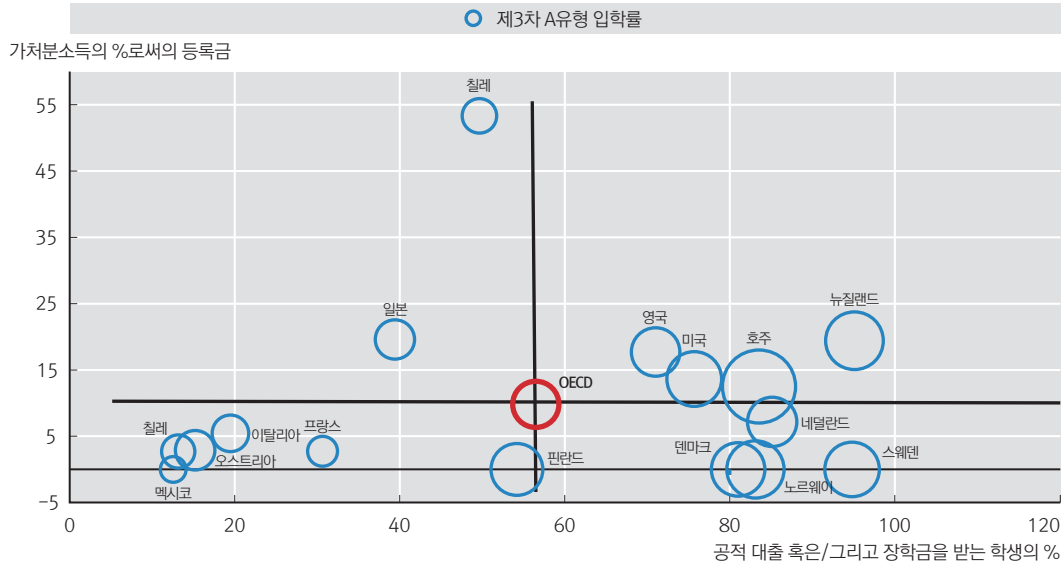
제1심 재판의 비율



출처: CEPEJ (2012), European Judicial Systems (database). OECD calculations based on questions 91, 94, 97, 98, 99 and 100. Data from Brazil provided by the national authorities.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963>

9.3. 등록금과 재정적 지원(2010-11)



출처: OECD (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3-en> (Tables B5.1, B5.2 and C3.1a); and OECD (2013),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3,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3-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2982>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

시민들과 민간기업들이 정부와 상호작용하고 공공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디지털채널에 대한 선호와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채널은 더 넓은 범위의 사용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반면, 정부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들의 비용을 줄여준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채널의 도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많은 OECD 회원국들에서는 활용에 있어서 몇 가지 종류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이들 국가의 온라인서비스의 활용은 더욱 제한적이다. 정부는 온라인서비스의 공급을 여전히 개발시켜가면서도 이러한 격차들은 줄여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민간기업들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활용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공은 민간기업들의 시간을 절약하고 관리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써 ICT를 자신들의 운영상에 적용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민간기업들은 시민들보다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태세가 더 많이 되어있다고 간주되기에, 각 국은 온라인 거래를 선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이미 높은 온라인 활용률을 더욱 증가시키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 중 아이슬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는, 비록 행정절차상 전자거래와 같은 분야에서는 완전한 거래서비스의 사용을 조사할 때 다른 추세가 드러날지라도, 공공 기관당국과의 일반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다. 회원국들 중에, 가장 높은 나라들은 호주, 프랑스, 슬로베니아이다. 국가별 법률,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위한 자격요건의 차이,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중개자의 사용 등은 국가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대기업들(직원 250명 이상)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자정부 활용도를 보이지만, 그들은 평균적으로 OECD 전체의 총 기업체수의 1% 미만에 해당한다. 중소기업들(직원 50-249명)은 대기업의 활용도에 근접하지만, 대기업과 소기업(직원 10-49명) 간에 상당한 격차가 난다. 호주, 헝가리, 이탈리아, 대한민국,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대기업 및 소기업간의 활용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활용도가 늘어나는 것은 두 배의 혜택이 발생한다. 공공 서비스 전달을 위한 온라인 채널의 민간기업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정부의 지출 감소에 도움이 된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기업들과의 디지털 상호작용이 완전히 의무화될 수 있는 영역들(예를 들면, 부가세 부과, 허가 혹은 등록)을 계속 증가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공공서비스의 활용도가 더 작은 기업에서는 낮은 반면, 소기업들은 여전히 OECD 회원국들의 성장의 중요한 견인차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보면 인터넷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접근성 및 ICT 능력 향상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시민들의 온라인 공공서비스 활용

민간기업들과 비교하여, 시민들은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때 온라인채널을 덜 활용한다. 이 분야는 북유럽국가들이 선도하는데, 정부와의 일반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양식에 내용을 채워 보내는 등 더욱 고차원적인 행위에서도 그러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 또한 시민들이 공공 관계당국에게 양식을 채워 보내는 데 인터넷을 높게 활용한다.

전자정부를 사용하는 시민의 평균비율은 나이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공 관계당국과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연령층은 25-34세까지의 사람들이다. 16-24세에 해당하는 젊은 연령층과 비교하면, 전자정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청년 격차(youth gap)”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원인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6-24세는 가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세금신고 등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들은 가장 낮은 연령층에는 관계가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 반면, 유권자 등록, 운전면허, 혜택 요구, 교육, 직업선택과 같은 이슈들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 관계당국의 처리가 요구되며, 이는 젊은 세대들이 사실상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과제(challenge)이다.

연로한 시민들 역시 공공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인터넷 채널을 활용할 가능성이 더 적다. 많은 국가들에서 25-34세까지와 65-74세까지의 연령층 간 온라인 정부서비스를 위한 인터넷 사용을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또, 몇 가지의 설명들이 제시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결여는 높은 연령층의 주요 장애 중 하나인데, 이는 단기부터 중기에 이르기 까지 원격의료와 같은 전자보건서비스 의 더 많은 사용을 통해 인구통계적 변화를 다루려고 노력하는 정부들에게 부정적인 시사점을 전해준다.

정부는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물리적 서비스 전달채널을 폐쇄할 준비가 되어있는 서비스들을 파악하거나, 디지털 채널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의 예로 종이서류에 의한 절차의 속도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는 대면서비스에 거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대학생 등 특정 인구집단은 인터넷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며, 이들은 덴마크의 사례와 같이 더 쉽게 전자적 채널을 사용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캐나다의 사회적 미디어, 동영상 등의 사용을 통해 디지털 채널로 변환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의무적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서 “digital by default” 접근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질 높은 온라인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디지털 채널에 대한 선호를 증감시켜 “pull”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의 일방통행적 상호작용(예: 정보 획득)은 고도의, 거래적인 상호작용들(예: 완전히 전자적인 문제 처리 혹은 완성된 양식 발송)보다 더 시민들

과 민간기업들 양자 모두에게 여전히 더 일반적이다.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고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호작용에 관한 후자의 단계로 진화하도록 돕는 것은 정부로 하여금 서비스 전달에서 ICT의 잠재적 효율성이 이득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시민들과 기업체들에 관한 지표는 Eurostat의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와 OECD의 ICT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고 있다. 지표들은 공공 관계 당국과 상호작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 들과 민간기업들의 비율을 평가한 것이다. 두 가지 자료 원천들이 방법론적으로 비교 가능하다. 자료들은 Eurostat의 annual Model Survey on ICT Usage and E-Commerce in Businesses and annual Community Survey on ICT Usage in Households and by Individuals. 에 근거하여 국가통계 사무국에 의하여 수집되었다.

자료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공공 관계당국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공공 관계당국은 모든 수준의 정부들에서의 공공서비스와 행정 활동양자 모두를 나타낸다. 상호작용은 정보획득, 양식 다운로드 및 전송, 행정절차 및 사건처리 등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행동들의 하위범주들을 포함하는 파생(derived)지표이다. 몇몇 나라들에서 중개자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이 조사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자정부 활용지표는 조사 수행 전 최근 12개월 동안에, 공공 관계당국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민간 기업들과 시민들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12개월의 기간은 각 부문간 서비스 거래의 서로 다른 일정을 지닌 국가간의 비교를 가능하도록 한다. 1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부문은 제외하였다. 개인들은 16세에서 74세까지 포함되어 있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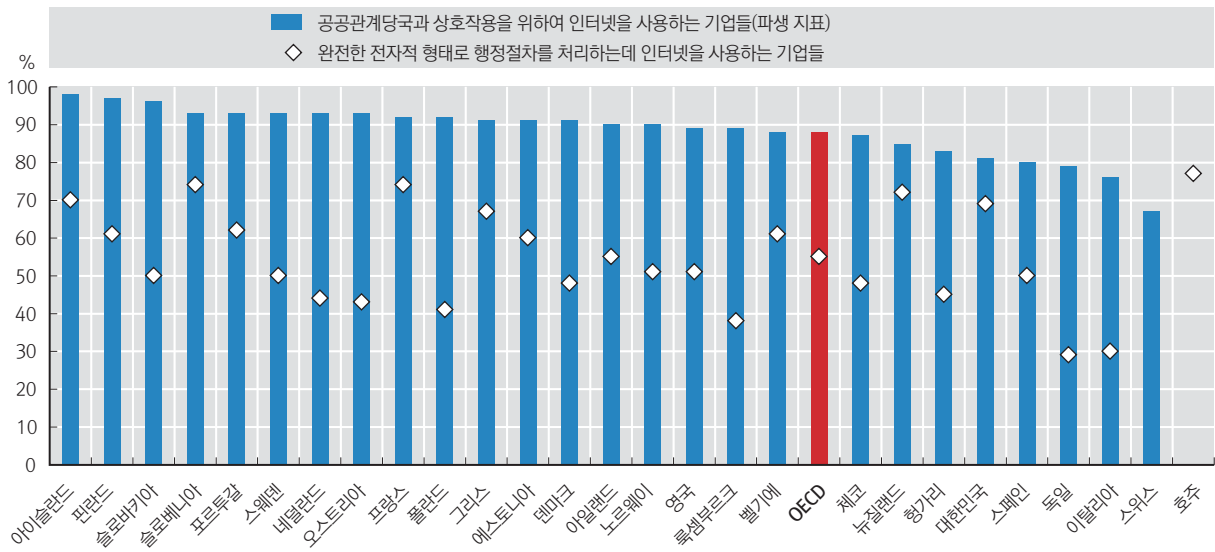
- OECD/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2011), *M-Government: Mobile Technologies for Responsive Governments and Connected Societ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8706-en>.
 OECD (2009), *Rethinking e-Government Services: User-Centred Approach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59412-en>.

그림 설명

- 9.4: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의 자료는 구할 수 없다. 스위스의 완전한 전자적 상호작용 및 호주의 정보획득 자료는 없다. 호주, 칠레,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위스의 자료는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정보 획득만을 의미할 뿐이며, 금융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호주의 자료는 2010년의 자료이고, 아이슬란드, 영국,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2년 자료이다.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의 전자적 행정절차 자료는 2010년 완전 전자 처리 건(full electronic case handling)을 나타낸다.
- 9.5: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터키, 미국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위스의 자료는 일반적 상호작용이 아닌 정보 획득만을 의미하며, 금융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자료는 2011년의 것이다. 호주의 자료는 2010년의 것이며 전자적으로 완벽한 형태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 9.6: 대한민국, 멕시코, 터키, 미국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이스라엘, 스위스는 양식에 채워 넣어 보내는 것에 관한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고, 일본은 공공 관계당국과의 상호작용 관련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의 자료는 단지 정보 획득만을 의미하며, 일반적 상호작용은 아니다. 이스라엘 자료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을 포함하며, 정보 획득과 온라인으로 양식에 기입하는 것 양자를 모두 포함한다. 캐나다의 자료는 2009년의 자료이며, 호주, 이스라엘, 스위스는 2010년의 자료이다. 뉴질랜드 자료는 양식에 기입해서 보내는 것이 아닌 양식다운로드에 대한 자료이다
- 9.7: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터키, 미국의 자료는 이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라엘, 스위스의 자료는 단지 정보를 획득하는 것만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다. 이 나라들의 "25-34세"연령층은 25-44세 사람들을 의미한다. 칠레의 자료는 25-64세의 연령층이다. 이스라엘 자료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을 포함하며, 정보획득과 온라인으로 양식기입양자를 포함한다. 캐나다, 이스라엘, 스위스의 자료는 2010년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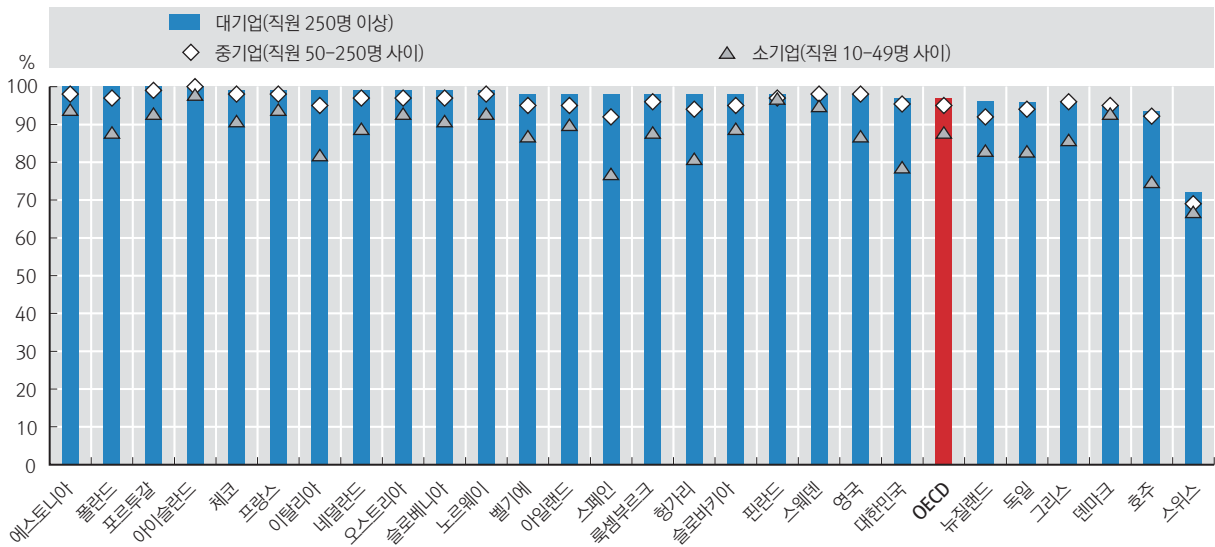
9.4. 활동 유형별 공공관계당국과의 상호작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들(2011)



출처: 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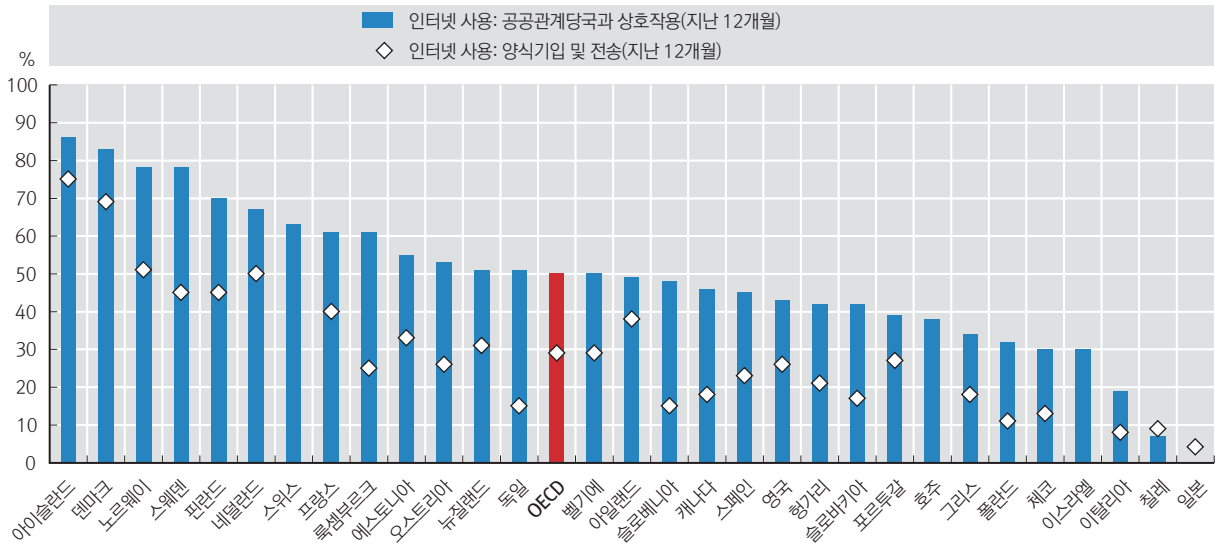
9.5. 기업 규모별 공공관계당국과의 상호작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업들(2012)



출처: 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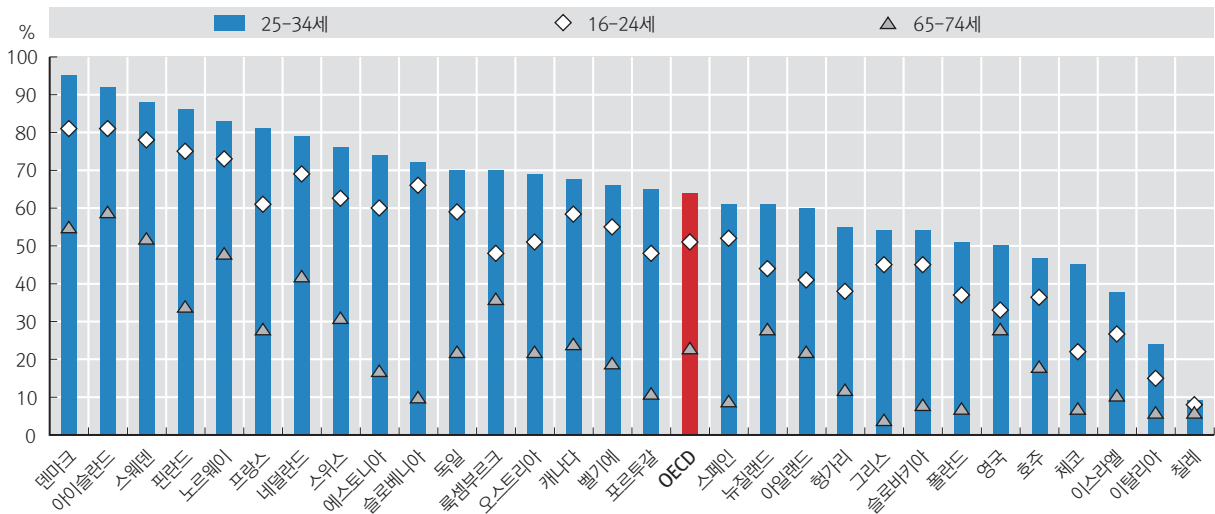
9.6. 활동유형별 공공관계당국과의 상호작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2012)



출처: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39>

9.7. 연령층별 관계공공당국과 상호작용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2012)



출처: 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58>

공공서비스 대응성: 적시성

민감성 높은 공공재화와 서비스는 다양한 시민들의 필요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적응한다. “두루 널리 적용되는(one size fits all)” 접근법보다, 민감성 높은 서비스 공급자는 고객층을 분할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피드백이나 불평을 선제적으로 찾고 고려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간다. 게다가, 민감성 높은 공공 재화와 서비스는 가능한 한 빠르게 응답 하고,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필요에 반응하도록 노력 한다. 그러므로 서비스 전달의 시기 적절성은 시민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감성 지표이다.

보건

대기시간은 서비스 전달의 시기 적절성을 측정하는 한 방법들 중 하나이다. 과도한 대기시간은 서비스 질은 물론 서비스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의료 치료의 연기는 종종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환자와 전문의간 관계를 경색시키고 건강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시간이 다른 배분 요소들이 없다면 그 서비스가 완전히 무료로 제공될 때 제한된 공급의 경우 시간이 조정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OECD 회원국들에서 2010년에 전문의를 찾아가도록 권고 받은 시민들의 거의 40%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기 전 4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고 보고하였다(그림 9.8). 그렇지만,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4주 이상 기다린 시민들의 비율은 캐나다의 경우는 거의 60%이며 독일은 20%이하이다. 평균적으로, 소수의 시민들(약 10%)은 대기수술을 위해 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대략 20%의 시민들이 오랜 대기시간을 보고하였다. 독일 시민들은 아무도 4개월 이상의 대기시간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직원의 부족, 빈약한 의료기관 혹은 병상수의 부족은 의료수술까지의 오랜 대기시간을 유발하였다.

조세행정

몇몇 OECD 회원국들은 특정한 공공서비스, 특히 조세행정에 대한 핵심 성과기준으로 시기 적절성을 포함시켜 왔다. 시간을 소득 신고를 위한 기준으로 삼는 국가들은 평균처리시간이 서류에 의한 신고는 40일, 전자적 신고는 35일을 초과하지 않았다(그림 9.9). 네덜란드, 폴란드 등 2개국에서의 신고는 3개월 이내에 처리되었다. 그 밖의 다른 모든 국가에서 서류상의 신고에 관한 처리시간 기준은 아일랜드의 경우는 10일에서부터, 호주, 덴마크, 일본의 경우는 42일까지 이르렀다. 대다수의 국가들에 있어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전자적 서류처리는 시간기준을 많이 낮추지 않았다. 이러한 국가들에서 세금신고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민들이 종이형태로 처리하는 시민들보다 3-4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사법

시기 적절성은 사법시스템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사법의 지연은 법의 지배를 유지하고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의 효율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의 능력에 대한 시선에 악영향을 미치며, 그리하여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재판의 지연은 또한 사건 및 경제적 상황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며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미래투자의 전망을 주저하게 한다. 반면에 과도하게 짧은 처리시간은 적법 절차의 필요를 약화시킬 수 있다. 소송의 기간은 사법부문에서 시기 적절성의 일반적인 지표 중 하나이다. 자료가 이용 가능한 31개 OECD 회원국들에서, 1심 민사재판의 평균 처리시간은 이탈리아의 550일 이상부터 일본의 대략 100일 정도까지의 범위이고, OECD 평균은 약 242일이다(그림 9.10). 프랑스식 법률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들은 가장 긴 처리시간을 보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률 시스템간 절차적 그리고 실질적 차이를 넘어서, 직원채용, 인적자원관리 정책, IT 사용, 사건 담당건수 관리 능력 등 사법시스템의 조직은 법정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전문의와 대기수술을 위한 대기시간에 관한 자료들은 OECD Health Data 2011에서 추출하였다. 전문의의 진료와 대기수술을 위한 대기시간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도록 권고 받은 때와 예약시간 사이의 시간이다. 전문의의 상담을 받았던 응답자들만이 대기시간을 명시하도록 요구 받았다.

개인적 세금신고의 처리시간에 관한 자료들은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에서 추출하였다. 처리시간은 한 시민이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서류 접수와 세금 환급에 관한 조세 관계당국의 결정 사이의 시간을 나타낸다. 세금 신고는 시민들이 관계당국에 과세소득을 보고하는 방식이다. 세금 환급은 시민들이 지불한 금액이 납세 의무보다 더 클 때 상환 받는 금액을 나타낸다.

1심 민사사건의 평균시간에 관한 사법자료들은 OECD의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에서 추출하였다. 재판 기간은 문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인 $[(\text{Pending } t - 1 + \text{Pending } t) / (\text{Incoming } t + \text{Resolved } t)] * 365$ 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계류중인 사건의 숫자에 관한 정보는 이용 가능하지 않지만 실제 길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던 국가들 같은 경우, 후자가 사용되었다 (영국 및 웨일즈, 멕시코, 뉴질랜드, 네덜란드). 추정 혹은 실제 재판시간 모두 구할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하여는, 재판의 길이는 세계은행 그룹의 Doing Business(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추정 재판길이 회귀의 예측 값으로 대체하여 계산되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a),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814-en>.

OECD (2013b, forthcoming),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Palumbo, G. et al. (2013),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4x00md5g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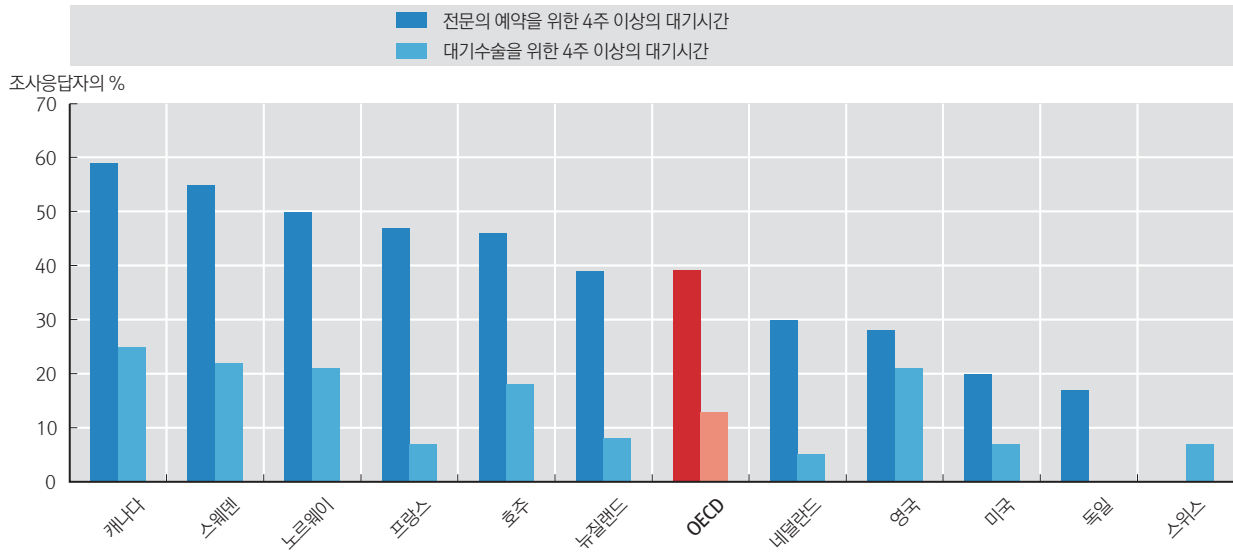
그림 설명

99: 이 그림은 행정적인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국가들만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날짜 수는 합리적 근사치로 추정될 수 없었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의 자료는 전자적이거나 종이에 의한 것이거나 양자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칠레 자료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제출된 신고는 입금은 5월 10일, 수표는 5월 30일 마감,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제출된 신고는 입금은 5월 17일, 수표는 5월 30일 마감,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제출된 신고는 입금은 5월 26일, 수표는 5월 30일 마감이다. 헝가리의 자료는 실제 성과가 아닌 조세 관계당국이 정한 기준을 나타낸다. 미국 자료는 각 개인 서류상 신고만이 기준이다.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고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구할 수 없다. 전자적으로 제출한 신고는 5-21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내국세 수입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대부분의 전자신고에 대해 달성하고 있다. 종이 서류에 의한 신고 관련 자료는 에스토니아와 포르투갈에서 구할 수 없다.

9.10: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9.8. 전문의 예약과 대기수술을 위한 대기시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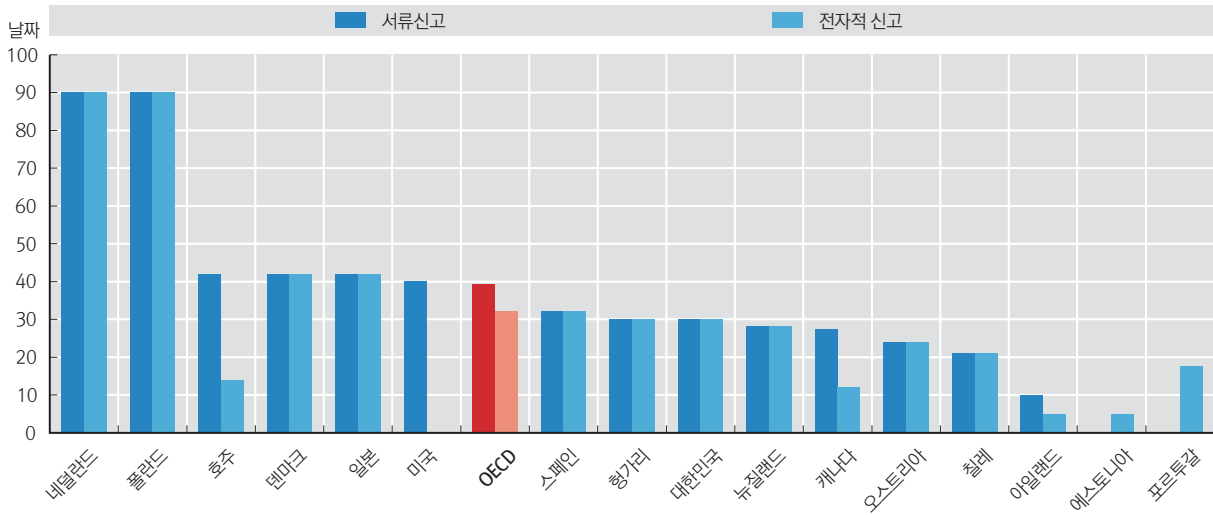


출처: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2010.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77>

9.9. 세금 환급이 기대되는 개인적 세금신고의 처리시간(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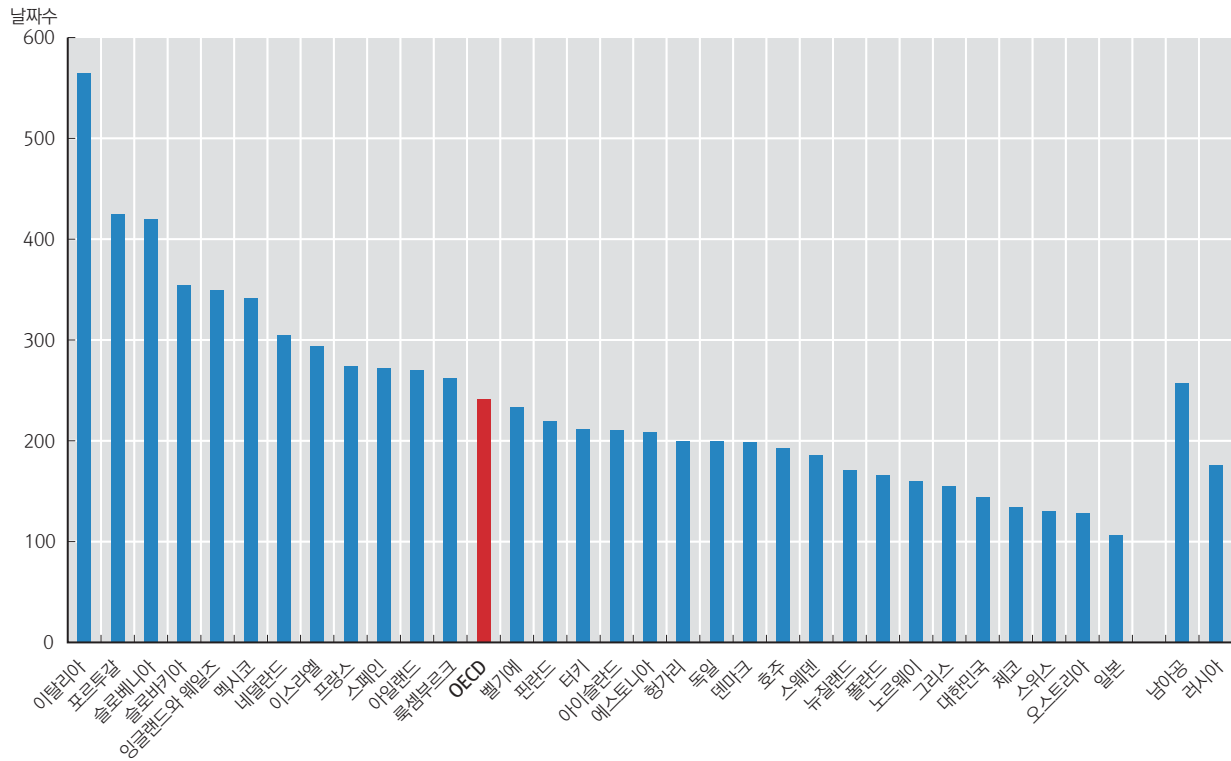
최소한 80%이상의 신고에 대한 평균 날짜수



출처: OECD (2013),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81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096>

9.10. 제1심 사건에 대한 재판길이의 날짜 수(2012)



출처: OECD, CEPEJ, World Bank; and Palumbo, G. et al. (2013),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5,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44x00md5g8-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115>

공공서비스 신뢰성: 시민권의 보장

모든 민주적 사회의 시민들은 그들의 정부와 정부기관에 대한 의무는 물론 몇 가지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공공부문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서비스전달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인 반면에, 정부가 시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귀를 기울이는 제도적 틀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된 측정 기준은 매우 드물다. 이러한 틀은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알려주고 보상 통로와 품질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민권의 선언은 또한 기본적 서비스와 절차 기준을 널리 공포하는 것인데, 한 예로 영국에 존재하던 시민헌장이 그것이다.

시민권 인식에 대한 평가는 국가정부와 그 리더십에 관한 신뢰가 감소하는 맥락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원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규제적 틀은 고사하고, 환자나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국가조차 매우 드물다.

조세행정

조세행정부문에서, 나라들간 조세정책의 다양성은 수입 주체의 운영환경을 서로 다르게 만들고 있는데, 그 결과로, 납세자 권리의 특정 세부사항들은 나라별로 다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일반적인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10년간의 초기에, OECD Committee of Fiscal Affairs Working Party No. 8은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문서를 출간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당시에는 명확한 “납세자 헌장”을 갖고 있지 않았던 반면, 다음에 이어지는 기본적 납세자의 권리가 모든 틀에서 제시된다: “정보를 받고, 도움을 받고, 고지를 받을 권리; 이의제기를 할 권리; 적절한 세금 이외에 더 이상 지불하지 않을 권리; 확실성의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 보안 및 비밀의 권리”.

OECD 회원국 간에,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정부들이 이러한 기본적 권리를 조직화하기 위하여 납세자 혹은 서비스 헌장을 개발해 왔다. 납세자 혹은 서비스 헌장은 담당공무원과 납세자 양자 모두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 문서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헌장관련 서로 다른 형태의 특성을 OECD 회원국 간에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규제적 수단들이 나중에 널리 발간될 “납세자 헌장”속에 통합되지만, 다른 상황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납세자 헌장이 없는 국가들이 공식적인 납세자 헌장이 있는 국가들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중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에서는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

표 9.11과 같이, 2012년 조세운명을 다루는 거의 모든 조세당국은 납세자권리들을 법령상 그리고/또는 행정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분석대상인 33개 OECD 회원국들 중에, 30개 국가들은 세법이나 다른 법령

들에서 이러한 권리를(부분적 혹은 전부) 성문화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뉴질랜드, 터키만이 예외이다. 반면에, 26개의 조세당국은 행정문서 형태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일련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종종 이것들은 “납세자” 혹은 “서비스” 헌장이라고 불린다). 문화적·법적 쟁점 이외에도, 또 다른 요소들이 법령에 성문화할 것인가 혹은 실질적인 행정적 접근을 할 것인가를 채택하는 국가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는, 행정적 접근의 채택을 지지하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집행 절차의 속도, 더욱 “독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의 사용, 범위의 확장(예를 들면, 입법 과정에서 다룰 수 없었던 더 넓은 권리들), 보다 나은 유연성, 보상의 용이성 등이다. 반면에, 법령에 성문화하는 접근법의 혜택은 다음에 이어지는 사항들을 고려한다: 납세자는 조세당국의 강력한 헌신을 목격함으로써 인식을 개선하고; 직원들에 의한 규제 도입을 고수하도록 하는 속도;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변화에 직면한 문서의 견고성(오래 지속됨); 문서가 보상이나 항의에 대해 설립된 메커니즘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보건

보건부문에서, 법적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환자의 권리나 관여는 공공 서비스 전달의 사용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평가하는 기본적 기준으로 간주된다. 5가지 요소들이 분석되는데, 이는 국가적 수준에서 환자의 권리에 관한 공식적인 정의나 헌장의 존재; 의료사고의 경우에 환자가 법정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병원이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자전담 창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보건 서비스에 대항하여 민원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책임이 있는 옴부즈만(Ombudsman)감독관의 존재여부; 건강공급자와 제약회사에 대항해서 집단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이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환자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33개국 중 26개국). 캐나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스웨덴, 스위스만이 이러한 규정을 보고하지 않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환자들은 의료사고의 경우에 재판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19개국)에서 병원들은 환자의 불평을 등록하기 위한 환자전담창구를 갖추어야 한다. 대다수의 OECD 회원국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을 조사하고 해소하는 것을 담당하는 옴부즈만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덴마크,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터키만이 이러한 형태의 존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납세자 권리에 관한 자료는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OECD, 2013)에서 추출하였다. 정보들은 OECD 회원국들과 그 밖의 주요 국가 풀에서 the IBFD Tax Survey와 the CIS Survey 등 2가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납세자 혹은 서비스 현장은 납세자와 담당공무원들 양자 모두로부터 기대되는 행동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는 일단의 관련문건들로 정의된다.

환자의 권리에 관한 자료들은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 Survey of 29 OECD Countries” (Paris et al., 2010)에서 가져온 것이다. 정보들은 OECD Survey on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2008-09 and 2012)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이어지는 질문들은 2012년 조사에서 정보를 추출하는데 사용되었다. 질문 90: “국가적 수준(예, 법이나 현장)에서 환자의 권리에 관한 공식적 정의가 있습니까?” 이어지는 질문들은 2008-9년 설문조사에서 사용되었다. 질문 76: “병원들은 환자의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환자 담당 창구를 갖출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까?” 질문 78: “귀하의 나라에서는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 처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질문 80: “사람들은 건강공급자, 제약회사 등에 대한 집단소송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질문 81: “보건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담당하는 ombudsman이 있습니까?” 집단소송제도는, 동일한 소송사유를 갖는 그들 자신과 더 큰 집단 및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수행하는 법적 소송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814-en>.

Paris, V., M. Devaux and L. Wei (2010),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 Survey of 29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5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mfxfq9qbnr-en>.

그림 설명

9.12: **캐나다**: 납세자의 권리법안은 15개의 권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법정권리와 서비스권리의 결합이다. 법정권리는 세법에 성문화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상에 관한 법적 권리가 포함된다. 서비스권리는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관계를 규율하고 행정적인 보상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의 민원 처리 절차는 그 사건에서 관계 공무원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부터 첫 단계를 시작한다: 만약에 납세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그/그녀는 민원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에 그/그녀가 여전히 불만이면, 그/그녀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납세자의 ombudsman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칠레**: 2010년 2월에, 법률에 의해서 인식되고 보장되는 최소한의 납세자의 권리를 상술하고 특정한 세법(Tax Code)에 새로운 조항이 도입되었다. **아일랜드**: 민원 처리를 위한 내부적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만, 고객들은 항소위원회(Appeals Commissioners), ombudsman 사무소, 평등 재판소(Equality Tribunal)를 경유하여 법률의 조항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룩셈부르크**: 행정적인 문서에 공식적으로 정의된 납세자의 권리는 단지 직접세에 관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9.11. 국가보건시스템에서 시민의 권리(2009-12)

	국가적 수준에서 환자의 권리에 관한 공식적 정의 또는 헌장(2012)	환자는 의료사고의 경우에 법정에서 보상을 구할 수 있다(2009)	병원들은 민원을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자전담장구를 갖추어야 한다(2009)	옴브즈만 사무소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고 해소하기 위한 책임이 있다(2009)	집단소송은 건강공급자와 제약회사들에 대항하여 허용된다(2009)
호주	●	●	●	●	●
오스트리아	●	●	○	●	●
벨기에	●	●	○	●	●
캐나다	○	●	○	●	●
칠레	●
체코	●	●	●	..	●
덴마크	●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독일	●	●	○	●	..
그리스	●	●	..	●	..
헝가리	●	●	●	●	..
아이슬란드	●	○	●	●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	●	..	○
일본	●	●	●	○	●
대한민국	●	●	●	○	○
룩셈부르크	○	●	●	●	○
멕시코	●	●	●	●	○
네덜란드	●	●	●	○	..
뉴질랜드	●	○	●	●	○
노르웨이	●	●	○	●	●
폴란드	●	●	○	●	●
포르투갈	●	●	●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	●	●	●
스웨덴	○	●	○	●	●
스위스	○	●	○	●	○
터키	..	●	●	○	●
영국	●	●	●	●	●
미국	●
OECD 계	26	25	19	21	14

● 예
○ 아니오

출처: Paris, V., M. Devaux and L. Wei (2010), "Health System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 Survey of 29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50,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5kmfxfq9qbnr-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704>

9.12. 조세행정에서 시민들의 권리(2013)

	납세자의 권리는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납세자의 권리는 행정적 문서들에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호주	●	●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캐나다	●	●
칠레	●	●
체코	●	○
덴마크	●	●
핀란드	●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	●
이스라엘	●	●
이탈리아	●	●
일본	●	○
대한민국	●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	○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	●
스페인	●	●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
미국	●	●
OECD 계	30	26

● 예
○ 아니오

출처: OECD (2013), Tax Administration 2013: Comparative Information on OECD and othe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0814-en>.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723>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공공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서비스전달에 대한 시민중심 접근방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는 조직적 수행전략의 중요구성요소이기도 하다. 인식에 관한 자료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조직체에 대한 시민들의 체험을 평가하고, 정부의 산출에 대한 그들이 받은 견해를 알아내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정보들은 공공관리자들로 하여금 어떤 요인들이 서비스전달에서 만족을 끌어내는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들이 개혁이 최종사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시민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은 또한 정책결정자와 관리자들이 자신들의 고객층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하위-사용자 집단을 알아내고 접근성에 있어서의 필요나 차이를 알아내는데도 도움을 준다. 더 나아가, 시민만족도는 정부의 전반적인 성과에 대한 중요한 결과물 지표가 될 수 있다.

공공서비스의 민감성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시민들의 체험에 대한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추구하고 대응하는 정부조직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공통 측정도구”와 이탈리아, 프랑스의 “품질 척도”는 서로 다른 정부조직체들로 하여금 서비스 질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시민들의 인식관련자료도 추가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대사에 해당하는 서비스전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고정된 설문응답자들이 준비되어 있다.

OECD 회원국들에서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는 대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된다. 예를 들어, 2012년에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72%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를 보고하였다. 거의 유사한 백분율로 양질 보건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도시 또는 지역의 학교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은 66%에 이른다. 평균적으로 만족도 수준은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위기가 진행중인 경우와 끝난 직후에도 상당한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시민들의 만족도 수준은 여기서 분석된 3개 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2% 미만으로 아주 약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나라별 차이는 크다. OECD 회원국들 중에 교육분야(19개국)와 보건분야(19개국)에 대한 만족도 상승보다 지역경찰분야(15개국) 만족도가 상승한 국가는 적었다. 에스토니아(14%p)와 슬로바키아(13%p)가 지역경찰분야에서 신뢰가 가장 상승한 반면에, 상당히 하락한 국가들은 멕시코(15%p)와 헝가리(7%p)였다.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상승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영국(양자 모두 9%p)인 반면에, 칠레(17%p)와 멕시코(11%p)는 가장 하락하였다. 9개 국가를 제외한 보건분야의 만족도 수준이 5%p이내의 변화를 보였으며, 헝가리(10%p)와 영국(8%p)이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에, 그리스(23%p)와 일본(10%p)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국가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높았다. 2012년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지역경찰과 보건분야의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 30% 더 높았으며,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26% 더 높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각 나라의 지배적 언어로 번역된 공통 질문지에 기초하여 전세계 약 140개국에서 수행된 Gallup World Poll에서 추출하였다. 몇 가지 예외는 있지만, 모든 표본은 확률기반이며 전국 15세 이상의 거주인구에 대한 국가적 대표성을 가진다(시골지역 포함). 그렇지만, 결과들은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표본의 크기는 각 국가에서 최소 1,000명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측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1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 관련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예”라는 응답의 백분율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에서, 당신은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교육시스템과 학교에 대한 신뢰 관련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만족”이라는 응답의 백분율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 혹은 지역에서, 당신은 교육시스템 혹은 학교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질의 보건의 이용가능성 관련 만족도에 대한 자료들은 다음 질문에 “만족”이라는 응답의 백분율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혹은 지역에서, 당신은 양질의 보건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 9.14, “특정한 공공서비스들에 대한 만족과 신뢰의 수준과 국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비교”는 온라인 <http://dx.doi.org/10.1787/88893294315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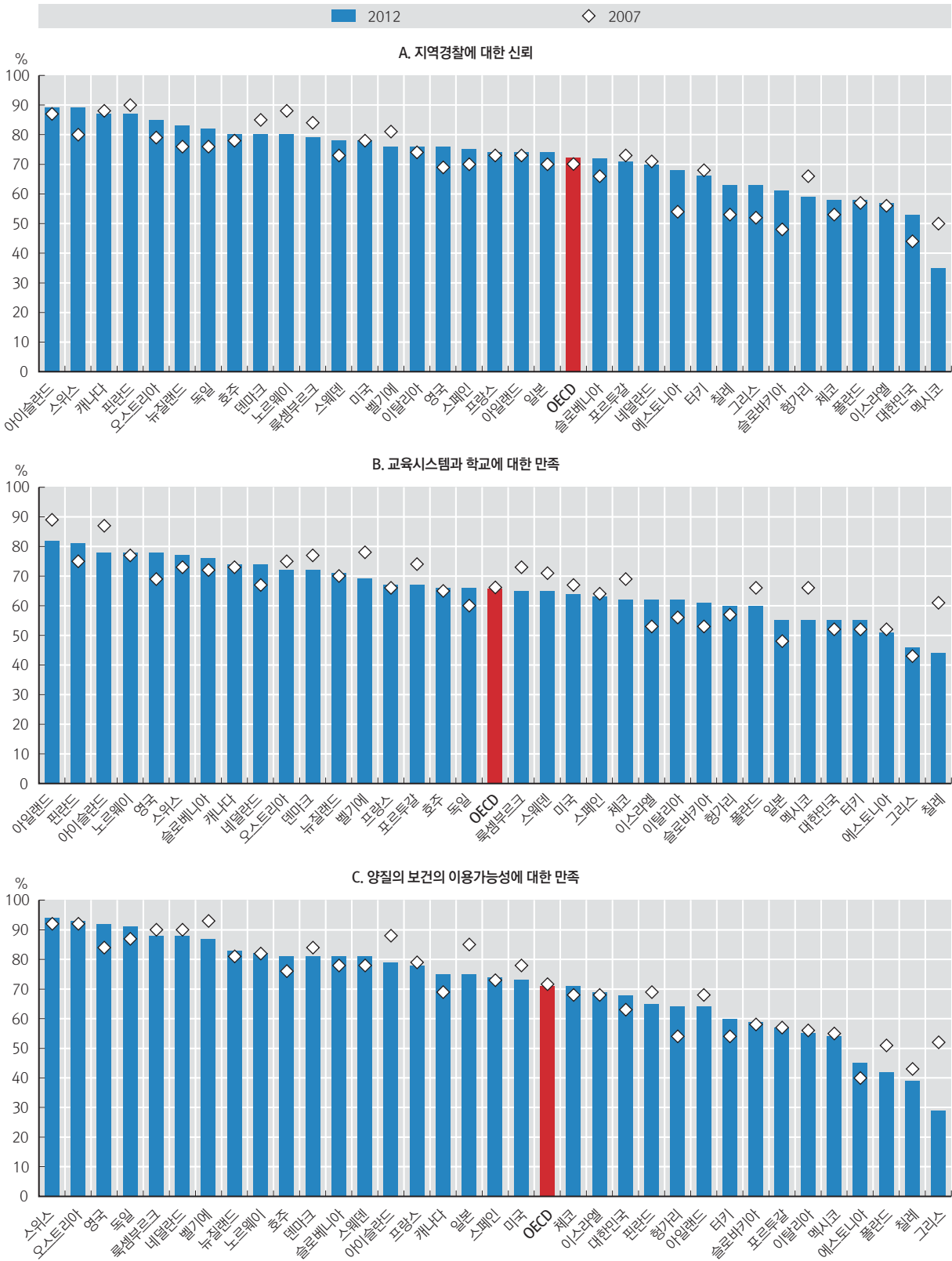
OECD (2012),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A Practitioner's Guide to Perception Survey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7179-en>.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자료는 2007이 아닌 2006년 자료이다. 칠레, 독일, 영국의 자료는 2012년이 아닌 2011년 자료이다. 지역경찰에 대한 신뢰와 보건에 대한 만족 관련 자료는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의 경우는 2012년이 아닌 2011년 자료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9.13. 특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의 수준(2007, 2012)



출처: World Gallup Poll.

StatLink <http://dx.doi.org/10.1787/888932943134>

부록 A

정부수입 총계 방식

다음 표는 조세, 사회적 기여금, 보조금 그리고 제3장 "공공 재정과 경제"에 제시된 기타 수입들에 대한 총계를 OECD 국가계정자료로부터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A.1. 정부수입총계

본보고서의 용어	국가계정체계의 용어	OECD국가계정자료의 코드 (일반정부의 주요 총계)
조세		
간접세	생산과 수입에 대한 세금	GD2R
간접세	소득과 부에 대한 세금	GD5R
자본세	자본세	GD91R
사회적 기여금	사회적 기여금	GD61R
보조금과 기타 정부수입		
현금과 자본보조	기타 현금이전	GD7R
	기타 자본이전과 투자보조금	GD92R_D99R
판매와 수수료	시장산출과 최종사용을 위한 산출	GP11_P12R
	기타 비-시장산출을 위한 지불	GP131R
재산소득	재산소득	GD4R
보조금	생산에 대한 기타보조금	GD39R
총 정부수입	총 정부수입	GTR

부록 B

COFOG 함수를 활용한 정부 기능분류

OECD가 개발한 정부기능분류는(COFOG) 자금이 사용된 목적에 따라 국가계정체계에(SNA) 나타난 정부지출자료들을 분류한다. 표 B.1에서와 같이, 일차적 정부기능은 지출자료를 10개의 기능적 집단 즉, 지출의 하위영역(국방,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 나누고, 2차적 정부기능은 각각의 1차적 정부기능을 9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다. 일차적 정부기능자료는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32개에 대한 것이고, 이차적 정부기능자료는 21개의 유럽연합회원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표 B.1. 1차적 수준과 2차적 수준의 정부기능분류(COFOG)

1차수준	2차수준
일반정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법무, 재정과 재무, 외교 ● 해외경제지원 ● 일반서비스 ● 기초연구 ● 일반공공서비스의 연구개발 ● 일반공공서비스 기타 ● 공공부채의 거래 ● 정부간 업무이전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방위 ● 시민방위 ● 해외군사원조 ● 국방연구개발 ● 국방 기타
공공질서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비스 ● 소방서비스 ● 법원 ● 교도소 ● 공공질서 및 안전연구개발 ●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1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이용할 수 없었다. 최근까지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일부 국가의 국내통계 부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수준에서 수집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국가계정체계(SNA)/UN 가이드,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 매뉴얼에서 정부기능분류의 관점을 적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2005년 Eurostat는 유럽국가들을 위한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토론을 했으며, 국가계정지출자료에 정부기능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설립하였다. 2차적 정부기능 분류자료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OECD의 비-유럽국가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과 유럽국가 중 스위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다. 또한 EU의 몇몇 회원국에서는 특정 정부기능분류영역에서만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OECD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한 이들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B.1. 1차적 정부기능분류와 2차적 정부기능분류(계속)

1차수준	2차수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경제, 산업과 노동 ● 농업, 산림, 어업과 수렵 ● 연료와 에너지 ● 광업, 제조업과 건설업 ● 운송 ● 통신 ● 기타산업 ● 경제연구개발 ● 경제 기타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관리 ● 오수관리 ● 공해저감 ● 생물다양성과 경관보호 ● 환경보호연구개발 ● 환경보호 기타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발 ● 공동체개발 ● 상수도공급 ● 가로조명 ●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연구개발 ●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기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생산, 적용과 설비 ● 외래환자서비스 ● 병원서비스 ● 공공보건서비스 ● 건강연구개발 ● 건강 기타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서비스 ● 문화서비스 ● 방송과 언론서비스 ● 종교적 그리고 기타 공동체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종교 연구개발 ●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종교 기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및 기본 교육 ● 2차적 교육 ● 2차적 이후의 제3차적이 아닌 교육 ● 3차적 교육 ● 수준이 정의되지 않는 교육 ● 교육에 대한 보조금 ● 교육연구개발 ● 교육 기타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과 장애 ● 노령 ● 유족 ● 가족과 아동 ● 실업 ● 주택 ● 기타 사회적 소외계층 ● 사회보장연구개발 ● 사회보장 기타

n.e.c.:Not elsewhere classified.

부록 C

복합지표 예산관행

이번에 발간된 한눈에 보는 정부는 예산관행과 관련하여, 두 가지 복합지표(예산과정에서 중기적 관점을 사용하는 것과 성과예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를 포함하고 있다. 복합지표 구성을 위한 자료의 사용은 성과예산에 관한 2011년도 OECD 연구조사와 예산의 관행과 절차에 관한 2012년도 OECD 연구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협의의 복합지표는 중기지출의 기본 틀과 성과예산과 같은 예산관행의 핵심적 측면에 대한 불연속적이고 질적인 정보들을 요약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많은 각각의 지표들에서 공통의 흐름을 발견하려는 시도들보다는 복합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Nardo et al., 2004). 그렇지만, 복합지표의 사용과 개발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 복합지표들은 이 지표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지표에 의해 측정된 것들이 실질적 결과측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워서 사용자들에 의해 종종 그리고 자주 잘못된 해석을 유발할 수 있다.

OECD는 복합지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복합지표 또는 종합지표의 의미 있는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 언급한 복합지표 구성을 위한 요약책자(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Nardo et al., 2008)에서 정의한 각 단계들을 이 책에서의 복합지표에서도 따르고 있다.

각각의 복합지표는 그 분야에서 합의된 개념을 대표하는 이론적 기본 틀에 기초하고 있다. 지표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은 관련분야에 관한 각국 대표단의 협의를 거치고 OECD내의 관련 전문가집단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 요소분석과 같은 다양한 통계적 도구들이 동일한 근본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고 변수를 구성하는 각 지표들이 서로 상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활용되었다.
- 탐색된 결측값의 귀속에 관한 서로 다른 방법론 사용
- 비교를 위한 모든 하위지표와 변수들의 정규화
- 복합을 위하여 모든 하위지표들을 채택 가능한 방법론에 따라 선행분석을 사용하여 합치기
- (동일한 가중치, 요소 가중치, 전문가 가중치와 같은) 서로 다른 방법의 가중치에 대한 지표의 견고성을 확립하기 위해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장 적절한 가중치방법으로는 전문가 가중치 방법이다.

이 지표들이 예산시스템의 모든 질적인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개념적 기초와 규범적 추정치 요구된다.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지표들은 본질적으로 다소 서술적인 것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명칭으로 제시되었다.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사문항은 지표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각 국가들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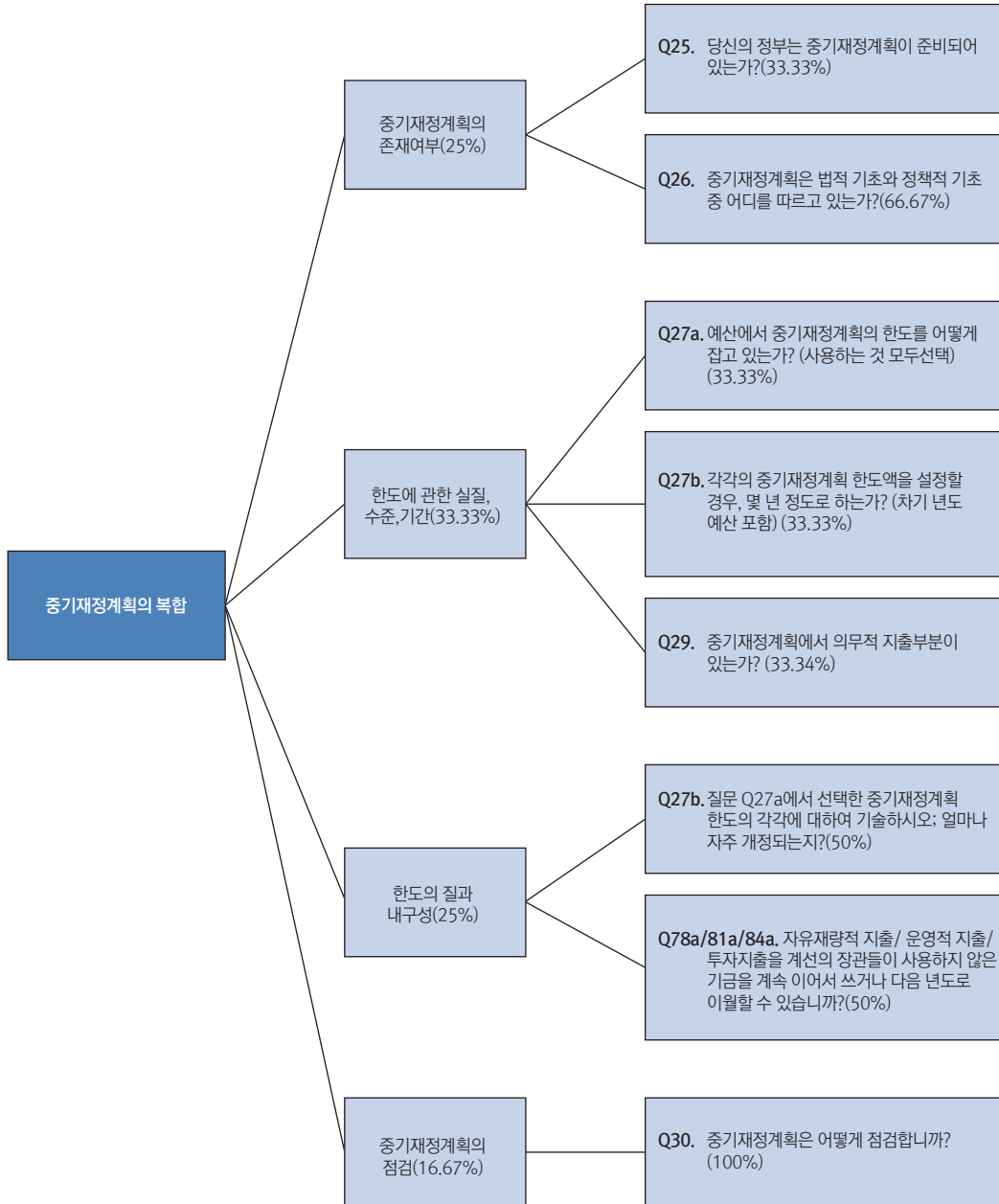
비록 복합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의 협력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우수관행이나 혹은 이론에 근거하고 있지만, 변수의 구성이나 가중치 양자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 OECD는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우수관행을 계속 재정의하고 예를 들면, 이번 판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복합지표인 예산적 유연성과 같은 개념을 다시 논의해 나갈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년도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복합지표들은 2009년판에서의 복합지표들과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번의 복합지표들은 추가적인 또는 이전과는 다른 질문용어 및 가중치를 포함하여 갱신된 연구조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복합지표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주제(topic)의 각 부분은 각각 두 가지 주요분야(중기재정계획과 성과예산)의 각각에 대한 이론적으로 관련 있는 측면들로 구성된 넓은 범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넓은 범주들 각각에 대하여 가중치를 할당하였다. 각각의 넓은 범주들 안에서 관련된 질문들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질문들에 하위가중치가 할당되고, 이러한 질문들 내에서 각각의 응답에 대한 점수들이 부여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점수로서의 국가별 점수는 넓은 범주의 가중치의 산출물이고, 각 국가들에 의해 제공된 응답(1 또는 0)을 곱한 질문에 대한 하위가중치의 산출물이다. 복합지표는 각 나라들의 이러한 점수들을 함께 더한 결과물이다. 0과 1로 복합지표는 서로 다르다; 1이라는 점수는 주어진 주제에 올바른 관행을 활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기재정계획(MTEF) 변수, 가중치, 점수

아래의 목록과 가중치들이 중기재정계획의 복합구성에 사용되었다.

그림 C.1. 중기재정계획지표에서 사용된 변수와 가중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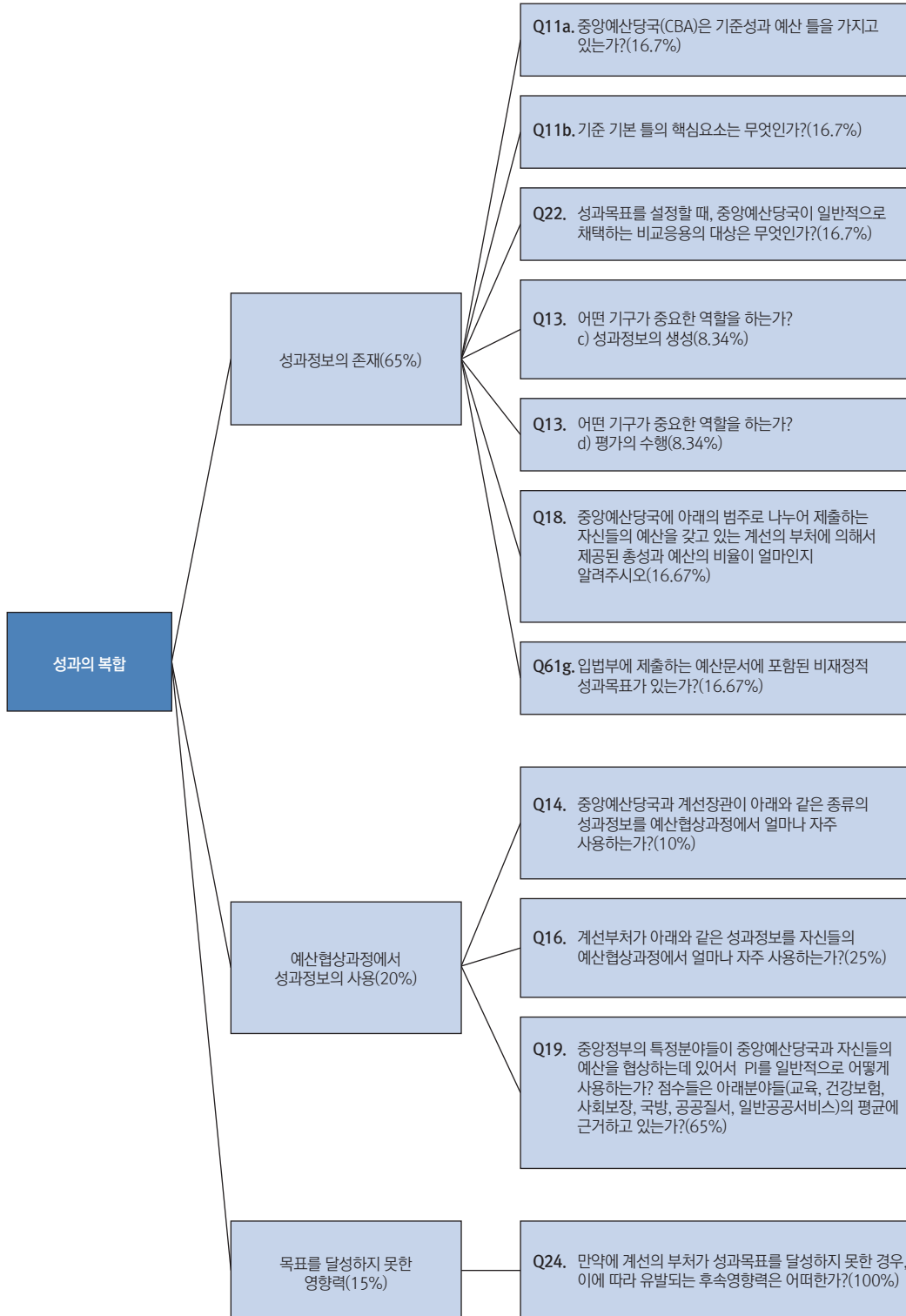


설명: 이론적 기본 틀, 각 복합지표의 구성과 가중치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자료는 www.oecd.org/gov/govataglanche.htm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수준에서 성과예산시스템의 사용과 가중치 및 점수

아래의 목록과 가중치들이 중기재정계획의 구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C.2. 성과예산지표에서 사용된 변수와 가중치



설명: 이론적 기본 틀, 각 복합지표의 구성과 가중치에 관한 추가적인 상세한 설명자료는 www.oecd.org/gov/govtaglance.htm 에서 이용할 수 있다.

부록 D

정부의 피고용인 보상에 관한 방법론과 부가 사항

보상은 공공분야에 능력 있는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양자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정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정부 피고용인들에 대한 보상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몇몇 경우에는 급여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급여를 동결하고 있다. OECD는 공공분야에 있어서 급여수준과 급여구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주요부처의 전형적인 직종에 대한 보상 수준을 담고 있는 자료집을 2010년에 만들고 2012년에 갱신하였다. 각 국가간 그리고 각 부처들간 관리적 수준이 너무 많고 다양하며 관리적 직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의 보상에 관한 연구조사에서는 중앙정부의 특별한 직위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 공공영역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직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에 있어서 평균적인 보상을 비교하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다. 공공영역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개선하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보상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고위 관리직, 중간관리직, 전문직과 비서직군의 OECD 회원국간의 각 수준별 보상에 대한 비교는 그들의 관련된 총 보수를 보여주는 것이며, 여기에는 임금으로의 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기여금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준별 보상의 비교에 있어서 각 나라들간의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대체로 총원가 접근법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보상자료들은 또한 그 나라 내에서 제3차 교육까지 받은 근로자들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였는데, 이는 유사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근로자를 요구하는 다른 직업군과의 상대적 매력도(attractiveness)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는 또한 그 나라들의 다양한 경제적 발전정도를 고려해야 하기에 1인당 GDP로 교정하였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노동시장, 서로 다른 문화적·정치적 합의, 그리고 각 나라들에 있어서 동일한 직업군이라 할지라도 임금결정의 성격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것들이 이 분석에서는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들간 비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직업군

연방/중앙정부의 피고용인들의 보상에 관한 조사는 이전의 조사인 2010년의 것을 갱신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보상정책과 관행에 관한 비교분석과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사는 중앙/연방/국가 정부수준에서 표본 직업군의 피고용인들의 연간 보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은 중앙정부의 전형적인 직종에 대한 보상수준들에 관한 자료집을 만드는 것이며, 이는 공공서비스에 있어서 보수 수준과 급여구조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계당국의 책임아래 제공된 것이다. OECD의 이러한 자료들의 사용은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의 이스라엘정착촌의 국제법상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조사는 중앙과 연방 정부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정부,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구들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는 모든 정부수준에서 정부기업과 준정부기업을 제외하고 있다. 이 조사에는 종종 "사무국"이라고 칭하는 중앙 정부에 부속되어있는 사무소나 기구들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조사에서는 자문역이나 단기계약직을 제외한 전일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질문지들은 중앙/연방정부의 4가지 전형적인 직종집단(고위관리자, 중간관리자, 전문가, 비서직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직종들은 각 나라들간의 비교가능성과 대표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서비스직을 제외하고 이러한 직종에 관한 정보들은 3개의 핵심 부처(내무부, 재무부, 법무부)와 3개의 분야별 부처(교육부, 보건부, 환경부)에서 수집되었다. Box D.1은 이 조사에 포함된 부처의 전형적인 담당분야를 기술하고 있다.

Box D.1. 이 조사에 포함된 부처의 전형적인 담당분야들

이 조사에 포함된 부처들의 기능과 활동을 묘사하고 있는 아래 부분들은 단지 안내서일 뿐이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는 부처의 이름이 다를 수 있고, 부처명도 국 또는 사무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무부

- 영토적 측면에서 그 나라를 대표함
- 보통선거에 의해서 전반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함
-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이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지방이양을 촉진함
- 이민 정책을 다룸
- 국가안보정책을 세우고 조율함
-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함
-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내적 안전(보안)을 유지함

재무부

- 정부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함
- 조세정책을 분석하고 만들어냄
- 재정제도를 위한 규제를 만들고 수행함
-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발전을 점검함
- 국가적/중앙/연방정부로부터 하위 국가정부로 기금이전을 관리함

법무부

- 사법시스템의 기능을 잘 유지함
- 특정 분야에 대한 규제 및 법의 조문들을 준비함
- 정의의 관점에서 공공정책의 주요 방향을 정의하고, 그 실행을 담당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
- 처벌이나 기타 제재조치의 효과성과 지속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

Box D.1. 이 조사에 포함된 부처들의 전형적인 책임들(계속)

교육부

- 일반적으로 1차적 학교부터 2차적 또는 고등학교까지의 국가교육시스템의 조직, 조율과 규제
- 공공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함.
- 공사립의 학교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통제와 평가를 수행함.
- 교사와 행정직원들의 효과적 관리를 보장함

보건부

- 공공보건정책(예방과 위생기관과 전문인이 양성)의 설계와 집행
- 스포츠와 관련된 정책 및 약물중독에 대항하는 정책의 규정
- 산업안전규제와 사회적 안전과 관련 있는 분야에 대하여 다른 부처와의 협력

환경부

- 환경보호와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관련된 규제나 법령의 기본 틀을 관리하고 규정
- 환경, 건강, 안전과 재산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인 산업, 토지이용, 시설물의 인증

Box D.2 는 이 조사에서 담고 있는 직종의 정의와 분류를 담고 있는데, 이는 모든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정형적인 것들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리자로 간주되는 기준은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들의 작업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서는 이러한 사람들(관리자)에 대부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의 서로 다른 계층들 간의 서로 다른 책임들을 더욱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상세한 기술보다는 계층적인 차이점에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하였다.

Box D.2. 직군의 범위와 정의

고위 관리직

D1 관리직(ISCO-08 1112 분야)은 장관이나 사무총장, 차관의 바로 아래에 있는 고위공무원이다.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원이 되며 부처 혹은 부처의 장에 의해 임명된다. 이들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조언하며, 정책에 대한 해석과 집행을 감독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집행력도 가진다. D1 관리직은 내각이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지만, 내각이나 위원회의 일부분이 되지는 못한다. 이들은 특정 행정적 분야나 부처/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관한 것들을 제공한다. 독립기관, 분권, 수평적 조직구조, 권한이양등과 같은 시스템이 있는 국가에서는 정확한 직종명칭이 나라마다 각각 다르다.

D2 관리직(ISCO-08 11과 112)은 D1관리직의 바로 밑에 위치한다. 이들은 정책과 계획을 직접 형성하고 검토하며, 다른 관리자들과 도움을 받아서 부처 혹은 특별부서의 전반적인 활동을 조율하고 평가한다. 이들은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일 수 있다. 이들은 사업의 조직화와 관리에 있어서 안내를 하며 다른 정책영역에 있는 전문가 팀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감독하에 있는 특정한 행정부서/단위의 목적과 전략 및 사업들을 결정한다.

Box D.2. 직군의 정의와 분류(계속)

중간 관리직(최소한 3명 이상의 관리책임이 있음)

D3 관리직(ISCO-08 12의 부분)은 D2관리직 바로 아래에 있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간부 또는 이사들의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지침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국이나 과 단위의 일반적인 기능들을 계획하고 지시하며 조율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정된 분야 내에서 전문적인 팀의 관리나 리더십을 제공한다. 이들은 단위나 부서 또는 정책분야별로 직원관리 및 과업관리와 추진을 담당한다. 이들은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담당한다. 이들은 다른 전문가 팀의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D4 관리직(ISCO-08 121의 분야)은 D3관리직의 바로 밑에 있다. 이들은 정책적 조언과 전략적이며 재정적인 계획을 만들고 수행한다. 이들은 운영적이며 행정적인 절차들을 만들고 실행하며, 고위관리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이들은 예산을 준비하고 재정적 운영을 감시하며 지출을 통제하고 자원사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며 업무수행을 통제한다. 이들은 과업단위 내에서 특별한 전문가 팀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한다.

전문직

고위 경제학자와 정책분석가(ISCO-08 242와 2422의 부분)는 관리적 책임(최대 3명 이하의 직원관리)을 가지지 아니하며, 하위의 분석가나 행정직원과 비서직원의 위에 위치한다. 이들은 통상 대학졸업 학위가 요구된다. 이들은 다양한 과업과 작업분야에서 약간의 리더십적인 책임이 요구되며, 정부의 단위사업이나 과제수행의 설계, 수행과 수정에 관한 정책지침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이들은 현재의 정책과 법령들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편차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것들을 재검토한다. 이들은 정책 옵션을 분석하고 만들어내며, 정책의 변화를 위해 요약보고서와 새로운 제안을 준비한다. 이들은 또한 공공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행정적 정치적 타당성과 재정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이 집단의 직원들은 경력을 쌓음으로써 관리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들의 전문분야는 법률, 경제학, 정치학, 공공 행정, 국제관계, 엔지니어링, 환경, 교육학, 보건경제 등 다양하다. 고위 정책분석가/ 경제학자는 전문분야에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위 경제학자/정책분석가(ISCO-08 411과 4110이 분야)는 행정직과 비서직군 아래에 위치한다. 이들은 통상 대학의 학위가 요구된다. 이들은 리더십의 책임은 없다. 이들은 정부의 과업이나 사업의 설계와 집행 및 수정에 대한 지침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이들의 업무는 현재의 정책과 법령들이 시대에 뒤떨어졌거나 편차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것들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들은 정책옵션을 만들고 분석하며, 정책변화를 위한 요약서와 제안서를 준비한다. 또한 이들의 전문분야는 법률, 경제학, 정치학, 공공 행정, 국제관계, 엔지니어링, 환경, 교육학, 보건경제 등 다양하다. 고위 정책분석가/ 경제학자는 전문분야에 최소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위 정책분석가와 경제학자들은 관련분야에 5년 이하의 경력이 필요하다.

비서직군

비서직군(일반기관의 직원)(ISCO-08 411과 4110)은 일반적으로 비록 대부분이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학 졸업의 학위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돈을 처리하는 작업과 여행준비, 정보요구, 약속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정보를 기록하고, 준비하고, 분류하고, 작성한다; 메일을 분류하고 개봉하고 보내며; 보고서와 서신을 준비하고; 직원을 위한 설비들을 기록하고; 전화나 전자적 조사들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연결하거나 보내고; 계산서를 검토하고, 청구서를 준비하고 재정적 거래의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정보를 컴퓨터에 기록하고 원고를 교정하거나 정정한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의 준비, 지출의 점검, 계약서 초안의 작성과 주문서의 작성과 구매를 돕기도 한다. 이 범주에는 사무보조원들의 과업을 감독하는 고위직 비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직군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개발된 직군의 국제표준분류(ISCO-08)를 따랐다. 그 이유는 몇몇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부의 직업 군을 분류할 때 ISCO의 모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직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없고 각 국가들이나 각 부처들 간 관리직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목적을 위하여, D1은 대통령이나 수상에 의해 임명된 장관에 의해 지명되었거나, 수상이나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나 사무국장의 바로 아래직위의 최고위관리직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D4까지의 관리직을 포함하고 있는데, D1과 D2는 고위관리직으로, D3와 D4는 중간관리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문직"은 고위직과 하위직 사이에 위치하는 분류이다. 그 이유는 이 집단은 경력의 편차가 상당히 큰 직원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12년 조사에서는 조사관/수사관, 일반경찰, 이민국직원, 세관원과 조세검사관 등과 같은 최 일선에서 일하는 직군에 관한 정보들도 수집하였다. 이러한 기능들은 중앙정부에 조직되어 있고, 부처나 혹은 사무국에 소속된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이민국 직원의 기능이 경찰이 수행하는 활동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기능들이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Box D.3. 서비스 전달자- 직업에 대한 기술

경찰 조사관과 수사관(ISCO-08 3355)은 의심스러운 혐의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와 관련된 정황과 사실을 조사한다. 이들은 또한 대부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행동이나 상황 그리고 설립기관들에 관한 명백하거나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찾아낸다. 이들의 업무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의심스러운 혐의자를 찾아내기 위하여 범죄를 계획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것들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나 혐의점을 찾는 것을 포함하며,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를 획득, 분류, 분석하며; 범죄자를 체포하고; 법정에서 증언한다. 이들은 통상 관리책임을 갖고 있다. 경찰 검사관(조사관)과 수사관은 통상 대학 학위가 있어야 하거나, 경찰관으로서의 특정한 기간의 경력(통상은 5년 이상)을 갖춘 후의 승진으로 채용된다.

경찰관(ISCO-08 5412)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분야를 순찰하고, 법과 규제를 강화하며, 의심스러운 혐의자를 체포한다. 또 다른 의무로는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고 현장에서 질서를 확립하며; 사고, 범죄,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한다.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3사람이상의 관리책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경찰관은 일반적으로 대학 학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국 직원(ISCO-08 3351)은 관련 규칙과 규정을 강화하고 행정적 처리를 하기 위하여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을 점검한다. 이들의 임무는 그 나라를 불법적으로 떠나거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나라의 해안이나 국경을 순찰하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문서가 필수적인 관련당국의 승인이나 확인을 확보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법률집행, 국외추방, 기소와 관련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공조한다. 이민국직원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3명 이상의 관리적 책임을 지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Box D.3. 서비스 전달자- 직업에 대한 기술(계속)

세관 검사관(ISCO-08 3351)은 관련 규칙과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화물들을 점검한다. 이들의 임무는 재화나 현금의 수출 또는 수입과 관련된 정부의 법과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짐들을 검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정부의 법과 규제를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운송 화물과 서류들을 이송을 검사하고, 이민과 세관법을 위반하는 금지되었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품을 압수하고 사람들을 구금한다. 세관검사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3명이상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조세검사관(ISCO-08 3352)은 조세수입을 검사하고, 고위정부관리자 또는 회계사들에게 예외적이거나 중요한 경우와 관련되는 회사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와 의무들과 세금의 양과 형태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서들과 매매영수증 및 조세수입을 검사한다. 이들은 정부의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체와 기관들, 기타 여러 가지 문서들과 매매영수증이나 세금수입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법과 규제들, 조세부와 법률이나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내부통제와 시스템과 기록들을 처리하고 기입된 조세수입을 검사한다. 조세 검사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3명이상에 대한 관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보상

이 조사는 총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다음 두 가지 중요 요소들로 구성된다: 1) 임금 2)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 보수의 수준에 관한 자료들은 전일제 정규직에 대한 것이다:

1. **임금**은 사회적 기여금이나 소득세와 같은 것들을 포함하며, 피고용인 대신에 지출하는 원천징수이나 사회보장금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것들과 행정적인 편의나 기타 다른 이유로 고용주가 실제로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용인에게 지출하는 것들도 포함한다.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보상은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총임금과 급여에는 아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임금**은 정부를 위해 제공하는 피고용인들의 서비스와 노동시간에 관한 정규적인 연봉을 의미한다. 비록 급여와 임금이 주간, 월간 또는 분기별로 지출된다 할지라도, 이 조사의 목적을 위하여 연간 급여로 다루고 있다. 이 자료에서는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
- **추가적 급여**는 국가들간 비교가능성이 확보되면서도 하나도 빠짐없는 완벽한 자료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 급여는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 범주에만 한정하였다:
 - ❖ 법정공휴일이나 **연차 휴가**에만 한정하여 일한 시간에 관한 보상
 - ❖ **연말과 계절적 보너스**; 이윤 분배 보너스; 그리고 정규휴가비나 기타 다른 사례금으로서의 보상금, 부가적 휴가비와 관련된 정규 보너스나 보상금이다.
 - ❖ **정규적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닌 보너스나 보상**(성과급이 아닌)은 비정규적 보너스 혹은 피고용인으로서 전반적인 실적에 관련된 기타 예외적 보수들에 대한 언급이다.

2.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은 자신들의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적 혜택(건강보험, 연금)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고용 관련 사회보장망이나 사회보장기금에 대하여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적 기여금을 의미한다.

- 건강과 질병, 연금, 노령에 대비하기 위한 사설 사회보험망이나 법정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용주의 기여금**.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은 자신들의 피고용인을 위한 사회적 혜택(건강보호, 연금)을 확보하기 위한 고용관련 사회적 보험망이나 사회적 안전기금에 대한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적 기여금을 말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여금은 공공망에 지불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사설망에 지불되기도 한다. 또한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은 때때로 사회적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기금을 포함하기도 한다.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에 관해 수집된 자료들은 2011년 조사에서는 건강이나 연금계획에 대한 기여금으로만 한정했는데, 이는 이러한 것들이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었다.
- 건강과 연금혜택에 한정되어 고용주가 지불하는 기금성격이 아닌 피고용인의 사회적 혜택. 여기서 "기금성격이 아닌"의 의미는 사회적 기여금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보장기금도 아닌 사회적 혜택들을 의미한다. 기금화 되지 않은 연금이나 건강망은 여러 나라들에서 실제 존재하는데; 이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연금이나 건강혜택을 위한 지출이 일반정부 예산으로 책정된다. 상당한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 피고용인들의 사회적 혜택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용인이나 피고용인의 기여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혜택의 기금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담기 위해 예산안에 특별한 분야를 따로 두게 된다.

모든 나라가 자신들에 대한 조사응답에 사회적 기여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이는 주로 기금화되지 않은 연금망에 기인한다). 그 결과로서, 이러한 나라들에서 받은 자료원천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추정해 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가계정에서, 기금화되지 않은 연금망을 귀속시키는 것은 국가간 개념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국가계정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피고용인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다루는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 자료들에서 보고된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금의 모든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보고서에서 사용한 자료들에서 보상비용을 계산해 내기 위한 비율은 해당국가들과 협의하고 조사를 거친 후 선정되었다. 이렇게 공유되는 국가계정의 원천은 다음 국가들에서 선정되었다;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과 노르웨이. 더 나아가, 여기서 공유된 벨기에의 경우는 보상조사와 국가계정자료로부터 나온 자료들을 조합하여 추정된 것이다.

고용주의 기여금에서 보상에 관한 조사와 반대되는 것은 건강이나 연금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계정 기본 틀에서의 자료들은 모든 고용주들의 사회적 기여금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 결과로, 어떤 의미로 보자면, 공유된 결과물들은 이러한 원천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는다면 과대평가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가계정자료들은 모든 정부 피고용인들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의 비율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율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직군들 간 사회적 기여금의 비율상 존재할 수도 있는 차이점들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사에서,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하여, 직업 간에 다양한 사회적 기여금을 위한 정확한 자료들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기여금의 수준은 단지 하나로만 대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들의 사회적 기여금을 통해 피고용인들이 받게 되는 혜택의 질과 양은, 각 국가들에 있어서, 서비스들과 기금들의 관리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들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에 의존하는 것이다.

보상

구매력평가방법론을 사용함에 있어서 미국 달러화로 보상자료들을 변환하는 계산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상대적 가격수준과 환율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구매력평가는 각 나라들에 있어서 그리고 각 나라의 수도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용의 상대적 차별성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 대다수의 중앙정부 피고용인들은 그 나라의 수도에서 고용되고 있다. 임금은 수도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용에 있어서 상대적 차이를 보상하는 경향이 있다.

OECD는 또한 각 국가들을 OECD 국가계정통계(자료집)에서 활용되는 1인당 GDP로 정규화한 자료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정규화는 각 국가들에 있어서 평균적 부의 수준 차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다.

OECD는 평균적인 의무교육보상(총임금 +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에 대한 평균적 총보상의 비율을 계산하고 있다. 중앙정부 피고용인들의 직군이 일반적 고등교육에 대한 조사내용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 등 모든 경제주체의 그것에 대한 공공분야의 보상에 관한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의무교육 보상에 관한 자료는 OECD 한눈에 보는 경제(2013년판이나 그 이전 판들) 보고서에서 언급된 자료들의 조합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지만, 비록 교육의 수준에 대한 교정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직군에 속하는 개인들의 또 다른 특성들은(예를 들면, 연공서열, 나이, 성 등과 같은 것들) 교정하지 않았다.

의무교육에 대한 보상과 1인당 GDP와 관련된 피고용인들의 보상비율은 일하는 시간으로 교정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접근법은 3가지 비교측정법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근무시간의 조정

연간 평균보상(연간 평균 총급여 + 고용주의 사회적 기여금)과 사람들이 실제 일한 시간간의 차이점은 조정된 연간 평균보상을 얻기 위해 계산된다. 실제로, 각 국가들간의 비교가능한 기준과 관련된 피고용인들의 보고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매주간 공무로 일한 시간, 평균적 법적 공휴일, 공무로 근무하는 날짜들)의 차이는 조정된 연간 평균보상의 계산을 위하여 사용된다.

모든 관리직(즉, D1, D2, D3, D4)을 위하여,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피고용인들에게 공평하게 주간 근무시간을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료들은 휴일에 대해서만 조정된다.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보정은 표 D.1. 에 나타나 있다.

평균 비교 연간 보상은 아래와 같다:

$$W_{co}^{a*} = \frac{\left(\frac{W_{co}^a}{P_c} \right)}{H_c^{a*}}$$

여기서

W_{co}^{a*} 는 근무시간관련 PPP에 의해 교정된 직업군(O)내에서 각 국가들(C)의 피고용인들의 평균적 연간 보상

W_{co}^a 는 그 국가의 통화로 직업군(O)의 범위 내에서 각 국가(c)의 국내통화로 표시된 평균적 연간 보상

P_c 는 국가(C)의 구매력

H_c^{a*} 는 국가(c)에 있어서 평균근로시간의 비율. 이것은 국가(c)에 있어서(조사자료에 따르면) 2088개로 나뉘어지는 평균 연간근로시간과 상응한다. 2088이라는 숫자는 매주 40시간 휴일이나 어떤 종류의 휴가도 없이 이론적으로 일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1일 8시간 매주 일하면 261일간 일하는 것을 말한다.

표 D.1.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교정

	실제 접하는 근로시간 (시간/주당)	평균 휴일	근무에 적용되는 평균 공공휴일 수	그 나라의 연간 평균근무일	그 나라의 연간 평균근무시간	주간시간과 휴일로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교정한 계수	휴일로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교정한 계수	보정하지 않은 연간 휴가일수나 근무시간 등을 고려한 교정한 계수
호주	37.5	20	10	231	1730	0.830	0.885	1.000
오스트리아	40	25	10	226	1806	0.866	0.866	1.000
벨기에	38	26	10	225	1708	0.819	0.862	1.000
칠레	44	15	9	237	2083	0.999	0.908	1.000
덴마크	37	30	9	222	1641	0.787	0.850	1.000
에스토니아	40	34	5	222	1774	0.850	0.850	1.000
핀란드	36.3	32	7	222	1607	0.771	0.850	1.000
프랑스	35.5	25	7.5	228	1620	0.777	0.875	1.000
독일	41	29.5	10	221	1814	0.870	0.848	1.000
그리스	40	25	12	224	1790	0.858	0.858	1.000
아이슬란드	40	30	14	217	1734	0.831	0.831	1.000
이스라엘	42.5	24	9	228	1936	0.928	0.873	1.000
이탈리아	36	32.0	8	221	1589	0.762	0.847	1.000
일본	38.8	20	17	224	1734	0.831	0.858	1.000
한국	40	20	14	227	1814	0.870	0.870	1.000
네덜란드	36	23	8	230	1654	0.793	0.881	1.000
뉴질랜드	40	20	11	230	1838	0.881	0.881	1.000
노르웨이	37.5	25	10	226	1693	0.812	0.866	1.000
폴란드	40	26	11	224	1790	0.858	0.858	1.000
포르투갈	35	25	11	225	1573	0.754	0.862	1.000
슬로바키아 공화국	37.5	25	15	221	1655	0.794	0.847	1.000
슬로베니아	40	29.9	15	216	1727	0.828	0.828	1.000
스페인	37.5	22	14	225	1685	0.808	0.862	1.000
스웨덴	39.8	33	9	219	1739	0.834	0.839	1.000
영국	37	25	8	228	1685	0.808	0.873	1.000
미국	40	20	10	231	1846	0.885	0.885	1.000

주석: 이 표에서의 숫자는 반올림된 것이다.

일주일에 7일중에 5일간 매년 일하면 최대 일하는 날짜는 261일, 매 근무일에 8시간씩 1년간 일하면 2088시간.

오스트리아: 2011년 1월 1일부터, 휴일의 총량은 나이에 의존한다; FTE는 7월 1일전에 43번째 생일이 되면 그 해부터는 6주당 30일로 240시간이다. 6월 30일 이후에 43번째 생일이려면 그 다음해에 240시간이다.

에스토니아: 1년당 휴가는 당해 직에 근속한 만큼에 의존한다. 3년이상 근속하고 28일을 근무하면 달력으로 따져 35일은 달력상 35일(해마다 1일씩, 최대 10일까지 추가)이 연간 휴가이다.

핀란드: 1년당 연간 휴가는 근속기간에 따라 30일부터 38일까지이다.

독일: 공무원과 공공분야 피고용인의 실질적 근무시간이 다르다.

이탈리아: 휴일의 법적인 근무일자는 다양하다. 첫 번째 3년간의 근무자는 30일이고, 4년차부터는 32일이다. 경찰의 예를 들면, 연공서열에 따른 2가지 부류가 있는데; 15년부터 25년 근속하면 36일이 25년이상근무하면 45일이다.

한국: 공무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는 3일부터 21일까지이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계약서에 따라, 주간 37.5시간이거나 주간 40시간의 근무시간이 있다. 휴일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33세 이하는 25일, 33세 이상은 30일이다.

슬로베니아: 연간 휴가일수의 평균이 측정되었다. 근로자들은 4주보다 짧지 않은 휴가를 갖는다. 또한, 근로자는 15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으면 매 자녀마다 1일의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업무수행실적과 관련하여, 공무원은 3일이내의 연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근무조건이 나쁜 경우(소음, 열기 등) 또는 건강상태가 안 좋은 경우, 또는 조직 단위(organisational unit)를 지도하기 위해 3일까지 연간휴가를 늘릴 수 있다.

스웨덴: 중앙의 집단협약에 따라 근로일수는 나이별로 다양하다. 30세 이하의 피고용인은 28일의 휴일을, 30세부터 39세까지는 31일을 40세 이상은 35일의 휴일이 보장된다.

영국: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런던 이외의 지역은 37시간이고 런던에서는 36시간이다. 휴일에 관련하여 1년간 평균 일하는 일수는 부서마다 다르다.

자료 출처: 중앙/연방정부에 있어서 피고용인들의 보상에 관한 2011년도 OECD조사

부록 E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상세 자료

이 부록에서는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한 투명성의 수준은 물론 중앙정부 의사결정자들에게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각 관련국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개요에 관한 것들은 그림 8.4.에 제시하였다.

표 E.1에 대한 설명

자료들은 회원국의 관행을 반영하고 있다. 그 나라의 특정 자료들의 합계를 계산하는 것은 3개 분야(집행, 입법, 사법)의 정부와 그것들의 공적 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사적 이익의 공개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사적 이익과 모든 직종들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여겨지므로 동일한 가중치가 할당된다. 각 나라들의 응답을 점수제로 나타내기 위하여, “금지”와 “정보는 공개되며 온라인과 인쇄물로 공적 이용이 가능함”의 범주들은 최고점수인 100점이 부여되고, “정보는 공개되며 요청에 의해 공적으로 이용 가능함”은 두 번째 높은 점수인 67점, 그리고 “정보는 공개되지만 공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은 세 번째인 33점이다. “공개를 요청할 수 없음”은 0점이다. 검사된 모든 사적 이익들은 동일한 가중치를 갖는다.

브라질, 체코, 그리스,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자료는 2010년 자료이다. 스페인의 입법부와 사법부의 자료 역시 2010년 자료이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사적 이익의 공개에 관해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기소기능은 집행부에 있다. 법무부의 상급기관들은 다른 집행부 피고용인들과 같은 자격요건하에서 공적 이용이 가능한 재정적 공개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위수준의 연방 검사는 별도의 비공개적인 이해충돌 보고시스템이 있다. **노르웨이**의 판사에 관한 자료에는 배석판사나 화해조정 판사는 제외되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해충돌의 공개에서 반드시 판사나 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사법활동의 지침”이 있다. (법원 웹사이트: www.courtsfnz.govt.nz/guidelines/business/guidelines-for-judicial-conduct를 이용 가능함) 또한, 검사는 종종 변호사가 되며, 직업적 윤리의무를 따라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주어지고 심지어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브라질**의 경우, 집행부의 공무원에 대한 사적 이익의 충돌과 그 직을 떠난 후의 금지(법 12.813)사항에 관한 새로운 법이 2013년 7월에 발효되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 관계당국의 책임아래 제공된 것이다. OECD의 이러한 자료들의 사용은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의 이스라엘정착촌의 국제법상 상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외부 직종에 대한 보수: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의 경우는 모든 직종에 대하여,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경우에는 판사에 대하여, 어떤 종신직 공무원도 외부에서 보수를 받는 직종으로 이해충돌이 야기되는 경우에 정부의 구속력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덴마크의 경우, 만약에 외부직종들이 법에 의하거나 특별위원회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외부직종을 가질 수 있지만, 반드시 외부직종이 공개되어야 판사가 그 직종을 보유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법에 의해서 수상, 장관, 판사와 검사는 보수를 받는 외부직종이 금지되어 있으며, 연구원이나 교사의 경우에는 공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보수를 받는 외부직종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판사는 대법원의 허가 없이는 보수를 받는 외부직종을 가질 수 없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이나 감독자의 허가 없이는 판사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외부직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직종을 보유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학부모회 의장의 직위같이 보수를 받지 않는 외부직종을 갖는 것은 대법원이나 감독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판사들의 외부직종에 대한 정보가 요청된다 할지라도, 그 판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폴란드의 경우, 수상과 장관들은 사적 이해충돌의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활동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이들은 심지어는 이러한 자격이 보수를 수반하지 않아도 재단이사회사나 상법적 회사나 기업체의 임원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전직: 에스토니아의 경우, 집행부나 입법부의 소속원들에 대한 전직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보들이 규정에 선행하여 공개되고 있다.

자산, 부채, 소득의 원천과 소득액, 그리고 선물: 아이슬란드의 경우, 수상은 탐감되었거나 이득으로 바뀐 대출금에 대하여 공개할 것이 요구된다. 아일랜드의 경우, 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게다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들의 개인적 이해를 공개해야 한다. 즉, 다른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즉, 외부의 직종에서의 보수), 주식, 이사직위, 토지, 선물, 특정서비스나 여행시의 할인, 상담, 그리고 윤리법 하에서 매년 발표되는 사적 이익 중 공적 계약과 관련되는 모든 사적 이익.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의 등록부(The Registers of Members' Interests)상에 이러한 이해관계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 최저임금의 10배이거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물은 신고해야 한다. 만약에 공무원에 의해서 검정되었다면, 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실제로, 약 66%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수상과 장관들은 예를 들면, 그들의 재산, 부채, 소득의 원천과 소득액과 같은 것들로 표현되는 재산에 관한 진술을 공개해야만 한다. 비록 이러한 진술들이 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지라도, 거의 모든 장관들은 온라인상 이것들 공개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에서는, 비록 공개의 형식과 관련하여 특별한 후속조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개된 정보들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제출된 정보를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 E.1. 각 나라별 2012년도 3개분야의 정부에 있어서, 선정된 사적 이해관계의 공개와 공개된 정보의 공개적 이용가능성

분야	나라	재산	부채	소득원천	소득액	보수를 받는 외부자위	보수 없는 외부자위	선물	전직
공공부문	대한민국	●	●	●	●	●	●	●	●
	일본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독일	●	●	●	●	●	●	●	●
	프랑스	●	●	●	●	●	●	●	●
	스페인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캐나다	●	●	●	●	●	●	●	●
	호주	●	●	●	●	●	●	●	●
민간부문	대한민국	●	●	●	●	●	●	●	●
	일본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독일	●	●	●	●	●	●	●	●
	프랑스	●	●	●	●	●	●	●	●
	스페인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캐나다	●	●	●	●	●	●	●	●
	호주	●	●	●	●	●	●	●	●
합계	대한민국	●	●	●	●	●	●	●	●
	일본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독일	●	●	●	●	●	●	●	●
	프랑스	●	●	●	●	●	●	●	●
	스페인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캐나다	●	●	●	●	●	●	●	●
	호주	●	●	●	●	●	●	●	●

부록 F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직위	부처
호주	Ms Kathie Potts	Deputy Public Service Commissioner	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오스트리아	Mr Michel Kallinger	Director-General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and Innovative Administrative Development
벨기에	Mr Jacques Druart	Head International Co-ordination	Federal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Organisation
캐나다	Nicolas Wise	Executive Director	Treasury Board Secretariat
덴마크	Mr David Fjord Nielson	Special Advisor	Ministry of Finance
핀란드	Ms Katju Holkeri	Head of Government Policy Unit	Ministry of Finance
프랑스	Mr Daniel Aunay	Chef de la mission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Ministère du Budget, des Comptes publics, de la Fonction publique et de la Réforme de l'État
이탈리아	Dr Pia Marconi	Director-General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일본	Mr Irie Akifumi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Japan to the OECD
한국	Mr Seong Ju Kang	Director-General for Information Security Policy	Information Strategy Offi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네덜란드	Mr Peter van Der Gaast	Head of the Department on Analysis, Labour Market and Macroeconomic Counselling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노르웨이	Kleng Bratveit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Reform, Department of ICT Policy and Public Sector Reform
스웨덴	Susanne Johansson	Advisor	Statskontoret
영국	Ms Liz McKeown	Deputy Director, Analysis and Insight	Cabinet Office

용어해설

용어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의 의미
예산	지출, 수입, 결손이나 잉여와 부채 등이 포함된 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포괄적 내역서. 예산은 공공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 자원을 어떻게 쓸 것 인지를 설명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문서이다.
현금보조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에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유자격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 예를 들면, 연금, 실업급여, 개발보조 등
중앙예산당국(CBA)	중앙예산당국(CBA)은 단일 공공 독립체이거나 중앙/국가/연방 수준의 각 정부에 위치 하는 기관들의 협력체이며, 국가/연방예산의 관리와 보관의 책임이 있다. 많은 나라들 에서, 종종 중앙예산당국은 재무부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예산당국은 예산제안 서를 만들고, 예산협상을 수행하고, 기금을 분배 또는 재분배하고, 예산법률의 준수를 확보하고, 효율성 점검과 수행평가를 담당한다. 중앙예산당국은 예산집행을 통제하지 만, 특정목적의 공공기금의 국고기능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 앙예산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계적/국가적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점검하며, 예산 지출의 효과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	예산관련 시민들을 위한 지침에 대하여 여기서는 입법부에 제출된 연간예산의 중요 요 소들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서로 정의한다. 이것은 연간예산 제안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들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문서이다. 더 상세한 문서에 대한 참조나 연관들을 담고 있어서,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이 추가로 다른 참조 사항을 더 보거나, 연관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집합적 재화와 서비스	공동체 전체에 혜택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 예로는, 국방, 공공 안전과 질서에 관한 정 부지출을 포함한다.
복합지표	개별지표를 합쳐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것. (Nardo et al., 2005)

자료군(Dataset)	단일주제 (예를 들면, 규제 의 질)에 관한 지표나 변수들의 집합
효율성	주어진 자원으로 활동한 결과 이루어낸 최대한의 산출(OECD 통계용어)
효과성	목표를 달성한 정도(OECD 통계용어)
국가계정유류체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양립 가능한 계정체계로 전체 경제(지역, 국가, 회원국 집단 등)와 OECD 통계용어 등 다른 경제체계와의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술이 되어 있음. 국가계정체계(SNA)와 완전히 일치함.
연방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역 혹은 주의 자치정부 사이에서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재정규칙	이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OECD는 유럽연합의 정의와 유사하게 사용함. 수치상의 재정규칙은, 예를 들면, 연도내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과 같이, 재정정책의 총계에 관한 영구적 제약을 말한다.
정규직환산인력(FTE)	정규직환산인력의 수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연간노동시간의 평균으로 총 노동시간을 나눈 것이다(OECD 통계용어).
성(Gender)	남성이나 여성에 연관되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기대. 모든 문화는 여자와 남자가 어떤 권리와 힘과 자원을 소유하며, 각 성별로 적절한 행동이나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들의 집합으로 남자와 여자간의 생물학적 차이점을 해석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인종, 민족성, 계급과 같이 성(gender)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회와 가능성의 상당부분을 규정하는 사회적 범주이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그 사람의 참여를 모양 짓는다.
공공부문에서 일반고용의 기본 틀	이것은 대부분의 정부 직원들의 고용조건과 관련되며, 대부분의 법정 피고용인 들에게는 확실하게 관련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임시 피고용인은 정부 직원들을 위한 일반고용의 기본 틀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단기로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들은 몇 가지 예외(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임시 피고용인인 경우임)를 제외하고 일반 고용의 기본 틀에서 고용된 것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일반정부	일반정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 모든 사회보장기금, 비-시장, 비-영리기구로 정부에 의해 재정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구성된다. 공기업과 준공기업은 그것이 정부가 소유한 것이라도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한 비기업체로 준공기업이 아닌 것은 일반정부에 속한다(1993 국가계정체계).

거버넌스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의 실행
국내총생산(GDP)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치. 특히 이것은 생산에 참여한 모든 국내 구성요소들의 총 부가가치의 합계(산출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합치고, 보조금을 제외함)와 같다. 구매력 평가로 측정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사용의 합(중간소비를 제외함)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 보다 작고 국내 생산자들에 의해 배분된 주된 소득의 합이다(OECD 통계용어).
독립재정기관(IFI)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며, 재정정책과 수행에 관한 비-정파적 감독, 분석, 때로는 조언을 제공하는 집행부 혹은 입법부의 법정 기구로 되어있는 독립적 기관. 독립재정기관(IFI)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전진단의 기능을 수행한다(과거지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 회계감사기관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정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표	"주어진 분야에 상대적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측정치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 측정.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표는 측정대상간 혹은 시간 별 차이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 (Nardo et al., 2005)
개별적 재화와 서비스	주로 각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 예로는 교육, 건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투입	노동, 자본의 투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 "예를 들면, 건강 서비스의 투입에 대한 정의는 의료와 비-의료 인력의 시간, 의약품, 전력사용, 그 외의 구입된 물품과 장비나 건물 등의 사용에 관한 자본비용 등이다." (Lequiller, 2005)
노동력	주어진 기간 동안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동력 혹은 현재 활동인구(OECD 통계용어).
결과물	활동을 통한 궁극적인 성과. 결과물은 정부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외부의 요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OECD 통계용어)
산출	정부의 성과평가에서 산출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된다(예, 수업시간, 산정되었거나 지불된 사회복지 혜택)(OECD 통계용어).

성과정보	성과정보는 정부와 비-정부 조직 모두에서 생성되며, 질적이거나 양적인 것 일수 있다. 성과정보는 정부의 정책, 과업, 조직의 투입·과정·산출·결과물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지표, 계량수치들이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성,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과정보는 통계학; 정부조직의 재정적·운영적 계정; 정부 조직에 의해 생성된 성과보고서; 정책, 과업 혹은 조직의 평가; 혹은 지출 보고서 등에서 발견된다.
생산성	생산성은 투입량에 대비하여 산출된 양의 비율을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경제학자들은 총 생산성(총 투입에 의해 변화된 총 산출)과 한계생산성(투입단위당 변화된 산출 정도)을 구분한다(Coeil et al., 1999).
공공부문	일반정부 분야와 (준)공기업을 합한 것(1993 국가계정체계)
공공부문의 과정	공공부문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구조, 절차, 관리
공공 서비스	공공이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시민들 위해 정부에 의하여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사기업 부문이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공적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용어는 소득과 상관없이 특정 서비스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결부되어 있다. 비록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재정보조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이유로 공공서비스는 보통은 대부분의 경제적 부문에 적용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받는다.
국가계정체계 (SNA)	<p>국가계정체계는 거시경제 계정, 재정수지 및 표의 통합으로 국제적으로 개념·용어·분류·회계기법 등에 있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임(SNA 1.1)</p> <p>1993년 국가계정체계는 유엔, 국제통화기금, 유럽공동체 위원회, OECD, 세계은행이 함께 만들었다(OECD 통계용어).</p> <p>2008년의 국가계정체계는 1993년의 국가계정체계의 상당부분을 바꾸면서 최신판으로 개정하였다. 호주(캐나다의 정부부채 분야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OECD 회원국에 대하여 국가계정체계의 지표들은 1993년의 국가계정체계에 근거하고 있다. 2014년도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계정에 이러한 변화들(즉, 이 보고서에 제시된 선정지표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는)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p>

단일 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역 혹은 주의 자치정부 사이에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국가, 그러나 단일국가도 행정적으로는 지방수준의 정부를 가질 수 있다.

변수

수치적 측정이나 할당된 분류(예를 들면, 소득, 나이, 무게 등, 그리고, "직업", "산업", "질병" 등)의 범주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가치집합을 담당할 수 있는 계층단위의 특성(OECD 통계용어).

근무시간 조정

정부 피고용인들의 연간 평균 보상에 적용되는 조정으로, 적용 가능한 근무날짜의 평균숫자와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의 차이를 보상하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 관행을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 미국이며, 유럽연합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의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논제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자료와 결과물들을 널리 전파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

정부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공공행정의 효율성·효과성을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지만, 많은 회원국들의 경제적 위기와 재정적 긴축에 따라, 정부가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지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3은 “정책”이라는 명칭의 장에서 오늘날의 정부신뢰를 날카로운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어서 아래 기술하는 분야들을 포함하는 핵심지표들의 포괄적 자료군을 독자들에게 제시하였다.

- 전략적 거버넌스
- 공공 재정과 경제
- 예산관행과 절차
- 공공분야의 고용과 보수
- 정부에서의 여성
- 공공 조달
- 개방적·포괄적(범 정부적) 정부
- 시민을 위한 서비스: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한눈에 보는 정부의 도표와 차트를 만드는데 사용된 Excel™ 스프레드시트는 StatLinks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 국가별 자료문서와 기타 온라인상의 보충자료들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웹사이트인 www.oecd.org/gov/govatagrance.htm 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온라인 주소에서 문의하십시오.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이 보고서는 OECD의 모든 책, 정기간행물, 통계자료들을 수집하는 OECD iLibrary로도 발간되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oecd-ilibrary.org 주소를 방문하십시오.

2013

